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Strateg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Architectural Policy

김영현 Kim, Young Hyun
조상규 Cho, Sang Kyu
임현성 Lim, Hyun Sung

(a u r i

AURI-기본-2015-7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Strateg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Architectural Policy

지은이: 김영현, 조상규, 임현성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5년 10월 26일, 발행: 2015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2,000원, ISBN: 979-11-5659-047-7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김영현 부연구위원
연구진	조상규 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연구보조원	안지수, 이진욱
외부연구진	윤서연, 최영은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강인호 한남대학교 교수 강 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준 국토교통부 사무관
--------	---

연구요약

제1장 서론

광역시·도에서는 지난 5년간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활발히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11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반면,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점검 TF팀을 구성하여 그간 성과를 일부 검토한바 있으나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계획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기 위해 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추진체계, 예산계획 등 기존 계획방식에서의 행정적, 제도적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관련 계획 간의 관계 정립,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수정, 계획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향 제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원인을 도출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건축정책의 성과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

건축정책을 선행한 유럽국가에 비해 시작은 뒤늦었으나 그 동안 건축정책에 대해 목말라 온 현실에서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계획이 지난 5년간 우리 건축계에 영향을 준 것은 실상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다. 우선 건축을 ‘민간자산의 건축’ 보다는 ‘국가자산으로서의 건축’으로 건축기본법의 근본 취지인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합일된 건축계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건축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건축기본법의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크게 ①건축정책기본계획(제10조, 제11조)과 지역건축기본계획(제12조) 수립, ②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제13조), ③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제20조), ④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제21조), ⑤건축디자인 시범사업(제22조) 등 5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건축기본법 실행수단에 따른 성과와 의미

건축기본법 실행수단	1차 성과	2차 성과	3차 성과
기본계획 수립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16개 광역수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관련 법령 제정의 근거 마련 건축정책 지원 기구 설립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시재생 특별법, 건축자산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제정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기구, 국가한옥센터 설립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구성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운영(1기~3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정책 심의, 조정의 기능 건축정책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정책을 단일부처 업무가 아닌 범부처 업무로 정책범위 확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진흥원 설립 근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 행사, 교육, 신진건축사 육성,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건축기금 조성 근거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기획업무, 사전검토 제도 운영 기준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도시재생 활력사업 등 시범사업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건축발주제도,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건축품질 향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신진건축가 육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 건축 및 도시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역량 향상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건축기본계획도 활발히 수립되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수의 건축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각종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전담지원기구 설립·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건축계에서 할 수 있는 정책과 일들이 많아졌다. 특히 건축정책 지원기구로서 건축진흥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등 다양한 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들 기구가 향후 건축·도시환경을 비롯한 건축업계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장 지역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 분석 및 성과점검

이장에서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된 11개 지자체 계획에 대한 계획수립 과정, 현황 및 여건변화 부문의 조사항목, 계획부문별 주요 정책 키워드, 실행주체, 계획에서 제안하는 전담지원기구의 기능 및 역할, 예산계획, 실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여부 등 지역별 계획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역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특징

지역	성격 및 특징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처음 수립되는 최초의 광역건축기본계획 •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등 공공부문에 초점을 둔 계획이며, 각 단위사업별 다양한 분야의 관계부서 및 전문가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다 인구 거주지역으로서 31개 시·군이 도시, 농어촌, 도농융합 등 다양한 구조로 되어있어 대한민국 축소판 성격을 지님 • 서울, 대전, 인천광역시 등과는 다르게 경기도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성격 모두를 지님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디자인,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건축·도시관련 시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타 계획보다 새롭고 다양한 사업 포함 • 신규사업 발굴보다 기존 건축·도시관련 사업과 상호 연계 및 발전시키는 과제 다수
전라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 등 전통적인 건축문화자산이 풍부한 이점을 살려 건축문화의 보존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문에 중점을 두어 계획 • 농촌과 도시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을 다수 포함강조 • 주로 건축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제도개선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룸
경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마다의 단계별 계획목표를 정하고, 1~4차까지의 향후 20년의 중장기 계획 수립

지역	성격 및 특징
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5개년 계획 : 2013~2017년 (건축·도시 관련 기반구축), 2차 5개년 계획 : 2018~ 2022년 (민간 파급·확산기), 3차 5개년 계획 : 2023~2027년 (대한민국의 선도적 건축·도시 환경 구축), 4차 5개년 계획 : 2028~2032년 (건축·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내 사업 추진시점을 단기, 중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기간 : 단기 2013~2014년, 중단기 2013~2017년, 중기 2015~2017년, 상반기 지속 2013년~, 중반기 지속 2015년~ • 시민 참여제, 이전후적지 랜드마크 개발, 대구건축 우수 품질인증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 발굴에 노력을 한 계획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 - 해안변과 중산간지역에 대한 개발관리 방안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등 제안 •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단기과제의 경우에도 중요도 및 사업성격에 따라 중점과제와 지원과제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재해·재난 등 안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의 실천과제 도출 •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실천과제별 성격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의 서민 친화적인 건축정책 과제 발굴 노력 -도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소규모 건축사무소 육성 전략 등
충청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전국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수립되는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이 통합된 종합계획 • 단, 중, 장기의 1~3차 건축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내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6개 핵심전략사업을 별도로 제안 • 세부실천과제에 대해 지역현안 및 특성을 고려하여 사군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

지역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한계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일반적·형식적인 기초조사로 인한 지역 현안 파악 부족

지역건축기본계획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건축·도시관련 계획 현황, 해외 선진국 지역건축정책 수립 현황 및 사례, 여건변화 및 전망에 대한 조사)에서 내용상 일반적·형식적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내 건축물의 단순한 물량파악이 아닌 질적 품질 및 성능 현황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이 기준치보다 못하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심도 깊은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 부족한 지역 예산으로 인한 지역별 차별화된 계획 수립의 어려움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상황으로 인해 지역단위의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예산소요가 적거나 불필요한 ‘조례제정’, ‘계획 기준 및 지침’, ‘교육’ 부문

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역단위의 시범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초점을 둔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도시재생사업,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과제가 편성되어 있어 지자체간 차별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성격의 사업 및 과제 발굴

과제 추진주체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과제’와 ‘지역 차원에서의 과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간의 연계·통합 과제’, ‘공동주택 디자인심의에 관한 과제’, ‘도시재생 정립에 관한 과제’, ‘건축산업 육성’ 등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상당부분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계획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지침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와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하는 과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 행정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수립기간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계획수립 주체로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연구용역 형태로 발주하고, 계획과정에 지역 전문가를 다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계획이 실행되고 추진하는 것은 지역 시·군 기초지자체 및 관련부서 실무자의 의지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계획을 수립하여도 계획을 이행하는 주체는 관계부서 실무자이기 때문이다. 매년 지자체 예산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부서 실무자의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 자체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 계획의 실행-모니터링-성과관리의 환류체계 부족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 계획의 성과관리의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건축기본법 및 지자체 건축기본조례에서 성과관리를 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두 번째로는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유명무실해지는 이유는 지자체 자체 예산부족, 전담조직 미비, 법적 근거없는 유명무실한 성과점검 항목 등 대부분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행 계획의 문제와 직결된다.

제4장 지역건축기본계획 당면문제와 원인

지역건축기본계획 문헌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국가 및 지자체 담당 부서 실무자, 전문가 대상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기능 및 역할과 계획 실효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①계획수립 범위 및 내용, ②계획수립 방법과 절차, ③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④계획 실행주체, ⑤실행력 확보를 위한 의견, ⑥응답자 특성 등 6개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 세부항목

구분	세부 설문조사 항목
계획수립 범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계획간의 관계 및 위상에 대한 인식 • 정책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적정 정책대상(주거, 경관, 산업, SOC, 공원 등 공공 공간, 공공디자인 등) • 계획 구성체계에 대한 적정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 및 실행과제 수립 여부 • 건축기본계획에 중점을 둔 분야(법·제도, 시범사업, 기준 및 지침, 교육·홍보 등) • 세부실천과제의 구체성 정도 및 적정성 • 광역시와 도의 계획 실행력에 대한 차별성(계획내용의 위계, 수립방식 및 절차 등)
계획수립 방법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수립시점 및 기간의 적정성 •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한 부서, 협의체 구성·운영, 전문가 TF 운영방식 및 효과 •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 및 항목별 중요도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예외사항 • 계획수립과정에서 실천과제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의견수렴 여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본계획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 건축디자인 및 도시환경 개선에 건축기본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 • 계획 이행정도 및 지자체 추진 의지
계획 실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및 지원조직, 전담인력 보유 여부 • 성과관리 전담부서 및 지원기구 지정의 필요성 •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모니터링 수행 여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실행력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원인 • 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소속, 직책, 전공분야, 해당업무 경력 • 계획 수립, 실행, 관리 등 참여 구분

관계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계획의 한계와 실행력 부족 원인은 ①계획 구성 및 내용 자체의 문제, ②법·제도적 측면의 문제, ③실행주체 및 행정적 한계 등으로 파악되었다.

- 계획구성 및 내용자체의 문제

계획범위 및 타 분야 계획과의 불분명한 관계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1차 계획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SOC 국가기반시설, 건축도시산업, 경관, 주택 등 광범위한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SOC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대상 범위에 대해 다소 인식이 낮아 건축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주택정책기본계획, 경관계획, 건설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타분야 관련 계획간의 상충 또는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및 계획범위에 대한 재설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정책목표가 현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족한 채 수립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일반현황이나 사례조사를 지양하고, 지역 내 기 추진 중인 사업현황, 지자체장 공약, 부서별 업무계획 등 실행으로 옮겨지는 행정 내부자료에 대한 면밀한 자료 분석과 함께,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부서 실무자 협의를 내실있게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앞장 인식조사 결과와 같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 번째로는 계획수립 시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건축기본법상 계획수립시점에 대해 ‘매 5년 단위’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자체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난 5년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계획수립이 뒤늦었던 지자체는 계획이 마련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무부서 및 협조부서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한 실행력 없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지역발전연구기관 또는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분야 전문성 및 관련 정책정보를 갖춘 연구기관이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

건축기본법 이후에 신규 법령간의 불분명한 관계에 대해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지난 5년간 새롭게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특별법 등 건축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 준비 중인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지역경관계획, 주택정책기본계획, 관련 계획 간의 상충 또는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계획범위에 대한 재설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수 있었다.

- 실행주체 및 행정적 한계

계획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업예산부족이 5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담부서 및 집행조직의 한계(41.3%)를 주요 문제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관 또는 협조부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책임지고 추진·관리하며 관련 타 부서간의 정책조정을 하는 총괄추진주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계획수립을 주관한 건축관련 부서가 타 부서 정책사업에 대해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정적 한계가 있으며, 기본계획 실행 및 관리를 전담하는 실무자가 부재하고, 잦은 보직순환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정책 자체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제기하였다. 건축정책에 대한 인식 문제를 확인해보기 위해 지자체장의 계획 실행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별로 없다’가 전체 36.51%로 가장 높았다. 1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계획자체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며,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제5장 타 계획의 실행 및 관리 사례 분석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타 법정계획, 특히 기본법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의 타 분야 계획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실행체계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수 계획사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위계별 계획 실행체계, 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관계 설정, 전담지원부서의 여부,

예산 확보와 관련된 실행체계,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건축기본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정계획 중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전략과 5개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환경종합계획, 여성정책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으로 총 6개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3개를 조사대상으로 더하였다.

근거법의 특성에 따른 근거법령,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기본계획

구분	근거법령	중앙부처	지자체
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광역시·지자체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중앙정부) 에너지법(지자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지역 에너지계획
	환경정책기본법	국가 환경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양성평등기본법 (前 여성발전기본법)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前 국가 여성정책 기본계획)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前 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 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도·시·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도·시·군) 농어촌 보건복 지기본계획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타분야 법정계획의 실행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에 대한 근거법과 관련법, 관련계획에 대한 위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9개 근거법에 따라 기본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법의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정계획을 하나의 세트로 하여 관련 법령과 계획간 위계를 분석하였다. 법정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전제로서 기본계획 자체의 수립과정을 분석하되, 수립과정은 계획수립주체, 심의기구, 관련 위원회, 별도 추진계획과 시행계획 유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중

양 및 지자체 단위의 전담부서 운영, 예산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정 기본계획 실행의 마지막 단계로서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체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개별 계획들의 평가주체와 평가내용, 평가관리 등으로 나누어 성과관리시스템으로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제6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건축정책의 대상 및 범위 재설정

건축정책을 선행한 유럽 주요국의 정책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내의 건축정책과는 달리 다루고 있는 정책대상이 ‘건축문화’, ‘공공건축’, ‘건축기술’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고, 정책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부문에 대해 초점을 두어 건축기본계획만의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달성은 특정 시설과 공간에 대한 계획이 아닌 법규, 행정프로세스, 설계발주 및 계약, 지침 및 기준, 건축기술, 교육 등 정책수단의 개선을 통해 건축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에서 다루는 정책대상인 주택공급, 도시기반시설 SOC 등은 과감히 건축정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책과제를 계획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단위에서 추진가능한 정책대상 여부를 계획 수립시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차이를 둔다면, 국가단위에서는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염두해 두고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제도적 측면, 행정프로세스, 기술개발 등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지역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간상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현황 및 공간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국가계획의 정책대상** : 법, 지침 및 기준, 행정프로세스 개선, 기술개발, 산업육상지원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
- **지역계획의 정책대상** : 지역 공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진단, 실질적으로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에 초점

□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관련법령 및 계획간 관계에 따른 범위 재설정

지난 5년간 건축정책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건축정책 부문별로 세분화된 법령에 의해 부문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동등한 위상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주택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국토계획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 등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상하위의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건축기본법상에서의 지역건축기본계획, 건축정책의 부문으로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계획 등
-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종합계획, 수도권 발전계획, 지역개발계획, 경관법에 의한 지역경관기본계획, 주택법에 의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 등
-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상하위의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해당하는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새롭게 설립되는 정책 지원기구 간 관계 정립

새롭게 제정된 건축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정책지원기구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녹색건축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있다.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중앙부처와 지역단위로 구분하되, 지원범위 및 방식에 대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구에서 각종 운영지침 및 기준,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기구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DB구축 및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전담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역발전연구원의 활용

계획수립뿐만이 아닌 성과점검 및 평가에 있어서 지역발전연구원의 역할은 키울 필요가 있다. 건축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행과정에서 별도의 담당 실무자가 부재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의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건축기본계획만을 추진·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발전연구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

을 어느정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제1차 지역건축기본계획에 의해 새롭게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전담지원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지자체 건축정책지원기구가 주거, 도시재생, 녹색건축 등 정책부문별 전문화된 지원기구 모두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건축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설립하여 앞서 설명한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실행주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 내실 있는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계획 실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과 성과점검은 지역건축정책이 초기 의도한 목적과 계획이 실제 시행·집행된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건축정책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경쟁력 및 도시브랜드 지수 등 국민 삶의 질 및 도시환경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와 연계하여 건축정책의 중요성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야 한다.

- 건축기본법의 개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본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등 4개 항목과 신규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전담 성과관리지원기구 지정’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 보완

지금까지 조사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전면 수정·보완안을 제안하였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건축정책의 성과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	15
1. 건축정책의 도입배경과 그간의 성과	15
1) 국내 건축정책의 추진과정	15
2) 지난 5년간의 중앙 및 지자체 건축정책 동향	19
3)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24
2. 해외 건축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43
1)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43
2) 덴마크의 건축정책	48
3) 노르웨이의 건축정책	56
4) 해외 건축정책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진단	63
3. 건축정책의 성과와 의미	67
4.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의의와 중요성	71

제3장 지역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 분석 및 성과점검75

1. 지역별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실행체계75
 - 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특징75
 - 2) 지역별 계획수립 주체 및 구성체계79
 - 3)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점검101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특징과 한계108

제4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당면문제와 원인111

1. 계획 실효성에 대한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111
 - 1) 조사개요111
 - 2) 조사결과113
2. 계획의 한계와 실행력 부족 원인126
 - 1) 계획구성 및 내용 자체의 문제126
 - 2)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129
 - 3) 실행주체 및 행정적 한계131

제5장 타 계획의 실행 및 관리 사례 분석133

1. 타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133
 - 1) 조사개요133
 - 2) 계획의 근거법과 관련법, 관련계획간 위계 설정136
2.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분석145
 - 1) 기본계획 수립 체계145
 - 2) 전담부서 운영 및 예산확보 전략148
 - 3) 성과관리체계152

제6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159

1. 건축정책의 대상 및 범위 재설정159
2.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161
 - 1) 신규 건축관련 법령 및 계획간 관계 정립161

2) 계획 실행 및 관리 전담주체 확보 방안	165
3) 내실 있는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168
4) 건축기본법 개정	171
5)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 보완	175
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안)	176

참고문헌	191
-------------------	------------

부록	201
-----------------	------------

부록1. 지역 건축기본계획 과제관리카드 예시	201
부록2.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개요	205
부록3. 관계실무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지	217
부록4. 전문가 자문의견	223
부록5. 타 법정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체계	228

표차례

[표 1-1] 국내 건축정책 관련 선행연구	5
[표 1-2] 전략계획 관련 선행연구	6
[표 1-3] 법정계획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	9
[표 1-4] 유럽 주요국의 건축정책 보고서	10
[표 2-1] 2010-2014 추진주체별 정책사업 발표동향	21
[표 2-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부분별 정책사업 발표 추이	22
[표 2-3] (부문)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관련 보도자료 추이	23
[표 2-4] (분야)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관련 보도자료 추이	24
[표 2-5]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자침	25
[표 2-6]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실적현황	26
[표 2-7] 법령에 의해 건축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과업	28
[표 2-8] 녹색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제도자침 주요 내용	30
[표 2-9] 도시재생 분야의 주요 제도자침 주요 내용	30
[표 2-10] 도시경관 분야의 주요 제도자침 주요 내용	31
[표 2-11] 공공건축 분야의 주요 제도자침 주요 내용	32
[표 2-12] 일반건축물 분야의 주요 제도자침 주요 내용	32
[표 2-13] 안전환경 분야의 주요 제도자침 주요 내용	33
[표 2-14] 도시관리 분야의 주요 제도자침 주요 내용	34
[표 2-15]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주요 제도자침 주요 내용	34
[표 2-16] 건축문화 분야의 주요 제도자침 주요 내용	35
[표 2-17]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분야의 주요 성과	36
[표 2-18] 전문인력 육성 분야의 주요 성과	38
[표 2-19] 건축문화 행사 분야의 주요 성과	39

[표 2-20] 건축교육 분야의 주요 성과	41
[표 2-21] 유럽과 국내의 건축정책 성과 비교	64
[표 2-22] 건축기본법 실행수단에 따른 성과와 의미	68
[표 2-23]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69
[표 2-24] 국가자산 규모	71
[표 3-1] 지역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특징	77
[표 3-2] 각 지자체별 계획수립과정	80
[표 3-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82
[표 3-4]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한 세부 조사내용	83
[표 3-5]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문에의 계획 반영사항	87
[표 3-6]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부문에의 계획 반영사항	88
[표 3-7]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부문에의 계획 반영사항	89
[표 3-8]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과제와 지자체 건축기본계획 세부단위과제와의 관련성	90
[표 3-9] 지자체 계획실행예산	95
[표 3-10]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안)	99
[표 3-1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 점검	101
[표 3-12] 지역건축기본계획 관련 정책보도자료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성과 검토	103
[표 4-1]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 세부항목(안)	112
[표 4-2] 설문응답자 특성	113
[표 4-4] 타 관련 계획간의 관계 및 위상에 대한 인식	114
[표 4-5] 지역별 특성 반영 정도	116
[표 4-6] 실행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116
[표 4-7] 기본계획 실효성에 대한 인식	118
[표 4-8] 지자체장의 계획 실행에 대한 추진의지	120
[표 4-9] 기본계획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	121
[표 4-10]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124
[표 5-2]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체계	145
[표 5-3]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체계	147
[표 5-4] 계획의 전담부서 운영 여부	149

[표 5-5] 중앙부처 계획의 예산안 및 예산확보 방안	150
[표 5-6] 지방자치단체 계획의 예산안 및 예산확보 방안	151
[표 5-7]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방식	152
[표 5-8] 정성 및 정량적 평가방식의 계획(중앙부처)	154
[표 5-9] 정성적 평가방식의 계획	156
[표 5-10] 정량적 평가방식의 계획	157
[표 6-1] 정책지원기구의 역할 및 관계 현황	163
[표 6-2] 타 지자체 건축기본계획상의 건축정책 지원기구 현황	167
[표 6-3] 지역건축기본계획의 3개 부문 점검사항	171
[표 6-4] 건축기본법 개정방향	171

그림차례

[그림 1-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2
[그림 1-2] 연구 흐름도	14
[그림 2-1]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16
[그림 2-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7
[그림 2-3]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18
[그림 2-4] 국가건축정책의 추진경위	19
[그림 2-5] 2010~2014 추진주체별 정책사업 발표동향	20
[그림 2-6] 기관별 발표에 따른 부문별 정책사업 발표 추이	22
[그림 2-7]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관련 보도자료 추이(부문별)	23
[그림 2-8]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관련 보도자료 추이(분야별)	24
[그림 2-9] 건축·도시 관련 법률 제·개정 연표	27
[그림 2-10] 건축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주제별 연대순 자침 및 제도(2010~2015)	29
[그림 2-11] 유럽건축정책 동향 및 우리나라 건축정책의 현재	66
[그림 2-12] 건축정책 주요 성과 및 추진 경위	69
[그림 2-13]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출처 : IPCC, 기후변화 2007 종합보고서)	72
[그림 2-14] 산업별 고용 및 부가가치 효과	73
[그림 2-15] OECD 국가의 건축설계산업 사업체 당 매출실적 비교	74
[그림 3-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75
[그림 4-1] 동등한 법적 위상으로 개별적인 관계	114
[그림 4-2] 일부의 계획 및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114
[그림 4-3]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으로서 관계	114
[그림 4-4] 일부계획과는 동등한 위상이나 일부와는 상하위 관계	114

[그림 4-5] 타 계획간의 관계	114
[그림 4-6] 기본계획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 및 정책분야에 관한 인식	115
[그림 4-7] 기본계획의 지역별 특성 반영에 대한 인식	116
[그림 4-8] 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	116
[그림 4-9]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절차 중요성 우선순위	117
[그림 4-10] 기본계획 조사항목별 중요도	118
[그림 4-11] 기본계획 실효성에 대한 인식	118
[그림 4-12] 계획 실행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119
[그림 4-13] 지자체장의 계획 추진의지	120
[그림 4-14] 합리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방법	120
[그림 4-15] 성과관리의 필요성	120
[그림 4-16] 계획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원인	122
[그림 4-17]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추진경위	128
[그림 4-18] 건축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관계	129
[그림 4-19]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간의 관계	130
[그림 5-1]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기본계획, 관련계획간 위계	137
[그림 5-2] 환경정책기본법과 기본계획, 관련법 및 계획간 위계	139
[그림 5-3] 양성평등정책 기본법과 기본계획	141
[그림 5-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법간 관계	144
[그림 6-1] 지역건축기본계획 성과관리 참여주체별 역할 및 기능	170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난 5년간의 건축정책 성과

2008년 6월,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건축의 품격 및 품질, 도시경관 향상 등을 목표로 국가차원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2010년 5월에 수립되었다. 광역시·도에서는 지난 5년간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활발히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11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가장 큰 성과로는 건축분야의 다양한 법령 및 제도가 마련되어 건축정책을 세분화한데 의의가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2012.2월)을 비롯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20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6월) 등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마다 새로운 건축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등 건축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각 법률에 근거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다수의 정책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건축진흥원,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건축정책을 수행할 다양한 기구도 마련될 계획이다.



[그림 1-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출처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기별 정리(저자작성)

□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 및 성과관리의 취약성

성과관리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2010년~2012년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2013년~2014년 성과에 대해서도 현재 보고 준비 중이다.

건축정책기본계획 113개 단위실천과제 중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한 결과, 약 81%인 92개 사업이 수행 완료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의 건축정책 성과는 건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경우,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는 자체적인 점검 TF팀을 구성하여 그간 성과를 일부 검토한바 있으나 이는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에 그쳤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계획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건축정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계획수립 및 정책시행 자체도 중요하지만 계획된 정책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는 건축정책의 실행력 확보,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 자료이다. 건축정책이 실질적으로는 지역에서 구현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제1차 건축정책이 완료되는 현시점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 성과에 대해 면밀히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행정적,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를 근거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거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체계적으로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실무자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이후 그간 이루어 온 정책적 효과 및 계획자체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기 위해 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추진체계, 예산계획 등 기존 계획방식에서의 행정적, 제도적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관련 계획 간의 관계 정립,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수정, 계획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종합·분석하여 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향 제안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원인을 도출하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건축정책이 시작하게 된 필요성 및 추진경위 분석, 국내·외 건축정책 추진 동향 및 국가별 계획내용, 실행 및 성과관리 체계, 전략계획으로서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의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건축정책기본계획이 국가경쟁력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정책임을 입증하며, 지속적으로 발전·관리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시·도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과 성과에 대한 분석, 건축정책을 기 추진한 유럽 주요국의 정책프로그램과 국내 정책성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계획수립시점,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와 내용, 타 법령에 의한 관련 계획 간의 관계 재정립, 건축기본법 개정방향, 관련 기관별 역할,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유도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지속적으로 발전·관리되어야 할 당위성 및 중요성 입증**
 - 건축정책이 시작하게 된 필요성 및 추진경위 분석
 - 국내·외 건축정책 추진동향 및 국가별 계획내용, 실행 및 성과관리 체계 분석
 - 전략계획으로서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의의 및 지속적으로 발전·관리되어야 할 당위성 제시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 및 내용, 성과에 대한 분석**
 - 광역시·도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 및 방법,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계획간의 관계, 예산계획 수립, 실행주체 및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
 - 유럽 주요국의 건축정책 프로그램과 국내 정책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건축정책을 먼저 시행한 유럽 주요국별 계획 구성 특징, 실행 및 성과관리 관련 시사점 도출
 -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
 - 계획내용 및 성과분석, 관련 지자체 실무자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관련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건축기본계획의 정책적 실효성 평가
 - 계획 활용도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개선 방향 도출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계획수립 지침 전면수정**
 - 계획수립시점, 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범위와 내용, 타 법령에 의한 관련 계획 간 관계 재정립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방향,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부서의 역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건축위원회 등 관련 기관별 역할,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등 다양한 정책대안 제안
-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국내 건축정책 관련 선행연구

그간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 2010~2012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등 국가차원의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기초연구 및 국회보고서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국내외 정책이슈에 대한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는 연구가 있었으나 ‘건축정책’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것은 국내에서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문화관광연구원을 중심으로 건축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 11개 지자체에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1] 국내 건축정책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제명: 제1차 건축정책기본 계획2012-2014•연구자(년도): 국토해양부 (2010)•연구목적: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법·제도 재개정•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TF팀 운영•대국민 인식조사•중앙부처·지자체 소관별 시책 조사•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부처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의 구현을 위하여 3대목표와 6대 전략을 제시하고 18개 실천과제를 도출•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및 세부 사업 도출•실천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수립
	2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제명: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연구자(년도):김상호,김영현 (2009)•연구목적: 2010년 시행을 목표로 수립중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내·외 성과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조사·분석•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분석•정책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검토•해외 주요국의 정책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운용현황 파악 및 분석•국내 법정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및 운영사례 조사·분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제명: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 연구•연구자(년도): 조상규, 김영현(2012)•연구목적: 2007년에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선행연구 검토•국·내외 사례조사 및 국토교통부 내부 사업점검 자료 및 추진자료, 성과계획서 등 조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건축정책기본계획 단위과제별 사업추진 현황 조사 분석•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된 건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 단위과제별 주요 성과 내용을 2년마다 모니터링 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 건축환경, 문화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 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 • 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조상규 외 (2013) • 연구목적: 국가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한 국내 건축도시 분야의 여건변화를 검토하고,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정책 아젠다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조사 • 건축, 도시 조경 등 건축정책 관련분야별 전문가 설문조사 • 건축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미래의 메가트렌드에 대해 STEEP법에 의해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영역으로 미래변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성과 • 국가사회적 건축정책 여건변화와 미래전망 • 전문가가 전망하는 건축정책의 방향 • 새 정부 국정과제와 건축정책

□ 전략계획의 성과관리 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전략계획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지자체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전략계획 활용방안을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방안(이병기·김진위, 2006)” 과 영월군을 대상으로 전략기획 접근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전략기획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윤정길·유무정2003)”, 서울시 정책발연구원의 “공공조직의 전략기획체제 구축 방안(나태준·김성준, 2003)”, “지역개발 부문에 전략계획 방법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김홍순, 2002)”, “전략계획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안태환, 2002)”, “전략계획 특성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재녕, 2001)”,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변화관리를 위한 전략기획의 활용방안(안영훈·장은주, 2000)”, “전략적 관리와 목적달성에 의한 정책평가의 방향(노화준, 2000)” 등이 있다.

[표 1-2] 전략계획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방안 •연구자(년도) : 이병기·김건위 (2006) •연구목적 : 전략계획 고려사항 또는 작성지침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실제 전략계획 수립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의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자치단체 계획수립 관련 보고서 분석 •설문조사, 외국문헌의 실증적 문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계획과정과 민간 전략계획의 종류와 이의 공공부문에서의 적용가능성 도출 •전략계획 이론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계획체제상의 문제점 조사·분석 •전략계획 방식을 적용한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전략기획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 윤정길·유무정 (2003) •연구목적 : 영월군을 대상으로 전략기획의 접근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능력형성, 발전방안, 비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담당자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의 이론적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전략기획 분석틀을 통한 영월군의 SWOT분석 및 지역주민, 공무원 설문조사·분석 •분석결과를 통한 전략적쟁점 도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공공조직의 전략기획체계 구축 방안 •연구자(년도) : 나태준·김성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연구목적 : 공공부문의 비능률성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략기획체제의 서울시 적용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 전략기획체계 벤치마킹 사례조사 •국내의 전략기획 도입성과 평가를 위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서울시 기획체제 및 기획수준 진단을 위한 설문 및 면접조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련 특성 및 현황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기획 도입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사례를 통해 공공조직의 전략기획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적인 청사진 제시 •전략기획체계에 적합한 조직의 구축방안, 운영전략, 전략기획체제의 서울시 적용방안 제시 •서울시 문화국을 시범 선정하여 전략적 기획체제 적용 및 결과도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지역개발 부문에 전략계획 방법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구자(년도) : 김홍순 (2002) •연구목적 : 전략계획 방법론을 지역개발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을 비판적 차원에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계획 개념의 이론적 고찰 •문헌연구를 통한 지역개발 부문에 채용가능한 전략계획 방법과 기존방법 비교 •문헌연구를 통한 전략계획의 적용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계획에 대한 기존문헌 분석·비교를 통해 개념, 도입방안, 기대효과, 한계, 구성 등 지역개발 부문에서의 전략계획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전략계획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 •연구자(년도) : 안태환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계획의 이론적 고찰을 통한 분석의 틀 도출·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계획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단체장의 역할, 과제, 바람직한 리더십에 대한 분석의 틀 도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지차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한 과제,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 단체장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고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전략계획 특성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 이재녕(2001) •연구목적 :현행 재건축과 관련된 법규를 중심으로 기존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략계획 모형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고찰 •해외 재건축 관련 사례조사 •현지실태조사 •주민면담, 설문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건축 관련 문헌연구를 통한 변천과정, 추진과정 검토 •대구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실태조사, 주민대상 설문조사 •전략계획의 의의, 특성 관련 문헌연구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행가능한 대안 모색 •최근 법제도 고찰을 통해 현실적인 전략계획적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 모색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지방자치단체 변화관리를 위한 전략기획의 활용방안 •연구자(년도) : 안영훈·장은주(2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목적 : 외국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략적인 기획 방법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고찰 •중앙, 지방의 기본 발전기획 및 자치발전계획 정책내용 분석 •해외 사례조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의 개념, 중요성, 필요성에 관한 이론 검토 •우리나라 발전계획, 지방자치 실시 후 발전기획과정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전략기획과정 활용방안 모색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전략기획의 개념, 활용가치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변화관리를 위한 전략기획 활용방안 제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도시계획수립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자(년도) : 안태환(1997) •연구목적 : 전략계획적 관점에서 우리의 도시계획수립상의 문제점 분석·개선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문헌연구를 통한 이론 고찰 •도시계획 관련 보고서 고찰 •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법정 및 비법정계획서, 자치구 계획서, 관련기관 연구보고서 문헌조사·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한 계획수립상의 문제점 규명

법정계획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시행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이용우, 2007)”와 건설교통부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2002)”,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구축 연구(2005)”, 국무조정실의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2006)”,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영근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2003)”, 한

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건설교통부가 협동으로 수행한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2006)” 등이 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과제 및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수의 연구보고서 및 성과보고서가 있으나 건축정책에 대한 실행 및 성과관리 체계에 대해 선행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표 1-3] 법정계획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 이용우(2007) •연구목적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 및 활용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UN, OECD, 영국, 독일 등 해외사례연구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 전문가 설문,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 설문, 공청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유시지표 사례연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모형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안) 설정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안) 산정 및 목표치 설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구축 연구 •연구자(년도) : 김성일, 국토연구원(2005) •연구목적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건설교통 부문 재정사업의 자율평가 체계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사례조사 및 국토해양부 내부 사업점검 자료 및 추진자료, 성과계획서 등 조사·분석 •연구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담당자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개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성과지표의 적용현황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및 성과지표 개선방안 제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자(년도) : 김성일 외 (2007) •연구목적 : 건설교통부문의 재정과 성과를 연계하는 성과지향형 예산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방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문헌조사, 면담조사, 실증분석을 수행 •각종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 연구협의회 구성 운영, 관계자 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평가제도의 개요 •국내외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관리제도 사례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설명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안

□ 해외 건축정책 관련 선행연구

유럽연합(EU)회원국을 중심 영국,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건축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유럽 건축정책의 추진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법률(legislation), 부분정책(sectoral policy), 종합정책(comprehensive policy)로 나뉘며, 이 중 국내 건축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인 종합정책에 해당하는 국가계획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표 1-4] 유럽 주요국의 건축정책 보고서

구 분	건축정책 공식문서 채택 현황		
	정책 존재 유형	세부 정책기본계획	정책 관련 공식문서 수
프랑스	법률(legislation)	Law on Architecture(1977)	1
영국	부분정책 (sectoral policy)	World Class Places – The government's strategy for improving quality of place(2009)	1
스코틀랜드	종합정책 (comprehensive policy)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2001), Building our Legacy, Statement on Scotland's Architecture Policy(2007)	2
북아일랜드	종합정책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for Northern Ireland(2006)	1
아일랜드	종합정책	Action on Architecture: 2002–2005, Government Policy on Architecture 2009–2015:a Sustainable Future Delivering Quality within the Built Environment	2
핀란드	종합정책	Finland's Architectural Policy(Finlands Arkitekturpolitik)(1998)	1
네덜란드	종합정책	Ruimte voor Architectuur(1991–96), De architectuur van de ruimte(1997–2000), Ontwerpen aan Nederland(2001–04), Actieprogramma Ruimte en Cultuur(2005–08), Een cultuur van ontwerpen(2009–12)	5
덴마크	종합정책	Danish Architecture Policy(Dansk Arkitekturpolitik)(1994), Architecture 1996(Arkitektur 1996), Nation of Architecture Denmark(Arkitekturation Danmark)(2007)	1
노르웨이	종합정책	Surroundings as Culture: Action Programme for Aesthetics in Public Environment(1992), Aesthetics in Government Building and Constructions [Estetikk i statlige bygg og anlegg](1997), Architecture.now(2009)	1
에스토니아	종합정책	The Architectural Policy of Estonia(2002)	1
유럽연합	성과보고서	Survey on Architectural Policies in Europe(2012)	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건축기본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고, 건축정책이 국내에 도입되는 초창기에는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건축정책의 필요성 및 해외 건축정책 사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2010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국내에서 ‘건축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간 국가단위에서의 정책성과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기초조사연구,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분야의 미래전망에 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 지역단위에서의 건축기본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계획의 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 수립된 건축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자체가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지역별 수립된 건축기본계획의 실행과정에서 부족한 정책적·제도적 문제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건축정책이 단순한 법정계획으로써 형식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닌 지역 건축 품질 향상 및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전략계획으로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검토는 국내외 연구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하되, 건축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로 한정하였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수립이 완료된 11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계획 수립과정 및 실효성에 대한 관계전문가 인식조사 범위의 경우,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는 지자체, 준비 중인 지자체 모두 포괄하여 조사하였다.

□ 내용적 범위

국내외 건축정책 동향의 경우, 해외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시점까지의 유럽 주요국의 건축정책 주요 흐름에 대해 추진주체, 정책 추진방식, 정책내용, 성과관리 측면에서 검토하고, 국내 건축정책 동향은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략계획의 정책적 효과와 계획운영방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 유사한 타 분야 전략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체계 사례조사를 통해 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 문헌조사를 토대로 전략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타 분야 법정 계획의 수립과정, 상·하위 계획간, 관련계획간 역할 및 관계 정립, 성과관리 체계,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계획 실행 및 관리 주체의 설정 등을 다각적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지역건축기본계획 분석의 경우, 11개 지자체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정, 지역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 상위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계획 내용의 구성, 참여 사군 및 부서 등의 실행체계, 성과관리 체계 등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실무자, 지역 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산·학·연 전문가 대상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원인,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기본법 개정(안)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 수정안을 비롯하여 계획 실효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부서, 지자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방법

□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

전략계획 수립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국가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보고서에 대한 내용 및 특성을 검토하고, 중앙 및 지자체 보도자료 분석 등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 5월~2014년 12월까지의 전국 광역·시·도 건축정책보고서를 검토하고, 2010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앙 및 지자체에서 발표한 정책 보도 자료(2014년 12월 기준 중앙부처에서 725건, 지방자치단체 1,809건)를 분석하였다.

□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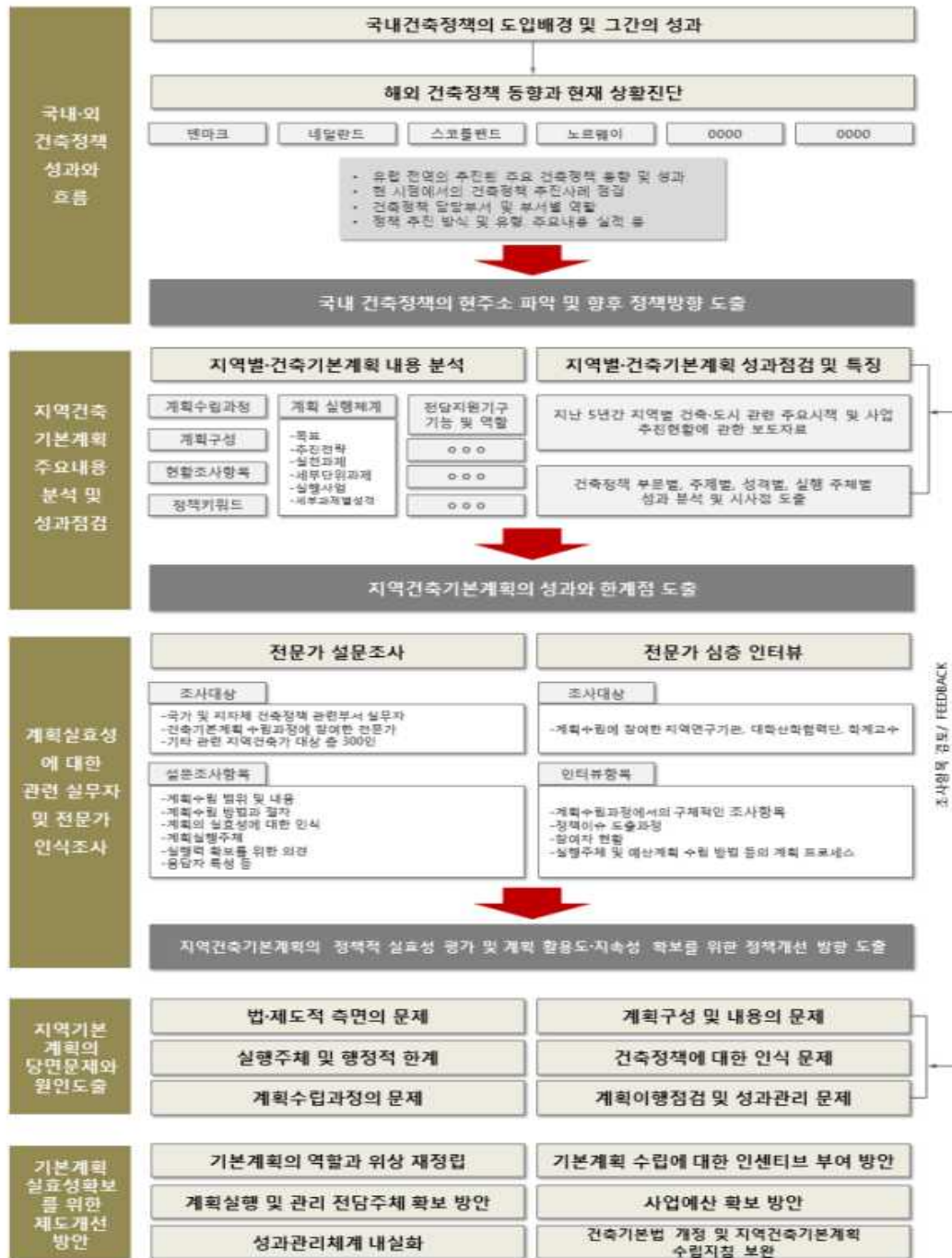
지자체 관련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정책성과를 점검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정책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진이 마련한 1차 성과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 해당 지역 관련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추가적인 성과를 점검하였다.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지역발전연구기관, 대학산학협력단, 학계교수 등 연구진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자체 건축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별 주관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정책이슈 도출과정, 참여자 현황, 실행주체 및 예산계획 수립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프로세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 지역별 계획수립 참여 전문가 및 실무자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주체인 지자체 실무담당자, 지역발전연구기관 간 계획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본계획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연구 흐름도



[그림 1-2] 연구 흐름도

제2장 건축정책의 성과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

1. 건축정책의 도입배경과 그간의 성과
2. 해외 건축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3. 건축정책의 성과와 의미
4.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의의와 중요성

1. 건축정책의 도입배경과 그간의 성과

1) 국내 건축정책의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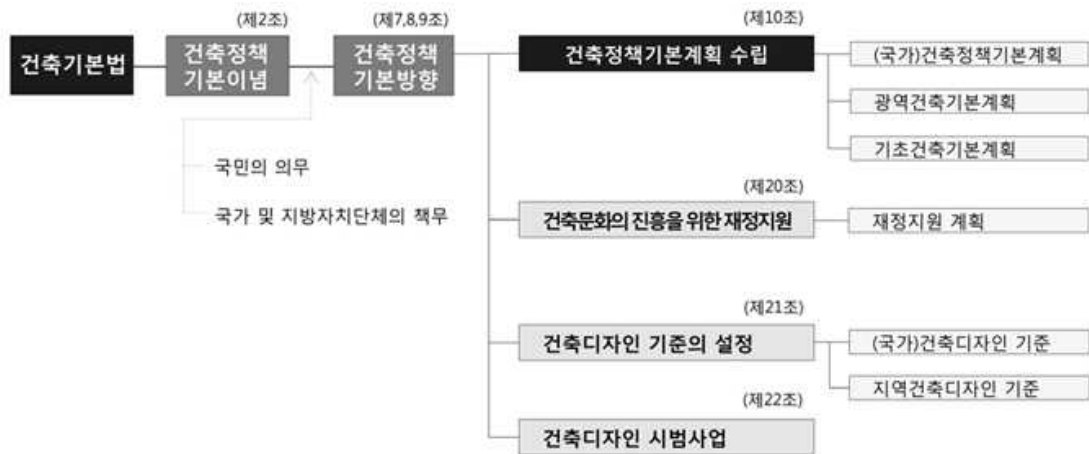
□ 건축정책 개념의 등장

건축정책은 최초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간 유럽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핀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영국 등 16개 국가가 건축정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 외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등 14개국 이 국가차원에서의 건축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건축물의 공공적·사회적 역할 정립, 건축물과 공공공간의 통합적 관리, 문화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건축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되고, 2010년 국가차원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를 주무 부처로 건축·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시·도에서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거나 계획 수립 준비 중이다.



[그림 2-1] 건축기본법과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 체계

*출처 : 김상호 외(2008), 질적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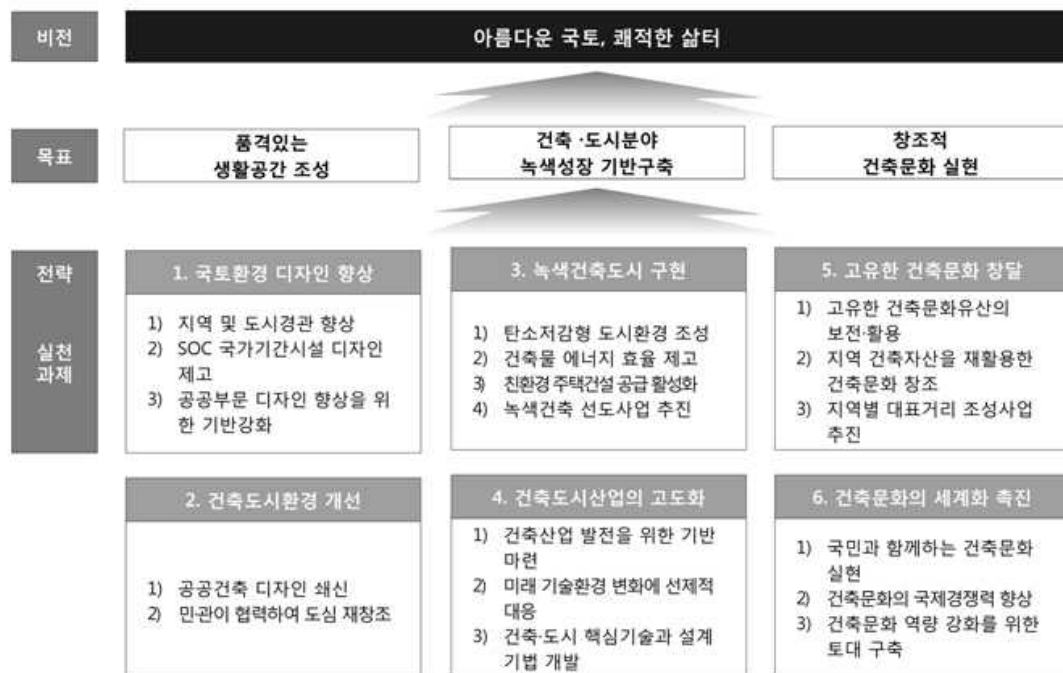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추진경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2010년 5월에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2년 만에 수립되었다.¹⁾ 이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 건축계에서는 당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건축계 전문가들의 모든 관심이 모아졌었다. 산·학·연·관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구조 및 환경 등 엔지니어링, 건설, 공공디자인, 조경계획 및 설계 분야 등 각계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TF가 구성되어 20여 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건축아젠더를 발굴하고, 5년간 실천해야 할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 목표로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6대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 113개 세부단위과제로 구성된 계획을 수립하였다.

1)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 전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건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간적인 계획범위로는 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까지 포함하는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내용은 기본적으로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15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문에서는 도시경관, SOC시설의 디자인,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디자인, 도시재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부문은 녹색건축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저감방안, 친환경 주택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계기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부문에서는 한옥 등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 건축문화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그림 2-2]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출처 : 국토해양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p.22.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관계 전문가 TF팀이 구성되어 계획안을 마련하고, 2015년 5월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제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보면 구성체계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정책목표에서 다루는 정책대상 및 범위도 1차 계획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제2차 계

획에서는 새로운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창조경제’, ‘문화융성’과 연계하여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추진전략은 1차 계획보다 세분화되어 9대 추진전략, 24개 실천과제, 68개 세부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출처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5.5.22),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2014-2019), p.34,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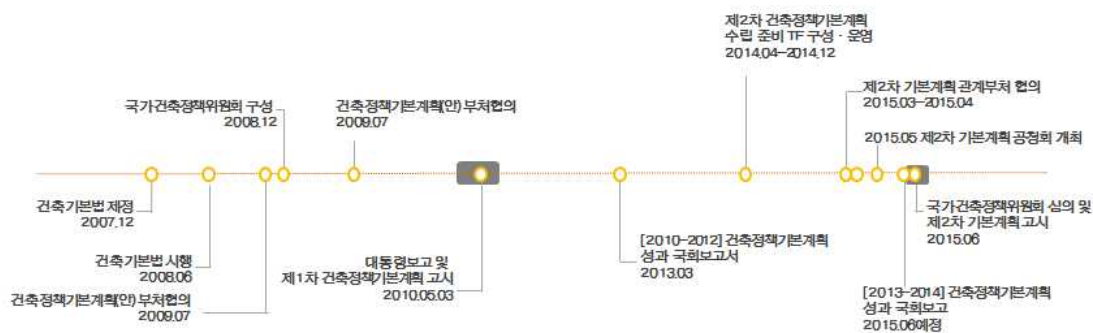
제2차 기본계획은 정책 대상 및 이슈에 있어서 1차 계획과 차별을 두고 있다. 우선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했던 ‘안전’, ‘복지’, ‘통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현안 이슈를 건축정책과 접목을 시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행복한 건축 실현’ 부문에서는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건설과정 및 실내 건축환경에서의 안전관련 기준 강화, 건축분야 종사자의 건축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리뉴얼 촉

진을 위한 건축분야의 규제 완화, 복지 증진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부문에서는 공공건축에 대한 디자인 향상, 녹색건축에 대한 기준 강화와 함께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육성’ 부문에서는 제1차 계획과 연계되어 지역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건축문화교육, 국토경관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건축분야의 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4] 국가건축정책의 추진경위

*출처 :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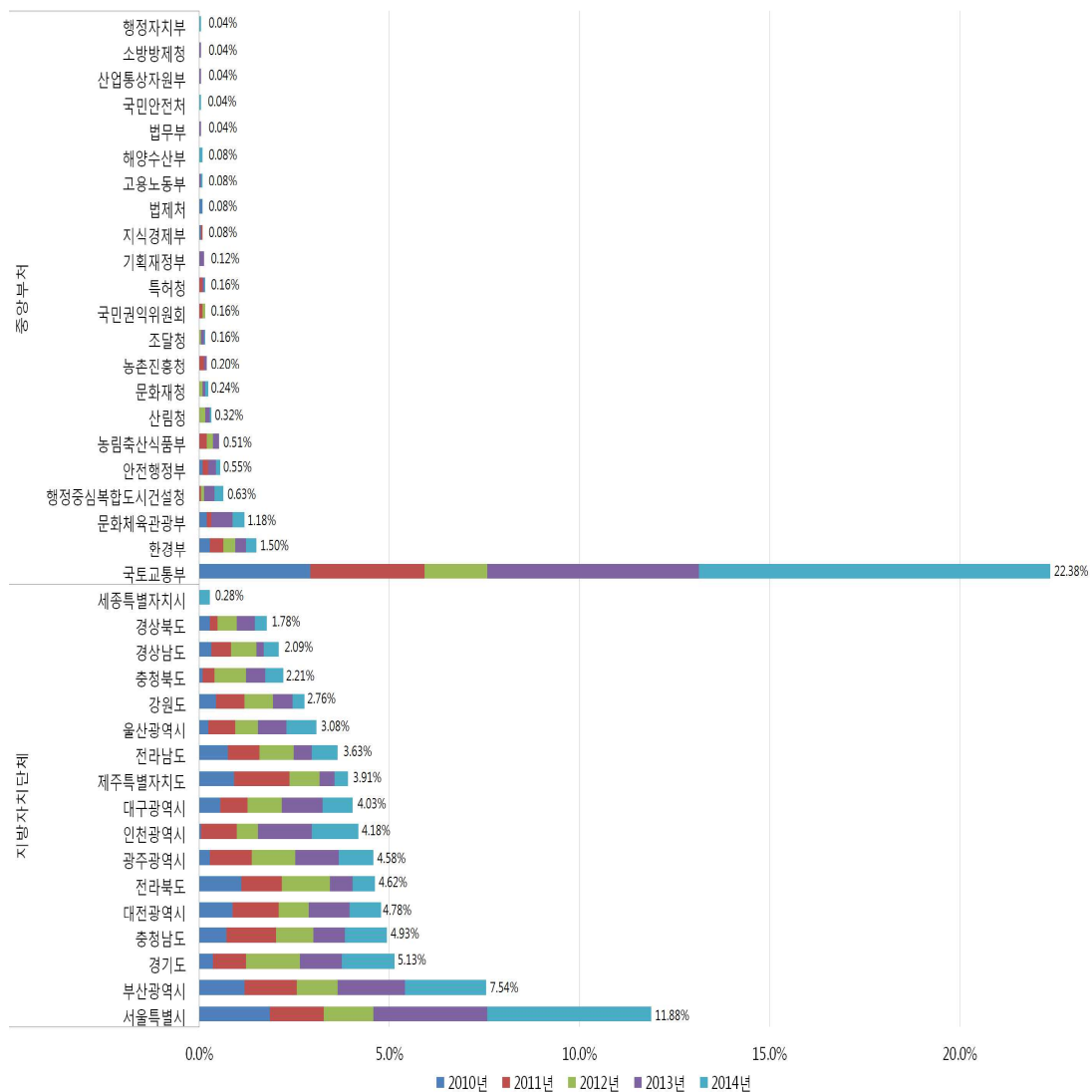
2) 지난 5년간의 중앙 및 지자체 건축정책 동향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축정책의 동향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였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발표 건축·도시 관련 보도 자료를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국토환경디자인’ 등 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따라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정책성격에 따라 ①계획수립, ②법제도 개선, ③사업추진 및 지원, ④시스템 구축, ⑤연구 및 교육, ⑥행사 및 홍보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집·조사·분석하였다.²⁾

2) 정책 보도자료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 5월 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진이 분류해 왔으며, 정책동향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 정책 보도자료에서 관리하고 있다.

□ 추진주체별 건축정책 동향

지난 5년간 22개 중앙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534건의 건축·도시 관련 사업 및 시책을 발표하였다. 중앙부처에서 725건(28.6%), 지방자치단체에서 1,809건(71.4%)의 정책사업이 발표되었으며, 건축·도시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발표가 많았던 부처는 국토교통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순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순이었다.(그림2-5, 표 2-1 참조)



[그림 2-5] 2010-2014 추진주체별 정책사업 발표동향

*출처 :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정책 보도자료의 내용 정리(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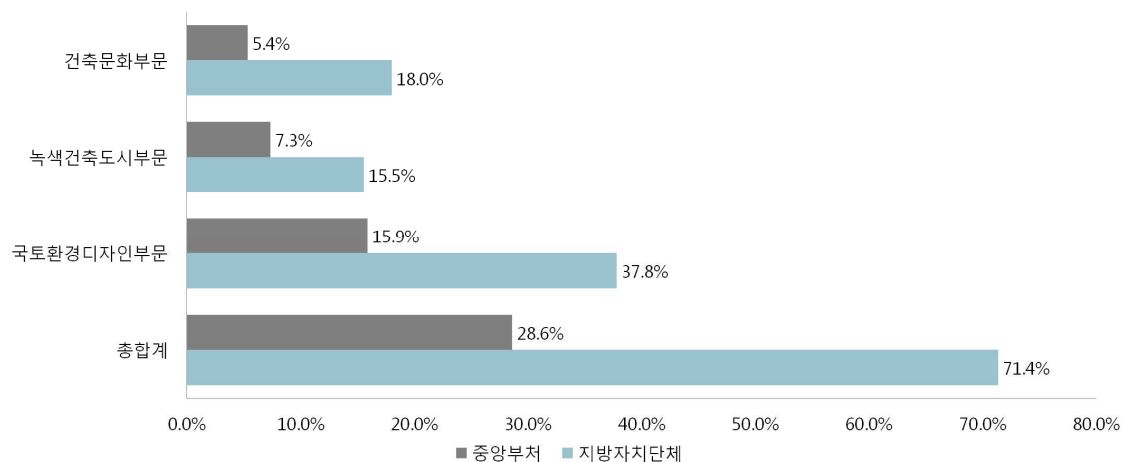
[표 2-1] 2010-2014 추진주체별 정책사업 발표동향

구분	추진주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중앙부처 (22)	국토교통부	74(2.92%)	76(3.00%)	42(1.66%)	141(5.56%)	234(9.23%)	567(22.38%)
	환경부	7(0.28%)	9(0.36%)	8(0.32%)	7(0.28%)	7(0.28%)	1.50%
	문화체육관광부	5(0.20%)	3(0.12%)	—	14(0.55%)	8(0.32%)	1.1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1(0.04%)	2(0.08%)	7(0.28%)	6(0.24%)	0.63%
	안전행정부	2(0.08%)	4(0.16%)	—	5(0.20%)	3(0.12%)	0.55%
	농림축산식품부	—	5(0.20%)	4(0.16%)	4(0.16%)	—	0.51%
	산림청	—	—	4(0.16%)	3(0.12%)	1(0.04%)	0.32%
	문화재청	—	—	2(0.08%)	2(0.08%)	2(0.08%)	0.24%
	농촌진흥청	—	3(0.12%)	—	2(0.08%)	—	0.20%
	조달청	—	—	1(0.04%)	2(0.08%)	1(0.04%)	0.16%
	국민권익위원회	—	2(0.08%)	2(0.08%)	—	—	0.16%
	특허청	—	2(0.08%)	—	1(0.04%)	1(0.04%)	0.16%
	기획재정부	—	—	—	3(0.12%)	—	0.12%
	지식경제부	1(0.04%)	1(0.04%)	—	—	—	0.08%
	법제처	2(0.08%)	—	—	—	—	0.08%
	고용노동부	—	—	—	1(0.04%)	1(0.04%)	0.08%
	해양수산부	—	—	—	—	2(0.08%)	0.08%
	법무부	—	—	—	1(0.04%)	—	1(0.04%)
	국민안전처	—	—	—	—	1(0.04%)	1(0.04%)
	산업통상자원부	—	—	—	1(0.04%)	—	1(0.04%)
	소방방재청	—	—	—	1(0.04%)	—	1(0.04%)
	행정자치부	—	—	—	—	1(0.04%)	1(0.04%)
	합 계	91(3.59%)	106(4.18%)	65(2.57%)	195(7.70%)	268(10.55%)	725(28.61%)
지방자치 단체 (17)	서울특별시	47(1.85%)	36(1.42%)	33(1.30%)	76(3.00%)	109(4.30%)	301(11.88%)
	부산광역시	30(1.18%)	35(1.38%)	27(1.07%)	45(1.78%)	54(2.13%)	191(7.54%)
	경기도	9(0.36%)	22(0.87%)	36(1.42%)	28(1.10%)	35(1.38%)	130(5.13%)
	충청남도	18(0.71%)	33(1.30%)	25(0.99%)	21(0.83%)	28(1.10%)	125(4.93%)
	대전광역시	22(0.87%)	31(1.22%)	20(0.79%)	27(1.07%)	21(0.83%)	121(4.78%)
	전라북도	28(1.10%)	27(1.07%)	32(1.26%)	15(0.59%)	15(0.59%)	117(4.62%)
	광주광역시	7(0.28%)	28(1.10%)	29(1.14%)	29(1.14%)	23(0.91%)	116(4.58%)
	인천광역시	1(0.04%)	24(0.95%)	14(0.55%)	36(1.42%)	31(1.22%)	106(4.18%)
	대구광역시	14(0.55%)	18(0.71%)	23(0.91%)	27(1.07%)	20(0.79%)	102(4.03%)
	제주특별자치도	23(0.91%)	37(1.46%)	20(0.79%)	10(0.39%)	9(0.36%)	99(3.91%)
	전라남도	19(0.75%)	21(0.83%)	23(0.91%)	12(0.47%)	17(0.67%)	92(3.63%)
	울산광역시	6(0.24%)	18(0.71%)	15(0.59%)	19(0.75%)	20(0.79%)	78(3.08%)
	강원도	11(0.43%)	19(0.75%)	19(0.75%)	13(0.51%)	8(0.32%)	70(2.76%)
	충청북도	2(0.08%)	8(0.32%)	21(0.83%)	13(0.51%)	12(0.47%)	56(2.21%)
	경상남도	8(0.32%)	13(0.51%)	17(0.67%)	5(0.20%)	10(0.39%)	53(2.09%)
	경상북도	7(0.28%)	5(0.20%)	13(0.51%)	12(0.47%)	8(0.32%)	45(1.78%)
	세종특별자치시	—	—	—	—	7(0.28%)	7(0.28%)
	합 계	252(9.94%)	375(14.80%)	367(14.48%)	388(15.31%)	427(16.85%)	1809(71.39%)
총 계		91(13.54%)	106(18.98%)	65(17.05%)	195(23.01%)	268(27.43%)	725(100.00%)

※세종특별자치시의 보도자료는 2014년 1월 부터 수집

*출처 :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 정책 보도자료의 내용 정리(저자작성)

모든 부문에서 지자체 발표 정책사업이 중앙부처의 정책사업보다 과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국토환경디자인’ 부문과 ‘건축문화’ 부문의 정책사업은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점 발표된 부문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과제로 중앙부처의 경우 전체 28.6% 중 15.9%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과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71.4% 중 37.8%의 정책과제가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이었다.



[그림 2-6] 기관별 발표에 따른 부문별 정책사업 발표 추이

*출처 :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정책 보도자료의 내용 정리(저자작성)

[표 2-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부문별 정책사업 발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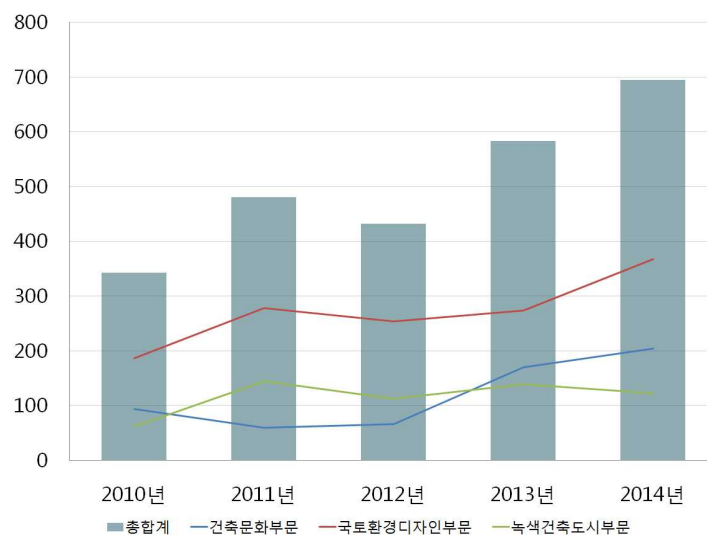
구분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국토환경디자인	총합계
중앙부처	136(5.4%)	403(15.9%)	186(7.3%)	725(28.6%)
지방자치단체	457(18.0%)	958(37.8%)	394(37.8%)	1809(71.4%)
계	593(23.4%)	1361(53.7%)	580(22.9%)	2534(100.0%)

*출처 :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정책 보도자료의 내용 정리(저자작성)

□ 정책부문별, 성격별 동향

3대 정책목표 부문별로는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녹색건축도시’ 부문, ‘건축문화’ 부문 중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사업이 매년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추세이다. 그림 2-3, 표 2-3과 같이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은 2010년 187건(54.5%), 2011년 278건(57.8%), 2012년 254건(58.8%), 2013년 274건(47.0%), 2014년 368건(52.9%)로 5년간 총 1,361건(53.7%)를 차지하고 있다.

‘녹색건축도시’ 부문의 정책사업과 ‘건축문화’ 부문의 정책사업은 매년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지만,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녹색건축도시’ 부문의 정책사업이 각 144건(29.9%)과 112건(25.9%)로 ‘건축문화’ 부문의 정책사업보다 많았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강조한 정책기조에 의해 2011년과 2012년도에 녹색건축도시에 대한 성과가 다수 발표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7]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관련 보도자료 추이(부문별)

*출처 :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정책 보도자료의 내용 정리(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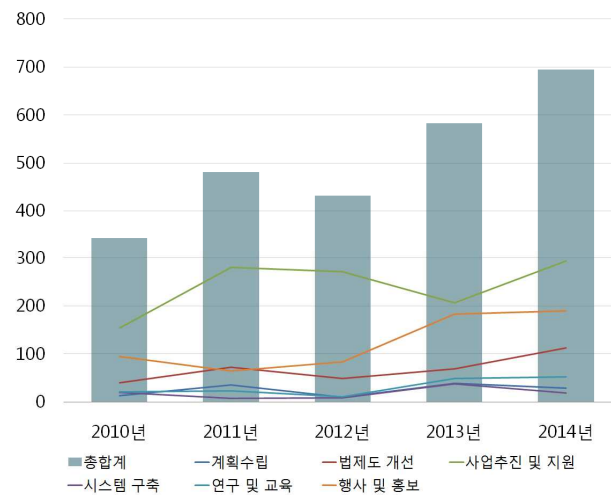
[표 2-3] (부문)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관련 보도자료 추이

년도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국토환경디자인	합 계
2010년	94(27.4%)	62(18.1%)	187(54.5%)	343(100.0%)
2011년	59(12.3%)	144(29.9%)	278(57.8%)	481(100.0%)
2012년	66(15.3%)	112(25.9%)	254(58.8%)	432(100.0%)
2013년	170(29.2%)	139(23.8%)	274(47.0%)	583(100.0%)
2014년	204(29.4%)	123(17.7%)	368(52.9%)	695(100.0%)
년도 총합	593(23.4%)	580(22.9%)	1361(53.7%)	2534(100.0%)

*출처 :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정책 보도자료의 내용 정리(저자작성)

정책성격별로는 ‘사업추진 및 지원’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행사 및 홍보’ 분야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밖에 ‘계획수립’ ,

‘법·제도 개선’,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교육’ 분야의 정책사업은 큰 변동없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2-8]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관련 보도자료 추이(분야별)

*출처 :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정책 보도자료의 내용 정리(저자작성)

[표 4-4] (분야) 연도별 건축·도시 정책관련 보도자료 추이

년도	계획수립	법제도 개선	사업추진 및 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교육	행사 및 홍보	합 계
2010년	13(3.8%)	40(11.7%)	154(44.9%)	20(5.8%)	21(6.1%)	95(27.7%)	343(100.0%)
2011년	35(7.3%)	72(15.0%)	280(58.2%)	7(1.5%)	23(4.8%)	64(13.3%)	481(100.0%)
2012년	10(2.3%)	49(11.3%)	271(62.7%)	8(1.9%)	11(2.5%)	83(19.2%)	432(100.0%)
2013년	39(6.7%)	69(11.8%)	206(35.3%)	37(6.3%)	49(8.4%)	183(31.4%)	583(100.0%)
2014년	29(4.2%)	112(16.1%)	294(42.3%)	18(2.6%)	52(7.5%)	190(27.3%)	695(100.0%)
년도 총합	126(5.0%)	342(13.5%)	1205(47.6%)	90(3.6%)	156(6.2%)	615(24.3%)	2534(100.0%)

*출처 :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정책 보도자료의 내용 정리(저자작성)

3)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 건축정책 성과관리 범위와 방법

건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매2년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0~2012년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013년 3월에 국회에 보고되었다. 2010~2014년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국회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총 113개의 세부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 8개 중앙부처와 44개 부서가 관계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들 세부단위과제에 대해 매년단위로 실천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성과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매년 초 건축정책기본계획 실천과제별 담당부처 및 부서에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담당부처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정리하고 있다.

과제관리카드는 세부단위과제별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기간, 추진방법, 사업 추진예산, 사업 주요실적에 대해 작성하고, 성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성과자료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과제관리카드는 부록 1 참조)

[표 2-5]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지침

구 분	내 용
1)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관부처(부서) 및 협조기관을 참고하여 해당 추진계획 및 실적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 과제현황, 과제성과 및 실적, 예산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세부추진과제별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완료사업의 경우, '건축정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확인차원에서 면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료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정보 입력
2)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관부처((부서), 주관부처 담당자 이력 및 현 담당자 기입
3)과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현황 및 추진기간, 추진방법, 과제내용 등 과제의 진행상황과 방향에 대하여 작성 기 작성된 추진방법 및 주요추진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 후 내용변경 및 추가사항을 작성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 및 내용에 해당하는 분류항목 선택(추진방법 및 내용별로 중복선택 가능)
4)과제성과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추진기간 동안의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및 실적에 대한 고시 및 보도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법·제도 지침, 계획 및 보고자료 등의 근거자료 작성 전년도 계획 이행에 대한 실적 및 차년도 계획 작성
5)예산 및 소요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과제의 착수 및 완료기간에 해당되는 소요예산 작성 기 작성된 내용에서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예산과 변경 후 예산을 병기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부자료(저자작성)

□ 성과 개요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113개 단위실천과제에 대한 성과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지난 5년간 총 108개의 단위 실천과제를 수행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으로 이행목표 96%를 달성³⁾하였다.

[표 2-6]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 현황

(단위 : 사업 건수)

목표	추진 전략	세부과제	단위 과제 (건)	단위과제 사업 착수 현황(건별)							추진실적현황				
				2010 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이행완료			미 실행	성과 포함*	미 포함**
										단일 사업	계속 사업	변경 사업			
품격 있는 생활 공간 조성	1. 국토 환경 디자인 향상	1-1.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13	1	9	1	2	-	-	13	-	-	-	13	-
		1-2. SOC국가 기간 시설 디자인 제고	10	1	7	-	2	-	-	8	2	-	-	11	-
		1-3.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6	1	2	1	1	-	-	5	1	-	-	6	-
		합 계 (사업건수)	29	3	18	2	5	-	-	26	3	-	-	29	-
	2. 건축 도시 환경 개선	2-1.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8	1	4	1	-	-	-	3	3	2	-	8	-
		2-2. 민·관이 협력 하여 도심재창조	6	-	6	-	-	-	-	3	3	-	-	6	-
		합 계 (사업건수)	14	1	10	1	-	-	-	6	6	2	-	14	-
건축·도시 분야 녹색 성장 기반 구축	3. 녹색 건축 도시 구현	3-1. 탄소저감형 건축· 도시환경 조성	3	-	3	-	-	-	-	3	-	-	-	3	-
		3-2.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7	-	7	-	-	-	-	6	1	-	-	7	-
		3-3.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6	1	1	-	-	-	-	2	1	3	-	6	-
		3-4.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4	-	2	2	-	-	-	1	3	-	-	4	-
		합 계 (사업건수)	20	1	13	2	-	-	-	12	5	3	-	20	-
	4. 건축 도시 산업의 고도화	4-1.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7	-	2	2	2	-	-	7	-	-	-	7	-
		4-2. 미래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6	-	3	1	-	-	-	6	-	-	-	6	-
		4-3. 핵심기술 및 설계 기법 개발촉진	6	1	5	-	-	-	-	5	1	-	-	6	-
		합 계 (사업건수)	19	1	10	3	2	-	-	18	1	-	-	19	-
		창조적 건축 문화 실현	5. 고유한 건축 문화 창달	5-1. 고유한 건축문화 유산의 보전·활용	6	1	3	1	-	1	-	3	3	-	-
5-2. 지역건축자산을 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4			1	-	2	1	-	-	2	2	-	-	4	-
5-3. 지역별 대표가치(브랜딩가치) 조성사업 추진	5			-	-	-	-	-	-	-	-	2	3	2	3
합 계 (사업건수)	15			2	3	3	1	1	-	5	5	2	3	12	3
6. 건축 문화의 세계화 촉진	6-1.국민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 실현		6	-	1	2	2	-	-	5	-	-	1	5	1
	6-2.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4	-	-	-	-	-	-	1	1	1	1	3	1
	6-3.건축문화역량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6	1	-	2	-	2	1	5	1	-	-	6	-
	합 계 (사업건수)		16	-	1	4	2	2	1	11	2	1	2	13	2
총 계			113	8	55	15	10	3	1	78	22	8	5	108	5

*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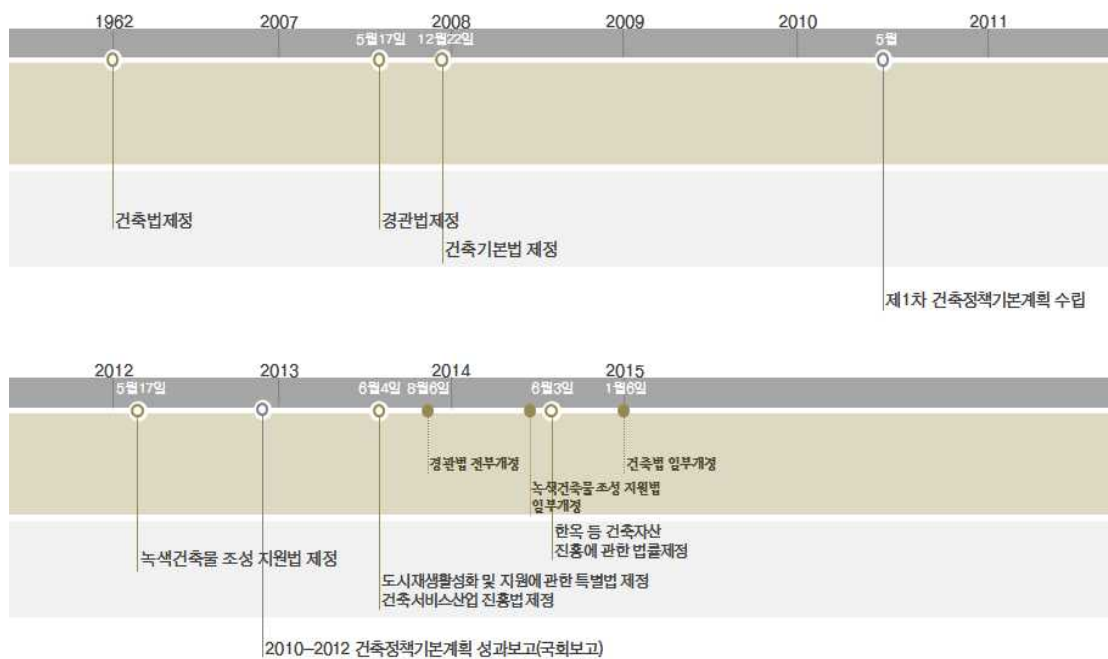
* 2010~2015년도 단위완료된 사업, 계속사업, 변경되어 추진완료된 사업

** 미실행된 사업으로 사업성과로는 포함되지 않으나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으로 이관된 사업

3)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수립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에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성과점검은 앞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관계부처 및 부서 44개 대상으로 과제관리카드에 의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정리된 결과이다.

□ 건축관련 법령 제개정 성과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건축관련 법령에 큰 변화를 준 시점은 「경관법」과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 세부 정책분야별 구체적으로 실행 및 지원할 수 있는 관계 법령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 건축·도시 관련 주요 정책 사안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건축정책과 연관된 다양한 계획 수립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림 2-9] 건축·도시 관련 법률 제·개정 연표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각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경과를 정리

관련 법령 제정으로 인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다양한 건축정책 연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련 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각종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전담지원기구 설립·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국가한옥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기구, 녹색건축센터의 마련은 건축정책 작간접적으로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로서 제1차 건축정책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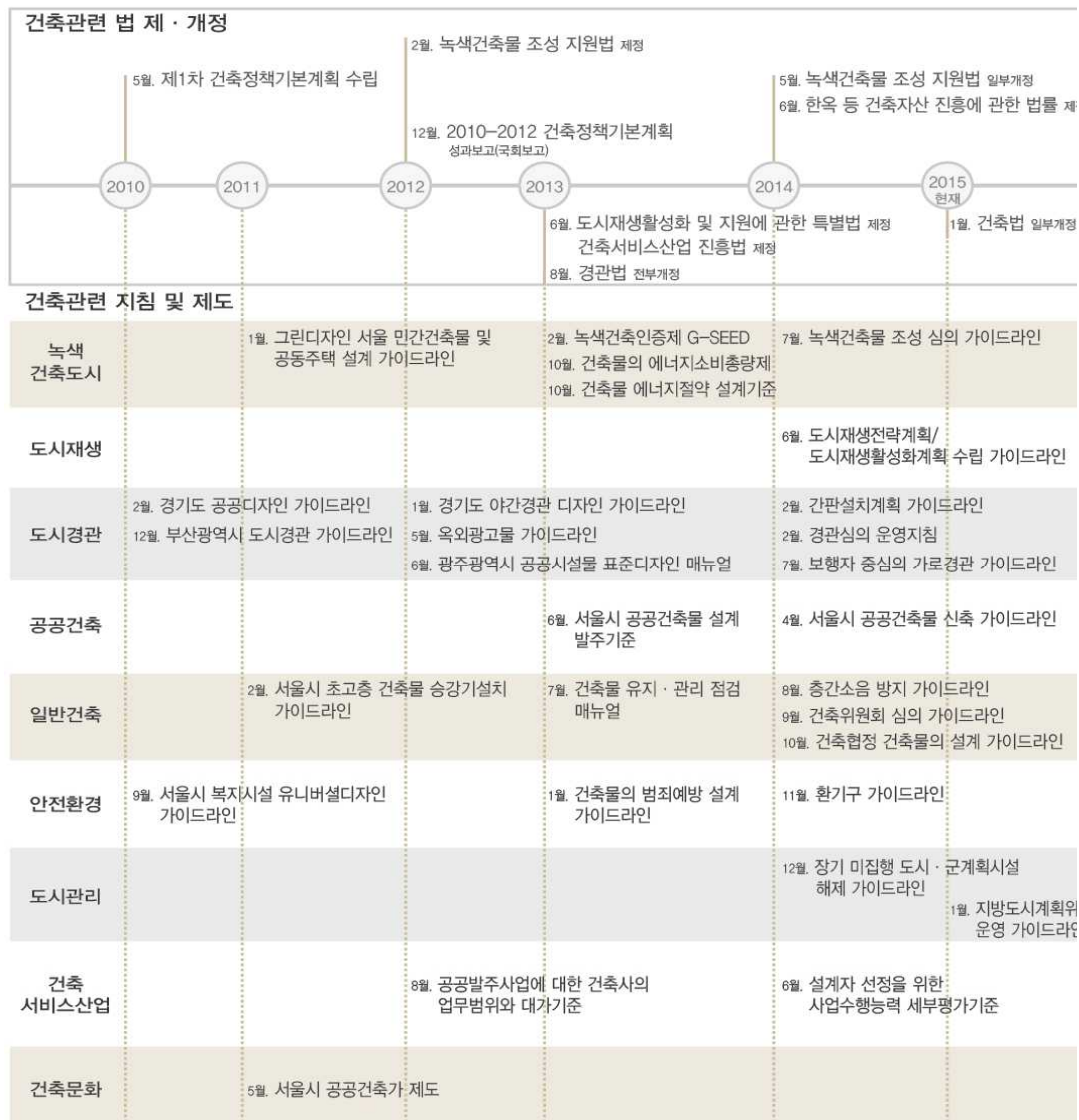
[표 2-7] 법령에 의해 건축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과업

근거법령	주요 세부 과업	근거법령	주요세부과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도시재생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방침 수립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도시재생기획단 구성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운영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종합정보체계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20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 설계도서 양식, 자재,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 등 표준화 • 전문인력 양성 및 양성기관 지정운영 • 관련 산업 창업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진흥원 설립운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20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총량 관리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 • 그린리모델링(증축, 개축, 대수선 등) 시범사업 •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운영 • 에너지 평가사 등 녹색건축물 전문 인력 양성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201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 국가한옥센터 설치 및 운영 •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각 건축관련 법령별 주요내용 정리

□ 건축제도 및 기준 개발 성과

건축·도시분야의 다양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건축 관련한 다양한 제도,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주제별로 크게 ①녹색건축도시, ②도시재생, ③도시경관, ④공공건축, ⑤일반건축, ⑥안전환경, ⑦도시관리, ⑧건축문화, ⑨건축서비스산업 등 9개로 분류하면 아래 [그림 2-10]과 같다.



[그림 2-10] 건축관련 법 제 · 개정에 따른 주제별 연대순 지침 및 제도(2010~2015)

*출처 : 저자작성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를 요약하자면, 녹색건축도시 분야에서는 ‘그린디자인 서울 민간건축물 및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2011.1)’, ‘녹색건축인증제 G-SEED(2013.2)’,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제(2013.10)’,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2013.10)’,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 가이드라인(2014.7)’,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 기술심의 가이드라인(2014)’ 등이 발표되었다.

[표 2-8] 녹색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제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국토교통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을 건물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 및 관리하는 제도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공공건축물(3천㎡이상), 민간건축물(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시범 시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국토교통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은 2013.5.20. 제정·시행되었으며,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제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에 대해 규정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지정 • 제1장 총칙,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3장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제5장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제6장 보칙으로 구성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 심의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 조성 개요,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개선, 녹색건축 인증 제도와 절차, 계획 단계, 설계/시공 단계, 건물 유지관리 단계, 건축물 철거단계까지의 녹색 건축 적용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적용사례, 에너지 절약형 건축사례 총 9장으로 구성

도시재생 분야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4.6)’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2014)’ 이 마련되었다.

[표 2-9] 도시재생 분야의 주요 제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동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 • 총론,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세부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기타사항 총 4장으로 구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외,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 제1장 총론, 제2장 사전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3장 세부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제4장 기타사항으로 구성

도시경관 분야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2013)’,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2014)’, ‘경관 심의 운영지침(2014)’, ‘간판설치계획 가이드라인(2014)’을 비롯하여 지자체별 다양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2)’,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가이드라인(2010.12)’, ‘경기도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2012.1)’,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매뉴얼(2012.6)’ 등이 마련되었다.

[표 2-10] 도시경관 분야의 주요 제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설치지역의 용도, 가로 및 건축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필요한 사항 제시 • 토지이용의 용도별로 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완화의 비율에 따라 녹지·주거지역,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특성화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성요소, 광고물 종류, 가로유형, 건축유형에 따라 각각의 지역별 가이드라인 제시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경관은 보행자가 이용하고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공간환경으로서 가로시설물 영역, 보행영역, 외부공간 영역, 건축물 영역으로 구분 • 지역성, 편안함, 가로의 미관, 지속가능성, 보행 연결성, 보행 연속성, 시설물 통합, 안전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총 9개의 기본원칙 수립 • 공통 가이드라인, 가로유형별 가이드라인, 통합시설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경관 심의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 •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 심의, 제3장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4장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5장 경관 심의 절차, 제6장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제7장 행정사항으로 구성
간판설치계획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과 건축물이 일체화된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간판설치계획의 작성 및 검토에 필요한 사항 제시 •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간판설치 기본방향 및 원칙, 건축유형별 간판설치 가이드라인, 간판설치계획서 작성방법 등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간판설치계획서 양식, 건축 유형별 간판설치 체크리스트 제시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설계발주 기준 및 신축 가이드라인으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기준(2013.6)’,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2014.4)’ 등을 발표하였다.

[표 2-11] 공공건축 분야의 주요 제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 기준 (서울특별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4.9. 시장 방침으로 마련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 전(前)단계 업무에 활용 제1절 총칙, 제2절 자문단 구성·운영, 제3절 설계공모 준비, 제4절 설계 공모 공고, 제5절 설계공모 심사, 제6절 사후 설계관리, 제7절 발주정보 공유로 구성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설계, 감리, 공사, 유지관리, 평가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활용 공공건축물 중 그 용도가 업무시설의 용도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외국인 투자기업지원시설 또는 국제기구 유치대상 건축물을 대상 적용대상 건축물 공사의 기획, 설계, 시행 시 적용하며, 방재·방법 기준,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기준, 친환경·녹색건축물 기준, 에너지절감 기준, 신·재생 에너지 공급 기준, 건축물 디자인 기준 제시

일반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2012.7)’,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2014.9)’,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2014.10)’ 등이 마련되었다.

[표 2-12] 일반건축물 분야의 주요 제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국토교통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매뉴얼의 점검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6개로 대분류되고, 이에 따른 소분류 항목 36개, 세부항목 50개로 평가결과 계량화(1점~5점)를 통해 적합여부 평가하여 객관적인 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필요한 기준 제시 제1조 목적, 제2조 운영원칙, 제3조 심의기준 제·개정 등,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 위원회 개최 및 회의공개, 제6조 위원회 심의대상, 제7조 심의의결 방법 등, 제8조 심의 신청 및 제출도서, 제9조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로 구성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 및 표준규약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협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협정 지역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건축협정을 하는 경우 건축협정에 반영할 사항과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내에서 건축협정구역으로 인가 받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적용 건축협정 구역 내 건폐율, 용적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지하층의 설치, 담장 및 출입구, 대지안의 조경, 주차장, 부대시설, 건축구조의 기본원칙, 맞벽구조의 형태, 건축물의 설비기본원칙 등에 대해 기준 제시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보행안전, 범죄예방, 건축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2013.1)’, ‘충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2014.8)’, ‘환기구 가이드라인’,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2011.2)’ 이 각각 마련되었다.

[표 2-13] 안전환경 분야의 주요 제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독·다가구·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건축심의 대상건축물(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기타(고시원·오피스텔 등) ·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과 적용대상 유형별에 따른 지침 제시
충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주택 등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층간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기준 제시 ·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은 공통사항과 용도·규모별 적용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
환기구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로서,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고려한 설계·시공·유지 관리 기준 제시 · 계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의 세부지침 구성 ·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에 관한 규정, 시공 과정에서 환기구의 세부사항, 철제덮개의 규격·강도에 관한 제품기준 등 명시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조 완화 규정 중 초고층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 완화 적용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승강기 대수 산정, 제4조 사용인원 산출, 제5조 혼잡 시간대, 제6조 건물 내 승강기 적정 배치, 제7조 승강기 에너지절약 설비, 제8조 피난용 승강기, 제9조 비상용 승강기로 구성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없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블록 디자인 및 설치 시 접근성 지향, 보행 안정성 확보, 포용력 확장 3대 기본원칙 수립 · 기본방향, 장애 없는 보도의 구조, 보도의 포장, 횡단보도의 구조, 가이드라인 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2014.1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이 마련되었다.

[표 2-14] 도시관리 분야의 주요 제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군계획 시설 중 시행령 제19조제9호에 따라 규모 등이 도시·군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또는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 도모함에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및 합리적인 절차 제공 제1장 총칙, 제2장 가이드라인의 적용, 제3장 해제 기준, 제4장 관리 방안, 제5장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구성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심의기준을 구체화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회 운영, 제3장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추가 기준, 제4장 기타 사항으로 구성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2012.8)’,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4.6)’이 발표되었다.

[표 2-15]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주요 제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설계업무(기획, 건축설계, 사후설계관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업무), 공사감리업무, 건설사업관리(CM)업무 등으로 업무범위 설정 대가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 정액가산식 적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총 제13조로 적용범위, 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입찰안내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적격자 등의 선정, 평가점수 계산,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이의 제기 등의 내용 제시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분야에서는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2014)’,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도(2014)’,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2014)’,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2011.5)’ 등이 있다.

[표 2-16] 건축문화 분야의 주요 제도·지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소유자 등의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신청 시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심의(자문)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한옥의 소유자등에게는 심의(자문)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옥위원회는 효율적 운영 도모 한옥의 외관 및 내부에서는 공간구성의 및 배치계획, 지붕 및 입면계획, 단면계획, 기타계획에 대한 형태, 재료 등의 권장내용과 예시사례, 가이드라인 제시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도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 및 건축법상 규제완화 혜택을 통해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적극 보전·활용 제3장 제10조 우수 건축자산의 등록, 제11조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제12조 우수 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제13조 우수건축자산의 증축·개축 및 철거 등, 제14조 우수 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15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재 등록 신청으로 구성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국토교통부,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 구역 내의 도시 미관향상과 가로경관의 연속성 보전을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 일부조항 완화·적용 가능 제4장 제17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18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1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그이 수립, 제2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제2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으로 구성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서울특별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4월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는 총 104명으로 공공발주 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 및 자문과 소규모 공공건축물(1억 미만)의 지명현상설계 참여 등의 역할 수행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성과

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간판개선 시범사업,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도시재생 선도사업,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사업 등이 지난 5년간에 추진되어 왔다. 해당 시범사업 중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내세워 추진한 사례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한하지만,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단위과제에 연계된 사례를 기준으로 성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17]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분야의 주요 성과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p>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⁴⁾ (국토교통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2009년 시범사업) 계획수립비용 지원사업 공모로, 본 사업의 기획연구(2009)에서 제시하는 공공건축, 주거건축, 공공공간, 기반시설, 수변공간 및 기타를 대상으로 공모(총 10개 사업 선정, 총 15억 원 지원) • (2010년 시범사업) 녹색건축, 수변공간, 기반시설 및 기타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건축물·시설물과 주변 공간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사업대상 설정 유도 (기존 2개 사업(10억 지원) 외 신규 6개 시범사업(10억 지원) 선정) • (2011년 시범사업)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지역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건축·공공공간에대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공모(기존 3개 사업(7억 지원) 외 신규 3개 시범사업(5억 지원) 선정) • (2012년 시범사업) 지역 간 통합된 공간이미지 형성, 지역경관 향상을 위한 공간 관리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공모(기존 5개 사업(54억 지원) 외 신규 6개 시범사업(8억 지원) 선정) • (2013년 시범사업)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시설물의 경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열악한 국토경관으로 인해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공간관리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공모(기존 5개 사업(48.6억 지원) 외 신규 3개 시범사업(4.5억 지원) 선정) • (2014년 시범사업)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개별 경관요소에 대한 통합적 계획 및 사업추진으로 국토품격 향상 및 개성 있는 지역경관 창출 도모(기존 4개 사업(27.66억 지원) 외 신규 4개 시범사업(6억원) 선정)
<p>간판개선 시범사업⁵⁾ (행정자치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고, 화려하고, 큰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간판 문화 선진화 및 확산을 유도 • 사업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가이드라인(규격, 디자인, 설치 수량 등) 고시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광고물 설치 • (2012년 시범사업)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도별 2개소 추천을 거쳐 행정자치부에서 총 21개소 최종 선정(사업비 42억 원(수익금 21억, 지방비 21억, 50:50 매칭조건) • (2013년 시범사업) 전국 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총 35개소 추천지 중 신규 1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2년도 사업장 중 우수지자체 8개소에 대해 계속지원(사업비 88억 원 (수익금 44억, 지방비 44억, 50:50 매칭조건) • (2014년 시범사업)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총 32개소 추천지 중 신규 1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3년도 사업장 중 우수지자체 5개소에 대해 계속 지원(사업비 90억 원(수익금 45억, 지방비 45억, 50:50 매칭조건)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개선 중심의 공공 디자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적 커뮤니티 디자인 추구 • 문화생활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위치한 유희공간(간이역, 버스터미널, 소규모 유희공간)을 대상으로 공간조성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 (2013년 시범사업) 충북 증평역, 경북 분천역, 강원도 영월시 무릉초교 운일분교, 전북 진안시 구 마령복지회관, 전남 보성시 득량면 역전길,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창고, 울산시 남구 공업단지하수도 등 유희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 7개소 선정⁶⁾ • (2014년 시범사업) 전남 무안 몽탄역, 강원 정선 시외버스터미널, 충북 영동 황간버스터미널, 제주시 추자도 어촌계 냉동창고, 충북 충주 (구)여성회관, 전남 광주 (구)광주극장 관사 등 공공디자인 사업 6개소 선정⁷⁾
도시재생 선도사업 ⁸⁾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노후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자생을 위한 근린재생형 사업 구분 • (도시경제기반형)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정비·개발과 연계, 복합적 개발사업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 창출, 4년간 최대 250억원 지원(2개소) • (근린재생형)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 노후·불량 근린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4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11개소) • (도시경제기반형)부산, 청주, (근린재생형)서울 종로, 광주 동구, 영주, 창원, 군산, 목포, 대구 남구, 태백, 천안, 공주, 순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하여 행정·기술적 사항 지원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⁹⁾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성공모델 창출을 통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민간부문 확산 유도 • 국비 지원 방식에 따라 사업기획지원사업과 시공지원사업으로 구분 • (시공지원사업) 일반 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 보조(건축공사(단열개선·외부차양 등), 기계설비공사(냉난방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 • (기획지원사업)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화 유도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 지원(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 설계 컨설팅(그린코치), 구조건전성, 에너지성능, 조사·평가, 사업기획안 작성, 민간금융활용 사업비 조달방안 등)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¹⁰⁾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서울시, 노원구청이 공동투자하고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연구단이 함께 실현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관리하는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이라는 국가 R&D 연구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1단계) Mock-Up 주택 조성 완료(2013~2014) : 친환경에너지 기술검증을 위한 교보재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시공기간동안의 에너지 체험 및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 (2단계)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중(2014~계속) :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106세대) 내 단독주택(2세대), 합벽단독주택(4세대), 연립주택(9세대) 등을 포함하며, 국민임대주택을 고품격 주거문화의 도시형 타운하우스단지로 창출

□ 전문인력 육성 성과

건축기본법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제7항에서는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축사 역량 강화 및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아래 [표 2-14]와 같은 공모, 시상, 지원사업, 자격제도 등을 신설·운영하였다.

[표 2-18] 전문인력 육성 분야의 주요 성과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¹⁾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고 유능한 신진건축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시상·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개최 •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사 단독설계로 완공된 대표작품 1개의 포트폴리오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선정 • 상장과 동판 수여 및 수상작 전시회 개최, 수상자의 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는 작품집 제작,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2013년 국토부장관상 3인(대상1인, 최우수상2인), 협회장상 9인(우수상) 등 12명, 2014년 국토부장관상 3인(대상1인, 최우수상2인), 협회장상 5인(우수상) 등 8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20명의 수상자 배출
젊은 건축가상 ²⁾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를 선정해 그들의 국·영문 작품집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포하고, 그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건축 문화 스타’를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젊은 건축가 상」 시상 • 국내외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만 45세 이하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1개 이상의 준공 작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및 공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선정 •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작품 전시회, 작품집 발간, 국내외의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 제공 • 2012년 3개 팀 4명, 2013년 3개 팀 6명, 14년 3개 팀 5명을 선정하는 등 매년 5인 내외의 건축가를 선정·시상

4) 조상규, 김영현(2012), 2010~2012 건축정책성과보고서, p150~p151.의 내용을 재인용하고, 2013년과 2014년도의 성과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진(사업책임자 심경미 부연구위원)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5) 행정자치부 “간판개선시범사업” 홈페이지(http://ipsign.plab.co.kr/productview/productview_2012_01.aspx) 내 각 연차별 시범사업 개요, 지원규모,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

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간이역 및 유흥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2013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7개 지역 선정)”, 2013년 4월 4일 배포일자.

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간이역, 시외버스터미널 및 유흥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2014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 6개 지역 선정)”, 2014년 4월 18일 배포일자.

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2014년 4월 28일 배포일자.

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국가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총 20억원 지원)”, 2014년 2월 6일 배포일자.

10)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indcoop.mju.ac.kr/asp/business/lab_center/center_37.asp) 내 제로에너지디자인센터에서 설명하는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에 대한 내용 정리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담당건축사 제도 ¹³⁾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담당 건축사 제도' 도입을 포함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2014년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건축사의 업무실적을 인정하고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 (2013년 시범사업) 충북 증평역, 경북 문천역, 강원도 영월시 무릉초교 운일분교, 전북 진안시 구 마령복지회관, 전남 보성시 득량면 역전길,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창고, 울산시 남구 공업탐지하보도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 7개소 선정 (2014년 시범사업) 전남 무안 몽탄역, 강원 정선 시외버스터미널, 충북 영동 황간버스터미널, 제주시 추자도 어촌계 냉동창고, 충북 충주 (구)여성회관, 전남 광주 (구)광주극장 관사 등 공공디자인 사업 6개소 선정
한옥건축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3년까지 500여 명의 전문 인력 배출 한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공모절차로 선정한 총 7개의 교육기관 (3개 과정)을 통해 시행하며 25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6억5천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¹⁴⁾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건설업체의 인력부족 및 국내 청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건설기술교육원 등 9개 기관에서 총 4천 명의 전문인력 양성 계획 (취업자 과정) 단기 취업과정 및 외국어 사용이 능통한 고급 인력 양성 (3,300명) (재직자 과정) 건설업체 재직자의 역량 강화 및 국내건설에서 해외건설 분야로의 전직 확대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700명) 기획·금융·설계 능력과 함께 해외 프로젝트 관리역량 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¹⁵⁾
에너지평가사 도입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신설하여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도모 건축물 에너지평가사는 2013년 에너지관리공단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작하였으며, 법령 개정을 거쳐 2015년 국가자격으로 전환 예정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 1급 자격과 연면적 500㎡ 미만 중소형 건축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2급 자격으로 구분

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수상자 선정", 2013년 9월 30일자, "올해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 탄생", 2014년 8월 19일자의 내용 재정리

1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대표 젊은 건축가를 찾습니다.", 2014년 5월 8일자.

1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2014년 9월 29일 배포일자.

14) 2014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준이며, 한옥설계과정(6개월), 한옥시공관리자과정(3개월),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2주)

15) 2014년 두 곳의 대학원이 선정되었으며,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해외건설 현장 맞춤형 특화 교육을 실시, 연간 50명 이상의 해외 건설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가 양성' 본격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부족한 해외건설 인력수요 충당-",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2014.10.24일자

□ 건축문화 행사 및 교육 성과

건축기본법 제정 및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건축 문화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시상식,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된 점이다.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경관, 녹색건축, 한옥 등 분야별로 다양한 공모전 및 시상식이 만들어졌다.

[표 2-19] 건축문화 행사 분야의 주요 성과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¹⁶⁾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공공건축 조성에 힘쓴 공공발주자의 공로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공공 건축물 조성 주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공발주자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 • 공공기관이 시행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고일 이전 5년 이내 준공작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발주·시행한 기관 또는 부서에 시상 • 2014년 총 4점(국무총리상 1점, 국토부장관상 3점), 2013년 총 5점(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국토부장관상 3점) 등 매년 5점 내외의 작품 선정·시상
대한민국 경관대상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경관 가꾸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 국토교통부 주최¹⁷⁾로 2011년부터 제정·시행 하였으며 2014년 까지 총 4회 개최 • 경관유형은 시가지경관·역사문화경관·농산어촌경관·자연경관·공공디자인의 5가지 부문으로 구분 • 공모주제는 2011년 '지자체 경관계획', 2012년 '주민과 더불어 하는 경관행정', 2013년 '마을경관만들기 활동주제', 2014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으로 선정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을 시작으로 2014년 9회 개최 •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장소의 소유권을 가진 단체 및 개인에 시상하며, 장소를 만드는데 참여한 관련자 및 단체는 소유권자와 합의 후 상장과 동판에 공동 병기 • 대통령 표창인 대상과 국무총리 표창인 최우수상을 각 한 작품씩 선정하고, 성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두레나눔상', '거리마당상', '누리쉼터상', '우리사랑상' 으로 명하여 시상 • 2014년 총 5점(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장관상 3점), 2013년 총 6점(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문체부장관상 4점) 등 매년 6점 내외를 선정하여 시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2008년부터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주최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우수사례 부문과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으로 공모 진행 • 우수사례 부문 및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 5점 등 매년 12건 내외를 선정하여 시상 • 2014년 총 9점(우수사례 부문 5점,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 4점), 2013년 총 14점(우수사례 부문 6점,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 6점, 연구부문 2점) 등을 선정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녹색건축 조성사례를 발굴하여 건축관련 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조기 정착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 공고일 기준 준공 완료된 모든 녹색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있는 설계자·시공자·건축주에게 시상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의 대상 1점,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의 최우수상 각1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녹색건축대전 후원기관장 표창의 우수상 다수 등 총 11점 내외를 선정하여 시상
녹색건축 한마당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 해외 정책 등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민간·공공·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 • 녹색건축 유공자 시상과 민간·공공·학계 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최신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공모를 진행하며 한옥계획 부문, 한옥준공 부문, 한옥사진 부문으로 나누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2011년 ‘Neo-Hanok Vision : 진화하는 한옥’, 2012년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 2013년 ‘한옥의 가능성’, 2014년 ‘누구나 누리는 한옥’을 주제로 진행 • 계획 부문은 한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내·외국인), 준공 부문은 공고 시점 3년 이내 준공된 한옥 건축물, 사진 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 대상 공모 • 2014년과 2013년 각각 3개 부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상 3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3점 등 총 65점씩(건축부문 3개, 계획부문 18개 사진부문 44개)을 선정하여 시상
한옥포럼 (국가한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 • 2011년부터 개최되었으며 2012년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 가치와 전망”, 2013년 “우리가 원하는 한옥”, 2014년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을 주제로 하여 연간 3~4차례의 포럼 진행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한국건축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후원으로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당해 연도의 건축적 트렌드를 집약하여 전시 •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1982년부터 개최된 ‘건축가축제’를 대중적이고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되도록 2005년 ‘대한민국건축제’라는 컨벤션 행사로 발전시켰으며, 2007년부터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로 개칭하여 진행 • 행사기간 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과 ‘젊은 건축가상’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외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강연회 및 심포지엄,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16)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지침 참고, 국토교통부, 2014

17) 2012년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한국도시설계학회 및 한국경관학회에서 주최함

건축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어린이 대상의 건축창의교실이 2012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초건축교재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일반인인 어른을 대상으로는 도시재생 트렌드에 맞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도시재생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교육이 추진되었다.

[표 2-20] 건축교육 분야의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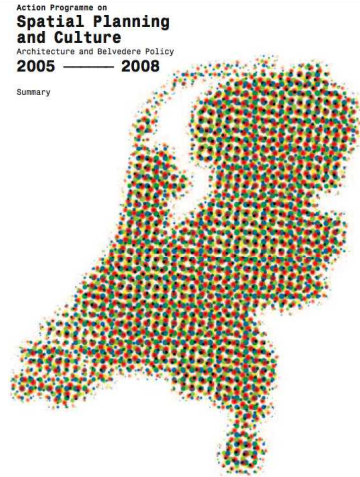
구분	주요 구성 및 내용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축을 통한 창의력 개발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추진 • 2012년 첫 회를 시작으로 2014년 까지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참가신청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여 무료 시행 • 4~6학년 초등학생 약 120명 을 대상으로 건축창의 경진대회, 명사 특강, 한옥 체험 및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1박 2일간 진행
기초 건축교재 및 지도서 발간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에 대한 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계발·배양하기 위한 초등학생용 기초 건축교육 교재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 건축 창의 체험」 발간 • 국토교통부 기획 하에 2011년 개발에 착수하여 대한건축학회 및 대한건축사협회가 교재의 연구와 집필을 담당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13년 발간
도시재생 대학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학습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재생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7주간 교육과정을 거쳐 살고 있는 도시(마을)의 재생계획을 손수 마련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 수업과정은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준용하여 ‘현황조사’, ‘현황분석’, ‘계획구상’, ‘기본계획’ 으로 운영하고 강의→토론→발표→자문 등 교육과 검증 과정으로 진행

2. 해외 건축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1) 네덜란드의 건축정책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해 온 국가이다. 1991년에 “Space for Architecture”라는 이름으로 건축정책 문서가 공식발표 된 이후 200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건축정책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중 제4차 건축정책은 문화정책인 벨베데레 정책을 통합시킴으로서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내 국정기조로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화융성”이다. 정부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융성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건축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⁸⁾



① 건축정책의 발전

□ 제1차 건축정책(Sapce for Architecture 1991~1994)

네덜란드가 최초로 수립한 제1차 건축정책은 보건·복지·문화부(Ministries of Health, Welfare & Cultural Affiars)와 주택·공간계획·환경부(Housing, Spatial Planning & the Environment) 2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되었다. 제1차 건축정책에서는 건축 프로젝트의 검증 및 전반적인 건축수준 개선, NAI(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와 네덜란드 건축기금(Netherlands Architecture Fund)의 설립, 지역건축센터의 형성과 업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제2차 건축정책(Architecture of Space 1996~1999)

제2차 건축정책은 교육·문화·과학부(Ministries of Education, Culture & Science), 주택·공간계획·환경부(Housing, Spatial Planning & the Environment), 농수산업부(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 Fisheries), 교통·수자원관리부(Transport, Public

18) 영문요약문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 Architecture and Belvedere Policy 2005-2008 Summary」 내용 정리

Works & Water Management) 등 총 4개의 정부부처가 참여하여 수립되었다. 제2차 건축정책에서는 정책 범위에 도시, 조경, 인프라를 포함시킴으로써 건축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 제3차 건축정책(Shaping the Netherlands 2001~2004)

제3차 건축정책은 기존 정책내용을 발전시키면서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9개 주요사업들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제3차 건축정책에 참여한 각 중앙부처가 최소 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건축가위원회(Office of Chief Government Architect)가 계획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진행방향을 자문관리하였다.

□ 제4차 건축정책(Spatial Planning and Culture 2005~2008)

제4차 건축정책은 문화정책인 벨베데레 정책¹⁹⁾을 통합시킴으로써 건축이 내포하는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건축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선행해야 할 사항으로 개별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과정에 문화적으로 가치는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디자인 기초조사 수행(Design studies)²⁰⁾”과 “사업발주 업무 개선(Commissioning practice)²¹⁾”을 강조하고 있다.

② 건축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건축정책과 문화정책의 통합을 위한 주요정책사업으로 도시 및 비도시, 교통,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 ①선도사업 추진, ②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법률검토, ③예산지원 강화 ④건축 관련 정보 확산 등 4개 부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성공적

19) 네덜란드는 과거의 급속적인 개발에 의해 등한시 되었던 기존 건조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인식하였으며,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물리적 대상 위주의 접근보다는 지역 위주의 접근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건축정책에도 이를 반영하였으며, 제2차 건축정책에 참여했던 교육·문화과학부, 주택공간계획환경부, 농수산업부, 교통수리관리부가 네덜란드 보존 및 고고학적 유산 서비스 관련 부서와 협력함으로써 문화정책으로서의 벨베데레 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벨베데레 정책의 핵심전략은 '개발을 통한 보존'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을 개발과 연계하여 국민이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벨베데레 정책 공식문서(Belvedere Policy Document 2000-2009)를 통해 정부는 도시 공간계획 내 문화적 역사 요소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20)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 과거 역사적인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 그리고 미래에 지어질 건축 디자인을 고려하여 문화적인 통일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21)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디자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공공 및 민간 발주자들이다. 특히 건설규모가 대규모화, 복잡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설계자와 발주자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덜란드 건축정책에서는 건축사업의 성공여부가 발주자의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사업발주업무에 대한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인 사업수행을 위해 앞서 강조한 디자인 기초조사와 함께 다분야 7개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정책사업 목표

-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역사문화, 건축 및 도시계획, 조경 분야의 통합적인 접근과 협조
- 다양한 부처간 협조적 업무 수행체계 구축운영
- 사업 추진간 다양한 전문가 의견협의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통합적인 개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문화 및 역사적 건축 현황, 도시계획 실태 등 디자인 기초조사 수행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 및 문화유산 관련 단체의 전문가 활용
- 네덜란드 공간계획 및 문화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제적 입지 및 협조 조성

□ 주요 내용

- 선도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중에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사업별 정부의 역할, 사업규모, 사업단계, 디자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4차 건축정책에 포함된 건축 시범사업으로는 총 13개의 사업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며, 시범사업의 범위는 역사건축물의 복원 및 리모델링의 건축단위에서부터 도시재생, 신도시 건설의 도시계획까지 광범위하며, 전문분야에 있어서도 건축분야뿐만이 아닌 조경, 도시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건축 발주제도와 같은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시범사업으로 정리된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①레이크스미술관 리모델링(The New Rijksmuseum):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대규모 건물의 리모델링, ②네덜란드 워터라인 프로젝트(The New Holland Water Line): 다이내믹한 지형 내 위치한 역사적 방어 시설의 보존 및 개발, ③도로 디자인 개선(Design of motorway routes and their surroundings): 도로 품질과 주변 환경의 개선, ④비즈니스 공원 건축(Business park architecture): 공원 배치, 조경 및 건물의 품질 개선, ⑤발주체계 개선(Improvement of

professional commissioning practices): 새로운 사업 실행에 있어 공간 품질 개선, ⑥외교관 건물 개선(Embassy buildings): 네덜란드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외교관 건물의 디자인 개선, ⑦기존 군사방어 시설의 기능 변경(Change of function of sites and structures formerly used for Defence purposes): 문화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군사방어 진지 및 구조물을 새로운 사용자 측면에서 기능 변화·개선, ⑧아프슬라위트다이크(Afsluitdijk): 75년간의 엔지니어링 기술 기념, ⑨로마제국 요새 보존(Limes): 로마제국 경계지역에 위치했던 요새에 대한 디자인 개선, ⑩랜드스타드 디자인(Design in the Green Heart): 네덜란드 서쪽의 광역 도시권의 중심부 디자인, ⑪전후 지역의 도시재생(Post-war districts): 문화적 가치들을 강조한 도시 재생 추진, ⑫공간 디자인 요소로서의 물 활용(Water as element in spatial design): 물 관련 사안들을 디자인을 통해 해결, ⑬세계유산 보존(World heritage):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적 유산들의 보존 및 개발 등이다.

네덜란드 건축정책이 타 유럽국가와 차별화된 건축정책이라고 한다면, 1, 2차 건축정책을 통해 건축기반이 되는 실행주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이후에 3, 4차 건축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대한 실증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건축정책을 가시화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법률 검토 및 예산지원 강화

통합적인 건축정책 및 벨베데레 정책 실현을 위해 건축사법, 환경영향평가체계 등 일부 법률을 검토하여 개정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적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해 ISV(도시 재생과 지역정부의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투자 기금)에 추가적인 목표와 기금들을 설정하고, 네덜란드 지형 및 조경 보존을 위해 ILG(비도시 개발과 지역정부의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투자 기금)의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 건축관련 정보 확산

건축정책 및 문화정책의 진흥 및 통합을 위해 전문가 및 일반대중의 건축 관련 지식 습득, 관련 정보교환 및 개발을 위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국제적 교류 등에 대해 폭넓게 투자하였다.

③ 건축정책의 추진 주체

네덜란드의 건축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7개 중앙부처로 교육·문화·과학부(Ministries of Education, Culture & Science), 주택·공간계획·환경부(Housing, Spatial Planning & the Environment), 농업·자연·식품관리부(Agriculture, Nature & Food Quality), 교통·수자원관리부(Transport, Public Works & Water Management), 경제부(Economic Affairs), 외교부(Foreign Affairs), 국방부(Defence)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 부처간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선도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투자 프로그램에 문화적 목표들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공간계획 수립 단계에서 디자인 품질 및 문화적 역사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역사문화적 정보 인프라 구축, 지형 및 조경 계획, 문화정책(벨 베데레) 프로젝트 조직의 지원업무 등이 있다.

국가 건축가도 국가 건축정책에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 건축가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공간계획, 인프라 및 지형 개발, 각종 규율 검토, 건축교육, 건축정책 코디네이팅, 건축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도모 등에 대해 자문을 하며, 정부부처들을 대상으로 건축 계획과 건축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문화유산, 시각 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²²⁾ 2004년 이후로 국가 건축가는 정부 자문 이사회의 의장으로 역임되어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정부 자문 이사회(Chief Government Architect and Board of Government Advisors)는 농업·자연·식품관리부, 교육·문화·과학부와 교통·물관리부의 정부 관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문위원은 소속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 관련 정책 사안들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건축·문화유산 보존 단체(Architecture and heritage organisations)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 계획가, 건설가, 프로젝트 개발자, 디자인 전문가, 문화적 역사가와 일반 대중과 함께 네덜란드 건축과 벨베데레 정책 실현을 위해 각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2) 국내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지역건축정책위원회가 있다.

④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건축정책 관련 예산 지원은 중앙부처인 주택·공간계획·환경부와 교육·문화·과학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축단체 지원을 위해 2005년 기준 매년 1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559억 8,065만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4,500만 유로(한화 약 668억 4,885만 원)는 네덜란드 건축연구소 Nai에, 3,300만 유로(한화 약 490억 2,249만 원)는 네덜란드 건축 기금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5-2009년간 도시 재생과 지역정부의 사업 지원을 위한 정부 투자 기금의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연간 400만 유로(한화 약 59억 4,212만 원)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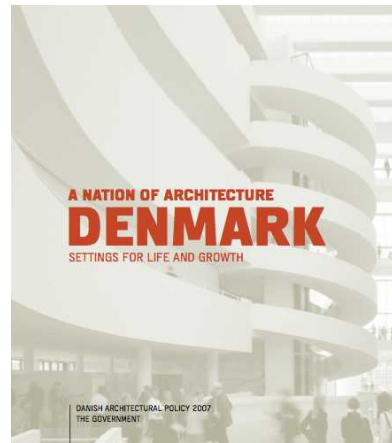
2) 덴마크의 건축정책

덴마크는 1994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1996년도에 제2차, 2007년도에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덴마크 건축정책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건축정책은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서문과 주요 건축정책 10대 목표영역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본론, 관련 추진기관별 역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 건축정책의 10대 목표 및 주요 내용은 건축물 품질 확보에 관한 사안이 주를 이루며, 건축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할 사항,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선진 건축국가이기에 높은 수준의 건축산업 및 교육수준 유지·강화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며, 건축산업 및 기술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잘 정리되어 있다.²³⁾



① 건축정책의 발전

덴마크는 1994년에 최초로 건축정책을 도입하였다. 이후 1996년에 제2차 건축정책으로 발전시켰으며, 2007년도에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 건축정책에 대한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23) 영문 「A Nation of Architecture Denmark: Settings for Life and Growth」 내용 정리

2007년에 제정한 제3차 건축정책의 경우, 첫 번째 통합적인 국가 건축정책 문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제3차 건축정책을 통해 덴마크를 건축의 나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2014년에는 새로운 건축정책인 「Danish architectural policy: Putting people first」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인 건축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덴마크 건축정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건축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별 건축물뿐만이 아닌 국토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접근과 고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덴마크가 우수한 품질의 건축적 자산을 보유한 국가임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 주택에서 국토계획, 교육 및 글로벌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 사례로 건축정책을 수립하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② 건축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덴마크의 제3차 건축정책은 건축을 크게 삶의 질을 확보하는 장소의 측면과 덴마크 성장 동력의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접근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 품질 확보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담고 있으며, 선진 건축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건축산업 및 교육수준 유지·강화에 대한 내용과 기술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덴마크 제3차 건축정책에서는 크게 2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우수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의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함으로써 삶을 보다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두 번째로는 건축산업을 덴마크의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축디자인 및 시공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덴마크의 위상을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 정책 목표

- 공공시설에 있어 높은 건축 품질 확보
- 건축품질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 확보
- 건축품질과 효율적인 시공방식 확보

- 건강,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건축물 공급
- 정부보조주택의 건축 품질 확보
- 도시계획에서의 건축품질에 대한 우선순위 보장
- 건축 유산의 보존 및 개발
- 덴마크 건축 수출을 위한 개선된 여건 조성
- 덴마크 건축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덴마크 건축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 주요 내용

- 공공시설의 디자인 품질 확보

공공건축물은 도시이미지, 시민 삶의 질에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로써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발주청의 역할, 발주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자산의 하나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실천과제로 ①주요 공공시설 발주기관에서의 건축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기관의 역할을 강조²⁴⁾하고, ②공공부문에서의 투입비용 대비 품질요구에 대한 수준 향상, ③정부의 턴키계약에 의한 건축물 품질 확보, ④건축정책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교류 확대, ⑤지역건축정책 수립에 대한 컨설팅 지원²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건축품질에 대한 민간부문의 수요 확보

건축물의 대부분은 국가가 아닌 민간소유인 건축물이 많다. 국가 전체의 건축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건축정책만으로는 민간부문의 건축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민간업체간 디자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건축물 이용자인 시민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책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①건축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각종 전시, 교육, 가이

24) 덴마크 대학 자산관리청(Danish University and Property Agency), 덴마크 국방 자산 및 인프라 관리 조직(Danish Defence Estates and Infrastructure Organisation), 덴마크 왕실 자산관리청(Palaces and Property Agency)별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개별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5) 덴마크 건축센터 DAC는 지역 건축사회, 건축가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건축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지역건축정책 템플릿 구축)하고 있다.

드투어, 세미나 등을 통한 국가적 건축 논의 인식 확산, ②덴마크 경관의 주요요소인 단독주택에 대한 디자인 선도사례 발굴 및 카탈로그 제작·배포를 통한 홍보, ③기초적인 기술기준에서 기능과 품질 요건을 추가한 건축기준 고도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 건축품질과 효율적인 시공방식 확보

유럽 국가 대부분의 건축정책이 건축과 문화의 접목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덴마크 건축정책은 건축과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건축분야를 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하이테크 건축, 건설기술을 융복합하는 정책을 많이 다루고 있다. 새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건축 설계기술 못지않게 새로운 시공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덴마크 건축정책에서는 창의적인 건축설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 전제조건으로써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공기술에 대한 발전을 필수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건설자재 및 시공기법의 혁신은 건축에 있어서 창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3D 디자인 툴 개발로 인해 과거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기하학적인 복잡한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등 건축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실천과제로는 ①공공주택 및 공공건축사업 부문의 시공품질 재고를 위해 모든 사업 프로세스에서의 디지털화, ②건축 및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기준의 글로벌스탠다드화, ③건축설계 신기술 및 디지털 툴에 대한 지식 보급, ④건축 전문교육에서 디지털 툴에 대한 교육 강화, ⑤공공사업 입찰 시 건축물에 대한 연간 유지비용 산정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고려 강화, ⑥건설자재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건축물 공급

우수한 품질의 건축은 심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 접근성, 지송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한 실내 환경은 적정 자재 선택을 통해 조성될 수 있으며, 건축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고려되어 한다. 건강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은 이용자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환경성 질병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며,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시민건강 증진에 건축가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건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측면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가조하고, 건설과정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대한 다양

한 정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①건물 내 습기 감소를 위한 새로운 건축기준 마련, ②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연구 확대 및 사업 운영, ③기존 건축물의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금 운영, ④건축물 에너지 관련 기준 강화, ⑤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건축 산업의 역할 중요: 'Bolig+' 프로젝트²⁶⁾, ⑥지역 도시계획에 저에너지 설계유도 등의 건강 및 녹색 건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정부임대주택의 건축 품질 확보

1960-80년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임대주택은 대규모 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디자인이 저급한 양상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사회주택법(Consolidation Act on Social Housing), 도시재개발 및 개발법(Act on Urban Renewal and Urban Development)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 디자인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세부적으로는 ①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²⁷⁾, ②취약한 주택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③도시 재개발 관련 교육 강화 등이 계획을 실천과제로 포함하였다.

- 도시계획에서의 건축품질에 대한 우선순위 보장

도시계획은 개별 건축물 하나가 아닌 대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기본방향 및 조율하는 과정이다.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 자연, 인프라간 상호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은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조성하는 기본요건으로 건축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덴마크 건축정책으로 ①도시계획의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 ②새로운 근린단위 계획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③도로 및 도시 구조에 대한 연구 확대, ④조경과 접목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⑤스완 라벨 빌딩(Swan-labelled buildings)²⁸⁾ 촉진, ⑥랜드마크로서의 품력 발전기를 활용한 지역경관 향상 등 건축뿐만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고려도 건축정책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26) 조명과 온수 사용에 소요되는 에너지와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택 설계 개발에 목적을 둔 것으로 2007년에는 국제적 공모로 발전 시킬 예정이다.

27) 덴마크 도시재개발법(Danish Urban Renewal Act)에 따라 임대주택 개발 및 도시재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매년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에 의해 신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테마는 건축의 기술적, 기능적,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시설 접근성, 에너지 효율 및 실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8) 주택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우수한 품질과 쾌적한 실내를 보장하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 건축유산의 보존 및 개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다양한 덴마크 건축물 및 구조물은 국가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개별 건축물은 덴마크의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따라서 정부의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건축정책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건축물에 대한 개조 또는 증축 시 원래 구조의 건축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Cultureal Heritage Agency)²⁹⁾에서 매년 건축 전문가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①매너 하우스³⁰⁾ 등 건축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예산 확보, ② 건축물 보존에 대한 평가 수행, ③지역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DB구축 및 지도 제작, ④문화유산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사업 운영³¹⁾, ⑤첨단 건축설계 및 시공기법과 문화유산과의 융·복합, ⑥건축유산 보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

덴마크 경제는 점차 지식서비스, 디자인산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 전망으로 건축분야는 덴마크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큰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분야이다. 그간 덴마크 내 건축사사무소들은 폭 넓은 해외시장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우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대규모 건축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건축산업의 해외수출 잠재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에 해외 수출 여건 조성을 통해 덴마크 건축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건축센터 DAC³²⁾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전시 기획³³⁾, ②외교부 무역위원회 주관으로 덴마크 건축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마련, ③국제시장과의 교류 및 홍보 확대³⁴⁾, ④외국 건축 전문인력의 취업기회 보장 등의 정책을 수립하였다.

29) 덴마크 건축정책에서는 국가문화유산위원회에서 역사건축물의 개조 및 증축 허가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건축 전문인력이 역사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30) 덴마크의 옛 영주의 저택으로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복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DKK 600만 예산(한화 약 11억 2천만원) 등을 건축 복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31) 국가 문화유산 위원회는 레알다니아 재단 및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특정 지역이 문화적 유산 활용을 통해 인구, 상업, 관광 요충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사업 운영 예정이다.

32) 덴마크 건축센터 DAC는 국제 건축 비엔날레 및 전시를 벤치마킹하고 건축 전시를 지원하며 수출 홍보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33) 덴마크 건축 및 디자인 홍보를 위해 DAC와 덴마크 디자인센터(Danish Design Centre)는 2007-2010년 간 국제적으로 투어(travelling exhibit)하는 전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동시에 덴마크 건축 기업들의 홍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34) 덴마크 건축, 디자인, 공예를 홍보하기 위해 DAC, 덴마크 디자인 센터, 덴마크 공예(Danish Crafts)에 의해 'Danish Edge' 라는 영문포털 및 소식지가 제작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해외 건축수출을 위해 외국기업에 국내 건축가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있지만 덴마크의 경우는 역발상으로 외국 건축 전문인력을 고용하는데 지원해 줌으로써 해외의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고 해외의 상업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결과적으로는 해외시장에 대한 산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었다.

-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덴마크 건축산업의 활력 및 혁신을 위해 신진건축가들의 재능과 지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덴마크의 경우도 우리나라 턴키 발주제도의 문제와 유사하게 특정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만 운영되는 지명경기(closed competitions)가 증가되어 공개 공모전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①와일드 카드 프로그램(New wild card scheme)³⁵⁾ 운영, ②유로판(EUROPAN) 참가³⁶⁾, ③신진건축가 프로젝트 수집, ④신진건축가를 위한 여행 보조금 지원³⁷⁾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건축 관련 연구의 수준 확보

덴마크만의 독특한 건축양식과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건축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의 건축교육은 타 국가에서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또는 기술에 초점을 둔 교육이 아닌 문화예술에 기반을 한 덴마크식 건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실무와 교육 및 연구분야 간 지속적인 발전 및 협력 도모를 위해 건축분야의 선도적 기업 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들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건축교육에서의 실무적인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건축교육 기관에 비즈니스 박사과정을 설비하여 산학 연계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덴마크 건축교육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교육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교육자, 학자 간 국제적 교류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5) 덴마크 건축센터 DAC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건축공모를 촉진하는 다양한 캠페인 및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였다.

36) 유로판(EUROPAN)은 40세 미만 유럽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건축 및 도시계획 공모전임

37) 건축교육 졸업자 또는 젊은 건축가들의 국제 및 기업적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여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행 목적은 전문성과 관련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덴마크 건축 마케팅의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고, 문화부 디자인 보조금 지급 사업실행 일환으로서 특히 중국과 뉴욕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③ 건축정책의 추진 주체

덴마크의 건축정책은 중앙정부인 문화부(ministries of Culture), 경제부(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사회부(Social Affairs), 외교부(Foreign Affairs), 환경·교통부(Environment and Transport) 에너지부(Energy)와 공공기구인 덴마크 대학 자산관리청(Danish University and Property Agency), 덴마크 국방 자산 및 인프라 관리 조직(Danish Defence Estates and Infrastructure Organisation), 덴마크 왕실 자산관리청(Palaces and Property Agency)의 참여로 작성되었다.

건축정책의 주요한 추진 주체로 덴마크 건축센터(Danish Architecture Centre, DAC)는 건축의 문화적·상업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보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화부, 경제부와 함께 레알다니아 재단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건축 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일반 대중을 위한 다양한 전시, 회의, 컨퍼런스, 교육, 서비스, 웹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덴마크 예술재단(Danish Arts Foundation)은 건축산업 진흥을 위해 3년간 장학금, 취업 및 여행 보조금, 시상보조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에 설립된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Danish Foundation for Culture and Sport Facilities) 스포츠, 문화, 여가 분야의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포츠 및 문화시설에 대한 계획수립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건축 품질 개선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Cultural Heritage Agency)는 건축, 선사시대 기념물, 박물관의 문화적 유산 가치를 보존 및 강화하고자 문화재 등록 및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건축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④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덴마크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서는, 덴마크 예술재단에 소속된 건축위원회(Committee for Architecture)에서 매년 DKK 750만(한화 약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 재단은 국립복권기관인 'Danske Spil'로부터 매년 DKK 8,000만(한화 약 15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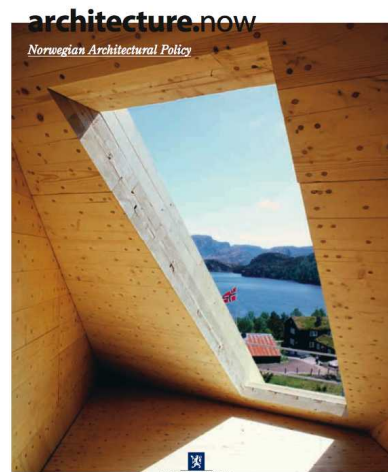
레알다니아 재단은 덴마크 건축센터에 2005년에는 210만 DKK(약 4억원), 2007년에는 연간 1,240만 DKK(약 23억원)의 예산 지원을 하였다.

3) 노르웨이의 건축정책

노르웨이는 1992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조환경의 문화적 측면: 공공환경 심미성 관련 실행 프로그램 (Surroundings as Culture: Action Programme for Aesthetics in Public Environment)」을 시작으로 1997년 제2차 건축정책 「공공건축 및 건설사업의 심미성 (Aesthetics in Government Building and Constructions)」, 2009년도에 제3차 기본계획 (Architecture, now Norwegian Architectural Policy)을 수립·발표하였다.

노르웨이 건축정책은 건축분야의 주요쟁점사항으로 ①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②사회적 변화, ③지식과 혁신 등 3개 사안으로 정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6개 추진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과제, 노르웨이 건축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타 유럽국가와 비교되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건축정책 서두에 '건축의 정의'에 대해 일반적 의미, 학문적 의미, 산업적 의미 등 건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다각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건축정책에 많은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³⁸⁾



① 건축정책의 발전

노르웨이는 1992년에 처음으로 제1차 건축정책인 「건조환경의 문화적 측면: 공공환경 심미성 관련 실행 프로그램(Surroundings as Culture: Action Programme for Aesthetics in Public Environment)」을 제정하여 건축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7년에는 제1차 건축정책을 개정하여 제2차 건축정책인 「공공건축 및 건설사업의 심미성 (Aesthetics in Government Building and Constructions)」을 수립하였다.

2009년도에는 제3차 기본계획인 「Architecture, now Norwegian Architectural Policy」를 수립·발표함으로써 국가의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38) 영문 「Norwegian Architectural Policy: architecture, now」 내용 정리

② 건축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노르웨이의 제3차 건축정책은 ①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②사회적 변화, ③지식과 혁신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6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정책 목표: 6대 추진 전략

-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
- 우수한 건축품질 확보를 위한 도시 및 인구집중센터 개발
- 문화적 환경 및 건축유산 보존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 건축에 대한 첨단기술 보급으로 건축디자인 수준 향상
-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 건축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주요 내용

-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

노르웨이 건축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가장 우선과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및 도시설계분야에서 친환경적인 교통, 폐기물 처리, 패시브 하우스 확대, 태양전지 및 히트펌프, 바이오 연료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 등 제로 에너지 빌딩 건립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①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소비 감소, 환경 및 건강에 유해한 물질 생산 억제,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택 및 건설부문의 환경실행계획 수립’, ②건축물 에너지 성능요구 기준 강화 및 건축물 전생애주기 환경 평가, ③패시브 하우스 건축기준³⁹⁾ 개발 및 보급 확대, ④저에너지 프로그램 도입⁴⁰⁾으

39) 노르웨이에서의 패시브 하우스의 난방 관련 에너지 소비량은 일반 주택의 25% 수준으로 건물 외부의 추가적인 단열, 실링(sealing), 연손실을 방지하는 창문과 문, 태양광 에너지 및 열회수 시스템 이용 등 패시브 하우스 기준을 개발하여 보급

40) 저에너지 프로그램은 건설산업협회(Building Industry Association), 건축가협회(architect's association Arkitektbedriftene), Housing Bank, Enova, 국가빌딩기술행정국(National Office of Building Technology Administration), 노르웨이 수자원에너지기관(Norwegian Water Resources and Energy Directorate), Statsbygg(공공 건설사업 및 부동산 관리기관, Directorate of Public Construction and Property)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노르웨이 건축정책, 2009)

로 빌딩 및 인프라시설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⑤바이오에너지 프로그램 확대 : 농산업의 바이오에너지 이용과 우드칩 활용, 빌딩 구조에 맞춤형으로 건축되는 소규모 바이오 원료 플랜트에 대한 투자 지원 등, ⑥에노바(Enova) 운영: 주택, 빌딩,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신축 주거와 상업시설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약 650동의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지원, ⑦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도시 시범사업인 ‘미래의 도시(Towns of the future)’ 사업⁴¹⁾ 추진. 13개 대도시⁴²⁾에 적용, ⑧공공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축 프로그램 도입, ⑨친환경 및 재생가능 소재로서 목재사용 증대, ⑩공공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관리, ⑪빌딩에너지 라벨링 제도⁴³⁾ 운영. 1,000㎡ 이상의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 ⑫기후변화에 대한 시각적 자료 제공 : 기후변화 정보를 시각화하고, 위기지역 맵핑, 해수면 상승 및 지표수 관리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평가수행 등이다.

- 우수한 건축품질 확보를 위한 도시 개발

지역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건축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비롯하여 건축도시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지원, 정보체계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실천과제로서 ①지자체 건축인력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조직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②공공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유관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역량이 부족이 지자체 지원을 위한 중앙 자문서비스 개발, ③사회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 추진, ④대중교통 이용 증대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독려 등 친환경적 교통체계 강화, ⑤무분별한 별장 신축 등 자연지형의 환경적 요소 보존, ⑥교육과정 및 웹포털 개발 등을 통한 건축 및 건설, 환경 디자인 관련 지식 강화, ⑦디지털 맵핑 툴 개발을 통한 어린이 공간이용 패턴 파악 및 계획 과정에 활용, ⑧인구 고령화 현상

41) ‘미래의 도시’는 2008-2014년 동안 수행되는 사업으로 주요목표는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 절감을 통해 살기 좋은 타운과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며,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에 의해 주관된 사업이다.

42) 본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13개 대규모 도시지역들로 오슬로, Baerum, 드람멘(Drammen), 사릅스보르크(Sarpsborg), 프레드릭스타(Fredrikstad), 포르스그룬(Porsgrunn), 시엔(Skien), 크리스티안산(Kristiansand), 산네스(Sandnes), 스타방에르(Stavanger), 베르겐(Bergen), 트론헤임(Trondheim), 트롬쇠(Tromsø)이다.

43) 에너지 라벨링은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개선하고, 주택과 상업시설의 매매 및 임대 시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노르웨이 수자원·에너지기관(Norwegian Water Resources and Energy Directorate)에 의해 개발된 웹 기반 솔루션을 통해 시행되며, 개별 빌딩은 난방 시스템, 환기 시스템 등에 기반한 필요 에너지량에 따라 에너지 인증서를 제공받고 있다.

에 대비하여 노인계층을 위한 주거 모델 개발, ⑨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건축승인 과정의 전산화 시스템 도입: 'Byggsok-plan⁴⁴⁾', ⑩문화유산 검색 웹사이트 운영⁴⁵⁾, ⑪역사적 도심부의 보존: 'National Interests in Towns(NIB)⁴⁶⁾', ⑫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률 강화 및 관련 가이드라인 보고서 작성으로 신축 건물, 인프라, 공개공지 등 공공시설 디자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문화적 환경 및 건축유산 보존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그러하듯이 노르웨이도 지역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①공공시설 유형별 국가 차원의 보존시설 계획 수립(national conservation plan): 문화유산법에 따라 1,000동 이상의 건물에 보존 업무 수행, ②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군사요충지 활용, ③노르웨이 석유, 에너지, 수자원 역사 강조: ‘노르웨이 석유 박물관’, ‘노르웨이 삼림 박물관’, ‘노르웨이 수력발전소 박물관’ 과 협력 및 새로운 박물관 건립 추진, ④농림식품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다양한 20개 문화적 지형을 선정하여 기록화하고 구체적인 보존 사업 추진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 건축에 대한 첨단기술 보급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축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축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건축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관계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정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건축분야 지식체계 현황조사 및 연구 추진: 노르웨이의 물리적 환경 변화 속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건축물의 문화예술 측면 발굴 및 공공의 역할 등, ②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를 지정⁴⁷⁾하여 건축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 ③친환경적 및 건강한 환

44) 국가 빌딩기술행정기관(National Office of Building Technology Administration, BE)에서 운영하는 ‘Byggsok’은 건축승인 과정의 준비, 제출, 관리를 전산화한 시스템을 말한다. 민간 건축허가승인 전 과정에 대한 가이드, 체크리스트, 템플릿을 제공하며 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Byggsok-plan’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45) 2009년 문화유산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Kulturminnesok)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노르웨이 문화유산국의 데이터베이스이자 문화유산법(Cultural Heritage Act)에 의해 보존되는 모든 문화적 유산의 데이터베이스인 ‘Askeladden’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이트이다.

46) 노르웨이 문화유산국은 2009년도부터 75개 도시 및 소도시의 국가 문화 유산지 관련 DB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47) 노르웨이 정부는 2009년 제로에미션빌딩연구센터(Research Centre on Zero Emission Buildings, ZEB)를 총 8개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Centres for Environment-friendly Energy research) 중 하나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건축예술학부(Faculty of Architecture and Fine Art)에 의해 주관하고 있다.

경 조성을 위한 다학제 연구센터 설립, ④건축이론 및 역사 연구센터(Centre for Architectural Theory and History, CATH) 개발, ⑤실무에 기반한 첨단 설계기법 연구 추진, ⑥대학기관 간 협력 강화, ⑦국가차원의 건축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 센터 Housing Bank⁴⁸⁾, ⑧노르웨이 건축센터 Norsk Form의 지속적 발전, ⑨오슬로 트리엔날레(Oslo Triennale)⁴⁹⁾: 3년 주기로 전시, 컨퍼런스 등 이벤트 운영, ⑩노르웨이 예술건축디자인 박물관 운영: 35만장 이상의 건축 도면과 모형, 건축 발전 기록물 등 소장, ⑪노르웨이 도로관리 기관(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tion)의 ‘국가 관광 루트(National Tourist Routes)’ 사업을 통한 신진건축가 발굴육성, ⑫유로판 노르웨이(Europan Norway) 개최, ⑬와일드 카드 제도: 젊은 건축가들의 건축 공모전 참여 독려 및 신진 건축가 발굴 등이다.

-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이 정부는 국가 내 가장 규모가 큰 발주자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자산이자 문화적 산물인 공공건축에 대한 발주청으로서 건축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노르웨이 건축정책은 공공건축물과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의 기반시설의 기획부터 설계단계까지의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건축도시 관련 법령 및 규제 기준을 정하는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①정부 주관 공공건축 공모전 운영, ②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급, ③공공 부문은 친환경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선도해야 하며, 모든 소비 및 생산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정책 마련, ④공공공간 및 건축물을 위한 예술 정책 장려, ⑤국가적 관광 루트 개발(National tourist routes): 운전자 중심의 뷰포인트 설정, 휴게 지점에서의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 등 노르웨이 관광지 개발, ⑥공공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인프라 시설의 품질 확보, ⑦BIM(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활용 확대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의 업무절차 및 소통 간소화 등 정부차원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정책

48) Housing Bank는 우수한 건축물과 환경 디자인에 대한 홍보를 국가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도시 및 커뮤니티 개발과 관련하여 Housing Bank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또는 예산 지원을 수행하며,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지식을 보급하고 있다.

49) 현재까지 오슬로 건축 트리엔날레는 3차례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2010년부터 오슬로 건축디자인 학교(AHO), 노르웨이 건축가협회(Norwegian Architects Association, NAL), 오슬로 건축가협회(Oslo Architects Association), Oslo Teknopol, Norsk Form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된다.

사항들을 계획에 포함하였다.

- 건축의 국제적 위상 제고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건축물에 대한 국제적인 마케팅 전략을 담고 있다. 노르웨이의 우수한 건축 수준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전시, 프리젠테이션, 페스티벌, 미디어를 통한 홍보, 인터넷 기반 정보 보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축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①노르웨이 예술 및 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해 노르웨이 건축 프로파일링을 우선순위 과제로 설정⁵⁰⁾, ②문화 관련 또는 노르웨이를 홍보하는 정보의 확산 측면에서 외교서비스를 통한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 ③우수건축을 전시함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관광지로서의 노르웨이 홍보 병행, ④인터넷 기반 정보 보급 시스템의 강화⁵¹⁾: 도시설계, 건축 관련 수상내역에 대한 DB 구축 및 인터넷 포털 'Norgesportalen⁵²⁾' 운영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추진 중이다.

③ 건축정책의 추진 주체

유럽 건축정책의 특징은 다양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 건축정책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르웨이 건축정책은 타 유럽국가보다도 정책수립 과정에 가장 많은 중앙부처가 참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행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지역개발부, 문화종교부, 교육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부, 석유에너지부, 교통·커뮤니케이션부, 외교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 장애인을 위한 정책 코디네이팅을 담당하는 부처로 유니버설 디자인 및 시설 접근성 제고에 대한 건축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 행정부 : 정부소유의 행정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로 공공 건설사업 및 부동산 관리기관인 "Statsbygg" 를 중심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빌딩 커미셔너, 시설 관리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국방부 :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면적의 공공토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부처로 역사적

50) 오슬로 오페라 하우스 등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국제 미디어를 통한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51) 노르웨이 건축센터인 Norsk Form에서 상의 다양한 언어 지원을 통해 인터넷 기반 정보 보급을 강화하고, 매달 영문으로 제작된 노르웨이 디자인 및 건축 관련 소식지를 국제 미디어, 전문가 등에게 보급하고 있다.

52) 19개 언어로 지원되는 외교 서비스의 인터넷 포털로서 전문적인 정보채널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존가치가 있는 방호시설에 대해 문화유산으로써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방시설관리위원회(Norwegian Defence Estates, FB)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전담하는 전문조직으로 국방시설에 대한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 최근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의 보급관리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 지방정부·지역개발부 : 주택 및 건설정책을 주관하고, 관련 지원에 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건축설계, 친환경 자재 이용, 에너지 효율성, 커뮤니티 디자인 등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 문화종교부 : 문화 및 체육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로 노르웨이 건축센터인 Norsk Form과 국가 예술건축디자인박물관(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을 관리하고 있다.
- 교육부 : 산하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오슬로 건축 디자인 학교,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베르겐 건축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 농림식품부 : 농촌시설에 대한 신축, 지형에 대한 공간분석, 유흥농촌시설에 대한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환경부 : 정부의 환경정책 중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문화유산 사이트의 보존 및 이용, 수질 좋은 해수 보존 및 독신 억제, 안정적 기후 및 청량한 산소 확보, 생태계 다양성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산업통상부 : 국제전시 사무국 BIE멤버십을 관리하는 부처로 노르웨이 건축산업 위상을 제고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 산하에 지난 10년간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적 프로파일링 제고를 위해 기여한 노르웨이 디자인위원회(Norwegian Design Council)를 두고 있다.
- 석유에너지부 : 에너지 정책에 대한 코디네이팅을 담당하는 부처로 관련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공기업 에노바(Enova)를 담당하고 있다.
- 교통·커뮤니케이션부 : 도로, 철도 등 네트워크 분야의 중장기적 계획 수립 및 평가, 이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및 예산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외교부 : 국제적인 문화협력사업과 노르웨이 건축의 국제화, 관광산업의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건축을 전시, 발표, 세미나 등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인터넷 포털 'norgesportalen' 을 관리하고 있다.

4) 해외 건축정책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 진단

□ 해외 건축정책의 흐름 속에서의 국내 건축정책의 위치

유럽의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크게 건축정책을 법률 제정에 의한 방식과 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부분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법률 제정을 통해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써 건축의 공공성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강력한 규범인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 지원기구 또는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 최초로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종합정책계획 방식으로 국가차원의 공식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 또한 종합정책계획 방식을 채택하였다.

대부분 건축물과 공간환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전략계획 형태로 구성되었다. 계획 수립주기는 국가별로 다르며, 통상 3~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계획내용에 대해 성과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영국과 키프로스 등은 부분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국가차원에서 법률 또는 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나 건축위원회 또는 전담지원 기구를 중심으로 건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출판물을 발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 유럽 건축정책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건축정책 상황

유럽과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률 제정에 의한 방식과 종합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모두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건축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수립됨으로써 본격적인 건축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유럽 주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정책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서 지난 5년간 성과를 비교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뒤늦게 건축정책을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유럽 국가 대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항을 국내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표 2-24 참조)

다만 유럽의 건축정책이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시행됨에 따라 건축지원기구, 공공건축가 제도, 디자인공모제도 등의 정책이 이미 정착되어 현재 많은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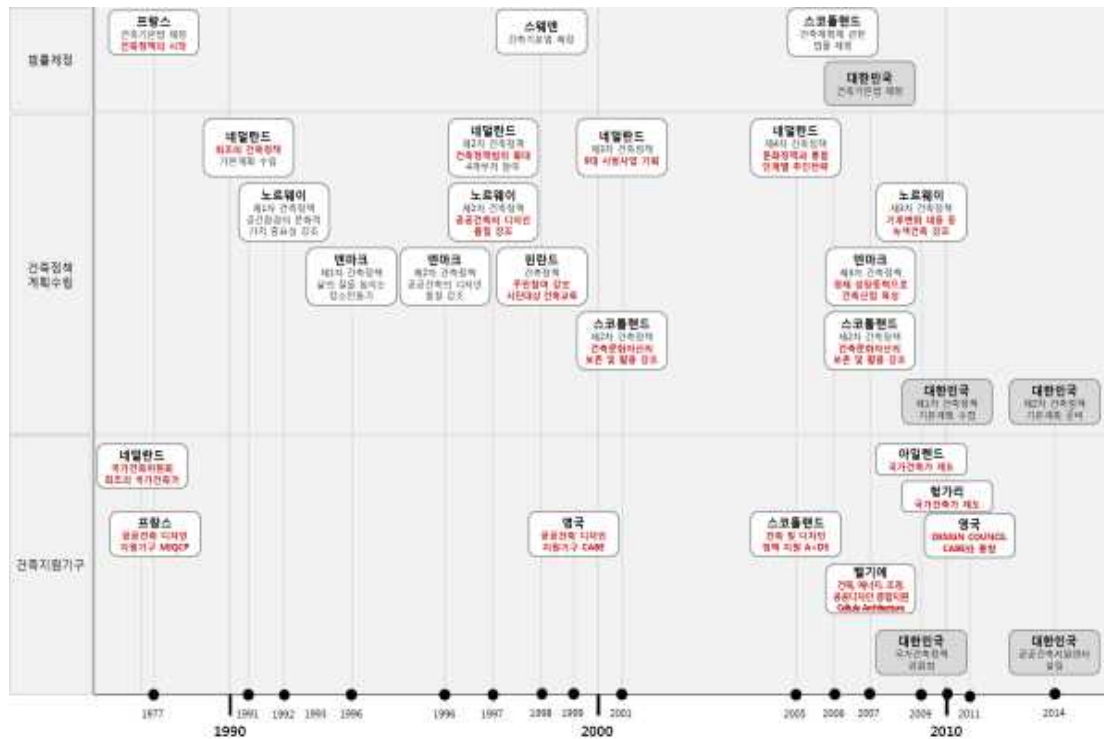
[표 2-24] 유럽과 국내의 건축정책 성과 비교

부문	주요 유럽 건축정책	대표사례	국내 정책 상황
건축문화 인식 확산	1. 건축문화기금 지원	핀란드 건축박물관, 네덜란드 건축협회(NAI), 벨기에 건축협회(VAi), 오스트리아 건축센터, 비엔나 건축센터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건축진흥원 설립 근거 확보
	2. 문화사업 지원	벨기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문화사업 지원사례	국토부 주관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 추진
	3. 연구사업 지원	네덜란드 건축기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녹색건축센터 지정 등
	4.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영국 CABE 발간물	경관조명, 수변경관, 해안경관 등 경관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5. 건축 시상제도 ⁵³⁾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등	공공건축상, 신인건축사대상, 녹색건축대전, 한옥공모전 등 다양한 시상제도 마련
	6. 기초건축교육 프로그램	영국, 핀란드,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국토부 주관 기초건축교육 교재 마련, 협회주관 건축캠프 시행
	7. 전문가 학습 프로그램	크로아티아	-
	8. 건축문화제 및 이벤트	국제 로테르담 건축비엔날레,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영국 Open house London 등	건축문화제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공공건축 설계 성능 기준 개선	9. 국가 건축정책 지원기구	프랑스 MIQCP, 웨일즈 건축지원기구, 스코틀랜드 A+DS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확보
	10. 지역건축지원 기구	프랑스 CAUE	지역건축위원회는 지자체별 있으나 건축정책 측면에서의 역할 정립 및 기능확보 필요
	11. 국가건축가 제도	네덜란드, 아일랜드, 헝가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필요

부문	주요 유럽 건축정책	대표사례	국내 정책 상황
	12. 지역건축가 제도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핀란드	서울, 경기 등 건축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에서 도입운영
	13. 시정건축가 제도	네덜란드	기초지자체 단위의 영주, 포항 등에서 운영
	14. 디자인 공모제도	프랑스 MIQCP의 디자인공모절차 지원, 벨기에 Open Call, 유로판(Europen)국제설계경기 등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역할로 설정되어 있으나 운영예산, 인력 등 확보 필요
	15. 신진건축가 지원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신진건축가 대상 공공건축 디자인 공모 시범사업 추진 중
	16. 건축 및 안전한 환경 조성	덴마크, 아일랜드	-
	17. 창조적 장소만들기 시범사업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으로 추진 지자체 지역명소화 조성 시범사업
	18. 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여건 조성	덴마크 job card 프로그램	해외 건축수출을 위한 계획 수립
지속 가능한 건축 기술 확대	19. 친환경 공공건축 시범사업	오스트리아 Haus der Zukunft House Tomorrow, 덴마크 Bolig+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초에너지절약형 녹색청사 시범사업 등
	20.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덴마크 스완라벨 빌딩제, 스페인 자발적 녹색인증제 등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녹색건축물 인증제 등 마련
	21. 지역 도시계획에 저에너지 설계 유도	덴마크	-
	22. 건축물 전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고려 강화	덴마크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도입
	23. 첨단 사공기술 개발	덴마크	BIM, BEMS 등 관련 협회 주관으로 추진
	24. 녹색건축 기술정보에 대한 웹사이트 개발	스코틀랜드, 덴마크	국토부 주관 그린투게더 웹사이트 개발

*출처 : 김영현(2014),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auri brief, p.8~p.9. 재인용

53) 유럽건축정책포럼에서 우수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시상제도로는 ‘State Prize for Architecture(키프로스)’, ‘Grand National Prize for Architecture(프랑스)’, ‘Grand Public Prize of Architecture(프랑스)’, ‘Gouden Pyramid(네덜란드)’, ‘National Award for Dwelling Quality(스페인)’, ‘vladimir Nazor(크로아티아)’, ‘Building city. Living city(독일)’, ‘Grand Austrian National Prize for Architecture(오스트리아)’, ‘National Prize Architecture(오스트리아)’, ‘Architecture Best house Award(오스트리아)’ 등이 있음



[그림 2-11] 유럽건축정책 동향 및 우리나라 건축정책의 현재

*출처 : 김영현(2014),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auri brief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직접작성)

3. 건축정책의 성과와 의미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축문화 형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2008년부터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축도시·조정분야의 산·학·연·관 각계 전문가 43명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2년간 지속적인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건축정책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건축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범위와 목표 설정을 위해 많은 건축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으며, 건축계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건축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건축을 통한’, ‘건축에 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이 국민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으며,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였다.

건축을 ‘민간자산의 건축’ 보다는 ‘국가자산으로서의 건축’으로 건축기본법의 근본 취지인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합일된 건축계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은 건축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건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및 소기의 성과 달성

건축기본법의 구성체계를 분석해 보면,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크게 ①건축정책기본계획(제10조, 제11조)과 지역건축기본계획(제12조) 수립, ②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제13조), ③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제20조), ④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제21조), ⑤건축디자인 시범사업(제22조)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이룬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 건축계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각 정책 실행수단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2-21과 같이 지난 5년간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 국가 및 지역별 중장기 건축정책 방향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 5년간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관련 법령 제정의 근거가 되었으며, 정책기반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건축정책 지원기구도 다수 설립·지정되었다.

두 번째, 건축정책 심의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건축정책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부처적인 대규모 건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제1기와 2기 위원회에서는 신한옥 활성화 전략, 보금자리주택, 친수공간 조성, 공공건축 품격향상 등 중요 안전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하였다.

세 번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 지원하는 등 건축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유럽 국가와 같이 향후 건축 기금 조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네 번째, 건축디자인기준이 단순한 업무지침서의 성격을 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기획업무 및 사전검토 제도 운영의 기본 지침으로써 작용되고 있으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 활력사업 등 관련 시범사업 운영의 업무절차이자 사업모델로써 작동되고 있다. 건축디자인기준을 준용한 사업운영으로 건축발주제도 등 건축프로세스가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 건축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향상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신진건축가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건축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었다.

[표 2-25] 건축기본법 실행수단에 따른 성과와 의미

건축기본법 실행수단	1차 성과	2차 성과	3차 성과
기본계획 수립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16개 광역사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관련 법령 제정의 근거 마련 건축정책 지원 기구 설립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도시재생 특별법, 건축자산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제정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기구, 국가한옥센터 설립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구성 (제10~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운영 (1기~3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정책 심의, 조정의 기능 건축정책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정책을 단일부처 업무가 아닌 범부처 업무로 정책범위 확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진흥원 설립 근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의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 행사, 교육, 신진건축사 육성, 전문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건축기금 조성 근거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기획업무, 사전검토 제도 운영 기준 건축디자인시범사업, 도시재생 활력사업 등 시범사업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건축발주제도,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 건축품질 향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신진건축가 육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 건축 및 도시환경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역량 향상

*출처 : 직접작성

□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관계 법령 제정

건축기본법 실행수단에 따른 성과 외에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별 ‘법·제도’와 ‘계획 및 사업’ 성과를 요약정리하면 아래 표 2-22와 같다.

건축정책 세부 실천과제에 따라 정책을 실행,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제·개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26]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건축정책 기본계획	법·제도	계획 및 사업
품격있는 생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 경관법 개정(201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2013) 공공건축자원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환경디자인사업(28개, 162억원 지원) 민간전문가 지원 사업사업(가창, 안동, 완주 지원) 해피하우스 사업(서울, 전주, 대구 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200억원 지원)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이차보전 20억원 지원) 그린홈 보증자리주택 공급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선도사업(거창, 포천, 강릉)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4) 건축협정제도(2013) 도입 국가한옥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한옥플랜 수립 및 한옥 R&D 추진 공공건축상(2011년부터 매년 5건, 신진건축사 상(2013년 12인) 등 각종 시상제도 운영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사업 추진

*출처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국가법령정보, 조상규·김영현(2012), 건축정책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재정리



[그림 2-12] 건축정책 주요 성과 및 추진 경위

*출처 : 국가법령정보 내용을 토대로 직접작성

□ 제1차 건축정책의 한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113개 단위실천과제에 대한 성과점검 결과 총 108개의 단위 실천과제를 수행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으로 계획 수립 초기 우려하였던 것보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기본계획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는 건축정책이 단일부처가 아닌 범부처 성격의 포괄적 계획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축정책은 다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반면 1차 계획에서는 86%(113개 과제 중 16개 과제만 타부처와 협력)과제가 국토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건축정책을 일찍부터 도입한 유럽국가 대부분에서는 다수의 부처가 건축정책에 참여하고, 부처간 협업을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특정부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계획된 정책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는 건축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 지역 건축정책의 총괄관리에 대해 지역건축위원회에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역 건축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세 번째로는 국가단위의 건축정책에 비해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은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계획을 실행, 관리하는 주체’의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건축정책관’실이 별도로 구성되었으며, 건축정책과(품격있는 생활환경 조성 부문, 건축산업육성 부문), 녹색건축과(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부문), 건축문화경관과(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부문) 등 기본계획 정책목표 3대 부문을 실행해 나갈 전담부서가 있는 반면,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건축인허가 부서 또는 주택담당과에서 추가적인 업무로 건축정책을 관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행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4.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의의와 중요성

□ 국가 및 지역자산으로서의 건축정책의 중요성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6,911,288동, 연면적은 3,451,351천㎡⁵⁴⁾”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가자산통계(2009년 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이 속한 ‘유형 고정자산’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약 42.8%를 차지한다. 특히 장소에 대한 토지자산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국가자산의 대부분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산 증감비율에 있어서 토지자산과 유형고정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⁵⁵⁾

[표 2-27] 국가자산 규모

(단위 : 조원 %)

2009년말 기준	자산총액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재고 자산	토지 자산	입목 자산	지하 자산	내구 소비재
국가자산	7,385.1	3,162.7	43.4	450.7	3,464.6	24.8	47.8	191.2
구 성 비	100.0	42.8	0.6	6.1	46.9	0.3	0.6	2.6
증 감 액	392.7	147.1	0.8	28.6	200.0	1.7	5.3	9.3

*출처 : 국가자산통계(2009), 통계청, p.13.

특히, 건축정책 대상 및 범위가 되는 공공부문의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지역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시설로서 도시의 환경수준과 질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뿐만아니라 국가자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13년 기준 한해 공공 부문 국내 건축공사 계약건수는 13,490건, 공공부문 국내건축공사 계약금액은 16조 6천억원 규모(2013 대한건설협회)로 파악된다. 건축정책을 통해 국가 전체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질, 디자인 향상을 하는 것은 국가자산 가치를 향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5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국 건축물 총 6,911,288동/34억 5천 1백만㎡”, 2015.1.30일자

55)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유재산 현황에서는 “국유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토지다. 나라가 보유한 땅은 2만3383km²로 경기도와 강원도 땅을 모두 합친 규모다. 금액으로 따지면 438조9469억원으로 전체 재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은 59조422억원(6%)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국유재산 950조, 경강원크기 ‘440조’ 땅보유”, 2015.9.2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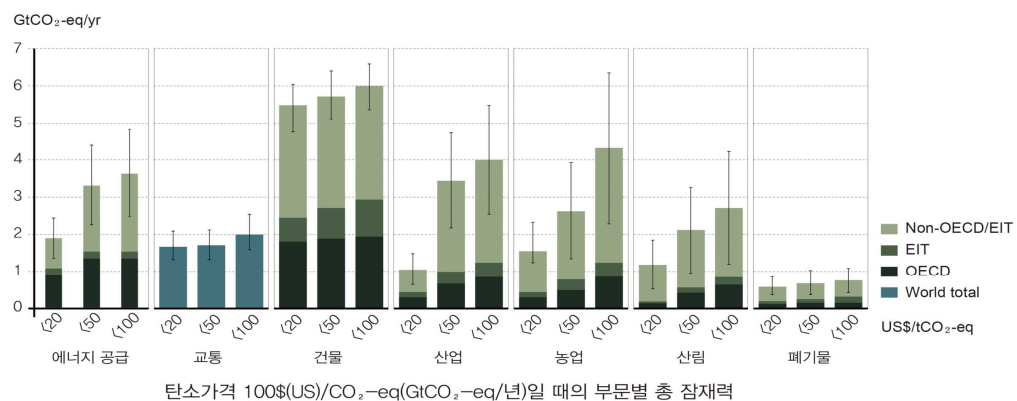
□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시를 구성하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사적인 개인자산임인 동시에 본질적으로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타 예술분야와 달리 개인 취향에 의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그 지역의 장소와 주변환경과 어울려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도시는 건물의 형태적, 기능적 측면에서 공공성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특성도, 특색있고 정리된 가로경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건축기본법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유럽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건축정책이 도입된 것은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첫 번째 정책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 사회작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공간복지 실현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도시재생 등 사회적 변화에 뒤따라 오는 다양한 난제들에 대해 국제적, 국가,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환경 및 이미지, 국민 일상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건축분야의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축물의 쾌적성편리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건물부문 온실가스배출량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가구 소득 증대, 거주자 인식 향상 등으로 인해 건축물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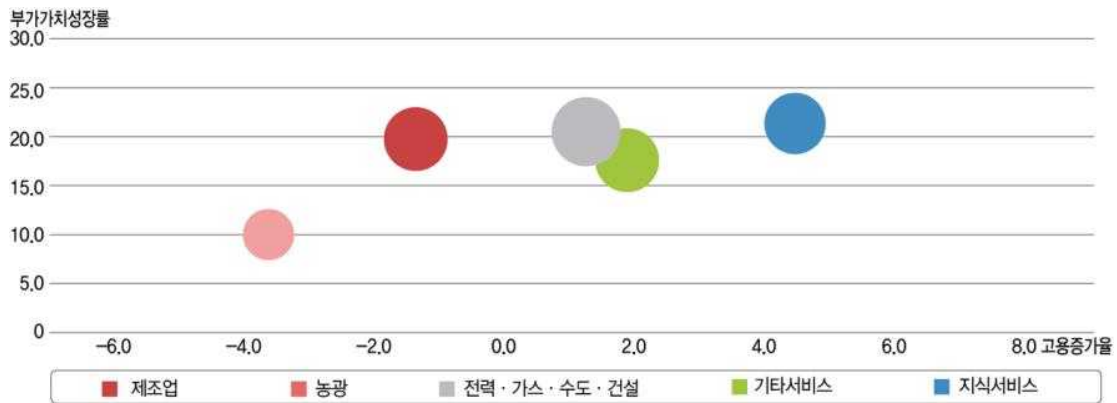
[그림 2-13]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출처 : IPCC, 기후변화 2007 종합보고서)

*조상규, 김영현(2013),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 및 분석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 재인용

56) 조상규, 김영현(2013),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 및 분석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건축정책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고, 국민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관련 제조업 등 기간산업의 해외 진출을 매개하는 등 국가의 위상과 부가가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주 : 1) 부가가치성장률은 1970~2004년간, 고용성장률은 1993~2003년간의 자료임
 2) 원의 크기는 2004년 현재 각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출처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한국은행 내부자료, 지식서비스산업 발전방향 (2005. 7., 박진수, p3)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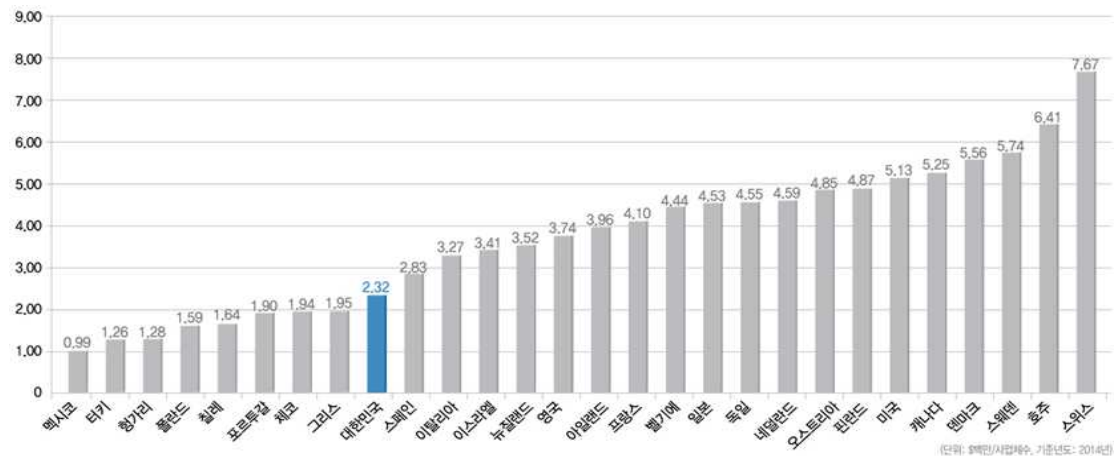
[그림 2-14] 산업별 고용 및 부가가치 효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경제의 저자 존 홉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건축분야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진출 지원, 기술혁신, 전문지원기관 설치,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 국가 건축서비스산업의 전체 사업체수는 약 39만개로 미국이 약 9만개 (23.35%), 일본 약 4.2만개(10.74%), 멕시코 약 4만개(10.24%)순으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수는 약 18,596개로 OECD 국가 중 9번째 규모에 위치하고 있다.⁵⁷⁾ 그러나 OECD 국가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당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하위권인 20 위인 실정이다. 한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당 매출액은 2.32(\$백만/사업체)로 OECD

57) 2014 Barnes Reports(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의 내용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재정리

국가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당 평균매출(3.69\$백만/사업체)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어 건축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건축정책이 필요하다.⁵⁸⁾



[그림 2-15] OECD 국가의 건축설계산업 사업체 당 매출실적 비교

*출처 : 국토교통부(201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63. 재인용

□ 전략계획으로서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

“건축도시분야는 관련주체가 다양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반면에 정책실현을 통한 혁신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김상호, 김영현, 2008) 또한, 건축은 다수의 주요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다. 주택 및 건설정책, 도시정책, 환경정책, 교통정책 등은 특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교육, 복지, 문화적 측면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 모두가 건축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 행정조직간 코디네이팅과 협력·지원하기 위한 정책근거가 된다.

전략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다. 계획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게 되면 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내용의 타당성과 정책실현성을 높이고 지역 전체의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건축 및 도시환경에 대한 애착과 관심은 보다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그 지역에 필요한 쟁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운 건축정책은 지역의 특화된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58) 국토교통부(201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70.

제3장 지역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 분석 및 성과점검

1. 지역별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실행체계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특징과 한계

1. 지역별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실행체계

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특징

□ 계획 수립 현황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전라북도, 제주도 등 11개 지자체는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개 지자체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신청을 한 상태로 내년도에 수립할 예정이다.



[그림 3-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출처 : 직접작성

□ 계획 주요내용 및 특징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 지난 5년간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건축기본계획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계획수립시점별로 각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지역이 도시, 농어촌, 도·농 혼합지역 여부에 따라 계획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국가단위에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하기 위해 ①건축도시디자인 향상, ②녹색건축도시 및 산업 육성, ③건축문화 진흥 등 3대 목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특성을 고려한 내용상 차별성

지역건축기본계획 내 세부실천과제의 내용은 상위계획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조에 맞추어 공통 범주 안에서 유사 적용된 과제와 각 지역별 현황 및 여건을 따라 특색 있는 과제를 독창적으로 발굴하여 구성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한옥을 포함한 전통적인 건축문화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여 ‘한옥마을 조성 및 민간에서의 한옥건축 지원에 관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도·농 혼합지역이라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실천계획 수립 시 농촌 및 도시지역을 나누어 각 대상지에 적합한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구광역시도 도시지역이긴 하지만, 타 지역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도로써 ‘시민 참여제’, ‘대구건축 우수 품질인증제’ 등의 도입을 하고, 이전적지 랜드마크 개발 등의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하였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안변과 중산간지역에 대한 개발관리 방안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해안경관 향상 시범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경상북도는 농어민의 서민 친화적인 건축정책에 초점을 두어 ‘도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등 지역여건에 따라 작은 규모의 건축정책을 제안하였고, 인천광역시는 지역현안 문제에 따라 범죄예방환경설계, 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거나 복지측면의 과제를 포함하였다.

• 계획 실행체계에서의 특성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실행체계는 조금씩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단·중장기의 단계별 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내에 시행 가능한 단기과제를 구분하였다.

주로 5년 내에 시행가능한 단기과제로는 조례 제·개정,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편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획 실행주체에 대해 구분을 한 사례로 경기도는 도에서 직접 실행·관리하는 실천과제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구분하였고, 충청남도의 경우 15개 시·군에 대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실천과제와 시·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 발굴보다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상호 연계하거나 발전시키는 과제를 다수 포함하여 계획 실행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타 충청남도는 2013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역녹색건축물조성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전략사업에 있어서도 건축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을 통합하여 계획간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3-1] 지역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특징

지역	계획목표 년도	구성 및 내용	성격 및 특징
서울 59)	2011년~ 2015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건축문화’를 비전으로 3개 목표, 6개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처음 수립 되는 최초의 광역건축기본계획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등 공공부문에 초점을 둔 계획이며, 각 단위사업별 다양한 분야의 관계부서 및 전문가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
경기 60)	2011년~ 2016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를 비전으로 3개 목표,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 6개 핵심전략사업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다 인구 거주지역으로서 31개 시·군이 도시, 농어촌, 도농혼합 등 다양한 구조로 되어있어 대한민국 축소판 성격을 지님 서울, 대전, 인천광역시 등과는 다르게 경기도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성격 모두를 지님

지역	계획목표 년도	구성 및 내용	성격 및 특징
부산 61)	2011년~ 2015년	‘시민의 건축 · 품격 있는 부산’을 비전으로 3대 목표, 9대 전략, 22개 정책과제와 23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 디자인,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건축 · 도시관련 시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타 계획보다 새롭고 다양한 사업 포함 신규사업 발굴보다 기존 건축·도시관련 사업과 상호 연계 및 발전시키는 과제 다수
전라 북도 62)	2012년~ 2017년	‘전통과 미래,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 12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 등 전통적인 건축문화자산이 풍부한 이점을 살려 건축문화의 보존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문에 중점을 두어 계획 농촌과 도시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
대전 63)	2013년 ~2017년	‘창조적 녹색건축 문화 공동체, 대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을 다수 포함·강조 주로 건축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제도개선,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룸
경상 남도 64)	2013년~ 2017년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녹색 경남건축’을 비전으로 3대목표, 6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마다의 단계별 계획목표를 정하고, 1~4차까지의 향후 20년의 중장기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5개년 계획 : 2013~2017년 (건축 · 도시 관련 기반구축), 2차 5개년 계획 : 2018~2022년 (민간 파급 · 확산기), 3차 5개년 계획 : 2023~2027년 (대한민국의 선도적 건축 · 도시 환경 구축), 4차 5개년 계획 : 2028~2032년 (건축 ·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대구 65)	2013년 ~2017년	‘문화중흥지, 시민의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와 48개 세부과제로 구성, 건축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선도과제로서 6대 핵심전략 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내 사업 추진시점을 단기, 중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 단기 2013~2014년, 중단기 2013~2017년, 중기 2015~2017년, 상반기 지속 2013년~, 중반기 지속 2015년~ 시민 참여제, 이전후적지 랜드마크 개발, 대구건축 우수 품질인증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 발굴에 노력을 한 계획
제주 66)	2013년~ 2018년	‘전문가와 함께하는 품격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3대 목표, 15개 중점과제, 4개 지원과제, 2개 중·장기 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변과 중산간지역에 대한 개발관리 방안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등 제안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고, 단기과제의 경우에도 중요도 및 사업성격에 따라 중점과제와 지원과제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지역	계획목표 년도	구성 및 내용	성격 및 특징
인천 67)	2014년~ 2018년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 아름다운 인천’을 비전으로 3대 목표, 9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재해·재난 등 안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의 실천과제 도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실천과제별 성격에 따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
경상 북도 68)	2014년~ 2018년	‘경상북도 고유의 아름답고 건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3개 부문별 목표와 12개 전략, 35개 정책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민의 서민 친화적인 건축정책 과제 발굴 노력 -도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소규모 건축사무소 육성 전략 등
충청 남도 69)	2014년~ 2019년	‘충남다움, 어울림의 건축문화 창조’를 비전으로 3개 목표, 8개 추진전략, 19개 실천과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전국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수립되는 녹색건축물조성계획이 통합된 종합계획 단, 중, 장기의 1~3차 건축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내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6개 핵심전략사업을 별도로 제안 세부실천과제에 대해 지역현안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

2) 지역별 계획수립 주체 및 구성체계

지역별 계획수립 주체 및 구성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 현황 및 여건변화 부문의 조사항목, 계획부문별 주요 정책 키워드, 실행주체, 계획에서 제안하는 전담지원기구의 기능 및 역할, 예산계획, 실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여부 등 지역별 계획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광역시와 자치도의 행정특성에 따른 기본계획 구성 및 세부내용을 분석하였다.⁷⁰⁾

59)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서울특별시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도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1) 김민수, 우신구 외(2012), 「부산건축기본계획」, 부산광역시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북발전연구원(2012),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전라북도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3) 대전발전연구원(2012),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2013-2017)」, 대전광역시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4) 경남발전연구원(2013),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2013-2017)」, 경상남도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5) 대구발전연구원(2013),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대구광역시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6) 박철민 외(2013), 「제주건축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7) 인천발전연구원(2013),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인천광역시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8) 경남발전연구원(2013),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2013-2017)」, 경상남도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69)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충청남도 건축관련기본계획」, 충청남도청, 내용 전반에 대한 정리
70) 대부분의 지자체는 광역시·도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동일한 기준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건축

□ 계획수립의 주체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주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11개 지자체별 계획수립과정의 수행기간, 계획수립주체, 계획수립용역기관, 계획참여 전문가 등 4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약 12개월~20개월로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획수립주체는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각 시·도지사이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정부출연기관, 지역발전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그 외 관련 학·협회 등에 학술연구용역 형태로 위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 수립과정에는 대부분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는 건축분야 전문가로 학계 교수, 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건축정책 아젠더 발굴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별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 각 지자체별 계획수립과정

	수행 기간	계획수립주체	계획수립용역기관	계획 참여 전문가
서울시	2009.5.11. - 2010.12.31 (약20개월)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③+④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대한건축사협회)	자문진 (총 39명, 교수 9명, 연구원 3명, 지자체17명, 기타 10명)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경기도	2010.02- 2011.06 (약17개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①+② (경기개발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민간전문가TF위원 (총 12명: 교수 8명, 연구원 1명, 기타 3명)
부산 광역시	2010.09- 2012.02 (약18개월)	부산광역시청 건축주택 담당관실	③+④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부산대학교)	민간전문가TF위원 (명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전라북도	2011.05- 2012.07 (약14개월)	전라북도청 토지주택과	①+② (전북발전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문가 TFT (총 17명, 교수 9명, 연구원 4명, 기타 4명)
대전 광역시	2011.05- 2012.10 (약18개월)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② (대전발전연구원)	민간전문가TF위원 (명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허가, 조직구조, 사업집행절차 등 상이한 행정특성에 따라 계획 추진성과가 다르다.

	수행 기간	계획수립주체	계획수립용역기관	계획 참여 전문가
경상남도	2011.09- 2013.01 (약16개월)	경상남도청 친환경건축과	② (경남발전연구원)	전문가 TFT (총 4명, 교수 4명) 자문위원 (총 9명, 교수 6명, 기타 3명)
대구 광역시	2012.01- 2013.04 (약15개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② (대구경북연구원)	-
제주도	2012.06- 2013.07 (약13개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③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위원 (자세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천 광역시	2012.04- 2013.09 (약18개월)	인천광역시 청 건축계획과	② (인천발전연구원)	민간전문가TF위원 (교수, 건축사, 공무원, 타 사·도 연구진) (명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경상북도	2013.01- 2014.02 (약13개월)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③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가 TFT (총 11명, 교수 5명, 연구원 2명, 기타 4명)
충청남도	2013.10- 2014.10 (약12개월)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문가 TFT (총 12명, 교수 6명, 연구원 5명, 기타 1명)

(① 정부출연기관, ②지역발전연구기관, ③대학산학협력단, ④학·협회)

*출처 :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직접작성

□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지표의 현황조사 및 여건변화 분석과 일반 현황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실·국별 주요정책 및 사업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항목을 크게 구분하면 ①인구구조 및 정주환경, ②도시구조 및 경관, ③건축물 및 공공공간 현황, ④건축문화자산 관련 현황, ⑤건축서비스산업 현황, ⑥전문가 및 주민 인식조사 등 6개 부문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수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수행한 조사항목으로는 인구구조 및 정주환경 현황에서 지리, 기후, 인구특성, 교통, 경제, 노령화 지수, 주택보급률, 노후도, 주거유형, 빈집 수 등이 있다. 도시구조 및 경관 측면에서는 도시계획 현황, 각종 건축도시 관련 사업 현황

항목이 있으며, 건축물 및 공공공간 현황에 있어서는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현황,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원 등 공공공간 현황, 친환경 건축물 현황 등이 있다. 건축문화자산 관련 항목은 문화재현황, 유형별 건축 관련 문화재, 등록문화재 현황, 문화 축제현황이 있다.

[표 2-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

분 류	세부 사업	서울	경기도	부산	전라북도	대전	경상남도	제주도	인천	경상북도	충청남도
인구구조 및 정주환경	지리, 기후, 인구특성, 교통, 경제, 노령화 지수 등	●	●	●	●	●	●	●	●	●	●
	주택 수, 주택보급률, 주택노후도, 주거유형, 빈집 수 등			●		●	●	●		●	●
도시구조 및 경관	건축·도시 관련 사업 현황		●		●		●		●	●	●
	도시계획현황(행정구역 및 토지이용)	●	●	●	●	●	●	●	●	●	●
	산업단지 현황										●
건축물 및 공공공간	지역별 건축물 용도별 현황			●	●	●		●	●	●	●
	건축 규모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원 등 공공공간 현황		●	●	●	●	●	●	●	●	●
	친환경 건축물 현황		●			●	●	●			●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 신재생에너지 보유현황		●		●		●			●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에너지관련 정책 현황				●		●			●	
	공사중단 건축물 방지기간							●			●
	건축물 노후도										●
	허가/무허가 건축물								●		
	2014 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								●		
건축문화 자산관련	문화재현황, 유형별 건축 관련 문화재, 등록문화재		●		●			●	●		●
	한옥문화재, 한옥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	●
	근대문화유산, 우수건축물							●	●		●
	목조건축물 지붕재료										●
	문화 축제현황		●	●	●		●			●	
	관광자원현황, 관광권역		●		●					●	●
건축 서비스 산업	건축 관련 교육 현황(대학)						●				●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서비스업 매출액		●				●		●		●
	건설공사 수주액 및 수주 현황		●				●		●		
의견수렴	전문가(자문회의, 워크숍, 설문조사 등)			●	●	●	●	●	●	●	●
	시민(의식수요조사, 설문조사 등)	●			●		●	●	●	●	

*출처 :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직접작성

각 지역별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4]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수행한 세부 조사내용

	현황조사·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실·국별 주요정책 및 사업 조사
서울	서울의 역사, 지리적 환경, 기후 특성, 인구구조, 도시구역, 정부, 경제, 교통	-	전문가_델파이조사 3회 (1회88명/2회68명/3회61명) 시민_정책 수요조사 (20세이상 1000명) _심층 시민토론회 (60명 서울시민, 20여 명 전문가 참여)	주택본부 도시계획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푸른도시국, 맑은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경기	-인구규모, 인구특성, 농업인구, 개발사업추진, 예산편성, 공공시설, 기반시설 -건축·도시관련 사업내용현황 -경기도 소재 근린공원 입지 -지역별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현황 -규모별 사업체 수 및 매출액 -지역별 건설공사 수주액 규모 -2010년 경기도 공공부문 설계발주 현황 -경기도 사·군별 축제 현황 -경기도 관광권역 설정 -경기도 내 산·재생에너지 활용가능 지역 -각 사·군별 산·재생에너지 보유 현황 -에너지 관련 주요 지표 전망	지역성발굴 및 지역활성화 지원 방안 관련 (국내)경기도 지역,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기존 건축자산 활용 (국내)포천시 폐채석장 건축문화자산 명소화 사례 (국내)군포시 납덕골 마을 (해외)일본 아오모리 아우가 건축정책 사례 (해외)영국, 네덜란드, 독일 기타 사례 (해외)중국 신천지	-	기획조정실 _도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도시주택실 _품격있는 녹색도시 건설 문화관광국 _일자리 창출 환경국 _녹색경기 조성 경제투자실 _환경해경제권
부산	- 일반현황 (지리적 위치, 지형, 인구지표, 기후특성, 도시구역(행정구역, 해안선 및 도서, 생활환경에 대한 견해, 주차장 현황), 공원 녹지 현황, 문화축제현황) - 건축물 유형 (종류별 주택현황,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용도별 건축물현황)	부산건축 실패사례 (국내)부산동 대아관광호텔, 부산 실내사격장화재, 부산 해운대 W아파트 화재, 횡령산 스키장, 오륙도 옆 S아파트 부산건축 성공사례 (국내)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산영화의전당, 광복로 시범가로사업, 경성대 앞 문화골목, 망미동 주공테라스아파트, 중앙공원 광복기념관 건축정책 사례 a. 초국가적·국가적 정책 (해외)EU 유럽이사회, 유럽이사회 결의안 b. 국가적 정책 (해외)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핀란드 c. 통합적 도시 정책 (해외)일본 도쿄, 싱가포르,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전문가, 민간회사, 디자인 관련 직종, 공공기관 _의견도출 기초설문조사 (219명)	건축정책관실 _주거복지, 주거환경정비, 재정비촉진사업 창조도시본부 _창조도시구현 도시개발본부 _건강한 도시공간 창출 문화체육관광부 _문화환경 조성 정책기획실 _도시경쟁력 향상 복지건강국 _복지서비스

	현황조사·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실·국별 주요정책 및 사업 조사
		d. 도시 실천 프로그램 (해외)일본 구마모트, 미국 콜럼버스, 캐나다 밴쿠버		
전북	<p>–일반현황(입지현황, 지형 및 지세, 기상 및 기후, 수계현황, 생태환경, 행정구역, 인구현황, 토지이용현황, 도로·철도 현황,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현황)</p> <p>–건축·도시관련 현황(건축물 현황, 건축물 허가 현황, 주택건축물 현황, 공공건축물 현황, 지역공간환경 조성 현황(공공공간 현황), 지역건축·도시관련 문화행사 및 사업현황, 문화재 현황, 건축자산 현황, 문화재 보존 관련 인력 및 예산 현황, 교육현황, 지역건축·도시관련 산업 현황, 한옥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전라북도 에너지 소비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황, 전라북도 에너지관련 정책 현황)</p>	<p>건축문화 가치 향상 관련 사례 (국내) 행복도시 총괄기획가, 서울 시민 디자인 위원회, 우주군 공공시설 프로젝트, 경기도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전라북도 지역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p> <p>건축문화 관련 사례 (국내) 전주 한옥마을, 전남 행복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택중택 명품화 사업, 경기도 고나광, 경기도 건축지도 작성 (해외) 일본 가나자와, 프랑스 문화유산자원화, 일본문화유산 자원화, 프랑스 라데팡스, 네덜란드 NAi</p> <p>공공건축 운영조직 관련 사례 (국내)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 부산 너른 소극장, 부산 톨레랑스 문화지대 (해외) 미국, 핀란드, 일본 구마모트, 프랑스 라데팡스, 중국 상해시 모간산루, 이탈리아 조나 포르또나</p> <p>건축정책 사례 (해외) 영국의 The London Plan, 일본의 동경구상 2000</p>	<p>전문가·자문회의 (총 11명, 2회) _TFT회의 (총 17명, 10회) 시군관계관 회의 4회 시민·공청회 (285명, 전북도민)</p>	<p>민생일자리본부_서민경제안정 및 지역경제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국 새만금환경녹지국_새만금 내부개발 추진 전략사업국_전략사업 10대 클러스터 완성도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농수산국_농식품산업육성 건설교통국_환경해권 물류허브 기반구축</p>
대전	<p>–인구현황(인구분포 변화도, 노령화지수분포 변화, 행정동별 총인구수 현황, 인구이동, 인구유입·출, 인구밀도 분포, 주택수분포, 주택유형별 분포, 연면적별 분포, 주택노후도 현황분포, 건축연도별 분포, 이전건축물 분포, 근대건축물 지정 현황, 근대건축물 유형별 분포,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현황,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현황, 도시공원 및 공공용지 현황, 어린이 공원</p>	<p>건축·도시관련 주요 사업사례 (국내) 해피하우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사업, 저탄소 미래형 도시 및 마을조성사업,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설치 지원사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p> <p>건축정책 추진동향 (국내)_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해외)_유럽연합, 영국, 핀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p>	<p>공무원 및 전문가 _설문조사 (286부, 조사내용: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인식도 평가,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계획관련) _자문회의</p>	<p>경제산업국_녹색성장, 전통시장육성, 에너지이용합리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_문화산업진흥, 산업단지개발관련 문화체육관광국_공공시설 계획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_자원절약, 생태하천 업계획, 녹지관련 사업계획 도시주택국_도심균형발전계획, 주택종합계획, 도시경관계획, 공간정보계획</p>

	현황조사·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실·국별 주요정책 및 사업 조사
충청	<p>-인구구조 및 정주환경(인구, 면적, 연령별인구구조, 시군별 인구변화, 주택보급률변화, 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 빈집수)</p> <p>-도시구조 및 경관(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현황, 충청남도 산업단지 현황, 공사중단 건축물 방지기간)</p> <p>-건축물 및 공간환경(대응도별 건축물, 지역별 주거용 건축물, 지역별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용도별 건축 연면적 추이변화, 시·군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변화 추이, 시·군 건축물 노후도, 공공시설)</p> <p>-건축문화자산관련(문화재 현황, 유형별 건축관련 문화재, 한옥문화재 현황, 등록문화재현황, 목조건축물 지붕재료, 건립시기, 근대문화유산목록, 비지정건축물 시기별건립, 건축물 유형별 시·군별 근대문화유산, 우수건축물, 관광자원)</p> <p>-건축서비스산업(건축관련 대학교,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서비스업 매출액)</p>	-	<p>전문가_공청회 (충남 건축사 150명 설문내용: 충청남도 건축문화공간 환경 인식현황)</p>	
경북	<p>-일반현황(임지현황, 지형 및 지세, 기상 및 기후, 수계현황, 생태환경, 행정구역, 인구현황, 토지이용현황, 도로·철도 현황, 문화·관광 경제 및 산업현황)</p> <p>-건축·도시 관련(건축물 현황, 건축물 허가 현황, 주택건축물 현황, 공공건축물 현황, 지역공간환경 조성현황(공공공간 현황), 지역건축·도시관련 문화행사 및 사업현황, 문화재 현황, 건축자산 현황, 문화재 보존관련 인력 및 예산 현황, 교육현황, 지역건축·도시관련 산업 현황, 한옥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에너지 소비현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황, 전라북도 에너지관련 정책 현황)</p>	<p>건축정책 사례 (국내)_광역건축기본계획 (해외)_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전체, 미국, 일본</p>	<p>전문가_자문회의 (총 4명, 1회) 시군관계관_시단위 지자체 실무회의(도내 8개시) 군단위 지자체 실무회의(도내 12개군) 시민_공청회 -도민의식 조사 (183명, 경상북도민, 조사내용: 경북 건축의 전망,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 현실적인 문제점, 잠재력 건축기본계획 취지 등)</p>	

	현황조사·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설문조사	실·국별 주요정책 및 사업 조사
경남	<p>-일반현황(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지형·지세, 해안선 및 도서, 인구, 행정구역, 토지이용, 기반시설)</p> <p>-건축·도시관련 교육·산업현황(용도별, 주택건축물 현황, 주택보급률 추이,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건축 연도별 주택 현황, 건설공사 수주액, 건축관련 서비스업 현황, 경남 중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경제활동인구 및 종사자수, 건축관련 학과 현황,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추이,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친환경건축물 인증 현황, 근대화유산현황, 사·군별 축제현황)</p> <p>-권역별 건축·도시현황 분석</p>	<p>건축정책 사례</p> <p>a. 국가적 정책 (해외)_네덜란드, 핀란드, 영국</p> <p>b. 지역차원의 정책 (해외)_브라질 꾸리찌바, 일본 도쿄, 싱가포르, 독일 프라이부르크, 일본 구마모토,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p>	<p>전문가_워크숍</p> <p>-자문회의</p> <p>시군관계관 회의</p> <p>시민_공청회</p> <p>-도민의식 조사 (700명, 경상남도 민 조사내용: 주거 만족도, 좋은 주거의 결정 요인, 현재 거주지역 건축·도시의 개선점, 좋은 건축도시에 관한 견해, 경남의 건축 및 도시에 관한 견해, 건축·도시환경 개선의 역할, 건축정책 수립을 위한중점 추진사항 등)</p>	
인천	<p>-면적 및 인구현황(면적, 인구추이, 경제활동 및 취업자 인구)</p> <p>-건축물 현황(공공시설, 문화재, 우수건축물, 2014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무허가 건축물, 건축허가, 개발 및 정비사업)</p> <p>-건축서비스현황(매출액 및 종사자, 생산 및 고용관련 현황)</p> <p>-군·구별 도시계획현황, 건축물현황, 종합현황</p>	<p>건축정책 사례</p> <p>(해외)일본 구마모토, 영국DQI, 벨기에 브뤼셀 구역협약, 독일 프라이부르크</p>	<p>전문가_자문회의 9회</p> <p>시민_공청회</p>	<p>광역건축기본계획 연관부서</p> <p>(건설교통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경제수도추진본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도시디자인추진단,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p>
제주	<p>-일반현황(지리 및 지형적 현황, 기후 및 기상특성, 인구, 행정구역, 토지이용, 기반시설, 제주건축의 흐름,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별, 층수별, 경과연수별, 고층건축물 현황, 주택 현황 및 보급률, 건축허가, 공공시설, 인적,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친화나경 건축물 인증, 문화재 지정, 전통가옥, 근대건축물 현황)</p>	<p>건축정책 사례</p> <p>a. 국가적 정책 (해외)_네덜란드, 영국</p> <p>b. 지역차원의 정책 (해외)_스코틀랜드, 일본 동경, 싱가포르, 런던, 뉴욕</p>	<p>전문가_자문회의(5회)</p> <p>시민_공청회</p>	

*출처 :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 지역별 계획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간 부합성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중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 반영된 정도를 정책목표부문별로 분석하였다. 정책목표 첫 번째인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문에서는 실천과제 위계에서 살펴볼 때,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재창조’의 내용은 대부분 반영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나, ‘SOC국가 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부문은 부산을 제외하고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세부과제로는 수변경관 및 생태하천 조성에 관한 과제, 교량 및 도로 등 SOC 디자인 개선에 관한 과제, 관련 법령간의 연계·통합하는 과제, 공동주택 디자인심의에 관한 과제, 도시재생개념 정립에 관한 과제 등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표 2-5]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부문에의 계획 반영사항

			연관성 있음 ●, 사업수()									
추진 전략	실천과제	세부과제	서울	부산	충청남도	인천	대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목표 1.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국민체감형 시설의 디자인 개선		● (14)	● (5)	● (3)	● (8)	● (4)	● (8)			
		도시경관 향상 시책 추진	● (5)	● (9)			● (1)				● (3)	● (3)
		수변경관 형성·관리유도 및 생태하천 조성										
		자연과 조화되는 지역경관 형성	● (4)	● (3)					● (6)	● (2)	● (6)	● (1)
		동서남해안지역 개발시 우수한 해안경관 창출							● (3)			● (2)
	SOC국가 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경관과 디자인 개념을 반영한 친환경										
		경관도로 조성사업시행										
		고속도로 디자인 정비사업 추진										
		항만시설의 디자인 개선 추진		● (1)								
		명품교량 건설 및 관광자원화 추진										
	공공부문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철도역사,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시설의 도시환경 개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디자인 실현	● (1)	● (7)			● (9)	● (7)	● (3)	● (6)	● (3)	● (7)
		공공건축물 시설물의 발주방식 다양화 추진	● (1)	● (1)		● (4)	● (1)	● (2)		● (1)		● (1)
		관련 법령간의 효율적 연계·통합을 통한 법체계 위상정립							● (2)	● (2)		
		다양한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조직 모델 보급	● (1)	● (8)	● (4)		● (3)	● (3)	● (5)	● (12)	● (4)	
2 건축 도시·환경 개선	공공 건축 디자인 쇄신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특화 및 환경 개선		● (2)								
		공공건축물의 디자인품질 개선과 강화				● (2)					● (3)	● (3)
		특별건축구역의 가이드라인 작성·제공				● (1)		● (2)				● (1)
		공동주택·공공 건축의 디자인심의 강화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책임 강화		● (11)	● (7)	● (6)	● (6)	● (3)	● (13)	● (8)	● (3)	
		도시재생개념 정립과 도시별 특화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 (8)	● (13)		● (7)	● (10)	● (4)	● (9)	● (10)	● (7)	● (5)

*출처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정책목표 두 번째인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부문에서는 건축물 단위에서의 에너지효율 제고에 관한 과제는 대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규모가 큰 단지개념의 녹색도시, 건축 산업 육성에 관한 과제, 첨단 건축기술에 관한 과제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녹색건축도시, 초고층 건축물 설계기술 개발, 녹색 건축 관련 기술 및 설계기법 개발 등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표 3-6]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부문에의 계획 반영사항

추진 전략	실천과제	세부과제	서울	부산	충청남도	인천	대전	경기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목표 2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3 녹색 건축 · 도시 구현	탄소 저감형 건축·도시환 경 조성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구축	● (2)	● (4)				● (1)	● (1)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조성	● (4)	● (5)		● (3)		● (3)	● (1)	● (1)	● (3)	● (2)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설계기준 강화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 (7)	● (3)		● (3)	● (4)		● (2)		● (3)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 (3)								
		친환경저에너지 부문 인력양성 및 전문성 제고	● (8)	● (7)			● (7)	● (13)	● (14)	● (2)	● (9)	● (3)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통해 그린홈 200만호 건설공급	● (1)	● (3)				● (4)	● (2)			
		그린홈 성능제고 추진						● (3)			● (2)	
		에너지소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소비량공개										
		미래형 Smart Grid City 시범단지 조성	● (1)									
	녹색건축 선도사업 추진	에너지 절약형 저탄소 녹색학교 건축										
		탄소제로 건축시범사업 추진	● (2)						● (3)			● (1)
4 건축 · 도시 산업의 고도화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건축사 역량강화 방안검토										
		건축관련 국가R&D 강화							● (1)			
		신진 디자이너 대상 설계공모를 통하여 신진 우수설계자 육성	● (1)						● (2)	● (7)		● (2)
	미래기술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성능중심으로 건축(조경) 기준의 혁신적 전환추진		● (2)		● (2)			● (1)			
		건축정보 모델링(BIM) 활성화 기반마련										
	핵심기술 및 설계기법 개발촉진	초고층 건축물 등 첨단 선진설계 기술개발	● (3)									
		녹색 건축 관련기술 및 설계 기법개발 추진	● (1)									

*출처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정책목표 세 번째인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부문에서는 공통적으로 근대 건축유산을 활용하는 과제, 건축문화 행사의 내실화 과제, 일반인 대상의 건축문화 교육, 건축문화 기록물 축적·관리 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과제, 상징거리 조성사업, 건축가 국제브랜드화 과제, 한스타일 건축문화 홍보에 관한 과제는 지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표 3-7]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부문에의 계획 반영사항

추진 전략	실천과제	세부과제	서울	부산	충청남도	인천	대전	경기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5 고유한 건축 문화 창달	고유한 건축문화유 산의 보전 · 활용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 (1)					● (2)			● (2)	
		기존도심 한옥지구 보전·재생 유도	● (3)						● (2)		● (1)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추진									● (1)	
		한옥의 산업화 및 현대화 기반조성	● (1)									
		한옥 보전·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		● (2)	● (3)					● (1)		
	지역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창조문화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문화공간 조성	● (5)	● (6)	● (8)	● (2)	● (2)	● (2)	● (2)	● (4)	● (4)	
		지역 유류 건축자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 마련·시행		● (3)				● (1)	● (1)		● (5)	
5 고유한 건축 문화 창달	지역별 대표거리(브 랜드거리) 조성사업 추진	광화문~한강구간 (7km)국가의 중심적 상징거리로 조성										
		지역의 대표가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체성 확립 및 관광자원화 추진				● (6)					● (2)	
6 건축 문화의 세계화 촉진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건축문화행사의 내실화 추진	● (3)	● (6)	● (3)	● (1)	● (4)	● (2)	● (1)	● (2)		● (1)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건축문화 교육확대	● (1)	● (10)	● (2)	● (5)	● (2)	● (2)	● (2)	● (2)	● (2)	● (3)
		우수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홍보강화	● (4)	● (6)							● (1)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건축가(조경가)의 국제브랜드화 추진										
		한스타일 건축문화 홍보추진										
	건축문화역 량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2)	● (3)		● (2)	● (1)					● (9)
		건축문화 기록물 축적·관리 시스템 구축		● (4)		● (1)	● (3)	● (8)	● (7)	● (8)	● (4)	● (1)

*출처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국가계획과의 정책 및 주제 관련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8] 건축정책기본계획 세부과제와 지자체 건축기본계획 세부단위과제와의 관련성

연관성 있음 ●, 사업수()

추진 전략	실천 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키워드 별	서울	경기 도	부산	전라북도	대전	경상남도	제주도	인천	경상북도	충청남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목표 1.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1 국토 환경 디자인 향상	지역 및 도시경 관 향상	국민체감형 시설의 디자인 개선	전면공지, 공개공지			●(2)		●(4)	●(4)		●(3)		●(2)
			테마가로 발굴, 활성화 사업			●(1)							
			자전거 친화적 도시환경			●(1)							
			복지, (유니버설 디자인)			●(3)							
			주거지 주차관련			●(4)							
			도시기반시설의 디자인 향상					●(1)				●(1)	
			특화거리					●(1)					
			생활공간 조성(커뮤니티 시설)		●(4)			●(1)	●(4)				
			도시 경관			●(3)							●(2)
			그린빌리지(녹색마을) 조성					●(1)					
		도시경관 향상 시책 추진	입체적 공간계획 수립	●(2)				●(1)					
			협정제도 매뉴얼 마련	●(1)		●(3)							
			연접 전면공지 성능기준	●(2)									
			건축물 높이관리			●(2)							
			간판문화 개선				●(1)						
			건축심의의 ·디자인관리를 통한 개선				●(2)			●(2)			
			도시환경 위해요소							●(1)			
			경과조명 가이드라인			●(4)							
		자연과 조화 되는 지역경관 형성	농어촌지역 경관계획 수립·시행			●(1)	●(2)		●(2)				●(3)
			지형을 고려한 공간계획			●(2)							
			협력 추진체계 구축			●(1)							
			농어촌 관련 정책 개선				●(1)		●(1)				
			농어촌 주거경관 및 환경 개선사업				●(2)		●(3)	●(1)			
			농어촌 경관을 고려한 주거모델개발				●(1)					●(2)	
		동서남해안 지역 경관 창출	정부 차원의 경관가이드라인 제정							●(3)	●(2)		
	SOC국가 기간	항만시설의 디자인 개선	항만디자인 표준과 지침을 마련			●(1)							

추진 전략	실천 과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키워드 별	서울	경기	부산	전라	대전	경상	제주	인천	경상	충청
				2010	2011		북도		남도	도		북도	남도

목표 1.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시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디자인 실현	공공부문의 건축·도시관련 디자인 기획과정 강화		●(2)	●(3)		●(5)	●(1)			●(3)	
			신진건축가 지원			●(1)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						●(1)				
			공공 공간 조성관련 사업							●(2)			
			정체성 확립							●(1)			
			디자인 업무기준 제정			●(3)	●(1)						
			업무 통합화방안 마련 연구		●(1)		●(2)	●(1)		●(2)			
			건축디자인 정책, 기준 관련 사업		●(4)			●(3)	●(2)			●(2)	
			공공건축(시설물) 유형별 특화된 설계과정 평가지표(DQI)개발·보급	●(1)						●(2)		●(1)	
		공공건축물 발주방식 다양화	우수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는 발주방식 도입	●(1)	●(2)	●(1)		●(1)		●(1)	●(2)	●(1)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1)		
			지역 건축산업 육성 및 전문화								●(1)		
		관련 법령 간의 위상을 정비							●(2)			●(2)	
		다양한 관리 조직 모델 보급	공공건축가 제도	●(1)	●(1)	●(2)	●(1)	●(1)	●(2)			●(3)	●(1)
			공공건축물 디자인개선 및 거점화			●(2)							
			심의위원회 운영, 협력형 설계관리		●(2)	●(4)	●(3)	●(2)	●(3)			●(4)	●(3)
			디자인 업무 통합화									●(4)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 방안										●(1)	

목표 1.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2 건축 도시 · 환경 개선	공공건축 디자인 색인	공동주택개선	노후공동주택 개선			●(2)							
		공공건축물의 디자인품질 개선과 강화	공공건축물설계 기준 마련·보급				●(3)			●(2)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1)	●(2)		
			특별건축구역의 가이드라인 작성·제공		●(2)					●(1)	●(1)		
	만·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			●(3)		●(3)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			●(4)	●(1)		●(2)				●(1)
			커뮤니티, 주민참여 관련			●(3)			●(9)			●(8)	
			도시재생사업 관련		●(2)	●(1)		●(2)	●(1)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방안		●(1)				●(1)		●(3)		●(3)
			안전한 도시, 주거지역 확보 방안										●(3)
			주거복지, 재능기부 관련 사업				●(2)			●(2)	●(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	공공건축물 기능·시설이용 활성화					●(1)					
			주거 유형별 맞춤형 재생전략 수립			●(4)	●(2)	●(6)					
			주민참여 지원				●(1)						
			지자체의 특화된 도시재생 지원	●(8)		●(9)	●(4)	●(1)	●(6)	●(5)	●(5)	●(10)	
			안전한 도시를 위한 CPTED 활성화						●(2)		●(1)		
			지역에 특화된 도시경관 연출								●(1)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		●(2)			●(3)	●(1)				
			주민참여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2)								

추진 전략	실천과 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키워드 별	서울	경 기 도	부산	전라 북도	대전	경상 남도	제 주 도	인천	경상 북도	충청 남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목표 2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3 녹색 건축 · 도시 구현	탄소 저감형 건축도 시환경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구축	자원재순환형 도시조성 기술 개발	●(2)	●(1)				●(1)				
			녹색도시건축 연구			●(3)							
			주민참여			●(1)							
		생태도시 조성	생태적 도시공간 조성추진	●(4)	●(3)	●(2)	●(3)		●(1)		●(3)	●(1)	
			건축물 녹화공간							●(2)			
			빛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구축			●(3)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에너지 소비총량제로 건축물의 유형 별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 강화	●(7)		●(3)	●(1)	●(2)	●(2)	●(1)	●(3)		
			생태 마을, 생태 단지 조성					●(2)					
			녹색기술 정보체계 구축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확대				●(3)							
		친환경저에 너지 부문 인력양성 및 전문성 제고	친환경 저에너지 관련 교육		●(4)	●(3)	●(3)	●(2)					
			녹색건축 모델 개발 및 보급			●(1)							
			녹색건축센터 설립 및 인증			●(1)			●(2)			●(1)	
			전문가를 활용한 녹색건축 관련사업		●(3)								
			친환경건축물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4)	●(3)	●(2)	●(6)	●(5)	●(3)	●(3)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연구						●(3)				
			리모델링 관련	●(4)	●(3)				●(6)			●(1)	
	친환경 주택건설 · 공급 활성화	주택신축· 개량을 통한 그린홈 건설	보급자리주택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		●(4)	●(3)			●(2)				
		그린홈 성능제고 추진	평가기준주택 대비 에너지 성능개선 수준 향상		●(3)		●(2)						
			미래형 Smart Grid City 시범단지 조성		●(1)								
	녹색건축 사업추진	탄소제로 건축시범사업	탄소제로 건축 Test-Bed 사업 추진	●(1)					●(2)				
			신재생 에너지 기술 적용	●(1)						●(1)	●(1)		
목표 2 건축·도시 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4 건축 · 도시 산업 의 고도 화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마련	건축관련 국가R&D강화	건축관련 R&D 전략·실행계획 수립						●(1)				
		신진설계자 육성	우수한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						●(2)	●(2)		●(4)	
			신진 설계자 대상 설계공모 시행	●(1)									●(3)
	미래기술 환경변화	성능중심으로 건축(조경)기 준의 혁신적 전환추진	건축 및 조경관련 방재기준 강화			●(2)			●(1)		●(2)		
		설계기법 개발촉진	첨단선진설 계 기술개발	초고층 건축물	●(3)								
	녹색건축 관련기술		초고층·복합건축물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1)									

추진 전략	실천과 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키워드 별	서울	경기	부산	전라	대전	경상	제주	인천	경상	충청
				2010	2011	2012	2013	2014					

목표 3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고유한 건축문화 유산의 보전· 활용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의 예산 및 기술 지원	●(1)	●(2)		●(2)						
		기존도심 한옥지구 보전·재생 유도	한옥건축물 대수선, 신축 등 건축행위 및 지표선정 관련 재정 지원	●(1)			●(1)						
			한옥 주거지 전수소자	●(1)									
			공공부문 지원을 통한 한옥 활성화 방안 검토	●(1)				●(1)					
			한옥관련 DB 구축					●(1)					
		농어촌 한옥마을 조성추진	농어촌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신축을 통한 한옥마을 조성				●(1)						
		한옥의 산업화 및 현대화	한옥 건축 기술기준 마련, 자재 표준화, 생산기술, 설계기준 등 연구	●(1)									
		한옥 보전·활용 관련 사업	한옥스타일 공동주택 건설, 한옥 개인주택단지 건설 등 추진			●(2)						●(1)	●(1)
			한옥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정보제공										●(2)
	지역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창조문화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근대건축문화자산 기록화	●(4)			●(1)						
			근대건축자산 발굴 및 보전, 관리	●(1)	●(2)	●(2)	●(1)	●(1)			●(2)	●(2)	●(2)
			건축자산 가이드라인·제도 수립			●(1)							●(1)
			지역명소를 활용한 도시공간 조성			●(3)	●(2)	●(1)	●(2)			●(2)	●(3)
			주민참여를 통한 유휴공간 활성화										●(2)
		지역 유휴 건축자산을 활용새로운 개발 모델 마련·시행	유휴시설을 주거용도(Transit Housing)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검토			●(2)	●(2)						
			상가 신탁을 통한 원도심 재생			●(1)							
			폐교나 농어촌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검토		●(1)		●(3)	●(1)					
	지역별 대표거리조성 사업	지역의 대표가로 조성을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관광 자원화 추진	특화거리 시범사업				●(1)				●(2)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문화거점 조성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조성								●(2)		
			생활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								●(1)		
			건축을 주제로 하는 마을 계획								●(1)		

추진 전략	실천과 제	세부과제	단위과제 키워드 별	서울	경기	부산	전라	대전	경상	제주	인천	경상	충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국민과 함께하 는 건축문 화 실현	건축문화행 사의 내실화 추진	우수(신인) 건축가 지원제도 마련			●(2)							●(1)
			건축문화행사 활성화	●(2)	●(2)	●(3)		●(2)	●(1)	●(1)	●(1)	●(2)	●(1)
			시상의 권위 제고	●(1)		●(1)		●(2)					
			우수건축 인식 확대 방안 마련										●(1)
		건축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시민건축대학 공모 지원사업	●(1)									
			지역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지원			●(6)							
			건축문화 교육·홍보		●(2)	●(2)	●(2)	●(2)	●(2)	●(3)	●(5)	●(2)	
			건축과 접목된 축제, 프로그램 개발			●(2)							●(2)
		우수 건축물, 도시환경 홍보강화	우수건축물, 도시환경 DB 구축	●(2)									
			생활문화자산 관련 사업			●(3)							
			우수건축물 선정 및 콘텐츠 활성화	●(1)		●(1)	●(1)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1)		●(2)							
	건축문 화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구 축	건축문화 진흥을위한 민·관 협의체구성	로컬거버넌스 운영체계 마련							●(3)			
			건축재단 및 건축관련시설물 설립	●(2)		●(3)		●(1)		●(2)	●(2)		
			건축문화 국외홍보전략 마련							●(1)			
			건축문화콘텐츠 개발							●(1)			
			건축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							●(2)			
		건축문화 기록물 축적·관리 시스템구축	우수한 건축문화와 관련된 기록물의 축적·관리 시스템 구축		●(2)	●(4)	●(2)	●(2)	●(4)	●(1)	●(1)	●(6)	
			건축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2)		●(2)	●(1)					
			건축디자인전시관 설립 및 운영									●(2)	
			건축명소지정 및 조성사업 실시		●(1)								
			주요 건축기록물의 수집·확보, 관리· 보존·전시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전 문 인력 육성		●(3)				●(3)				

*출처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 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별 예산 계획

지자체 계획 실행예산은 유사 세부사업별로 ①지역건축(문화) 활성화, ②커뮤니티시 설, ③건축문화자산관련, ④건축문화진흥관련, ⑤첨단건축 기술산업, ⑥신개발지, ⑦건축 물 성능개선, ⑧녹색도시, ⑨도시재생, ⑩주거환경개선, ⑪안전한 도시공간조성, ⑫주민참 여, ⑬경관, ⑭공공공간·건축조성 등 14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서울을 제외한 9개 지자체의 예산계획을 파악한 결과, 총 예산은 770,985백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자체별로는 인천(189,545백만원), 대전(187,000백만원), 충남(186,410백만원), 부산(87,240백만원), 제주(36,900백만원), 경남(29,370백만원), 경기(26,300백만원), 경북(15,350백만원), 전북(12,870백만원)순이었다.

예산비중이 높은 정책부문으로는 주로 건축문화 진흥관련사업, 건축문화자산 관련사업에 초점을 두고 실행예산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시는 건축문화 진흥관련, 경기도는 녹색도시, 부산은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 전라북도는 건축문화 자산관련, 대전은 녹색도시, 경상남도는 건축문화 자산관련, 제주도는 경관, 인천은 주거환경개선과 녹색도시, 공공공간·건축조성, 경상북도는 경관과 공공공간·건축조성, 충청남도는 건축문화 자산관련과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친환경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부산은 주거지 인접 상업지역 유형별 환경개선 방안, 전라북도는 지역자산에 기초한 연계 공간 조성사업, 대전은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 조성계획, 경상남도는 한옥의 보전 및 활용 계획 마련,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어촌 경관 매뉴얼 및 개선사업 추진, 인천은 공공공간 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경상북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형성 및 관련사업 추진, 충청남도는 한옥의 보전 및 활용 계획 마련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부분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관련 사업에 초점을 두었다.

[표 3-9] 지자체 계획실행예산

(단위: 백만원, 서울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분류	세부 사업	서울	경기	부산	전라	대전	경상	제주	인천	경상	충청	총계
		2010	2011	2012	북도		남도	도		북도	남도	
지역건축 (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900	100		1,000
	건축·도시문화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보급 및 운영	●		200		1200			1300			2,700
	(도시)지역 특성화를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800				1000		450		2,250
커뮤니티 시설	유희공간 및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	●	2000				-		1700			3,700
	지역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		200	2000	-		200					2,400
	커뮤니티 시설 DB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600				200					800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거점 조성			100								100
건축문화 자산관련	한옥의 보전 및 활용 계획 마련	●			1400		9000		300	400	51500	62,600
	한옥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110				300	410

분류	세부 사업	서울	경기 도	부산	전라 북도	대전	경상 남도	제주 도	인천	경상 북도	충청 남도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한옥의 보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200								—	200
	(근대)건축문화자산 선정지표 마련 및 기록화체계 구축	●	800	350		700	1700	500	200	850	390	5,490
	(근대)건축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계획	●	800	3100	400		3460	900	26800	1000	780	37,240
	지역자산 정보 구축방안 마련			200	800				200	500		1,700
	지역자산에 기초한 연계 공간 조성 사업				3100		300		2300	500		6,200
	지역명소 지정 및 조성			200		24300		300			3200	28,000
	지역명소 홍보물 제작			250	300							550
건축문화 진흥관련	건축문화 진흥관련 시설 및 제도 확충	●	3400	6470	2250	17100	350	200	4060	500		34,330
	건축문화 관련 교육	●	2000	900		2000	200	1000	1000	300	965	8,365
	건축문화 관련 행사 마련	●	800	—	—	2900	600	1120	—	600	50	6,070
	건축문화 관련 홍보 방안 모색	●		450					3000		100	3,550
	우수(신진)건축인 발굴·육성·지원	●		60		1000	200	600		700	40	2,600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400		400
	우수 건축물 지정을 통한 건축 문화 활성화제도 마련				700	1500	200		50			2,450
	건축문화 국제 경쟁력 향상							480	50			530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법체계 검토								250			250
	총괄책임건축가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					5000				500		5,500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인 개발방식 연구						100			1100		1,200	
첨단건축 기술사업	초고층건축물도로변 건립 등	●										0
	U-CITY 미래 성장형 건축산업					800				600		1,400
신개발지	새만금 통합디자인 방안 마련				450							450
	신개발지 이미지 특화를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130							130
건축물 성능개선	건축물 에너지 관리	●				900			900			1,800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	●		150	700	1000	600	400	—			2,850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 방안							200				200
녹색도시	에너지 저감형(자립형) 건축물 설계지침 및 체계마련		1300	200	100	300	400	200				2,500
	에너지 저감형(자립형) 건축물 조성 계획					39500		400	500			40,400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적용 방안 마련			700				200				900
	건축물 녹화공간 조성 및 관리, 지원체계 구축			200				500				700
	생태공간(도시) 조성 및 활용		600		200							800
	친환경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교육, 사업)		6400	490			600	400	15000			22,890
	녹색(정주)공간 인식을 위한 기반구축(교육, 네트워크)		1900		450	2100		500				4,950
	녹색기술을 적용한 도시 조성 계획 지원		200	900	400	27800	1300		32300			62,900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 지원 및 적용 활성화							900				900
	지속가능한 지하녹색공간 활성화								—			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100					3500			3,600	

분류	세부 사업	서울	경기	부산	전라	대전	경상	제주	인천	경상	충청	총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재생				-	2000 0			300			20,300
	창조적 지역재생 활성화 관련 계획 및 사업		500			2030 0	6100				4800 0	74,900
	도시재생 관련 사업			25500								25,500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1200								1,200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지수에 따른 계획방안 마련	●				1000						1,000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0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관련 사업							3660 0			15300	51,900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5630		900		3200			600	10,330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급방안 마련					-		400			49100	49,500
	1, 2인 가구 소형주택 건설방법 마련			850				300			400	1,550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0
	주거지 담장정비사업		1900								400	2,300
	주거지 인접 상업지역 유형별 환경개선 방안			33650				2485				36,135
	마을관리형 사회적 기업, 지역활동가 육성										300	300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새로운 주거유형 연구			500								500
	범죄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600				1300			2800	4,700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간환경 조성						200	4850				5,050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지역안전 확보						100	1000				1,100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및 교육 방안 마련											0
주민참여	CPTED를 적용한 (공공)공간 조성 시범사업 확대						100				1385	1,485
	마을건축가활용,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290		400			950		1,640
	주민참여제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			900			1150			800		2,850
	주민참여를 통한 (유휴) 공간 활성화 및 관리방안 모색		2200								5800	8,000
경관	주민주도의 협정제도 활용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0						200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형성 및 관련사업 지원				-			200		2100		2,300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		500					300				800
	지역특색을 반영한 농어촌경관 매뉴얼 및 개선사업 추진				-		450	15000			4300	19,750
	해안·도서지역의 (수변)경관 계획						650	3300	500			4,450
공공공간 건축 조성	건축물 및 공간환경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7500						7,500
	공공건축의 우수한 품질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300			2900		300	-	3,500
	지역의 (공공)건축가 역량 강화 및 활용			90	500		700	600	700	1500	700	4,790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 및 시범운영				-			3200		500	?	3,700
	공공공간(건축) 관련 법제도, 정책 마련			-	400			1900		700	-	3,000
	공공건축 DB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	0
	공공공간 (환경)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340		9000	-		3930 0			48,640
	대중교통 정거장 주변 공간환경 향상								3000			3,000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보행공간 등)			160					1000			1,160
	총계		26,300	87,240	12,870	187,000	29,370	36,900	189,545	15,350	186,410	770,985

*출처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 계획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지자체별 실행체계 분석은 단계별·부문별·권역별 추진전략, 실행주체 및 예산, 계획의 세부과제와 전담지원기구 실행계획, 성과관리방안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중·장기 또는 1차~4차 등으로 단계별 계획에 따른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도 단위의 지자체는 전라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4개 자치도인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권역별 계획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⁷¹⁾하였고, 각 지자체는 체계적인 지역건축기본계획 운영을 위해 수립한 전략에 따른 실천과제, 정책과제, 중점과제로 구분하여 관련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지역건축기본계획 운영을 위한 전담지원기구로서 지역 건축 관련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광역시에는 ‘인천건축문화재단’, ‘집수리지원센터’를 통해 건축문화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직, 부산광역시는 ‘부산형 주거서비스 기동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도시건축재단’, ‘부산녹색건축센터’ 등 4개의 건축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시 주거안정지원센터’, ‘녹색건축센터’, ‘건축·도시 공간정보 행정지원팀(가칭)’을 통해 주거환경 향상과 건축관련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지역건축지원센터’를 설립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도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는 ‘행복가꿈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공공건축 수준 향상, 친환경 도시 구축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전라북도는 ‘한옥진흥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농어촌 해피하우스 사업전담 서비스센터’ 등 3개의 관련 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건축정책 연구지원센터’,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녹색건축 서비스 관련과 건축관련 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각 지자체들은 계획추진을 위한 주요 실행방안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등 건축기본계획 관련 제도 개선과 행정조직 개편 등을 들고 있으며,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실천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보고 및 평가, 모니터

71) 광역사도에서 도출된 정책 및 실천과제를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및 실행하는 것이 아닌 사군구 단위별 지역현안에 따라 추진하기 적합한 실천과제를 묶어 권역별로 추진과제를 구성하였다. 이는 건축기본법상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권역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링 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표 3-10]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방안(안)

		추진 전략			예산주체			추진전략		실행		성과관리 방안
		단 계 별	부 문 별	권 역 별	국 비	도 비	시· 군· 구 비	단계별	권역별	주체 및 지원기구	주요 실행방안	
시	서울시	●	●	-	-	-	-	단기(2011~2012) 중기(2013~2015) 장기(2016~)	-	과제별 담당부서	· 공공건축가제도 도입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상 성과보고제 도입	· 2년 마다 성과사항 시의회 보고
	인천광역시	●	●	-	-	-	31	단기(2011~2015) 중기(2016~2020) 장기(2020~2030)	- (구역별)	과제별 담당부서 · 인천건축문화재단 · 집수리지원센터	· 공공건축가제도 도입 · 행정조직개편 · 법·제도 개선	· 전략별 실천과제에 대해 매년 성과관리 및 보고
	부산광역시	●	●	-	-	-	72	단기(1차, 2011~2015) 중기(2차, 2016~2020) 장기(3차, 2021~2025 4차, 2026~2030)	- (구역별)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실 · 부산형 주거서비스 기동센터 · 도시재생지원센터 · 부산도시건축재단 · 부산녹색건축센터	· 구군 단위 건축기본계획 수립	· 모니터링 및 평가 · 매년 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대전광역시	●	●	-	20	-	-	단기(2013~2014) 중기(2015~2016) 장기(2017~)	- (구역별)	대전광역시 주택지원과 · 주거안정지원센터 · 녹색건축센터 · 건축도시공간정보 행정지원팀(가칭)	· 구단위 건축기본계획 수립 ·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
도	경기도	●	●	●	-	-	21	1차(2011~2016) 2차(2016~2021) 3차(2021~2026) 4차(2026~2031)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과제별 담당부서 · 지역건축지원센터	· 전문가 TF팀 구성, · 건축정책위원회 발족 및 소위원회 구성	· 전략별 실천과제에 대해 매년 성과관리·보고 · 2년마다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국회 보고
	충청남도	●	●	●	19	40	23 16	단기(2014~2019) 중기(2020~2024) 장기(2024~2029)	북부도시권 서해안권 중부내륙권 건축문화권	과제별 담당부서 · 행복가꿈센터 · 공공건축지원센터 · 그린리모델링센터	· 건축·도시 관련 주요센터 설립 및 운영	· 실천과제별 성과관리 · 2년마다 국회에 보고

		추진 전략		예산주체			추진전략		실행		성과관리 방안	
		단 계 별	부 문 별	권 역 별	국 비	도 비	시· 군· 구· 산	단계별	권역별	주체 및 지원기구		주요 실행방안
	전라 북도	●	●	-	-	-	23	1기(2012~2017) 2기(2018~2022) 3기(2023~2027) 4기(2028~2032)	-	· 전라북도 한옥 진흥센터, · 공간축지원센터 · 농아존해파하우스 사업전담 서비스 센터	· 행정체계 및 관련 제도 정비 · 기초지자체와 연계 및 관리	· 개선방안도출 을 위한 모니터링
	경상 북도	-	●	●	-	-	1	단기(2014~2018) 중기(10년) 장기(20년)	동부 중서부 남부 북부	· 경북도청 건설도시방재국 ·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	· 사군단위의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TF팀 구성, 운영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 매년말 성과측정하며, 2년마다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의회 보고
	경상 남도	●	●	●	-	-	31	1차 2013~2017) 2차(2018~2022) 3차(2023~2027) 4차(2028~2032)	서북부권 동북부권 서부내륙 권 동부도시 권 해안권	· 경남도청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 관리 조직 · 경상남도건축정책 연구지원센터 · 경상남도 자탄소 녹색건축지원센터	· 건축디자인기준 수립 · 건축도시 디자인 전문가 구성 및 운영	· 사군의 권역별 특성화 · 차별화전략 마련을 위해 매 2년 마다 국회 보고
	제주도	●	●	-	-	-	-	단기(1차, 2013~2018) 중기(2차, 2018~2023) 장기(3차, 2023~2033 4차, 2028~2033)	-	과제별 담당부서	· 기준 및 제도 마련 · 조직 신설 및 개편 · DB 구축, 운용	· 건축기본계획 평가를 위한 운영회 운영

*출처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3)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점검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 추진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 과정에 대해 지자체별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계획 실행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인터뷰 항목은 계획 추진을 위한 별도 부서 및 담당자 유무, 성과 점검 시행여부, 성과관리 규정 여부, 과제별 사업실행에 대한 의견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별도의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은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으나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과점검의 경우에는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서울과 경기도 파악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업무과중 등으로 성과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았다. 이는 앞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구성과 추진체계 분석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명시하였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전담부서 마련,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등과 같은 행정조직 개편, 실천과제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보고 및 평가, 모니터링 운영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최근 건축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성과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 점검

		건축계획 추진 별도 담당자	건축기본조례 내 성과관리 규정	성과점검 시행여부	기본계획의 사업 실행에 대한 의견
시	서울	●	제22조의2(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	현재 진행중	-
	인천	●	x	x	- 재정난으로 핵심사업 실시 어려움 - 성과점검에 대한 예산 미비
	부산	●	x	x	- 계획의 성과창출이 어려운 부분 존재
	세종	●	x	관리에정	- 성과관리카드를 통해 단위과제별 담당자 지정 및 매년 단위로 성과관리 예정
도	경기	●	x	현재 진행중	- 경기연구원에서 별도의 수시연구과제로 단위사업별 이행점검 중
	충남	●	x	관리에정	- 성과관리카드를 통해 단위과제별 담당자 지정 및 매년 단위로 성과관리 예정
	전북	●	x	x	- 도 자체의 지방비에서 기본계획에 수립된 사업들을 이행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성과점검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임 - 국비를 통한 중앙정부차원의 사업이 이행 되어야만 사업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음

		건축계획 추진 별도 담당자	건축기본조례 내 성과관리 규정	성과점검 시행여부	기본계획의 사업 실행에 대한 의견
	경상북도	●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지원이 없거나 부족한 관계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사·군의 예산보다 도 예산이 더 어려운 실정 -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교부해 주지 않는 이상 지자체 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것은 어려움
	경상남도	●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부 사업만을 진행중 (건축문화유산 DB구축 및 콘텐츠개발연구)

*출처 : 지역별 건축정책 관련 담당부서 실무자 대상 전화인터뷰를 통해 직접작성

이러한 계획 추진상의 주체와 성과점검 조항 미비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과제 실행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이 어려운 부분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어렵게 하는 제일 큰 요인이 되고 있었다. 조사된 10개 지자체 중에서도 시 보다는 도 차원에서 사업 예산 마련이 어려워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과제별 성과점검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10개 지자체의 계획 추진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정책보도자료⁷²⁾를 조사하여 건축정책 관련 키워드 14개에 대한 세부과제 성과를 점검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된 세부과제들을 정책목표 3가지 아래에 중심 키워드별로 포괄하여 정리하였다.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 실행이 가장 많았던 과제들은 건축정책의 목표별로 ‘품격 있는 생활공간조성’,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건축도시관련 녹색성장 기반 구축’ 순이었다.

정책 목표 첫 번째인 품격있는 생활공간조성 부분에서는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 조성,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주민참여 등을 키워드로 하는 과제들의 추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5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실행한 사업으로는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 조성 부분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공공공간 디자인 관련계획 및 사업 추진, 지역 특성을

72)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름(aurum.re.kr)에 등록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분석

반영한 도시경관 형성 및 관련사업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급방안 마련, 주거 복지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관련 사업 등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창조적 지역재생활성화 관련 계획 및 사업,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들은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목표 두 번째인 건축도시관련 녹색성장 기반 구축 부문에 있어서는 광역시와 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과 같은 광역시는 녹색건축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반면, 도에서는 녹색부문에 대한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정책목표 세 번째인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부분에서는 건축문화진흥 관련 사업들이 가장 많이 추진되었다. 5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건축·도시문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보급 및 운영, 건축문화 관련 교육, 홍보방안 모색, 건축문화진흥 관련시설 및 제도 확충 등으로 건축문화진흥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 우선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계획 내 사업추진이 가장 많았던 지자체들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순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계획 내 건축문화진흥 및 건축자산활용 부분의 세부사업들을 가장 많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한양도성, 도시형한옥, 구 서울역사, 옛길 등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보전과 활용 측면의 과제들과 건축문화제, 서울시민건축학교 등의 건축교육 및 행사에 관한 과제들이 우선 실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에너지 저감형 건축물 설계지침 및 체계 마련,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적용방안 마련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 부분의 과제들과 창조적 지역재생 및 도시재생에 관련된 과제들이 우선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건축문화 제도개선,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교육 및 행사 관련 과제들과 건축도시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다수 추진되었고, 그 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형성 및 관련사업 지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지역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 건축물 녹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관련 과제들이 다양하게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시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건축문화진흥 부문의 과제들이 다수 추진되었고, 창조적 지역재생 활성화 관련 사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방안마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급방안 등이 우선 추진된 것을 확인하였다.

[표 3-12] 지역건축기본계획 관련 정책보도자료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성과 검토

(단위: 개수)

	분류	세부 사업	서울	경기 도	부산	전라 북도	대전	경상 남도	제주 도	인천	경상 북도	충청 남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품격 있는 생활 공간 조성	공공공간 · 건축 조성	공공건축의 우수한 품질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2)		●(2)					●(4)
		지역의 (공공)건축가 역량 강화 및 활용	●(1)		●(4)		●(1)			●(1)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 및 시범운영										●(1)
		공공공간(건축) 관련 법제도, 정책 마련		●(1)	●(1)					●(1)		
		공공건축 DB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1)									
		공공공간 (환경)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7)		●(9)	●(2)		●(2)	●(1)	●(1)
		대중교통 정거장 주변 공간환경 향상					●(1)			●(1)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보행공간 등)		● (15)	●(8)	●(2)	●(5)			●(1)		●(1)
	커뮤니티 시설	유희공간 및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		●(6)	●(1)			●(4)		●(1)		
		커뮤니티 시설 DB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1)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거점 조성		●(2)	●(2)							
	도시재생	노후 산업단지 재생	●(1)			●(1)	●(1)					
		창조적 지역재생 활성화 관련 계획 및 사업	●(6)	●(3)	●(2)	●(1)	●(2)			● (13)		
		도시재생 관련 사업	● (12)	●(3)	●(8)	●(4)	●(4)	●(2)		●(1)	●(3)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립	●(2)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지수에 따른 계획방안 마련			●(2)	●(1)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관련 사업		●(4)	●(5)	●(2)		●(2)		●(1)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관련사업		●(1)	●(2)		●(1)			●(1)		●(1)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급방안 마련		●(3)	●(7)	●(4)	●(2)	●(4)		●(5)		●(2)
		1, 2인 가구 소형주택 건설방법 마련								●(1)		

	분류	세부 사업	서울	경기 도	부산	전라 북도	대전	경상 남도	제주 도	인천	경상 북도	충청 남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축 도시 부문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2)							
		주거지 담장정비사업										
		주거지 인접 상업지역 유형별 환경개선 방안								●(1)		
		마을관리형 사회적 기업, 지역활동가 육성										
		새로운 주거유형 연구		●(1)			●(1)		●(3)	●(3)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범죄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1)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간환경 조성				●(2)				●(2)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지역안전 확보		●(1)						●(1)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및 교육 방안 마련								●(1)		●(1)
		CPTED를 적용한 (공공)공간 조성 시범 사업 확대		●(4)	●(5)		●(1)		●(1)			●(1)
	주민참여	마을건축가활용, 주민과 소통하는 마을 만들기			●(3)	●(1)						
		주민참여제도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		●(2)	●(10)	●(1)				●(3)		
		주민참여를 통한 (유휴) 공간 활성화 및 관리방안 모색			●(2)	●(5)		●(1)				
		주민주도의 협정제도 활용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6)		●(3)	●(1)	●(3)					
	경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형성 및 관련사업 지원		●(15)	●(20)	●(2)	●(2)			●(3)	●(4)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방안 마련			●(3)					●(13)		
		지역특색을 반영한 농어촌경관 매뉴얼 및 개선사업 추진				●(9)		●(1)		●(1)		●(1)
		해안·도서지역의 (수변)경관 계획		●(3)	●(5)	●(1)				●(2)		
		(도서)지역 특성화를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1)								
		건축물 및 공간환경 유지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2)	●(2)	●(6)					
	첨단건축 기술사업	초고층건축물도로변 건립 등										
		U-CITY 미래 성장형 건축산업									●(1)	

	분류	세부 사업	서울	경기 도	부산	전라 북도	대전	경상 남도	제주 도	인천	경상 북도	충청 남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녹색 성장 기반 구축	신개발지	새만금 통합디자인 방안 마련				●(1)						
		신개발지 이미지 특화를 위한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건축물 성능개선	건축물 에너지 관리	●(3)		●(1)					●(1)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	●(2)			●(4)	●(1)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 방안	●(3)									
	녹색도시	에너지 저감형(자립형) 건축물 설계지 침 및 체계마련	● (10)		●(1)	●(4)						
		에너지 저감형(자립형) 건축물 조성 계획	●(2)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적용 방안 마련	●(7)							●(2)		
		건축물 녹화공간 조성 및 관리, 지원 체계 구축	●(2)	●(7)			●(3)	●(1)				
		생태공간(도시) 조성 및 활용			●(1)	●(1)				●(6)		
		친환경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교육, 사업)	●(1)		●(2)							
		녹색(정주)공간 인식을 위한 기반구축 (교육, 네트워크)			●(1)							
		녹색기술을 적용한 도시 조성 계획 지원		●(5)		● (21)	●(4)			●(3)		
		친환경 건축자재 생산 지원 및 적용 활성화										
		지속가능한 지하녹색공간 활성화	●(3)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창조 적 건축 문화 창달	지역건축 (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 (15)									
		건축·도시문화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보급 및 운영	●(6)	●(8)		●(2)	●(1)			●(4)		
	건축문화 자산관련	한옥의 보전 및 활용 계획 마련	●(3)									
		한옥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2)									
		한옥의 보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2)									
		(근대)건축문화자산 선정지표 마련 및 기록화체계 구축	●(2)		●(1)							
		(근대)건축문화자산 보전 및 활용계획	●(5)		●(5)					●(3)	●(1)	

	분류	세부 사업	서울	경기도	부산	전라북도	대전	경상남도	제주도	인천	경상북도	충청남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축문화 진흥관련		지역자산 정보 구축방안 마련		●(1)				●(3)				
		지역자산에 기초한 연계 공간 조성 사업		●(1)	●(12)		●(1)					
		지역명소 지정 및 조성		●(3)	●(9)							
		지역명소 홍보물 제작			●(4)							
		건축문화 진흥관련 시설 및 제도 확충	●(9)	●(12)			●(6)		●(1)	●(2)	●(1)	●(1)
		건축문화 관련 교육	●(2)	●(5)	●(6)		●(5)		●(1)	●(5)		
		건축문화 관련 행사 마련	●(4)	●(3)	●(12)	●(6)	●(6)	●(2)		●(7)		
		건축문화 관련 홍보 방안 모색			●(6)							
		우수(신진)건축인 발굴·육성·지원	●(3)		●(1)	●(2)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우수 건축물 지정을 통한 건축 문화 활성화제도마련								●(4)		
		건축문화 국제 경쟁력 향상			●(2)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법체계 검토										
		총괄책임건축가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			●(1)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인 개발 방식 연구			●(1)							
총 계			120	113	72	73	72	25	2	99	14	14

*출처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 아우름 홈페이지(www.aurum.re.kr) 내 정책동향을 참고하여 재정리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특징과 한계

□ 일반적·형식적인 기초조사로 인한 지역 현안 파악 부족

지역건축기본계획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건축·도시관련 계획 현황, 해외 선진국 지역건축정책 수립 현황 및 사례, 여건변화 및 전망에 대한 조사)에서 내용상 일반적·형식적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 부분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례를 검토하게 되거나 지리, 지형, 기후, 인구, 행정구역, 토지이용 등 일반현황에 많은 부분 할애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내 건축물의 단순한 물량파악이 아닌 질적 품질 및 성능 현황 수준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건축물의 품질 및 성능이 기준치보다 못하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심도 깊은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향후 2차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핵심과제 및 시범사업 등 실질적으로 과제수행시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항목 개선이 필요하였다.

□ 부족한 지역 예산으로 인한 지역별 차별화된 계획 수립의 어려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2가지 성격의 과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는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지역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제도 및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는 과제가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도시·농어촌·도농혼합지역 등 지역 현황과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상황으로 인해 지역단위의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예산소요가 적거나 불필요한 ‘조례제정’, ‘계획 기준 및 지침’, ‘교육’ 부문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역단위의 시범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초점을 둔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도시재생사업,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에 공통적으로 과제가 편성되어 있어 지자체간 차별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성격의 사업 및 과제 발굴

지역건축기본계획 지침 상에서도 주된 정책방향과 목표는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위 계획간 내용적 측면에서 부합성을 확인할 필요는 있으나, 과제 추진주체 및 성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과제’와 ‘지역 차원에서의 과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간의 연계·통합 과제’, ‘공동주택 디자인심의에 관한 과제’, ‘도시재생 정립에 관한 과제’, ‘건축산업 육성’ 등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상당부분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 계획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지침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와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하는 과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 행정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필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수립기간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계획수립 주체로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연구용역 형태로 발주하고, 계획과정에 지역 전문가를 다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간 수립 완료된 모든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것은 계획과정에 전문분야별 다양한 지역전문가를 참여하여 수립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지역 현안, 건축분야에서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지역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계획이 실행되고 추진하는 것은 지역 시·군 기초지자체 및 관련부서 실무자의 의지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계획을 수립하여도 계획을 이행하는 주체는 관계부서 실무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조사한 9개 지자체의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예산계획은 총 770,985백만원에 달하지만,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계획대비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계획수립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책정한 것이지만, 매년 지자체 예산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부서 실무자의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 자체를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 계획의 실행-모니터링-성과관리의 환류체계 부족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

계획의 성과관리의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건축기본법 및 지자체 건축기본조례에서 성과관리를 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건축기본법상에서도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성과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2년마다 국회에 성과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지역차원에서는 이마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결과 서울시의 경우에만 최근 건축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성과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는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축관련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실무자도 있긴 하지만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점검하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역발전연구원인 경기연구원에서 별도의 연구과제를 통해 계획의 이행점검을 완료하였다. 가장 최근에 수립 완료된 세종시의 경우에는 단위과제별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련부서 실무자 교육과 함께 단위과제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성과를 점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행성과를 어떠한 지표로 점검해야 옳은 것인지 성과관리에 대한 행정적, 방법론적인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이행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유명무실해지는 이유는 지자체 자체 예산부족, 전담조직 미비, 법적 근거없는 유명무실한 성과점검 항목 등 대부분 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행 계획의 문제와 직결된다.

제4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당면문제와 원인

1. 계획 실효성에 대한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
2. 계획의 한계와 실행력 부족 원인

1. 계획 실효성에 대한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지역건축기본계획 문헌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했던 국가 및 지자체 담당 부서 실무자, 전문가 대상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기능 및 역할과 계획 실효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계획수립 과정 및 참여주체, 계획수립 이후의 실행체계, 행정조직, 성과관리 실태, 계획 실행 상 발생하는 제도적·행정적 한계와 문제원인을 파악하였다.

□ 조사대상

계획수립 당시의 국가 및 지자체 건축정책 관련부서 실무자를 비롯하여 현시점까지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담당이력을 조사하여 관계된 모든 담당 공무원과 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기타 관련 지역건축가 대상 191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설계

①계획수립 범위 및 내용, ②계획수립 방법과 절차, ③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④계획 실행주체, ⑤실행력 확보를 위한 의견, ⑥응답자 특성 등 6개 부문에 대한 설문조

사를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표 4-1]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 세부항목(안)

구분	세부 설문조사 항목
계획수립 범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계획간의 관계 및 위상에 대한 인식 • 정책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적정 정책대상(주거, 경관, 산업, SOC, 공원 등 공공 공간, 공공디자인 등) • 계획 구성체계에 대한 적정성 •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 및 실행과제 수립 여부 • 건축기본계획에 중점을 둔 분야(법·제도, 시범사업, 기준 및 지침, 교육·홍보 등) • 세부실천과제의 구체성 정도 및 적정성 • 광역시와 도의 계획 실행력에 대한 차별성(계획내용의 위계, 수립방식 및 절차 등)
계획수립 방법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수립시점 및 기간의 적정성 •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한 부서, 협의체 구성·운영, 전문가 TF 운영방식 및 효과 •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 및 항목별 중요도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에로사항 • 계획수립과정에서 실천과제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의견수렴 여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본계획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 건축디자인 및 도시환경 개선에 건축기본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 • 계획 이행정도 및 지자체 추진 의지
계획 실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및 지원조직, 전담인력 보유 여부 • 성과관리 전담부서 및 지원기구 지정의 필요성 •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모니터링 수행 여부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실행력 확보를 위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실행력을 저해하는 문제점과 원인 • 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 소속, 직책, 전공분야, 해당업무 경력 • 계획 수립, 실행, 관리 등 참여 구분

□ 설문응답자 특성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관계 실무자 및 전문가 19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2015.6.28.~7.8)하여 총 63인 응답하였다. 응답자 63인 중 중앙 및 지자체 관계 실무자 응답은 21인(33.3%), 참여 전문가는 42인(66.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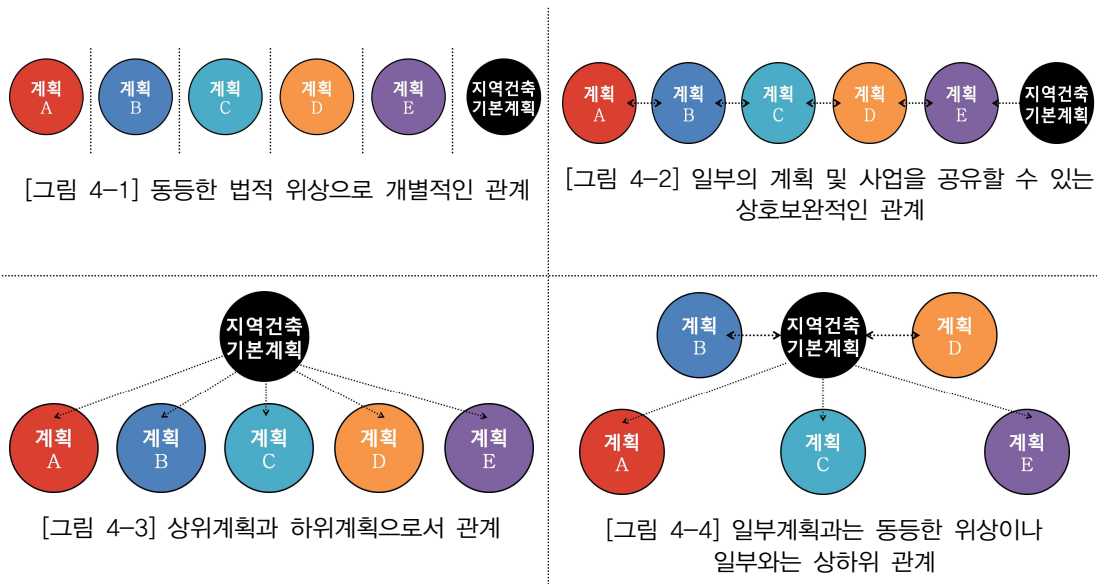
[표 4-2] 설문응답자 특성

지역	관계 실무자		참여 전문가		총합계	
강원도	0	0.0%	1	1.6%	1	1.6%
경기도	3	4.8%	5	7.9%	8	12.7%
경상남도	0	0.0%	7	11.1%	7	11.1%
경상북도	0	0.0%	1	1.6%	1	1.6%
대구광역시	0	0.0%	3	4.8%	3	4.8%
대전특별시	0	0.0%	7	11.1%	7	11.1%
부산광역시	1	1.6%	1	1.6%	2	3.2%
서울특별시	4	6.3%	8	12.7%	12	19.0%
세종특별자치시	7	11.1%	0	0.0%	7	11.1%
인천광역시	1	1.6%	2	3.2%	3	4.8%
전라남도	0	0.0%	1	1.6%	1	1.6%
전라북도	1	1.6%	0	0.0%	1	1.6%
제주도	2	3.2%	2	3.2%	4	6.3%
충청남도	2	3.2%	2	3.2%	4	6.3%
충청북도	0	0.0%	2	3.2%	2	3.2%
총합계	21	33.3%	42	66.7%	63	100.0%

2) 조사결과

□ 관련 계획 간의 관계 및 위상에 대한 인식

관련 계획 간의 관계 및 위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포함하는 지역단위의 법정계획인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경관 정책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관계에 대해 타 관련 계획과 ①동등한 법적 위상으로 개별적인 관계, ②일부의 계획 및 사업을 고유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③상위계획과 하위계획으로서의 관계, ④일부계획과는 동등한 위상이나 일부와는 상하위의 관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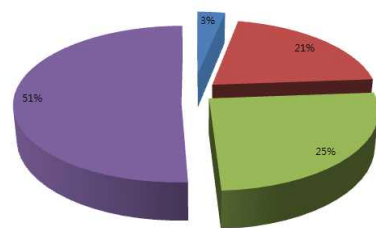
관련 계획간 관계 및 위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0.79%가 ‘일부계획과는 동등한 위상이나 일부와는 상하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일부의 계획 및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25.40%)’라고 응답하였다.

단, 응답자 구성에 따라 구분해 보면, 관계실무자는 ‘일부 동등, 일부 상하위 관계(57.14%)’ 다음으로 ‘상하위 관계’로 응답(23.81%)한 반면, 참여전문가는 ‘일부 동등, 일부 상하위 관계(50.79%)’ 다음으로 ‘상호보완적 관계(30.95%)’라고 응답하였다.

[표 4-4] 타 관련 계획간의 관계 및 위상에 대한 인식

구분	관계 실무자		전문가		총합계	
개별적 관계	1	4.76%	1	2.38%	2	3.17%
상하위 관계	5	23.81%	8	19.05%	13	20.63%
상호보완적 관계	3	14.29%	13	30.95%	16	25.40%
일부 동등, 일부 상하위 관계	12	57.14%	20	47.62%	32	50.79%
총합계	21	100.00%	42	100.00%	63	100.00%

■ 개별적 관계 ■ 상하위 관계 ■ 상호보완적 관계 ■ 일부 동등, 일부 상하위 관계



[그림 4-5] 타 계획간의 관계

□ 지역건축기본계획이 다루어야 할 정책분야 및 범위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책분야에 대해 중요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①건축문화 관련정책(4.38)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②녹색건축도시 관련 정책(4.03), ③건축도시 산업 관련 정책(3.97), ④경관관련 정책(3.86), ⑤주택관련 정책(3.86), ⑥SOC 국가기간시설 관련 정책(3.00) 순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6] 기본계획으로 다루어야 할 범위 및 정책분야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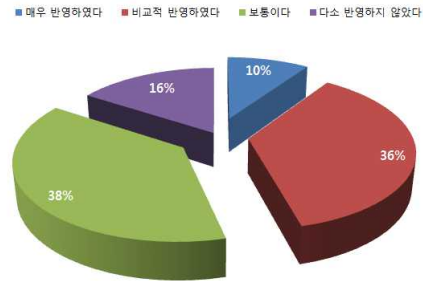
□ 지역별 특성 반영 정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 및 실행과제 수립 여부에 대해서 관계실무자, 전문가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반영(36.51%)’, ‘보통이다(38.10%)’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4.13%로 대부분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전문가 보다는 관계실무자 집단에서 지역별 특성 반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은 두 집단 모두 없음을 볼 수 있다.

[표 4-5] 지역별 특성 반영 정도

구분	관계 실무자		전문가		총합계	
매우 반영	4	19.05%	2	4.76%	6	9.52%
비교적 반영	6	28.57%	17	40.48%	23	36.51%
보통	10	47.62%	14	33.33%	24	38.10%
다소 반영하지 못함	1	4.76%	9	21.43%	10	15.87%
전혀 반영하지 못함	—	—	—	—	—	—
총합계	21	100.00%	42	100.00%	63	100.00%



[그림 4-7] 기본계획의 지역별 특성 반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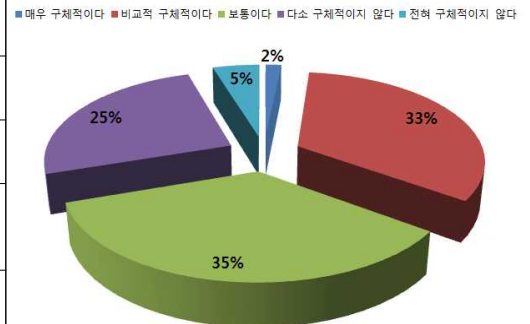
□ 기본계획 내용의 구체성 정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세부실천과제가 정책으로 실행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구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총 1.59%에 불과하였으며, 관계 실무자 전문가 합하였을 때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33%,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 34.92% 정도로 계획의 구체성에 대해 응답자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혀 구체적이지 못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14% 차지했음을 볼 수 있다.

[표 4-6] 실행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구분	관계 실무자		전문가		총합계	
매우 구체적	0	0.00%	1	2.38%	1	1.59%
비교적 구체적	8	38.10%	13	30.95%	21	33.33%
보통	8	38.10%	14	33.33%	22	34.92%
다소 구체적이지 못함	5	23.81%	11	26.19%	16	25.40%
전혀 구체적이지 못함	0	0.00%	3	7.14%	3	4.76%
총합계	21	100.00%	42	100.00%	6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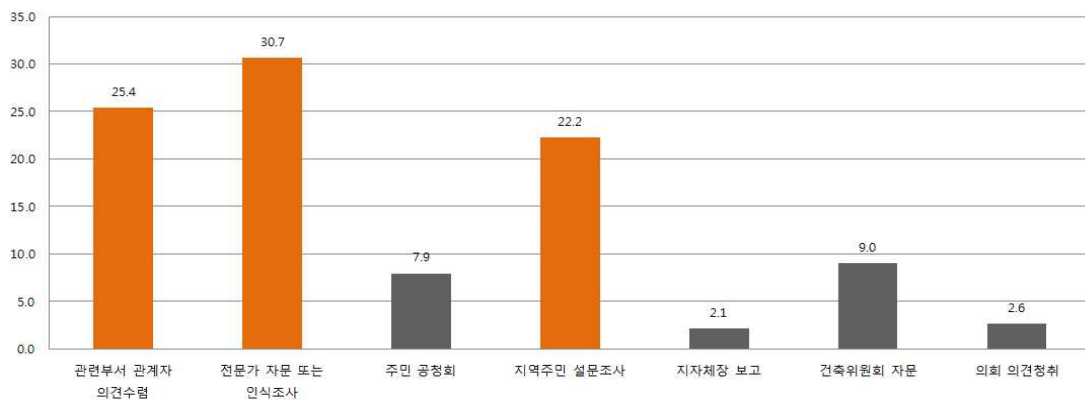


[그림 4-8] 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

□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절차 중요성 우선순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획수립절차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우선순위별 3가지 선택)한 결과, ①전문가 자문 또는 인식조사(30.7%), ②관련 실·국별, 시·군별 관계자 의견수렴(25.4%), ③지역주민 설문조사(22.2%) 등 3가지 절차를 가장 중요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④건축위원회 사전자문(9.0%), ⑤주민 공청회(7.9%), ⑥도·시 의회 의견청취(2.6%), ⑦지자체장 보고(2.1%) 등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 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소 형식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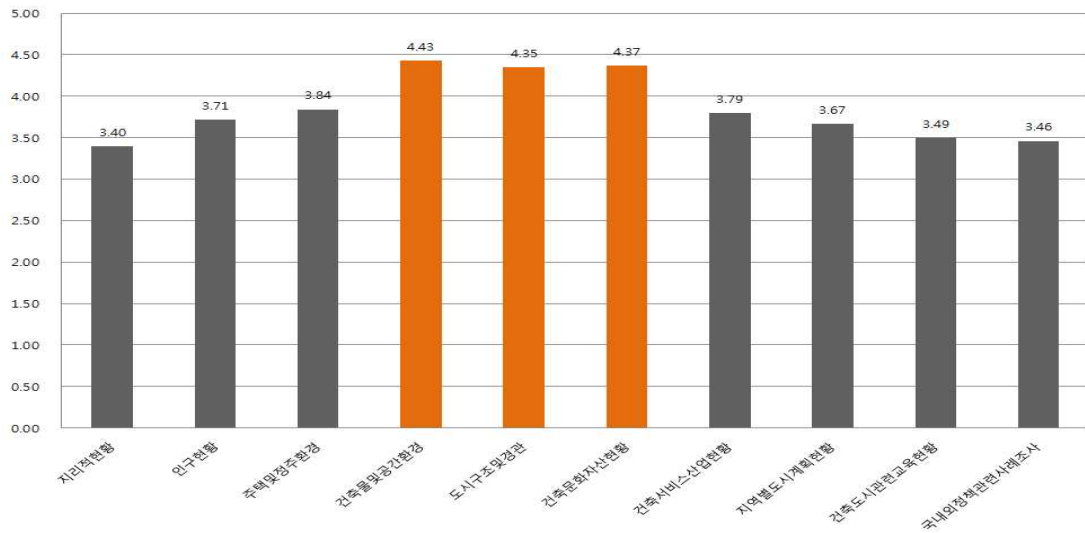


[그림 4-9]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절차 중요성 우선순위

□ 계획수립과정에 필요한 조사항목별 중요도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시 필요한 조사항목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항목에 대해 보통이상의 중요도를 보였으나, 특히 ①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현황파악(4.43), ②건축문화자산 현황 및 특징(4.37), ③도시구조 및 경관 현황(4.35)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개 항목 이외에 ④주택 수, 주택유형별 분포, 주택노후도 등 정주환경에 관한 현황(3.84), ⑤건축서비스산업 현황(3.79), ⑥인구구조 및 인구 특성, 규모, 분포 등 인구현황(3.71), ⑦지역별 도시계획 현황(3.67), ⑧건축도시 관련 교육산업 현황(3.49), ⑨국내·외 정책 관련 사례조사(3.46), ⑩지리적 현황(3.40)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10] 기본계획 조사항목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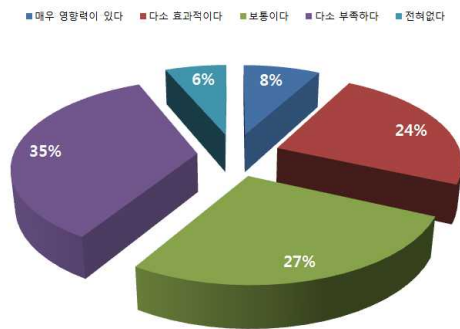
□ 계획 실효성에 대한 인식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두 집단 모두 ‘다소 영향력이 부족하다’가 전체 34.92%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응답자 집단 간 인식 차이 없이 동일한 비율을 보였으며, ‘다소 효과적(23.81%)’, ‘매우 영향력이 있다(7.94%)’로 응답한 비율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기본계획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표 4-7] 기본계획 실효성에 대한 인식

구분	관계 실무자		전문가		총합계	
매우 영향력 있음	2	9.52%	3	7.14%	5	7.94%
다소 효과적	7	33.33%	8	19.05%	15	23.81%
보통	5	23.81%	12	28.57%	17	26.98%
다소 영향력 부족	7	33.33%	15	35.71%	22	34.92%
전혀 없음	0	0.00%	4	9.52%	4	6.35%
총합계	21	100.00%	42	100.00%	63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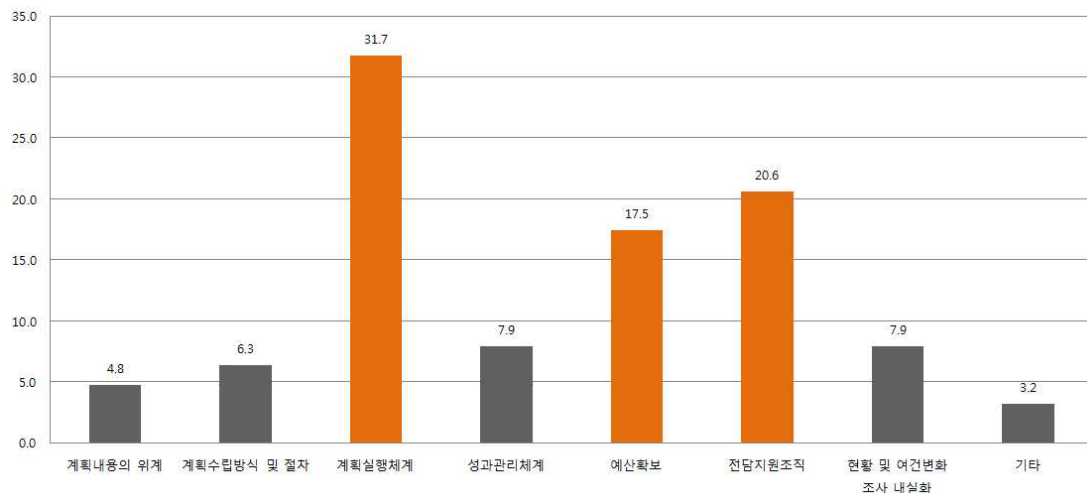


[그림 4-11] 기본계획 실효성에 대한 인식

□ 계획 실행력 향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①계획 실행체계에 대한 개선(31.7%), ②건축정책을 지원하는 전담지원조직 마련(20.6%), ③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확보(17.5%)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응답하였다.

3가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④성과관리체계 정비(7.9%), 계획 수립 초기과정에서의 지역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등 조사 내실화(7.9%), ⑤계획 수립방식 및 절차 개선(6.3%), ⑥계획내용의 위계 정립(4.8%) 등을 응답하였다.



[그림 4-12] 계획 실행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

□ 지자체장의 계획 실행에 대한 추진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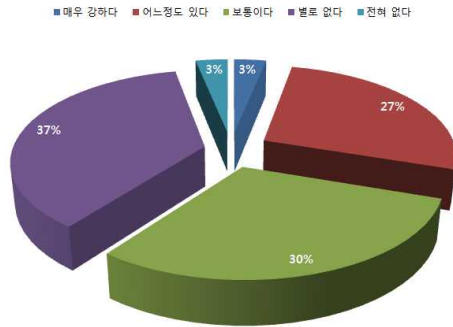
지자체장의 계획 실행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별로 없다’가 전체 36.51%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응답자 집단별 결과, 관계 실무자 집단에서는 ‘보통(38.10%)’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전문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42.86%)’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7%였으나, 관계 실무자 집단에서는 응답자가 없었다.

[표 4-8] 지자체장의 계획 실행에 대한 추진의지

구분	관계 실무자		전문가		총합계	
매우 강하다	2	9.52%	0	0.00%	2	3.17%
어느정도 있다	6	28.57%	11	26.19%	17	26.98%
보통	8	38.10%	11	26.19%	19	30.16%
별로 없다	5	23.81%	18	42.86%	23	36.51%
전혀 없다	0	0.00%	2	4.76%	2	3.17%
총합계	21	100.00 %	42	100.00%	63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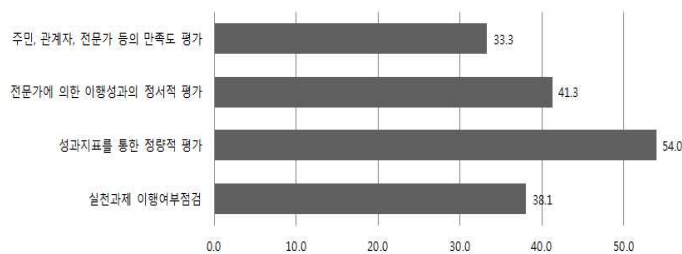


[그림 4-13] 지자체장의 계획 추진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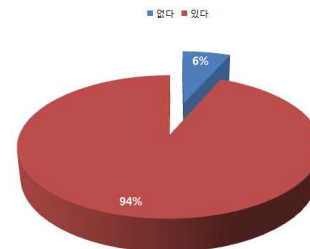
□ 성과관리의 필요성 및 합리적인 성과관리 방법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응답자가 ‘있다(94%)’ 라고 응답했으며, 합리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방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과지표를 통한 정량적 평가(54.0%)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과지표를 통한 정량적 평가’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전문가에 의한 이행성과의 정성적 평가(41.3%)’, ‘실천과제 이행여부 점검(38.1%)’, ‘주민, 관계자, 전문가 등의 만족도 평가(33.3%)’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비슷한 응답률을 볼 수 있다.



[그림 4-14] 합리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방법



[그림 4-15] 성과관리의 필요성

□ 기본계획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

기본계획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 가운데, 주요 개선사항으로 ①합리적 지표를 활용한 성과측정의 실천력 확보, ②평가결과에 따른 차별적 예산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③객관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조직 기구 편성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본계획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관리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평가 실행주체 및 지표와 평가 방법에 대한 지속적 논의환경 조성 및 새로운 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 밖에 예산확보율, 성과항목별 배점 부여 등 정량적 지표 개발과 주민만족도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정성적 방법도 혼합하여 성과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결과에 따른 차별적 예산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계획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선진사례 탐방기회 제공, 교육혜택 등 실천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객관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조직, 기구 편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과제별 예산 및 조직, 인력 활용성에 관한 사전 진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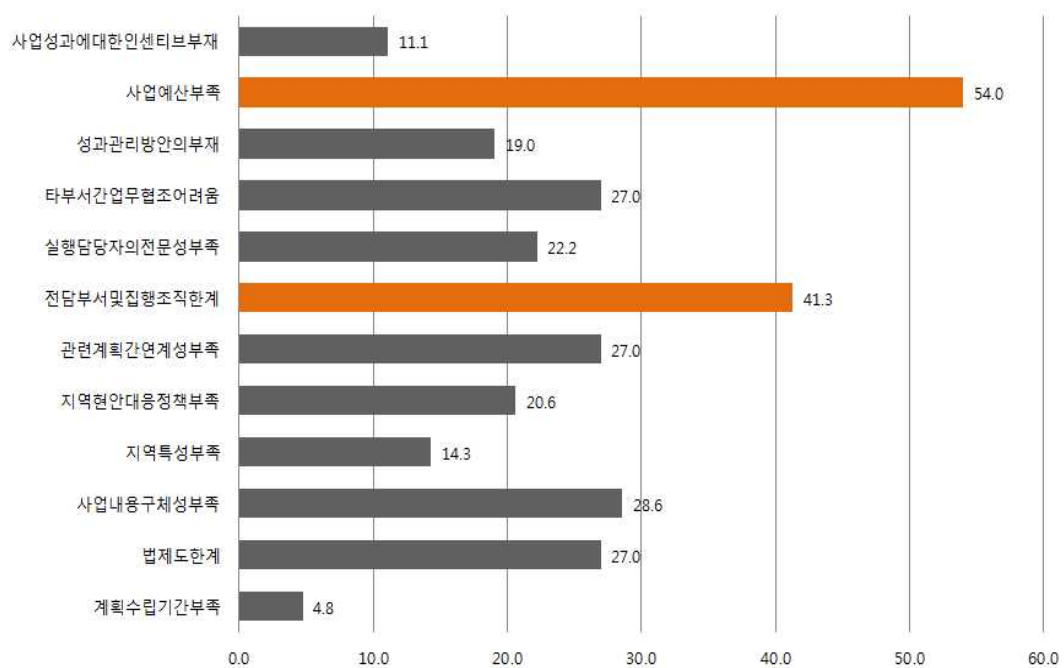
[표 4-9] 기본계획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

주요 개선사항	세부 내용	관계 실무자	관련 전문가
①합리적 지표를 활용한 성과측정의 실천력 확보	●평가실행주체 및 지표와 평가방법에 대한 지속적 논의 환경 조성 및 새로운 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	11	16
	●정량적 방법 : 예산확보율, 성과항목별 배점부여, 상대평가 등	3	2
	●정성적 방법 : 주민만족도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	4
	●공간 환경 개선결과의 평가방법은 구체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상대평가	-	1
	●건축계획 목표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달성여부에 따른 배점 부여	1	1
	●사업의 예산 확보율 집행액에 따른 목표달성평가에 아닌 다른사업과의 연계, 정책방향제시에 대한 기여도 등	3	1
②평가결과에 따른 차별적 예산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지역건축 기본계획 실행 및 성과 장려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계획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선진사례 탐방, 교육혜택 등 건축계획의 실천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1	2
③객관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조직, 기구 편성	●성과관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간-지방정부간 건축계획 운영 조율기구 또는 관리시스템이 필요 ●전문조직 및 기구를 신규 구성하여 성과결과를 향후 정책 및 사업추진에 연계 ●세부과제별 할당된 예산 및 조직, 인력의 활용성에 관한 사전 진단	3	5

□ 계획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원인

계획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①사업예산부족(5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②전담부서 및 집행조직의 한계(41.3)를 주요 문제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 문제원인으로, ③사업 내용 구체성 부족(28.6), ④타부서간 업무협조 어려움, 관련계획간 연계성 부족, 법제도의 한계(27.0), ⑤실행담당자의 전문성 부족(22.2), ⑥지역현안에 대한 대응정책 부족(20.6), ⑦성과관리 방안의 부재(19.0), ⑧지역특성 부족(14.3), ⑨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11.1), ⑩계획수립기간 부족(4.8)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16] 계획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원인

□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의견

기본계획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계획구성체계, 기초 데이터 구축,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건축문화 인식개선, 제도개선, 성과관리 체계 마련 관련 내용으로 구분된다.

계획 구성체계와 관련된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발굴, 사업의 실현성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발굴에서 ‘계획에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목표에 따른 로드맵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이 밖에 ‘지역주민의 계획수립 참여 유도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의 실현성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실행성이 높은 기본계획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의 방안 모색’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기초 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 건축물 현황, 인허가 통계, 지역 내 건축도시 관련 현황, 정책현안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단계, 향후 성과관리 단계에서 성과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건축문화 인식개선과 관련하여 건축 관련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해당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건축지원센터 등 지역 내 전문기관 및 인력을 구축’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지역 내 유관부서 및 담당자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주민참여 및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건축정책에 대한 주민제안, 지역 학생 및 일반인 정책공모를 비롯하여 다양한 건축문화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진흥특별회계 등 계획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볼 수 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행정협의체를 활용한 협력적 계획 실현, 관련 법률 및 계획간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성과관리 체계 관련하여 계획 이행 및 실적에 따른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시민 건축 모니터링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10]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

구분	주요 개선사항	세부 내용	관계 실무자	관련 전문가
계획 구성체계 관련	①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발굴	고려해야할 사항 : 수요, 지역여건, 정책, 제도, 행정 사항 등	-	1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건축계획을 위해 지역별 로드맵 작성	4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립을 통해 계획수립 참여 유도	1	1
		지역단위의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구축	-	1
	②사업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실천과제를 구분하여 기간별 계획 수립	실효성이 높은 기본계획 과제별 세부실행 계획의 방안 모색	6	4
		계획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전문가 및 주민의 공감대형성	1	1
		계획관리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진행과정 중 지속적인 피드백 운영	-	3
		단기성과 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계획 실현의 체계 마련	1	2
기초 데이터 구축관련	③지역 건축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도별, 시기별, 공간별, 유형별, 해외 유사 선진사례, 등 기초데이터 베이스 구축	-	1
		세부 분야별 다양한 설문조사, 현황조사, 전문가 연구수행, 중앙정부 주관의 건축 관련 통계조사 등 기초데이터 수집방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구축하고, 계획 수립, 추진, 성과관리 시 활용	1	-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건축문화 인식개선	④건축 관련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해당분야 전문인력 확보	지역건축지원센터 등 지역 내 전문기관/기구/인력 구축	5	6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실무연구진의 전문성 강화	-	1
		지역 내 유관부서 및 담당자간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건축, 도시, 주택, 문화 등)	1	3

구분	주요 개선사항	세부 내용	관계 실무자	관련 전문가
	⑤주민참여 및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성공적인 계획운동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 보 및 역량강화(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취지 및 목적 교육,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 한 인식전환)	2	8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관련 프 로그램 개발 및 홍보: 건축디자인 주민제 안, 건축설계 주민공모, 건축문화행사, 홈 페이지 제작 등	1	1
		지역전문가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확대	—	1
	⑥중앙정부의 홍보 및 예산지원	일관성 있는 건축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중 앙정부의 홍보 및 예산지원	3	3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건축진 흥특별회계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방법 고려	2	1
		중앙정부 지속적 관리를 통한 지역건축기 본계획 사업 발굴 및 지원	1	—
	⑦행정협의체를 활용한 협력적 계획 실현		—	1
제도 개선 관련	⑧관련 법률 및 계획 간 관계정립 및 유 사계획간 중복내용 정리	건축기본법의 사업부분 강화 및 타법 사업 연계강화와 건축기본계획만의 독립적 역할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	1
		건축기본법의 사업부분 강화와 유관사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건축기본계획의 독립 성 확보	1	2
		유사 계획의 양산을 막기 위한 유관법률 및 제도개선	—	1
성과 관리 체계 마련	⑨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운영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지역별 목표 달성, 사업성과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운영	1	2
	⑩시민 건축정책 모니 터링 제도 운영	지역별 건축정책 추진사업에 대해 시민이 모니터링하는 제도 운영	—	1

2. 계획의 한계와 실행력 부족 원인

1) 계획구성 및 내용 자체의 문제

□ 계획범위 및 타 분야 계획과의 불분명한 관계 정립 필요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계획범위는 건축문화, 녹색건축도시, SOC 국가기반시설, 건축도시산업, 경관, 주택 등 광범위한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는 SOC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대상 범위에 대해 다소 인식이 낮아 건축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정책기본계획, 경관계획, 건설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타분야 관련 계획간의 상충 또는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및 계획범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

□ 현황조사 및 지역현안문제 파악 부족

정책목표가 현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족한 채 수립되고 있는 상황을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기 추진되고 있는 건축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문제를 볼 수 있다.⁷³⁾

이는 계획수립 초기단계에 지역현황 및 현안에 대해 면밀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일반현황이나 사례조사를 지양하고, 지역 내 기 추진 중인 사업현황, 지자체장 공약, 부서별 업무계획 등 실행으로 옮겨지는 행정 내부자료에 대한 면밀한 자료 분석과 함께,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부서 실무자 협의를 내실있게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앞장 인식조사 결과와 같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설문조사도 필요하다.

관련 실무자 및 전문가에게 지역특성을 고려한 실천전략 및 실행과제 수립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비교적 반영(36.51%)’, ‘보통이다(38.10%)’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4.13%로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견을 집계한 결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발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여전히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3) 부산광역시의 경우 신규 사업 발굴보다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상호 연계하거나 발전시키는 과제를 다수 포함하여 계획 실행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였지만, 기존의 사업과 연계하거나 관련 계획들을 살펴본 지자체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계획수립시점에 대한 문제

건축기본법상 계획수립시점에 대해 ‘매 5년 단위’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자체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난 5년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계획수립이 뒤늦었던 지자체는 계획이 마련되고 나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이 1차와 2차 계획이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크게 변하지 않아 국가-지역간 계획 연계에 대한 문제는 치명적이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작용될 수 있다.

- 새롭게 제정된 건축관련 법령에 근거한 신규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경우에도 하위개념의 계획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됨에 따라 오히려 하위계획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련 계획간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시점에 대한 고려 및 제도개선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점이 상이함에 따른 종합적인 성과관리 어려움

건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2년주기로 국회보고용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계획 수립시점이 달라 전반적인 성과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지자체장의 공약과 연계되지 못하는 계획

지자체장의 선거 주기를 맞추지 못하면 정책방향이 다른 계획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계획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수립된 계획은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당시에 수립된 것으로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당시 당선인이 지닌 사회혁신도시, 안전한 도시, 마을 공동체, 주거복지 등과 같은 공약, 정책과는 다른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계획수립시점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17]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추진경위

*출처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각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

□ 주무부서 및 협조부서와의 협의 부족으로 인한 실행력 없는 계획 수립

관계 실무자 및 전문가에게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세부실천과제가 정책으로 실행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구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59%에 불과하였으며, 비교적 구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3%,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 34.92%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율이 31.16%를 차지하였다. 반면, 전문가집단에서는 ‘전혀 구체적이지 못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14%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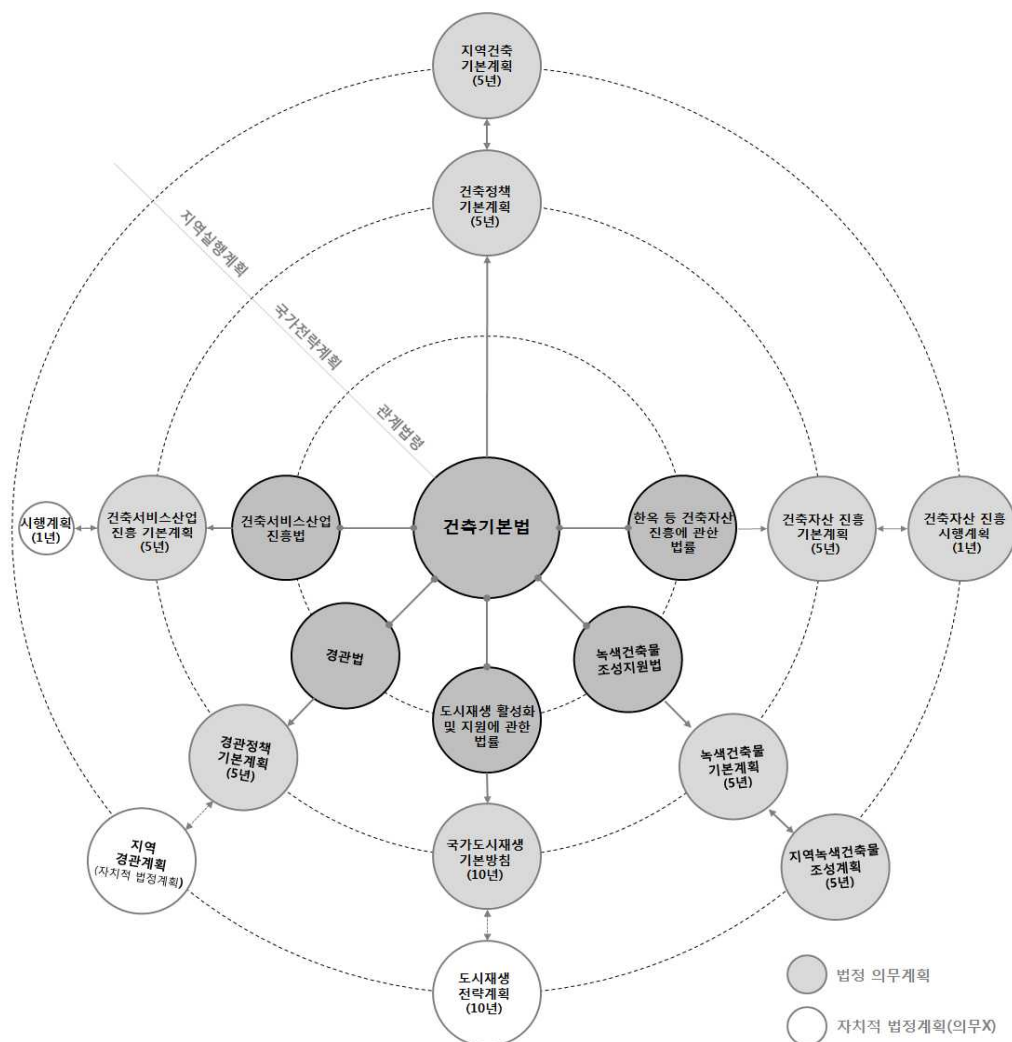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다. 그리고 실행주체도 지자체 관계 부서가 추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지역발전연구기관 또는 지역 대학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분야 전문성 및 관련 정책정보를 갖춘 연구기관이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수립 과정에는 지자체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해당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관계 실무자도 계획 수립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

□ 건축기본법 이후 신규 법령간의 불분명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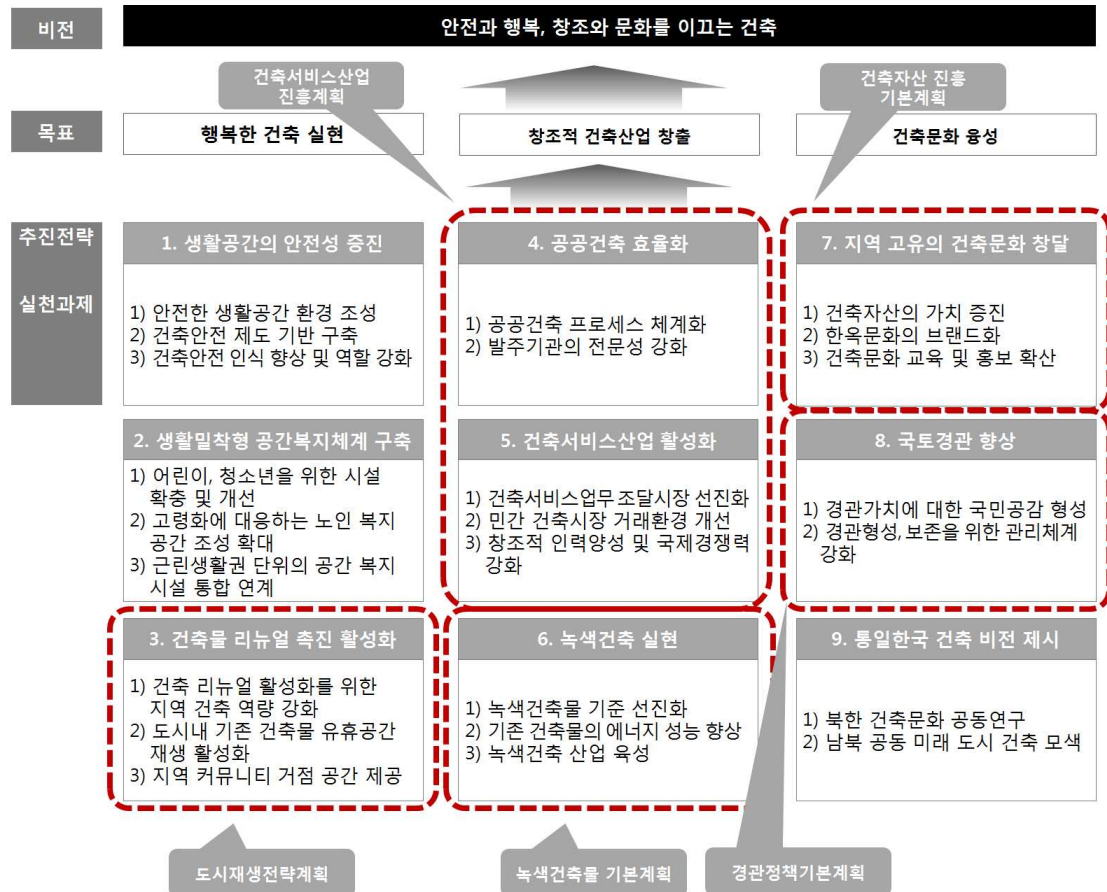
지난 5년간 새롭게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특별법 등 건축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 준비 중인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지역경관계획, 주택정책기본계획, 관련 계획 간의 상충 또는 중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계획범위에 대한 재설정도 고려해야 한다.



[그림 4-18] 건축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관계

*출처 : 직접작성

아래 그림 4-18과 같이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을 살펴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경관정책 기본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계획의 상위개념으로써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그림 4-19]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간의 관계

*출처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상위계획인 국가차원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경우는 구체적인 실행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닌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계획간의 상충 및 중복을 피할 수 있겠으나, 실행을 담보로 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계획내용의 구체성과 실행주체 등을 고려할 때 많은 혼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⁷⁴⁾

74)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의 경우는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과 함께 “건축관련 기본계획” 이라는 비법정 용어의 계획으로 건축기본계획을 관련 계획과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계획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규정 부재

계획된 정책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는 건축정책의 실행력 확보,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연계한 지역 건축정책의 총괄적인 성과관리 체계 부재로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3) 실행주체 및 행정적 한계

□ 계획실행에 대한 총괄추진관리 주체, 전담전문인력 부재

계획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업예산부족이 5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담부서 및 집행조직의 한계(41.3%)를 주요 문제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계획 실행체계에 대한 개선(31.7%), 건축정책을 지원하는 전담지원조직 마련(20.6%),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예산 확보(17.5%)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가장 큰 문제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주관 또는 협조부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책임지고 추진·관리하며 관련 타 부서간의 정책조정을 하는 총괄추진주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계획수립을 주관한 건축관련 부서가 타 부서 정책사업에 대해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정적 한계가 있으며, 기본계획 실행 및 관리를 전담하는 실무자가 부재하고, 잦은 보직순환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 지역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미흡

지역 건축정책의 총괄관리에 대해 지역건축위원회에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계획수립 심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 등 역할이 미흡하다.

□ 건축정책에 대한 인식 문제

건축정책에 대한 인식 문제를 확인해보기 위해 지자체장의 계획 실행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별로 없다’가 전체 36.51%로 가장 높았고 관계 실무자 집단에서는 ‘보통(38.10%)’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전문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42.86%)’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실무자 및 전문가들은 정책을 직접적으로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계획을 실행하는데 큰 부정적인 요소로서 단체장의 추진의지 및 인식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더 조사를 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1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계획자체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 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며, 제2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건축기본계획이 건축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행정적, 제도적인 한계로 실질적으로 이를 근거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거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체계적으로 계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더욱이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그간 이루어 온 정책적 효과 및 계획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실무자가 다수 있다.

제5장 타 계획의 실행 및 관리 사례 분석

1. 타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2.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분석
3. 시사점

1. 타분야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첫째, 지역 건축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타분야 법정계획을 대상으로 계획의 근거 법과 관련법, 기본법의 이념 혹은 방침의 구체화수단으로서 규정되는 계획간 관계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근거법에서 규정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계획 실행체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위계별 실행체계로서 전담지원부서의 여부, 예산확보 전략,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제도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하고자 한다.

□ 조사 대상

법정계획 중 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전략과 5개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환경종합계획, 여성정책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으로 총 6개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3개를 조사대상으로 더하였다.

[표 5-1] 근거법의 특성에 따른 근거법령,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기본계획

구분	근거법령	중앙부처	지자체
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광역지자체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중앙정부) 에너지법(지자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지역 에너지계획
	환경정책기본법	국가 환경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양성평등기본법 (前 여성발전기본법)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前 국가 여성정책 기본계획)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前 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도·시·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도·시·군)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이를 계획수립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 구분해보면, 중앙부처가 주체가 되는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에너지기본계획, 환경종합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으로 총 9개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계획은 광역지자체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지역 에너지계획,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지역 여성정책기본계획, 시·도/시·군·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시·도/시·군·구의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으로 총 6개를 조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앞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국가 계획 9개 중 지자체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계획이 제외되었고, 국토종합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삼아 지자체별로 별도로 계획하는 도시(지역)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지자체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 조사 내용

- 계획의 근거법과 관련계획간 위계 설정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타분야 법정계획의 실행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에 대한 근거법과 관련법, 관련계획에 대한 위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대상으로 삼은 9개 근거법에 따라 기본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법의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정계획을 하나의 세트로 하여 관련 법령과 계획간 위계를 분석하였다.

- 계획 실행체계 분석

법정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전제로서 기본계획 자체의 수립과정을 분석하되, 수립과정은 계획수립주체, 심의기구, 관련 위원회, 별도 추진계획과 시행계획 유무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 단위의 전담부서 운영, 예산확보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과정을 분석하였다.

- 계획 추진 및 성과 평가

법정 기본계획 실행의 마지막 단계로서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체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본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개별 계획들의 평가주체와 평가내용, 평가관리 등으로 나누어 성과관리시스템으로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2) 계획의 근거법과 관련법, 관련계획간 위계 설정

□ 범부처, 포괄적 대상에 대한 종합적 성격의 기본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의 경우

구분	근거법령	중앙부처	지자체
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광역시·지자체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중앙정부), 에너지법(지자체)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지역 에너지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교육, 환경, 건설이나 특정한 부서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목표를 대상⁷⁵⁾으로 하므로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범위 역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으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법 제9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법 제40조), 에너지기본계획(법 제41조), 지속가능 기본계획(법 제50조)으로 4가지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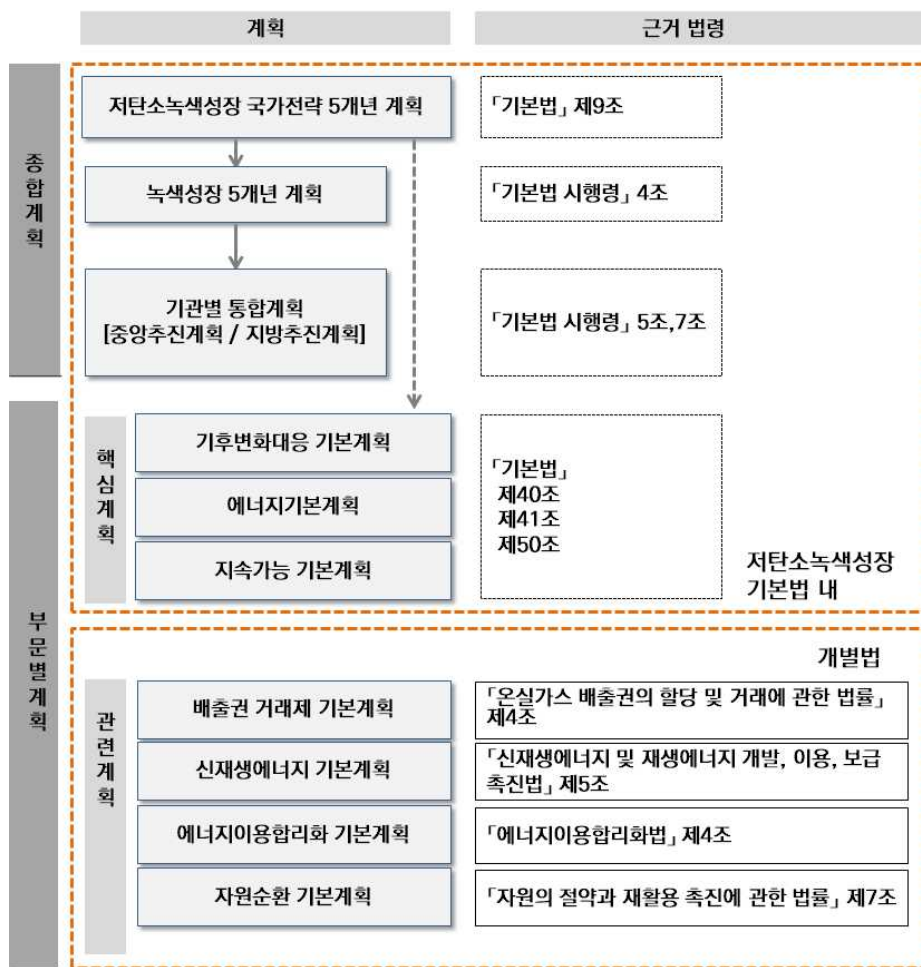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09~’50년)으로서 정책목표, 추진전략,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중기·실행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기본법 시행령 제4조)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안되는 중·장기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중앙추진계획과 지방추진계획을 5년마다 작성(시행령 제5조, 제7조)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

중장기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이 범부처 종합계획인 반면, 동법 40, 41, 5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3가지 기본계획(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지속가능)과 그 외에 관련계획들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분야별 계획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며, 녹색성장의 틀이 포괄하도록 조정되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종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 등으로 변경되어 녹색성장기본법 아래 편입⁷⁶⁾되었으며,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계획수립을 명시하고, 지역 에너지계획의 경우, 개별법인 에너지법에서 계획수립을 명시하는 등 법체계의 조정이 진행되면서 기본법과 개별법, 관련 기본계획의 위계가 설정되었다.

75) 오준근(2010),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222:17

76) 오준근(2010),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224:9~13 재정리

범부처, 포괄적 대상에 대한 종합적 성격의 기본계획인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은 목표달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었고, 국가 정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특정한 주무부서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각 기관별 통합계획으로서 중앙부처-지자체 등으로 구분되어 별도 작성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기본계획, 관련계획간 위계

□ 특정분야 총괄 규범적 성격⁷⁷⁾의 기본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의 경우

- 환경정책기본법

구분	근거법령	중앙부처	지자체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국가 환경종합계획(10년) - 국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5년)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법 제정(1977년)으로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시작 이후, 1990년 오염분야별 대책강화를 위해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하여 복수법체제로 전환하면서 국가환경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 지자체 및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적시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 제정과 함께 각종 계획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환경부 소관 개별법은 환경일반,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상하수도관리, 폐기물관리 등 6가지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개별법률은 모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이념이나 방향성에 합치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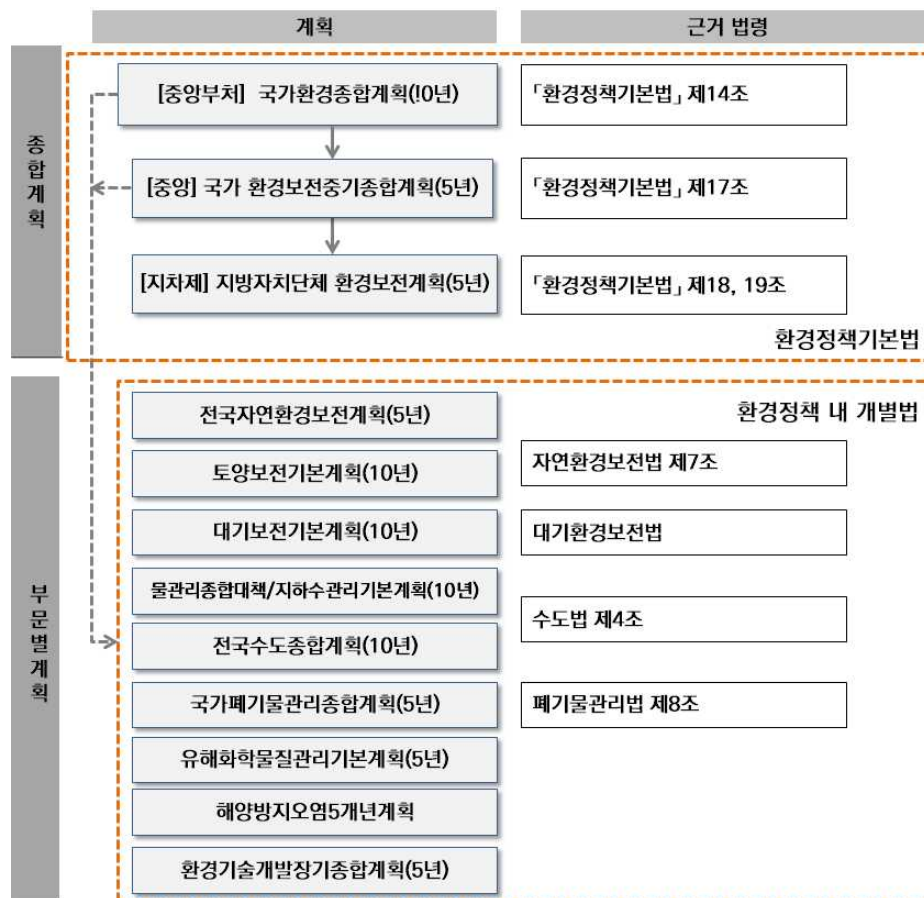
국가 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서 국가의 장기적인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며 장기전략계획으로서 자연환경 보전, 국토환경 보전, 대기환경 보전, 수질환경 보전, 폐기물 관리 등 부분별 계획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역할을 한다. 국가 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법17조)을 선도하고, 별도로 작성되는 분야별(대기, 수질, 자연환경, 국토환경, 연안해양환경 등) 환경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너지효과 유도하는 역할 뿐 아니라 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다른 개별적인 환경계획에 지침을 제공⁷⁸⁾할 수 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실천계획으로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분야별 환경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관계부처 환경정책과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총괄하는 법정부처 환경종합

77) 기본법을 분류하는 4가지(현장으로서의 기본법,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서 기본법, 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 종합법전으로서의 기본법) 중 총괄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은 공통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다른법률은 기본법에 없는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법과 개별법이 함께 효력을 가지는 경우이다(오준근(2010),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그 행정법적 과제'각주34 재정리)

78)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틀 마련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에서는 환경법 외 기타 국가계획(국토기본법, 기반시설법, 에너지법 등)에서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또는 환경친화적 발전에 대한 해석이 미흡하거나 계획마다 다르게 이해되어짐을 지적하며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기타 환경계획의 방향설정을 유도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음

계획이다. 중기종합계획은 전차 계획에서의 5년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동안의 전략과 추진과제를 재설정하는 것을 담고 있어 변화추이를 확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종합계획에서의 과제를 구체화하여 성과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작동된다.



[그림 5-2] 환경정책기본법과 기본계획, 관련법 및 계획간 위계

국가 환경종합계획은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으로 지자체 단위에서의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며,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은 국가 환경종합계획의 목표인 “자연스러운 생활의 터전”, “활력 넘치는 지속가능한 생명공동체”,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공정한 환경이용, 함께하는 환경보전”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을 제시하도록 지시되고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구분	근거법령	중앙부처	지자체
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前 여성발전기본법)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前 국가 여성정책 기본계획)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前 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근거로 작용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해왔다. 특히, 동법 제7조에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 중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기획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성된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초와 책무성을 천명하는 상징적 기제이면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실제 여성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로 역할을 하였다. 즉 기본계획을 수단으로 중앙의 관계부처들은 각자 담당 정책분야에서 여성의 문제를 도출하고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데 참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지자체에서도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가 부여되면서 지역수준의 여성정책도 활성화되는 수단이 되었다.⁷⁹⁾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등 기본법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2015년 7월 시행)하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⁸⁰⁾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에서와 같이 여성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이자 기본지침이면서 성평등 패러다임에 맞춰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과 조정 요청, 추진실적 평가, 국회보고 권한 등을 부여(법 제8조)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까지 양성평등책임관과 전문인력을 두도록 강제(법 제13조)하도록 하며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심의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1~12조)하였다⁸¹⁾.

79)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5: 6~20 재정리

80) 2015년 7월 여성가족부에서는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17년까지를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설정하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 ~ 2017)을 수정·보완하여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였음



[그림 5-3] 양성평등정책 기본법과 기본계획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13~17년)은 제1차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기본계획으로서 비전과 3대 목표 아래, 7개 대과제 및 21개 중과제, 66개 소과제를 갖는 형태이며, 소과제 차원에서 주관 및 담당부처, 관련 지자체 단위를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22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개별 전문분야의 기본법, 개별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의 경우

구분	근거법령	중앙부처	지자체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는 목적으로 건설공사와 건설산업 이라는 법적 대상이 보다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선 기본법과는 다른 법적 위계를 가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서 명시한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의 기초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기본계획으로서 건설산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 기술인력의 육성에 대한 대책,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 확보대책,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대책,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대책,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등 계획의 범위가 한정된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해 정책적

81) 제88차 여성정책포럼 발제자료 중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의의와 과제’12, 13p 재정리

으로 견인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의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없는 개별법 단위의 기본계획이 된다.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분야 개별법 중 하나로서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건설 기술 수준향상 및 관련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엔지니어링 업역의 통합, 기술자 관리의 통합, 산업등록의 단일화 등을 통한 건설기술용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해외진출 지원 및 교류 지원,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건설기술이라는 대상이 명확하며 특정분야 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으로서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법 제3조)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특별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의 경우

구분	근거법령	중앙부처	지자체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도·시·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도·시·군)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농산어촌 관련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되었다.

법 제 5조에 근거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해 ‘농어촌 공간’ 관점으로 통합 조정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계획’ 이면서 5년단위 ‘중장기 비전 및 전략계획’ 으로서 관계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자체 기본계획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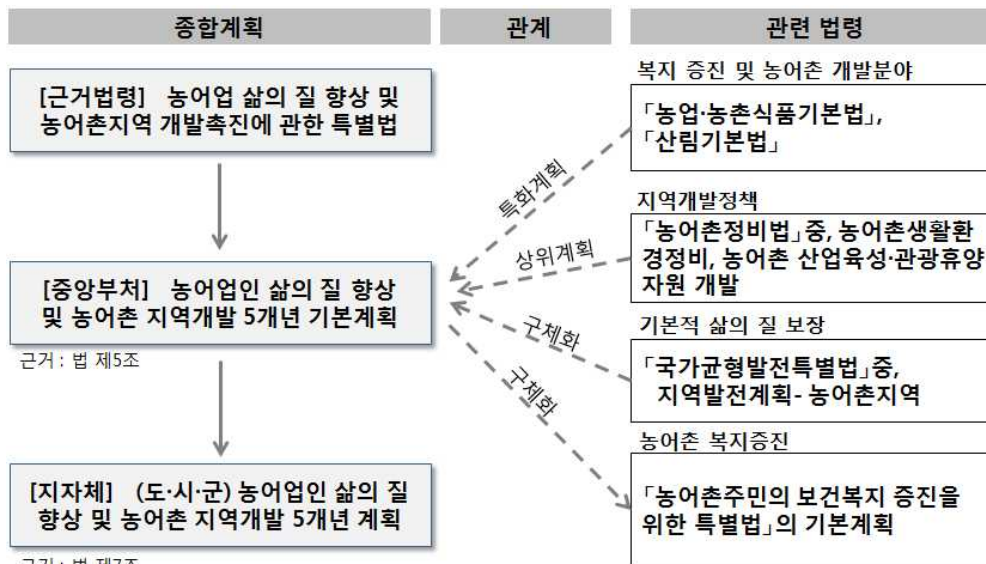
립 및 평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지침계획’ 이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를 중심으로 18개 부·청이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업계획이다⁸²⁾.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부처는 매년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동법 제6조), 광역시장 및 도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시·군계획을 수립·시행(동법 제7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총괄계획과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되며, 총괄 계획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의 개요, 부문별 주요내용, 재정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며, 부문별 계획은 중앙차원에서의 국가계획으로서 부문별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한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제정 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농산어촌 관련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농어촌 공간 개발이라는 점에서 「농어촌정비법」,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지역발전계획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농어촌 지역이라는 공간에 한정하면서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에 분야별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특별법과 개별법간 관계, 근거법과 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등의 위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향상특별법」은 특별법이긴 하지만,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기본법⁸³⁾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특별법에 근거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분야별 기본법인 「농업·농촌식품기본법」, 「산림기본법」 등의 내용 중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및 농어촌 개발 분야에 대하여 특화된 계획이고,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산업육성·관광휴양자원 개발 등 지역개발정책의 기본이 되는 상위 계획이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지역발전계획의 방향을 이어받아 농어촌 지역의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이다. 반면, 농어촌지역에 대한 또하나의 특별법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상의 기본계획은 보건·복지 관련 정책들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 확대 등 농어촌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계획으로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하겠다.

82) 제3차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기본계획(2015~2019) 보고서 41~42p 재정리

83) 삶의 질 향상 기본 실행계획 추진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보고서



[그림 5-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법간 관계
*출처: 관련법령 관계를 고려하여 직접작성

2. 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분석

1) 기본계획 수립 체계

법정계획 실행을 위한 전제로서 기본계획 수립체계를 수립주체, 심의기구, 관련 위원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법에 근거한 중앙부처 기본계획 중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은 장기 비전계획으로서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으로서 ‘5개년 계획’이 하나로 계획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추진계획으로 5년 단위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적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중앙추진계획과 별도로 매년 관계부처별 시행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실행력 제고를 위한 이중 장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우에도, 10년주기의 중장기 전략으로서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별도계획으로서 5년 단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투트랙(two-track)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부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별로 확인해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은 주체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는 반면, 나머지 7개 기본계획은 주관부서가 수립주체가 되었다. 이는 앞서 두가지 기본계획이 별도의 목적을 가진 범부처적 성격의 기본법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앙부처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계획안에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며, 특별히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국가 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의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표 5-2]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체계

계획구분	근거법령	기본계획 수립주기	(집행) 추진계획	시행 계획	수립주체	심의기구	관련 위원회	지역 계획 유무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09~50년) 5년	중앙추진 계획(5년)	매년	관계부처 합동	국가 녹색성장 위원회/ 국무회의	-	●

계획구분	근거법령	기본계획 수립주기	(집행) 추진계획	시행 계획	수립주체	심의기구	관련 위원회	지역 계획 유무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	(20년단위) 5년	-	5년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에너지 위원회/ 국가녹색성장 위원회/ 국무회의	국가 에너지 정책전문위원회	●
국가 환경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10년	환경보전중 가중합계획 (5년)	매년	환경부	국무회의	환경보 전전문 위원회	●
국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前 국가여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법 (前 여성발전기본법)	5년	-	매년	여성 가족부	양성평등 위원회	양성평 등실무 위원회	●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	(20년단위) 5년(검토)	-	5년	국토 교통부	국토정책 위원회/ 국무회의	국토정 책분과 위원회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5년	-	5년	국토 교통부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건설산업기본법	5년	-	매년	국토 교통부	건설산업발전 심의위원회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5년	-	매년	관계부처 합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5년	-	매년	보건복지 가족부	-	-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수립되는 지역계획은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에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초를 이어받아 지역 단위에서 수립되는 것이 기본이며 이때 수립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이 수립되도록 한 근거법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기본계획의 방식으로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방 녹색성장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이러한 형식은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시·도 및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現 양성평등정책기본법)에서는 지역 단위 여성정책 기본계획(現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으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전략과 과제를 이어받아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조정·보완하여 지자체 단위 여성정책 기본계획(現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근거법 상에서 국가 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 단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계획 수립의 근거로 삼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지자체 단위의 별도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계획으로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지자체 단위에서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근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표 5-3]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체계

계획구분	근거법령	기본계획 수립주기	시행계획	수립주체	심의기구	비고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5년	매년	지방자치단체	지방 녹색성장 위원회	-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법 (제7조)	5년	-	지방자치단체	-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10년	매년	지방자치단체	시·도 환경정책위원회	-
지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前 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	-	5년	매년	지방자치단체	-	강제사항 x 자율 수립 (ex, 경기도)
(시·도/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	5년	-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지역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	-	매년	지방자치단체	-	지역 기본계획 수립 x 중앙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2) 전담부서 운영 및 예산확보 전략

□ 계획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여부

국가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은 소관부서 내 담당인력배치 5건, 전담부서 미지정(과제별 담당) 2건, 정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2건 등이다.

전담부서로서 소관부서 내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現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며, 전담부서 없이 과제별로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계획의 경우는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계획이다.

정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위원회와 분야별 담당부처 등이 합동으로 계획이행을 추진하는 경우는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이나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경우, 담당과가 조직 내에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동 계획을 책임감 있게 준비, 수립하고 평가하기에 어려움을 가진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들이 사전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과정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⁸⁴⁾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의 경우는 대부분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지역 에너지계획 등에서 계획 실행을 위한 별도조직으로서 TF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84) 농어촌 보건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40p 참조

[표 5-4] 계획의 전담부서 운영 여부

전담부서 운영 여부	계획명	전담부서	주요 내용
소관부서 내 담당인력배치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자원정책과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위원회운영, 에너지자원정책연구 지원, 에너지 국정과제 총괄 등
	국가 환경종합계획	환경부 내 환경정책총괄과	기본계획 수립,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중기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실적 평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前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내 여성정책과	기본계획 이행 관리 및 소관 사업 추진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내 국토정책과	분권형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과 집행체계 구축,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개편 추진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내 기술정책과	건설기술진흥법령 운영, 건설기술진흥법령 규제개선,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업무성과관리(BSC)
전담부서 미지정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내 민생안정과	보건복지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매년 투자계획의 집행실적 및 추진성과 점검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내 건설경제과	건설정책 전반
정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국무조정실/ 분야별 담당부서/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전력 및 정책방향 설정, 기본계획 심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	분야별 담당부서/ 삶의 질 위원회/ 삶의질정책지원센터	지역개발 관련 정책 총괄조정, 기본계획 심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계획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집행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기본계획에서 예산확보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추진계획인 국가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등 4개 계획에서 확인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의 범부처계획으로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처별 소관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예산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 두 개의 기본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확인된다.

[표 5-5] 중앙부처 계획의 예산안 및 예산확보 방안

계획명	예산액	기간	예산확보 방안	예산사용계획
저탄소녹색 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10조 원	2014년도	·14년에는 총 10조원 수준 투자 ·15~18년 기간에는 투 자를 확대하되 국 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해서 구체화 해 나갈 계획	·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7조 2,554억 원 투자 · '지속가능 에너지 구축' 추진에 2,405억 원 투자 ·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육성' 추진에 6,562억 원 · '지속가능 녹색사회 구현' 추진에 1조 7,494억 원 ·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추진에 3,251억 원 투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46조 5천 억 원	14~19년 (5년간)	·국비 32조 1천억 원 (69.1%) ·지방비 12조 원(25.7%) ·기타 2조 4천억 원 (5.2%) *2차 계획기간 실적(34조 5천억원) 대비 35% 증가	· '보건, 복지' 추진에 7조 2,511억 원 투자 · '교육' 추진에 4,158억 원 투자 · '정주생활기반' 추진에 12조 9,666억 원 투자 · '일자리, 경제활동' 추진에 3조 9,859억 원 투자 · '문화, 여가' 추진에 1조 7,803억 원 투자 · '환경, 경관' 추진에 6조 4,470억 원 투자 · '안전' 추진에 12조 6,460억 원 투자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4조 5,421억 원	10~14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균형 적인 투자로 소요 재정 부담 ·매년 재정여건과 사 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조정 및 신규투자 수요 반영하여 추진	· '기본생활보장' 추진에 91억 원 투자 · '사회통합 지원확대' 추진에 2조 4,118억원 투자 · '보건의료인프라 확충' 추진에 2조 2,122억원 투자
(추진계획) 국가 환경보전중 기종합계획	26조 6,817억 원	13~17년 (5년간)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 확충 ·재정투·융자 특별 회계 재원 활용 ·수계관리기금 확충 및 민간투자 확대 유치 ·경제적 유인제도 강화 방안 검토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에 2조 2,458억 원 투자 ·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추진에 18조 7,180억 원 투자 ·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추진에 5조 6,134억 원 투자 · '글로벌 환경 협력 확대' 추진에 1,045억 원 투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정 기본계획에서 예산확보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개별 지자체 사례를 통해) 국가 계획에서 예산안을 수립하는 지방 녹색성장 추진전략,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등 4개 계획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상위계획의 구성을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실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추진시 국비와 지방비, 혹은 민간유치 부분 등으로 예산확보를 다원화하는 것은 계획 실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표 5-6] 지방자치단체 계획의 예산안 및 예산확보 방안

계획명	예산액	기간	예산확보	예산사용계획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전라남도 사례)	8조 2,251억 원		국비 4조 2,251억 원(48.8%) 지방비 3조 492억 원(35.2%) 융자 및 자담 1조 3,870억 원(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추진에 1조 7,047억 원 투자 · 농촌교육 추진에 7,895억 원 투자 · 기초생활 추진에 2조 3,216억 원 투자 · 농촌산업 추진에 1조 236억 원 투자 · 문화여가 추진에 1,754억 원 투자 · 환경경관 추진에 2조 3,433억 원 투자 · 지역역량 추진에 3,032억 원 투자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광주광역시 사례)	1조 7천4백억 원	13~17년도	국비 4,343억원(24.87%) 시비 11,489억원(65.80%) 민간유치 1,627억원(9.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0.81%, · 지속가능한 지구환경보전 24.51% 반영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전라남도 사례)	18조 8,562억원	09~13년도	국비 15조 3,195억원 (81.2%) 지방비 2조 2,446억원 (11.9%) 민간유치 1조 2,921억원(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의 땅, 전남 조성에 14조 8,593억원 ·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3조 9,147억원 · 녹색성장 선도 지자체 구현에 822억원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전라남도 사례)	1천6백억 원	2014년도	국비 782억원(47.58%) 지방비 862억원(5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세대사회통합 추진에 568억 원 · 기본생활보장강화 추진에 14억 원 · 보건의료기반개선 및 건강증진 추진에 280억 원

3) 성과관리체계

□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방식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 가운데 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으로 총 6건이고, 계획수립주체가 직접 성과평가를 하는 계획은 농어촌보건의료 기본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現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총 2건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으로 계획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및 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선정의 적절성과 과제달성도, 효과성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방식

중앙부처와 비교하여 지자체 차원의 계획은 자체점검을 통한 성과평가가 많았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現 지역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으로 총 4건이다.

위원회를 통한 평가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1건으로 지방녹색성장 위원회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바탕으로 기관별 세부시행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중앙부처와 전문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직접 점검하는 계획으로 시·도, 시·군의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으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이행점검 지표를 바탕으로 지자체 세부시행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표 5-7]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방식

평가주체 유형	계획명	평가 주체	평가내용	평가 관리
위원회를 통한 평가 (중앙)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3차 기본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매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	계획집행의 주요 과제별 현황 및 성과 평가	5년
	국가환경 종합계획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의 실적 점검 및 평가	매년

평가주체 유형	계획명	평가 주체	평가내용	평가 관리
	국토 종합계획	국토계획 평가위원회	계획내용의 형평·효율·환경성 분석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매년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녹색성장 위원회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평가	매년
수립주체 직접평가 (중앙)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의 계획, 집행, 성과에 대한 배점으로 성과관리	매년
	여성정책 기본계획 (현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표 개발에 의한 성과관리 설정된 과제별 정책목표의 달성을	매년
T/F팀 평가 (중앙)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전문가TF팀 구성	계획 수립작업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획에서 채택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선정의 적절성, 과제 달성도, 효과성	매년
자체점검 (지자체)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시·도, 시·군)	자체점검 평가실시단	중앙단위 계획에서 하향식 계획으로 부문별 세부 추진실적 성과평가	연도별 점검 (권장사항)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	자체점검 TF팀 구축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 운영방안을 제안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성과평가	연도별 평가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담당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의 구상·결정·집행·사후관리 전과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실적 평가	연도별 평가
	지역 여성정책 기본계획 (현지역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담당부처	자체적으로 각년도 시행계획과 담당부서의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 성과평가	-
위원회를 통한 평가 (지자체)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지방녹색 성장위원회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평가지침을 통보 후,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시행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연도별 평가
중앙부처 직접 성과관리 (지자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시·도, 시·군)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시·도 합동 평가 자료 중 복지부문을 별도로 재 분석하여 지자체별 복지수준 평가 진행	연도별 평가

□ 정량 및 정성적 평가 방식을 혼합하여 관리하는 방식

정성 및 정량적 성과평가를 혼합하여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계획은 총 9건으로 중앙 정부 계획 5건, 지자체 계획 4건)이며, 평가 주체로 위원회 또는 외부평가단, 전문가 TF 팀 구성 등을 통해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성적인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전문가 심층자문, 주민 및 관련 단체 의견조사 실시를 통해 계획의 이행정도를 파악하며, 정량적인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 GIS분석, 지표분석 등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 계획의 이행정도를 점수화 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표 5-8] 정성 및 정량적 평가방식의 계획(중앙부처)

구분	계획명	평가 방식	세부 성과평가 방법	성과관리 주체	협력 기관
중앙부처	건설 기술진흥 기본계획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추진부서, 수요자용을 위한 설문조사 계획추진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건설분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효율성 설문조사 	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한밭 대학교 연구진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수립 시 문제사항의 개선 정도 평가 건설산업 경쟁력, 기술수준 제고 정도 평가 		
	국토 종합 계획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의견: 지속가능성 이슈(형평, 효율,환경)와 계획 이슈(공간구조, 토지이용, 산업, 교통 등)간의 관계를 전문가적 식견과 판단에 근거하여 평가 	국토계획 평가센터	-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편익분석: 계획의 영향을 금전화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 모델링: 계획의 영향을 계량화된 인문 및 자연시스템의 인과관계로 분석 시나리오 분석: 계획의 내용이나 대안에 따른 미래상이나 목표달성 등의 변화 정도를 복수로 제시, 분석 GIS: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나 영향 정도를 시각적으로 비교·분석 지표분석: 계획으로 인한 유관 지표의 변화를 전망 분석 환경용량분석: 계획으로 인한 환경 용량, 임계치 등의 변화 분석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추진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사업필요성 및 목표의 적합성, 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 	보건복지 가족부	한국 보건 사회

구분	계획명	평가 방식	세부 성과평가 방법	성과관리 주체	협력 기관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달성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행(50점): 계획의 이행정도(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재원,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반영, 홍보, 일정관리 등) -성과(50점):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농어촌 환경변화 기여도, 차기 기본계획 성과지표 		연구원 (평가 체계 마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전문가 심층자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 계획 평가단의 전문가 활용 -전문가 회의, 간담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관련 안건 관련 의견 수렴 -농어업선진화 위원회의 논의 결과 반영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담당자 면접조사 ●농산어촌 주민 및 관련 단체 의견조사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 연구 기관
		정량적	●삶의 질 관련 기존 사회조사 및 연구결과 재분석		
	여성정책 기본계획	정성적	●부처별 사업에 대한 점검지표(타당성, 합목적성/충실성,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근거, 예산)	여성 가족부	한국여성 정책 연구원
		정량적	●세부과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도·시·군)	정량적	●지자체의 복지수준과 인프라, 재정, 전달체계 평가	중앙 부처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지 자 체		정성적	●행정안전부의 시·도 합동평가 자료 중 복지부문 재분석하여 지자체별 복지수준 평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도·시·군)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서비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교육·의료·안전·문화 등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주민생활 개선 정도 	외부 평가단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견 수렴: 분야별·지역별 정책동향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지역 에너지 계획	정성적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너지계획 사업의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공급 대책(10점), 신재생에너지 활용 대책(20점),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책(10점), 온실가스 감축대책(10점), 집단에너지 공급대책(10점), 미활용에너지원 개발대책(10점), 에너지복지 대책(10점), 지역 특화사업 발굴(20점) 	자체 TF팀 구축	-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	정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도로 연장 실적, 천연가스버스 보급률,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실적 	지방 녹색 성장	-

구분	계획명	평가 방식	세부 성과평가 방법	성과관리 주체	협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행정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인허가 실적 ●녹색생활·녹색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실적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립 실적 -자치단체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녹색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성장 조례 또는 규칙 제정 실적, 임야면적 증감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지방행정기관 재활용센터 설치 실적 	위원회	
		정성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생활·녹색일자리: Green 마을 지도·점검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 정성적 평가 방식의 계획

중앙부처에서 정성적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는 총 3건으로, 주로 관계 전문가 T/F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설문조사, 전략별 실천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의 계획에서는 정성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총 2건이 있으며, 중앙정부 계획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자체점검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표 5-9] 정성적 평가방식의 계획

구분	계획명	연구추진방법	평가 주체	협력 기관
중앙 부처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1. 건설업 관련 종사자 설문조사 -세부추진과제 평가(중요도, 달성도, 효과성) -차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추진실적 점검T/F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	1. 부처별 자체평가 -세부과제의 성과지표별 실적 및 계획·실행·결과의 단계별 성과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달성여부와 미달성 원인 분석 2. 세부 성과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자문위원단 구성	녹색성장 위원회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환 경보전계획	1. 자체 사업의 평가 -상위계획 부합성 -지침내용 반영성 -부문계획 적절성 2. 유관분야의 사업성과의 연결성 평가	환경보전 자문 위원회	-

□ 정량적 평가 방식의 계획

정량적 평가방식의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 계획 총 2건으로, 계획의 성격상 정량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계획에 국한되어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평가주체는 전문연구기관이 하고 있었으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는 기본계획에 평가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5-10] 정량적 평가방식의 계획

구분	계획명	연구추진방법	평가주체	협력기관
중앙부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1. 1차 에너지기본계획 5대 비전 성과평가 -지표: 자주개발률, 신재생에너지보급률, 원전설비 비중, 석유 의존도, 에너지원단위, 에너지기술 수준, 에너지 빈곤층 비율 2. 주요 과제별 세부평가: 에너지 믹스, 수요관리, 전력 수급, 해외 자원개발, 에너지 복지	-	-
	국가환경 종합계획	• 추진성과 연도별 항목 수치 비교 -생활환경: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지하수관리 -자연환경: 생태계 관리, 토양 관리 -환경용량: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지원체계: 지방의제 21추진실적, 수도요금 현실화율, 민간환경단체 지원 현황, 환경성 평가제도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

제6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건축정책의 대상 및 범위 재설정
2.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안)

1. 건축정책의 대상 및 범위 재설정

□ 건축정책으로만 답을 수 있는 정책 대상에 초점

국내에 처음으로 건축정책이 도입되고, 초기에 ‘건축’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건축기본법에서 정책대상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으로 광범위하게 선언한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그동안 ‘건축’ 자체의 범위를 너무 한정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1차 기본계획에서 너무 광범위한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을 포함하게 되었다.

- **전문분야** : 건축계획 및 설계, 도시설계, 조경계획 및 설계
- **시설대상** : 주택, 한옥, 공공건축, 공공공간, 도시공원, 가로환경, SOC시설
- **정책대상** : 주거환경, 도시재생, 공간환경 디자인, 경관, 건축산업, 건축문화
- **정책수단** : 법규, 행정프로세스, 설계발주 및 계약, 지침 및 기준, 건축기술, R&D, 교육

건축정책을 선행한 유럽 주요국의 정책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내의 건축정책과는 달리 다루고 있는 정책대상이 ‘건축문화’, ‘공공건축’, ‘건축기술’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⁸⁵⁾

85) 유럽건축정책포럼(EFAP)에서 2011년에 유럽연합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건축정책정책 집행실적 및 영향

‘건축’의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고, 정책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부문에 대해 초점을 두어 건축기본계획만의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건축정책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적달성은 특정 시설과 공간에 대한 계획이 아닌 법규, 행정프로세스, 설계발주 및 계약, 지침 및 기준, 건축기술, 교육 등 정책수단의 개선을 통해 건축수준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에서 다루는 정책대상인 주택공급, 도시기반시설 SOC 등은 과감히 건축정책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서의 정책대상 검토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책과제를 계획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부합성을 위해 사업 추진가능 여부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계획을 받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서비스산업육성 및 지원, 건축 설계 발주 및 계약제도 개선, 건축분야 R&D 연구개발, 녹색건축 및 첨단건축기술 개발 등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건축정책이 지역건축기본계획에 여과없이 수록되는 부분이 있어 지역단위에서 추진가능한 정책대상 여부를 계획 수립시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과제** : 국가 계획에서 제시한 건축 기준에 대해 지역특성 및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과제
- **지역 차원에서의 과제** : 국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국가계획에서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접목한 지역 내 공공건축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차이를 둔다면, 국가단위에서는 특정한 공간적 범위를 염두해 두고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제도적 측면, 행정프로세스, 기술개발 등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지역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간상에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현황 및 공간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유럽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Survey on Architectural Policies in Europe"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 16개국의 건축정책을 3개 부문인 ‘건축문화 인식 확산’, ‘공공건축 설계성능 기준 개선’, ‘지속가능한 건축기술 확대’ 등 3개 부문으로 정리하고 있다.

- **국가계획의 정책대상** : 법, 지침 및 기준, 행정프로세스 개선, 기술개발, 산업육성지원 등 제도적 측면에 초점
- **지역계획의 정책대상** : 지역 공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진단, 실질적으로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에 초점

제1차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지역 공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진단이 부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당초 건축기본법 제정당시 이러한 지역단위에서의 사업에 초점을 둔 건축기본계획은 시·군·구 단위에서의 기초건축기본계획에서 구현되기를 기대했지만 예산확보 및 지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초단위에서의 건축기본계획 수립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광역시·도 계획에서 이를 받아 줄 수 있어야 한다.

2.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 신규 건축관련 법령 및 계획간 관계 정립

□ 관련법령 및 계획간 관계에 따른 범위 재설정

지난 5년간 건축정책이 도입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건축정책 부문별로 세분화된 법령에 의해 부문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정책부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녹색건축’,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자산’, ‘경관’에 관한 별도의 부문계획과의 관계문제 있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심지어는 세부 부문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므로 상위개념으로서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5장에서 타분야 계획 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축전반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은 상하위 관계의 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계획간의 관계에 대해 대부분이 ‘일부계획과는 동등한 위상이나 일부와는 상하위 관계’로 계획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과 동등한 위상의 성격을 지니고 어떠한 계획과 상하위의 관계로 정립되는지가 중요하다.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동등한 위상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주택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국토계획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개발계획 등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상하위의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건축기본법상에서의 지역건축기본계획, 건축정책의 부문으로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계획 등
-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에 의한 도종합계획, 수도권 발전계획, 지역개발계획, 경관법에 의한 지역경관기본계획, 주택법에 의한 시도 주택종합계획,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 등
-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상하위의 관계에 있는 법정계획**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해당하는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⁸⁶⁾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새롭게 설립되는 정책 지원기구 간 관계 정립

새롭게 제정된 건축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정책지원기구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국가한옥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녹색건축센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있다. 이 중 법령에 근거하여 하위 지원기구를 둘 수 있는 것은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립근거를 둔 것은 ‘녹색건축 전담조직’이 있다. 지역한옥지원센터의 경우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비법정 지원기구로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새롭게 관련 법령들이 제정 및 정비되면서 건축정책을 지원하는 지원기구가 설립되고, 활발히 해당 정책 및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단위에서도 별도의 지원기구 설립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국가단위의 정책 지원기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 자문, 교육,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기구 운영이 제대로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중앙과 지역단위의 지원기구의 업무분장 및 역할 분담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중앙부처와 지역단위로 구분하되, 지원범위 및 방식에 대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구에서 각종 운영지침 및 기준, 매뉴얼 개발이

86) 현재까지 사·군·구 기초건축기본계획은 수립된 바 없지만 건축기본법 위계상 광역건축기본계획과는 상하위의 관계

필요하다. 또한, 지원기구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DB구축 및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표 6-1] 정책지원기구의 역할 및 관계 현황

근거법령	정책 지원기구	주요업무	하위 지원기구	주요업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공공건축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공공건축 지원센터 ⁸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지역 공공건축 발주,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 •지역 공공건축 디자인관리, 에너지효율화,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 •지역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지역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⁸⁸⁾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 한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조사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 한옥 지원센터 ⁸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9개년의 한옥응급센터 •한옥기술 R&D 개발 •대 시민 상담과 교육 •한옥 산업 박람회 •시민 한옥체험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지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도시재생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거법령	정책 지원기구	주요업무	하위 지원기구	주요업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체계의 운영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녹색건축 전담조직 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지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각 법령 내용 재정리

87)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기준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정 등)에서는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만 해당한다)

- 가.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 나.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 다. 공공건축 지원업무 운영규정

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에는 국가단위에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정받아 중앙 및 지자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비롯한 각종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 정착 이후에 차차 지역단위에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88) 최근 지역단위에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의지를 밝히는 지자체가 있으나, 지역단위에서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법상에서 정의한 것은 없다.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의해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정받아 운영된지 만 2년이 되지 않는 시점으로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디자인관리 자문,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각종 매뉴얼 등이 개발된 이후에 지역단위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89) 지자체 단위에서의 한옥지원센터는 근거법령은 없지만 지역 한옥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해 비법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2015년 9월 서울시에서는 서울사한옥장안·국가한옥센터(관·산·연) 협력을 통한 현장형 한옥지원센터를 오픈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15.9.17.일자)

90) 녹색건축센터에 대한 하위 지원기구로 지역단위에서의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정하

2) 계획 실행 및 관리 전담주체 확보 방안

□ 계획수립 주체의 전환 및 건축정책 전담 지원기구로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앞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건축기본법에서의 ‘건축’은 민간의 사적자산의 개념이 아닌 국가자산으로써, 그리고 공공의 장소를 만드는 공공정책의 의미를 가진다. 하나의 전문분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국가이미지 및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는 정책으로써 의미가 있다. 당초 건축기본법을 제정할 당시, ‘건축’이라는 정책분야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관할하는 부처가 다양하여 특정 단일부처가 아닌 범부처 성격의 정책이 만들어 질 것이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당연직 위원으로 모든 관계부처 장관으로 임명하는 범부처 성격이었다. 그러나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권자로 국토교통부장관로 되어 있으며, 계획 대부분의 내용이 국토교통부에 한정된 범위에서의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건축정책의 계획 추진주체를 국토교통부에만 지정하는 것이 아닌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외 건축정책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건축정책을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범부처 성격의 정책과제가 보다 확대되어야만 한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소속이 아닌 당초 설립취지를 살려 독립된 범부처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가진 심의기능으로는 크게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건축디자인시범사업 선정’, ‘한국건축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한국건축규정’은 최근 건축기본법 개정⁹¹⁾에 따라 추가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⁹¹⁾되어 향후 위원회의 역할에 기대가 된다.

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지역 한곳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임
91) 건축기본법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부처 및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운용되던 건축물관련 설계기준이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 전담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역발전연구원의 활용

계획수립 주체는 지자체장으로 보통 건축과 또는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 학술연구용역 형태로 국책연구기관 또는 지역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획수립뿐만이 아닌 성과점검 및 평가에 있어서 지역발전연구원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 건축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행과정에서 별도의 담당 실무자가 부재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의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건축기본계획만을 추진·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발전연구원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지역차원에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있다.⁹²⁾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공공디자인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에 대한 사업기획, 컨설팅, 모니터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전담지원기구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발전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 분야의 전문가 구성 가능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지역발전연구원이 있어도 건축분야 전문가가 부재하여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우도 여러 사례 있었다. 지역발전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제1차 지역건축기본계획에 의해 새롭게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전담지원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부산, 인천, 경기도,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아래표와 같이 별도의 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책적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지역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관련 지원기구가 설립될지 여부는 보다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건축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담지원기구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지자체 건축정책지원기구가 주거, 도시재생, 녹색건축 등 정책부문별 전문화된 지원기구 모두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건축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설립하여 앞서 설명한 건축정책 전반에 대한 실행주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92) 지자체 건축관련 실무자 인터뷰 조사과정에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2] 타 지자체 건축기본계획상의 건축정책 지원기구 현황

구 분	건축정책 지원기구	주요 역할 및 특징
부산광역시	부산형 주거서비스기동센터	• 주거환경과 관련한 긴급문제 발생시 수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동 단위의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 지역커뮤니티의 지속적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커뮤니티 지원센터 • 민간활동가 등 커뮤니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마련 • 유사 도시재생사업 내 커뮤니티의 통합적 지원방안 및 상호정보 교환 방안 마련
	부산 도시건축재단 (건축문화기금 조성)	• 부산건축문화제의 역할 강화 및 한계 극복을 위한 비영리재단법인 • 부산의 역사 문화에 대한 조사와 도시건축과 관련한 장기 발전 계획 및 비전 수립 • 관련기관과 단체의 교육, 학술, 교류, 연구, 전시, 행사 등 건축 문화사업 지원 • 부산시 건축문화정책과 제도, 프로그램 등 연구기획 개발 및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도시건축역사관, 시민건축대학 등 부산시 각종 건축문화 활동과 사업을 통합 주관
	부산 녹색건축센터	• 지역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부산시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관으로 설립 • 지역의 특화를 고려한 친환경 건축물 설계안에 대한 기술검토 유도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이나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인천광역시	인천건축문화재단	• 인천건축문화제 인천건축박물관 건축아카데미, 각종 학술사업 등 인천광역시의 건축문화 활동사업을 통합적으로 주관하고 지원
	집수리지원센터	• 집수리 지원센터를 기능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수리 지원과 관련된 업무 분담 • 전문가를 양성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문 및 상담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실시
경기도	지역 건축지원센터	• 지역 밀착형 건축·도시 환경 관련 서비스 지원 •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건축 민원 및 디자인에 대한 상담과 지원 시행 • 주민들의 자율적 건축·도시 환경개선 활동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에서부터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별 전문가 연계까지 지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정책 연구지원센터	• 지역주민, 건축·도시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에 정보제공 및 교류, 교육·지원 • 지역밀착형 건축·도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 지역주민, 건축·도시 관련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건축지원센터	• 녹색건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다양한 녹색건축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출처 : 조상규 외(2013),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 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55.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건축기본법 또는 지역건축기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상에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관리와 정책추진사항을 전담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내실 있는 건축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지역 계획 성과점검 운영 현황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어느정도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계획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계획 수립시점이 지역마다 재각각이어서 시점차이가 있겠지만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점검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타 분야 기본계획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계획은 대체적으로 자체점검을 통한 성과평가가 가장 많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은 ‘자체점검평가실시단’을 구성하여 부문별 세부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단위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에너지 기본계획」은 자체점검 TF팀을 구성하여 자체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환경보전계획」과 「지역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역 담당부서에서 각년도 시행계획과 담당부서의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추진실적을 이행점검을 하고 있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경우도 국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 역량에 따라 자체적인 점검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한 서울과 경기지역부터 성과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기본계획의 성과를 매년 또는 2년주기로 성과를 점검하여 계획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을 피드백하는 수단이 아닌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항목으로 성과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과관리의 방식이 정량적, 정성적인 성과평가체계를 갖춘 것이 아닌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아마도 서울, 경기 이외의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계획 실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과 성과점검은 지역건축정책이 초기 의도한 목적과 계획이 실제 시행·집행된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건축정책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자료로써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경쟁

력 및 도시브랜드 지수 등 국민 삶의 질 및 도시환경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와 연계하여 건축정책의 중요성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야 한다.

□ 일시적·단편적 성과측정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건축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정책 및 사업은 건축의 특성상 계획이 이행된 이후 기획-설계과정을 거쳐 실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간과 장소가 만들어지는데는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효과가 단기간에 드러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성과측정이 아닌 장기적 안목을 가진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건축·도시관련 현황조건이 다르고, 대부분의 건축·도시관련 정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top-down 형식의 성과관리가 아닌 bottom-up 방식의 자체 이행 점검을 통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⁹³⁾

□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방향

• 계획 실행과정에 대한 성과평가

제1차 기본계획은 지자체에서도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며, 실제로도 정량적인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한 계획 사례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계획 부문별 목표, 실천과제별 실행수단, 방법, 프로그램,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초점을 두어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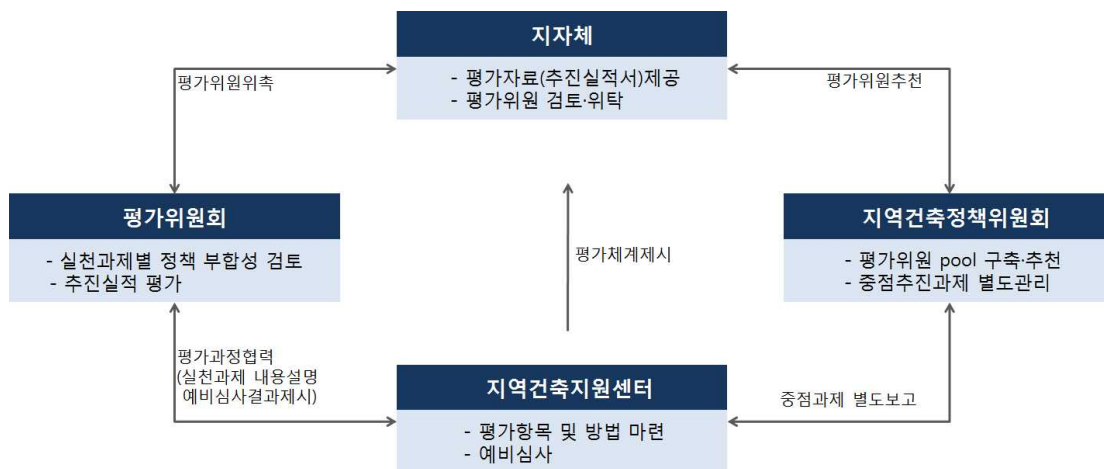
• 성과관리 참여주체별 역할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해 지역건축정책위원회(지역건축위원회에서 선발), 지자체 해당부서, 지역발전연구기관 또는 지역건축지원센터, 평가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해당부서에서는 계획 수립의 총괄 주체이자 관리기능을 하는 역할로써 건축

93) 김상호, 김영현(2008),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10.

기본계획에 관계된 부서의 담당 세부 단위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고, 실행계획별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지침 및 이행점검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한다. 평가위원회는 지역건축정책위원회 내에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서 실무자로 구성하여 별도 구성하여 각 세부단위과제별 실행계획,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관련자료 및 성과지표, 성과결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지역발전 연구기관 또는 지역건축지원센터는 지자체에 평가항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축정책위원회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6-1] 지역건축기본계획 성과관리 참여주체별 역할 및 기능

*출처: 김상호, 김영현(2008),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19, 재구성

• 성과점검 항목 및 중점사항

성과평가는 크게 3개 부문에 대해 점검한다. ①계획내용에 대한 평가, ②이행과정에 대한 평가, ③성과결과에 대한 평가 등 3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첫 번째로 계획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세부단위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목표에 대한 적합성, 사업 실행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에 대해 점검하고, 두 번째로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사업 중간상황의 점검, 사업추진기간의 적절성 및 관리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결과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점검함으로써 계획 전반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서 피드백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운

영될 필요가 있다.

[표 6-3] 지역건축기본계획의 3개 부문 점검사항

구분	평가항목	중점사항
계획내용 평가	사업 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표의 구체성/명확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근거 및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목표 및 수단의 적합성 •실행계획의 추진적합성 •실행주체의 적절성 및 업무분장의 명확성
	절차적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 주체의 타당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 •객관적인 현황 및 여건 조사 •분석을 통한 계획 실행력 고려 여부
이행과정 평가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재원 및 인력 등 투입된 자원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유관기관간의 연계 및 협조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여부 •사업 추진간 문제 발생 및 해결의 적절성
	사업추진기간의 적절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시점 및 완료시점의 적절성 •사업관리를 위한 노력
성과결과 평가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설정의 근거 •성과목표와 사업목적과의 상관관계
	성과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대비 사업 달성 정도(정량적/정성적) •사업 완료 여부

4) 건축기본법 개정

□ 현행 법령의 개정 필요항목 및 내용

연구결과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본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등 4개 항목이 있다. 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아래표와 같다.

[표 6-4] 건축기본법 개정방향

건축기본법	기존안	개선안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건축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②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2조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한 기본이념 및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제14조 국가 건축정책 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정책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신설) 9. 제12조 및 제00조 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10.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건축기본법	기존안	개선안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5. 건축제도·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건축기술·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u>지역건축기본계획의 추진 상황 및 평가 결과(신설)</u> 8.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지역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4. <u>지역건축기본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신설)</u>

□ 건축기본법 신규조항 제안

-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계획인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건축정책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지역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건축정책 국회보고, 제00조에 따른 지역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00조에 따른 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전담성과관리지원 기구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 및 제0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을 지역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역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역건축지원센터로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 보완

지금까지 조사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대한 전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지침 수정을 위해 검토한 사항 및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광역건축기본계획과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지역건축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정리하는 방안 검토

건축기본법 상에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광역시·도 단위에서의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시·군·구 단위에서의 ‘기초건축기본계획’으로 구분되어 위계를 설정하고 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현시점까지 16개 광역시도가 계획수립 완료 또는 수립 중에 있으나 시·군·구 단위의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평택시와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건축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광역건축기본계획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차별하여 세부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계획 내용을 구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광역시와 도의 구분된 지침 검토

건축기본법에서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광역건축기본계획’으로 묶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정체계가 상이하여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행력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 인허가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 계획 실효성이 높았던 반면, 자치도의 경우에는 시·군에 지침 및 기준 등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해져,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획수립 지침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계획 성격을 광역시와 자치도로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기본법의 개정을 동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광역시와 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시·군·구단위에서 기초건축기본계획을 무리해서 수립하려는 의지도 없으며, 예산상으로도 현실성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안)

연구내용을 토대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부록으로 수록된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지침⁹⁴⁾”의 내용을 기본토대로 최종적으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는 것을 제안한다.

1) 제1장 총 칙

□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작성방향과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각 지역의 건축·도시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의의

1-2-1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환경에 대한 건축·도시분야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인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1-2-2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역건축문화의 진흥을 통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전략 계획이며, 정부가 수립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계획이다.

1-2-3 지역건축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건축·도시관련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1-2-4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건축의 방향과 방안을 제

94) 국토해양부(2009), 건축정책기본계획연구, p.343~p.367.

시한다.

1-2-5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1-2-6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지역의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다룬다.

□ 제3절 지위와 성격

1-3-1 본 지침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정책방향 및 추진시점 등에 있어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하위계획이다.

1-3-2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시·도 및 시·군·구차원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

1-3-3 지역건축기본계획은 당해지역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과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다.

1-3-4 지역건축기본계획은 당해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내 유사 정책 및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종합계획이다.

1-3-5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시·군·구별 건축·도시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1-3-6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등 지역에서 수립되는 건축관련 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지역의 도시·경관·도시재생 관련 계획과 사업에 있어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 제4절 지침 운영 방향

1-4-1 광역건축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법, 영 및 수립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광역시·도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1-4-2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은 이 지침에서 제시한 계획 수립방향, 계획체계 등을 참고하여 시·군·구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1-4-3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본 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따르도록 하되,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

1-4-4 지역의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경관·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디자인 관련된 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지침을 작성·운영할 수 있다.

2) 제2장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범위와 내용

□ 제1절 계획수립 대상과 범위

2-1-1 지역건축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건축기본계획과 자치구(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건축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1)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5년 마다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이다.

(2) 기초건축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수립·시행하는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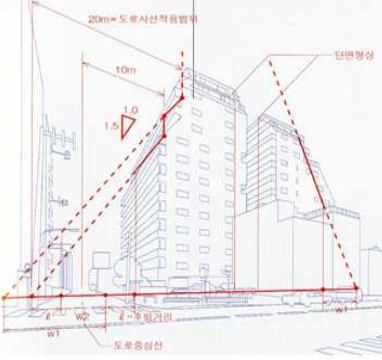
2-1-2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Building Act.)



개별 건축물

건축기본법(Architectural Act.)



건물

[건축법의 대지내 건축행위 범위와 건축기본법의 공간환경 요소]

2-2-3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으로 설정 하되, 최종계획의 수립년도를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설정한다.

2-2-4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건축 기본법 제3조)을 말한다.
- (2) “건축디자인”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건축기 본법 제3조)를 말한다.
- (3) “건축의 공공성”은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 등 으로 구성(건축기본법 제7조, 제8조, 제9조)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생활공간적 공공성 :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건축기본법 제2조)
 - 사 회 적 공공성 :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 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건축기본법 제2조)
 - 문 화 적 공공성 :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건축기본법 제2조)
- (4)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

(5)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건축디자인기준”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디자인(기획, 설계, 개선)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경관”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경관법 제2조)을 말한다.

(8) “국가기간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용수시설·물류시설·정보통신 시설 등을 의미(국토기본법 제4조)한다.

(9)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조)

(10) “선도시범사업”이란 향후 5년동안 정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업으로, 정책적 파급효과가 높거나 사업결과가 긍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공공의 선도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1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절 계획의 주요 내용

2-3-1 지역건축기본계획에는 법 제11조와 영 제3조의 내용과 지역 건축기본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3) 지역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p>(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p> <p>(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p> <p>(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 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p> <p>(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p>(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p> <p>(9) 지역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p> <p>(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p> <p>(11) 건축물에 대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p> <p>(1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p> <p>(1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p> <p>(1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p> <p>(1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p> <p>(16)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p> <p>2-3-2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3-1-1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내용을 차별화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2-3-3 지역건축기본계획에는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건축디자인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p> <p>(1) 지역건축디자인 기준은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건축·토목·조경 등 각 분야가 통합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p> <p>(2)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법 제22조·영 제20조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64호)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p>

□ 제4절 계획 수립 참여주체별 역할

2-4-1 정부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완료 후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행정지원을 이행한다.

2-4-2 광역시·도지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서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2-4-3 광역시·도의 건축정책위원회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최종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2-4-4 건축·도시관련 지역전문가 TFT(task force team)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지속적인 자문 및 계획 전반에 걸친 의견제시와 공론형성에 기여한다.

2-4-5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전담연구팀은 지역전문가 TFT를 운영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지역건축현황 및 여건 조사, 비전과 목표, 전략과 과제 등을 제안·검토한다.

3) 제3장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기준

□ 제1절 계획수립 기본원칙

3-1-1 지역내 건축·도시 관련사업을 전략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구체화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1-2 시·군·구별로 기초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유도하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건축·도시 관련사업의 통합과 연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3-1-3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도시 관련사업에 지역의 특성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1-4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건축·도시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는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축의 역할 강화와 제도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1-5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토대를 확보한다.

□ 제2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3-2-1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3-2-2 상위계획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건축·도시관련계획(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3-2-3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과 과제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3-2-4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용어사용은 건축기본법과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준용하여 계획간 혼란이 없도록 한다.

3-2-5 해당 지역의 건축·도시관련 계획, 사업, 지역동향 등을 분석한 여건전망을 통해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되, 과제별 목표연도 및 사업기간을 단계별로 작성한다.

□ 제3절 광역건축기본계획의 현황조사

3-3-1 건축현황조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배경, 필요성의 근거가 되며, 구체적인 과제 도출과 선정의 근거가 되므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항목을 검토·선정해야 한다.

(1) 법 제16조(건축기본조사) 및 영 제15조에서 제시한 항목 중 지역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을 선정한다[참고1].

(2) 지역건축의 물리적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지역적 특성을 검토한다[참고2].

- ① 지역건축물 현황
- ② 지역공간환경 조성 현황
- ③ 지역건축·도시문화 관련시설 현황
- ④ 지역한옥관련 현황

(3) 미래라는 시점 앞에 놓인 기회와 위협을 예측하는 전략적 분석을 위해 건축·도시관련 사항 이외에도 사회적·산업적·문화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참고3].

- ① 지역건축·도시관련 자료구축 현황
- ② 지역건축·도시관련 문화재 현황
- ③ 지역건축·도시관련 교육 현황
- ④ 지역건축·도시관련 문화행사 및 사업 현황
- ⑤ 지역건축·도시관련 산업 현황
- ⑥ 지역건축물 발주 및 수주 현황
- ⑦ 지역건축·도시관련 문화산업 및 콘텐츠 현황
- ⑧ 지역건축·도시관련 사업 현황

3-3-2 시·군·구별로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사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건축정책을 발굴하고, 계획 중인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1) 해당 시·군·구에서 추진된 건축·도시 관련사업 현황(사업현황, 총사업비 및 건축비, 사업기간 등)에 대해 조사한다[참고4].

(2)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광역건축기본계획의 과제로 추진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 제4절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의 설정

3-4-1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담당실무자와 전담연구팀(이하 계획수립 전담팀)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도시계획, 업무수행보고 자료 등 관련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광역차원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3-4-2 계획수립 전담팀에서 제시한 방향을 근간으로 지역전문가 TFT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비전과 목표 초안을 작성한다[참고5].

3-4-3 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전반에 걸친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건축·도시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및 관련 시·군·구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다.

3-4-4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지속적인 환류(피드백)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3-4-5 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의 설정과정은 계획수립전담팀 및 지역전문가 TFT 구성·운영을 위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 제5절 전략과 과제의 선정

3-5-1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주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과제는 전략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참고6].

3-5-2 전략은 지자체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민간과 공공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실현방안을 고려한다. 또한 전략에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재료와 기술의 개발·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3-5-3 과제는 전략별로 제시하며 과제의 중요도와 현실적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고, 중점과제는 우선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한다.

(1) 과제는 사업의 형태로 제시가능하며 실현가능한 내용을 제안한다.

(2) 우선과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다른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거점공간의 마련 또는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관련 법 개정 및 체계 정비 등과 같은 즉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이다.

(3) 중기과제는 중요성은 인정되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여건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추진의 필요성 등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4) 과제는 목표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용과 성격에 따라 세부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 제6절 성과지표와 예산투입 계획

3-6-1 성과지표는 과제별로 작성하며, 계획 수립 이후에 추진되는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다.

3-6-2 과제는 해당 시·도의 담당부서별로 관리토록 하며, 과제추진의 중간단계와 최종단계별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 관리한다.

3-6-3 과제 추진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며, 산정된 사업비는 관련 부서 및 시·군·구의 예산계획 고려하여 결정한다.

3-6-4 소요예산의 추정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확보 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재정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개략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민간의 재원 구분
- (2)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 (3)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

3-6-5 과제에서 제시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비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기존의 유사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정한다.

4) 제4장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정

□ 제1절 계획 수립 과정

4-1-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계획 수립 여건에 맞게 선택·조정 할 수 있다.

4-1-2 (전담연구팀 결정) 광역시·도지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책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건축·도시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4-1-3 (기초조사) 전담연구팀은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근거법인 건축기본법과 상위계획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분석하고, 해당지역의 도시기본계획·경관기본계획 등 건축·도시관련 각종 계획을 검토한다.

4-1-4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광역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시·도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1-5 (지역 건축현황 및 여건 조사) 전담연구팀은 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역의 건축문화·교육·홍보관련 현황, 관련기관·단체 현황 및 관련 산업체계 현황, 지역의 공간환경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지역의 여건을 바탕으로한 미래상을 도출한다.

4-1-5 (지역전문가 TFT 구성) 전담연구팀은 시·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계획수립과정에 상시적으로 의견수렴과 자문이 가능한 건축·도시관련 지역전문가 TFT를 구성·운영한다.

4-1-7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전담연구팀은 지역전문가 TFT와 함께 토론회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건축정책기본계획 내용에 부합하고 지역의 건축·도시관련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4-1-8 (전략 및 과제 선정) 전담연구팀은 지역전문가 TFT와 함께 토론회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를 도출한다.

4-1-9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전담연구팀은 광역시·도의 계획관련 실무담당자 및 시·군·구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현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4-1-10 (예산계획) 광역시·도지사는 과제와 연계되는 중앙부처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시·도의 예산계획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한다.

4-1-11 (시·군·구별 계획내용 의견청취 및 협의) 광역시·도지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실천과제별 해당사항이 있는 시·군·구별 협의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4-1-12 (광역시·도 공청회 개최) 광역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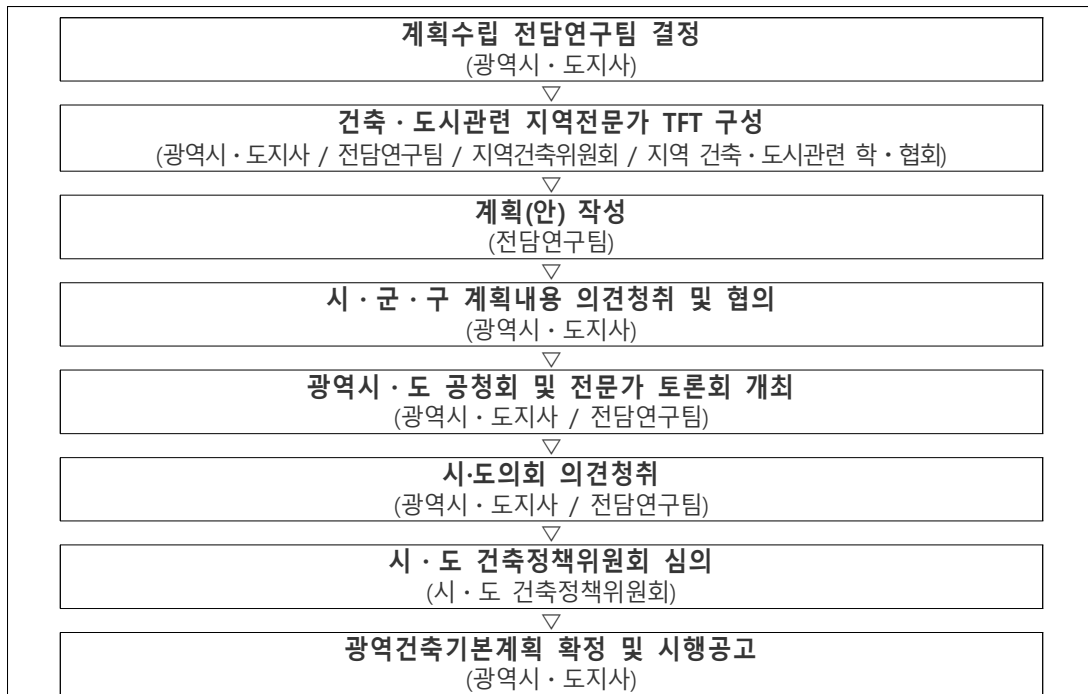
4-1-13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광역시·도지사는 지방의회의 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1-14 (광역건축관련 조례 제·개정 제안) 광역시·도지사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을 검토·제안한다.

4-1-15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광역시·도지사는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의견을 반영한 광역건축기본계획(안)을 시·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1-16 (광역건축기본계획 확정 및 시행공고) 광역시·도지사는 시·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을 보완하여 최종적인 광역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공고한다.

4-1-17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 4-1-3, 4-1-11, 4-1-13 내지 4-1-15에서 제시된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절차 예시]

5) 제5장 지역전문가 TFT 운영 및 시민의견 수렴

□ 제1절 지역전문가 TFT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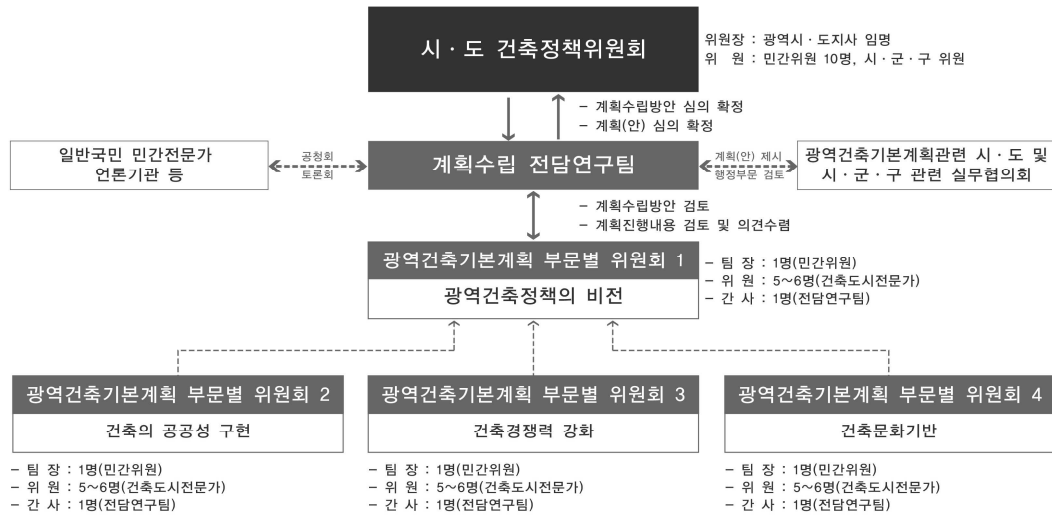
5-1-1 지역전문가 TFT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구성체제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구성한다. 또한 정책비전과 목표설정을 위한 TFT는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5-1-2 계획수립의 효율성과 논의의 효과적 진행을 위하여 계획수립 전담팀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전문가 TFT의 규모와 구성체제, 진행방식 등을 결정한다.

5-1-3 계획수립에 참여할 전문가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갖춘 지역내·외의 건축·도시분야의 전문가들로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건축사, 도시계획가, 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관련 학·협회 종사자 등을 총망라하여 누락되는 분야가 없도록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5-1-4 지역전문가 TFT는 건축정책에 관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계획수립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을 피드백하여 공문화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계획수립 전담팀은 지

역전문가 TFT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계획수립 전담팀 및 지역전문가TF 구성 예]

□ 제2절 시민의견 수렴

5-2-1 지역건축기본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지역전문가 TFT를 포함하는 해당 지역의 건축·도시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5-2-2 전문가 토론회는 개최하기 15일 전에 개최계획을 마련하여 건축·도시관련 학·협회, 학계 교수 및 학생, 관련산업 종사자에게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5-2-3 계획 수립내용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해 교육·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수립하는 지역건축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200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
- 건설교통부(2003), 「제2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충청남도청.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경기도청.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북발전연구원(2012),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전라북도청.
- 건축법, 2015 일부개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013.6.
- 경관법, 2013 전부개정.
- 경남발전연구원(2013),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2013-2017)」, 경상남도청.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14),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2014-2018)」, 경상북도청.
- 관계부처합동(2014),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
- 광주발전연구원(2014), 「광주광역시지역에너지계획」, 광주광역시청.
- 국가자산통계(2009), 통계청, p.13.
- 국무조정실(2006), 「성과지표개발관리매뉴얼」.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국 건축물 총 6,911,288동/34억 5천 1백만㎡”, 2015.1.30일자
- 국토교통부 외(20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외(201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2009), 「제4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
- 국토교통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2~2014)」.
- 국토교통부(2012), 「제5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13~2017)」.

국토교통부(201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2013), 「20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국토교통부(201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호.

국토교통부(2013),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국토교통부(2013),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3), 건축정책(2010-2012) 성과보고서.

국토교통부(2013),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연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70.

국토교통부(2014),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지침.

국토교통부(2014), 간판설치계획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4),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0호.

국토교통부(2014),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2014),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4),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 및 표준규약.

국토교통부(2014), 경관 심의 운영지침.

국토교통부(2014),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4), 우수 건축자산 등록제도

국토교통부(2014),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해제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4),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4), 한옥수선등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2014), 환기구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11), 국내 첫 제로에너지주택 단지 서울 노원구서 착공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8), 올해 「대한민국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탄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9),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작품공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2),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4), 201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 선정

국토연구원(2007),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 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2008),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연구」,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2011), 「국토계획 평가 시행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2013), 「국토계획 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기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내부자료(2015), 「(2014-2019)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

국토해양부(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국토해양부(2012), 2010-2014 건축정책기본계획 성과보고서

김민수, 우신구 외(2012), 「부산건축기본계획」, 부산광역시청.

김상호 외(2008), 「질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도시공간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p.35.

김상호 · 김영현(2009),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성일 외(2007), 「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 국토교통부.

김성일(2005),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계 구축 연구」, 국토연구원.

김순은(2007), 「영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 성과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제2호.

김영현(2014), 「건축정책 변화에 따른 전망」, 대한건축학회지 제59권제1호.

김영현(2014), 네덜란드 제4차 건축정책(2005~200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PU(건축도시정책동향)3월호.

김영현(2014), 덴마크 건축정책(200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PU(건축도시정책동향) 6월호.

김영현(2014),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 BRIEF 6월호.

김종호 외(2010), 「녹색성장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태완 외(2011),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홍순(2002), 「지역개발 부문에 전략계획 방법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제25집제1호, p.7-39.

나태준 · 김성준(2003), 공공조직의 전략기획 체제 구축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화준(2000), 「전략적 관리와 목적달성에 의한 정책평가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38(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012.2.

대구발전연구원(2013),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대구광역시청.

대전발전연구원(2012), 「대전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2013-2017)」, 대전광역시청.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6.

머니투데이, “국유재산950조, 경기·강원크기 ‘440조’ 땅보유”, 2015.9.29. 일자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전략계획(2013~2017)」.

문화체육관광부(2013.9),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작발표

문화체육관광부(2014.11), 「201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발표 및 시상식 개최

박대식 외(200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인석(2008),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실천-요건과 전략」, 건축과 사회 2008여름호, p.35 ~ p.43

박철민 외(2013), 「제주 건축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복지가족부(2010), 「제2차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10-14)」.

산업통상자원부(2014),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2011),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2011),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2013),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 기준.

서울특별시(2014),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2014),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 심의 가이드라인.

세종특별자치시(201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기본계획

안영훈·장은주(2000), 「지방자치단체 변화관리를 위한 전략기획의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태환(1995), 「전략계획적 관점에서 본 한국도시계획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태환(1997), 「도시계획 수립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32권제3호.

안태환(2002), 「전략계획 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제4호.

오준근(201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법의 경과와 행정법적 과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4년 제정.

윤정길, 유무정(2003), 「전략기획을 통한 지방정부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2(3):63-96.

이과섭(2014),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병기, 김건위(2006),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전략계획 구축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용우 외(2009), 「국토대예측 연구(I)」, 국토연구원.

이용우 외(2007),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제11권제2호.

이용우(2007),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이재녕(2001), 「전략계획의 특성에 의한 재건축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인천발전연구원(2013),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인천광역시청.

전남발전연구원(2009), 「전라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전라남도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전북발전연구원(2012),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전라북도청.

정명운(2010),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정영근(2003),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지수화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88차 여성정책포럼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의의와 과제」 :p.12~13.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3),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청.

조상규, 김영현(2012), 「건축정책 성과보고서 작성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상규, 김영현(2013),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 및 분석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

조상규, 김영현(2013), 「국가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건축정책 발전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7),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 연구」, 국토해양부.

한국건설신문(2013.9), “2013건축의 날 성황리개최” .

한국건설신문(2014.10), “범건축 정명원 회장, 건축의 날 훈장 영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농어촌 보건복지 현황 및 정책과제」, p.40.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여성친화지정도시 이행점검 연구 및 컨설팅」,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 「2014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및 사업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2014.6.

한장협외(2012), 「지역녹색성장정책성과과제:대구지역을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제11권제3호.

홍구표(2011),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소개, 건설기술 쌍용, 2011년 가을호.

환경부(2005),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행정자치부 “간판개선시범사업” 홈페이지(http://ipsign.plab.co.kr/productview/productview_2012_01.aspx)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간이역 및 유희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2013문화 디자인프로젝트 사업 7개지역 선정)”, 2013년 4월 4일 배포일자.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간이역, 시외버스터미널 및 유희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2014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6개지역 선정)”, 2014년 4월 18일 배포일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 지정”, 2014년 4월 28일 배포일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공모(국가·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총 20억 원 지원)”, 2014년 2월 6일 배포일자.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indcoop.mju.ac.kr/asp/business/lab_center/center_37.asp)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3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 수상자 선정”, 2013년 9월 30일자, “올해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 탄생”, 2014년 8월 19일자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대표 젊은건축가를 찾습니다.”, 2014년 5월 8일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담당건축사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2014년 9월 29일 배포일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전문가 양성’ 본격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부족한 해외 건설인력 수요 충당-”,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2014. 10. 24일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국 건축물 총 6,911,288동/34억 5천 1백만㎡”, 2015.1.30일자
- Norwegian Architectural Policy: architecture now.
- 2014 Barnes Reports(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Engineering Services Industry,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Industry
- A Nation of Architecture Denmark: Settings For Life and Growth.
- Action Programme on Spatial Planning and Culture Architecture and Belvedere Policy 2005-2008 Summary.
- BrysonJohnM(1991), 「Strategic planning and revitalization of the public service : A Guide to Strengthening and Sustaining Organizational Achievement」, Jessey - Bass Publishers, Sanfrancisco.
- IPCC,기후변화 2007 종합보고서
- Kaufman & Jacobs(1987), 「A Public Planning Perspective on Strategic Planning」, in Strategic Planninged, by John M. Bryson and RonertC. Einsweiler, Planners Press.
- Poister T. H, Streib G(1997), Strategic management: Q cor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s, in J.J. Gargan(ed.) Handbook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New York, Marcel Dekker, Inc, p.101-127.

기타 참고자료

- 강원도청_보도자료, <http://www.provin.gangwon.kr>
- 공감코리아_보도자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List.do>
- 경기도청_보도자료, <http://gnews.gg.go.kr>
- 경남도청_보도자료, <http://www.gsnd.net>
- 경북도청_보도자료, <http://www.gb.go.kr>
- 광주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gwangju.go.kr>
- 대구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daegu.go.kr>
- 대전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daejeon.go.kr>
- 서울특별시청_보도자료, <http://spp.seoul.go.kr>
- 부산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media.busan.go.kr>
-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
- 울산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ulsan.go.kr>
- 인천광역시청_보도자료, <http://www.incheon.go.kr>
- 전남도청_보도자료, <http://www.jeonnam.go.kr>
- 전북도청_보도자료, <http://www.jeonbuk.go.kr>
- 제주도청_보도자료, <http://www.jeju.go.kr>
- 충북도청_보도자료, <http://www.cb21.net>
- 충남도청_보도자료, <http://www.chungnam.net>
- 아우름_보도자료, <http://www.aurum.re.kr>

Strateg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Architectural Policy

Kim, Young Hyun
Cho, Sang Gyu
Lim, Hyun Sung

Architecture policy in Korea has been initiated since the enactment of Architectural Framework Act in 2007. Although the enforcement was relatively late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European ones, the Architectural Framework Act and Basic Architectural Planning brought a number of remarkable facts that caused great impact to our architecture industry over the past 5 years. The legislation related with built environments, such as Support for Green Building Act,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chitectural Property Promotion Act and Urban Restoration Activating & Support Act could contribute more on policies or projects such as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ystem & master planning, founding & managing organization exclusively for support and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Since the local architectural plans in Metropolitan city have been actively established, 14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Gyeonggi, Busan, Jeonbuk, Chungnam have completed or are now in progress of establishing their Basic Architectural Planning.

The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were established out of oblig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Architectural Framework Act, but this had not been implemented systematically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imitations. Therefore, many practicing professionals have many doubts concerning the policy effect which has been perform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and even of the plan itself.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s and the causes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the plan by analyzing the scope and contents of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and results. Furthermore, it suggests the policy improvements and alternativ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This study deeply analyzed the content of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and carried out the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state department & local governments and professionals about the functions, roles, and effectiveness of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for the parts hard to approach by documents.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limitation of the plans and the short of execution power came from ①the contents ②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③the limitation of agents who implement the plan and administration.

There were some problems of the plans' contents themselves. At first, the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has unclear relationship with other plans on other fields which makes it ambiguous. Second, the research was too general and formal to fully comprehend the local issues. Lastly, the plan was also hard to be differentiated due to the shortage of local government's budget. From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viewpoint, there have been repetitions and contradictions among the new legisla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rchitectural Framework Act and reset of the scope of plans. Lastly from the limitation of agents and administration, the point of the plan establishment was uncertain; the personnel who has an exclusive role to perform and manage the plans was not exist; assignments that each personnel has changed too often to carry out their work well-organized; and lack of interdependable cooperation among departments.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is study analyzed some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system operated in other fields' legal plans similar to the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especially established by fundamental law of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Moreover, it made the benchmarking study and deeply

analyzed ; some well-performed plans focusing on the plan performing system between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ir hierarchy,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laws and plan, existence of the department exclusively for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associated with budget secure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study brought up points that can be adopted as the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The study suggests that architectural policy targets and scopes reset and legislation and plans reorganize to secure the effectiveness as the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It also defines the role of new institution and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suggests the assessment system to make stable performance management on architectural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associated legislation.

Based on the study, revision direction of Architectural Framework Act and the guidelines of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are presented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comprehensive planning.

부록1. 지역 건축기본계획 과제관리카드 예시

1) 과제관리카드 개요

기본계획 세부단위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위해 ‘과제관리카드’ 형식으로 해당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에서 작성하고, 총괄부서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단위의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계획수립이 시작된 2010년부터 과제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있었으며, 지자체는 지역마다 성과관리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최근에 계획을 수립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국가단위에서 사용하는 과제관리카드 양식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지역건축기본계획 과제관리카드 예시(세종특별자치시)

□ 작성방법

- 세종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의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참고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실적 작성
 - 과제담당, 사업개요, 성과 및 실적, 예산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세부 단위과제별로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 사업이 완료된 경우 ‘건축정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확인차원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입력

□ 담 당

- 관련 사업 지속화 및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한 주관부서 현재 담당자 및 이전 담당자 이력에 관한 정보 입력

□ 과제현황

- 추진현황 및 추진기간, 추진방법, 과제내용 등 과제의 진행상황과 방향에 대하여 작성
-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 및 내용에 해당하는 분류 항목 선택(추진방법 및 내용별로 중복 선택 가능)

□ 과제성과 및 실적

- 과제 추진 기간동안의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작성
 - 성과 및 실적에 대한 고시 및 보도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법·제도 지침, 계획 및 보고자료 등의 근거자료 작성

□ 예산계획 및 소요예산

- 해당 과제의 착수 및 완료기간에 해당되는 소요예산 작성
- 기 작성된 내용에서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예산과 변경 후 예산을 병기

세종특별자치시 과제관리카드 【예시】

3대목표	목표 1. 행복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	6대 추진전략	전략 1.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18대 실천과제	실천과제 1.1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		
세부과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마련 및 적용		

담 당	①담당부서 (주관)	주관부서 기입			
	②담당부서 (협조)	협조부서 기입			
	③ 현재 담당자	담당과	담당자 명		전화번호(선택)
		000	(주관)	홍길동	
	④ 이전 담당자		(협조)		
		000	(주관)	000	

과제현황	⑤현황	추진현황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계획 추진기간		실제 추진기간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중단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행 <input type="checkbox"/> 료		착수	완료	착수	완료
	⑥과제내용			2017	2018	2016	2017
		• 과제 내용 기술 - 예시) 범죄예방설계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안전마을 형성)					
과제현황	⑦분류	<input type="checkbox"/> 관련 법령 제개정 <input type="checkbox"/> 계획수립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시범)사업지원 및 추진 <input type="/> 연구용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지침 및 기준마련 <input type="checkbox"/> 사업지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시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실행계획	⑧실행계획	사업개요
		<사업목적> • 비예산 사업은 제도·법령·규정 제·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 <사업기간> • 비예산 사업은 제도·법령·규정 제·개정의 착수시기와 최종목표시기를 기술 <사업형태> • 출연, 용역, 기관직접수행 등 <시행주체> • 사업(연구용역기관, 시범사업추진 단체, 시 관련부서 등) 시행주체에 대해 기술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지원근거> • 지원근거(법령·규정, 부처 중장기계획, 공약, 시책 등)를 반드시 명시 <추진경위> • 지금까지의 관련 사업 또는 유사 사업 추진경위 기술
		사업내용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세부사업 구성과 주요내용 기술 • 비예산 사업은 제·개정할 제도·법령·규정의 내용을 기술 • 세부사업별 구체적 내용, 세세부사업 구성 등의 설명자료 별도 첨부(자유 양식)

과제성과 및 실적	⑨성과 및 실적	지난 성과 및 실적		
		• 지난년도 사업 성과 및 실적에 대한 내용 작성		
		사업 추진성과(당해년도)		
		• 당해년도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실적 작성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완료 시점까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 작성		
	⑩근거자료			
	⑪분류	□고시 및 공고	☑연구용역 보고서	□법·제도 지침
		□보도자료	□계획 및 보고자료	□기타 ()

⑫예산 계획 및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작성방법 참고

1. 기 작성된 과란글씨는 ‘제1차 건축정책성과보고서’ 작성시 수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진 내용으로, 면밀히 검토 후, 수정 또는 추가·변경사항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①번 항목은 주관부서를 작성해 주시고, 협조부서가 있는 경우 ②번 항목에 작성해 주십시오.
3. ③번 항목에는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4. ④번 항목은 이전 담당자를 기입하는 란입니다. 관련 및 유사 사업의 담당자 이력을 기록, 보존코자 하니 현 담당자 이전에 관련 과제를 수행했던 담당자의 이력(부서,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입해 주십시오.
5. ⑤번 항목에서는 세부실천과제의 현재 상태를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고, 계획상 추진기간과 실제로 착수·완료된 년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6. ⑥번 항목에서는 세부실천과제의 주요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7. ⑦번은 ⑥번 항목에 대한 분류 표시란으로, ⑥번 항목의 내용에 따라 중복 표기 가능합니다.
8. ⑧번 항목에서는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작성해 주세요.
9. ⑨번 항목에서는 세부 성과 및 실적에 대하여 작성해 주세요.
또한, 기 작성된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수정·변경 또는 추가 할 성과 및 실적에 대하여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⑩번 항목에서는 ⑨번 항목에 대한 근거자료를, 출처, 제목, 일시 등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⑪번 항목은 실제로 근거자료에 대한 분류 표시란으로 근거자료별로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12. ⑫번 항목은 세부단위과제의 예산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연차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2. 지역별 건축기본계획 개요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은 평가모델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닌 추후 파생될 하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의 개념계획이다.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등 공공 부문에 초점을 두고 각 단위사업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최초의 광역건축기본계획
- (계획의 범위) 단기 : 2011~2015년(5년), 장기 : 2015~2024년(10년)
- (구성 및 내용)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건축문화’를 비전으로 3개 목표, 6개의 추진전략, 15개의 실천과제 도출

[부록_표13]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실천과제

VISION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건축문화		
목 표	전 략	실 천 과 제
활기찬 문화도시	1. 건축문화 지역 특성화	1) 장소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 2) 한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3) 근대 건축문화자산의 보전 및 활용 4) 초고층 건축물 건립방향
	2. 건축문화 기반구축	5) 건축문화 전담기관 설립 및 교육·홍보 강화 6) 우수건축인 발굴·육성·지원
지속가능한 푸른 도시	3. 녹색 건축·도시환경 기반구축	7)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 8) 건축물 에너지 관리 체계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9) 건축물의 생애관리 10)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균형있는 입체도시 서울	5. 건축·도시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11)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계획간 연계시스템 강화 12) 건축·도시 관리 수단 선진화 13) 공공건축물 기획·발주 체계 개편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14) 주거환경지수 개발 및 적용 15)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서울, 대전, 인천광역시 등 광역시와는 다르게 경기도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31개 시·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성격 모두를 지니고 있다.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은 타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차별적으로 5년 내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전략과제 6개를 선별하여 구체적인 예산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였고, 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담 관리 부서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전국 최다 인구 거주지역이며, 31개 시·군이 도시 및 농어촌, 도농융합 등 다양한 구조로 대한민국의 축소판 성격을 지님
- (계획의 범위) 2011~2016년
- (구성 및 내용)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를 비전으로 3개 목표,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 6개 핵심전략과제로 구성

[부록_표14]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실천과제

VISION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		
목 표	전 략	실 천 과 제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1. 생활공간의 품격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권 커뮤니티 공간 조성 2)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2. 효율적인 디자인품질 관리체계 구축	3)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 경기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법·제도 개선 5)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관리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3. 녹색건축 도시 관련 기준 정비	6)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지침 마련 7)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유도방안 마련
	4. 녹색 도시환경 조성기반 마련	8) 녹색 정주공간의 인식 확산 및 발전기반 강화 9) 지속가능한 건축·도시 구현을 위한 기술 활성화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	5.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10) 다양한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기준 마련 11) 건축문화 창조역량 강화
	6.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12) 건축자산 DB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13) 문화공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핵심전략과제	-	1) 경기도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사업 2) 경기도 신개발사업지 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3) 특별관리대상지역의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4) 경기도 지역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용 5) 경기도 지역명소화 시범사업 6) 건축문화, 녹색건축 및 도시환경 교육사업

□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은 농촌과 도시가 혼합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한 시책과 도시지역을 고려한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한옥 등 전통적인 건축문화자산이 풍부한 이점을 살려 건축문화의 보존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부문에 중점을 두어 계획
- (계획의 범위) 2012~2017년
- (구성 및 내용) ‘전통과 미래,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전략, 12개 실천과제 수립

[부록_표15]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실천과제

VISION 전통과 미래,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 전라북도		
목 표	전 략	실 천 과 제
고유한 건축문화 창조	1. 건축문화 자산 활용	1) 지역건축 자산 특성화 2) 건축자산 정보 구축
	2. 건축문화 가치 향상	3) 신개발지 이미지 특화 4) 건축문화 향유기회 확대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3. 도시공간 경쟁력 제고	5) 아름다운 건축물 활성화 6) 거점형 도시공간 창출
	4. 농어촌 생활공간 재창조	7) 농어촌 정주공간 개선 8) 농어촌 유희공간 활용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구현	5. 친환경 건축·도시 기반 강화	9) 탄소저감형 녹색건축 조성 10) 녹색건축 역량강화
	6. 건축·도시·조경 효율적 관리	11) 건축·도시·조경 관리 시스템 개선 12) 건축물 생애관리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은 특히,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 대해 상호 연계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과제가 많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경관, 디자인,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건축·도시 관련 시책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타 지역건축기본계획보다 새롭고 다양한 사업계획 포함
- (계획의 범위) 2011~2015년
- (구성 및 내용) ‘시민의 건축, 품격있는 부산’을 비전으로 3대 목표, 9대 전략, 44개 정책과제 수립

[부록_표16] 부산시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실천과제

VISION 시민의 건축, 품격있는 부산		
목 표	전 략	정 책 과 제
생활경관도시 산과 바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부산건축 실천	1. 일상공간의 생활 편의적 공공성 개선	1)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2) 도시 보행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자전거 운행성 개선 3) 약자와 소수에게 친근한 건축과 도시공간 4) 생활환경 Clean&Green 프로젝트 5) 동네골목가꾸기 프로젝트
	2. 자연과 지역성을 배려한 매력적 도시경관	6) 자연지형 및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시형태 관리 7) 도시인프라를 포함 공간환경 전반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8) 입지별 디자인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경관특성 강화 9) 도시색채조절과 품격 있는 야간경관 관리
	3. 미래 세대와 함께 할 지역 건축자산의 보전과 창출	10) 역사문화적 건축물/장소보존 및 지원 11) 달동네, 재래시장 등 생활 문화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12) 근대문화특화구역지정 및 명소화
녹색정주도시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기반 강화	4.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정주환경 조성	13)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자력수복형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14)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정주성/경관성 개선사업 15) 빈집 재고 활용을 위한 드림 홈 트러스트 16)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 17) 부산다운 전통스타일·전통 공간 형성 방안
	5. 지역밀착의 지속가능한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	18) 도심부발전계획 :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19) 커뮤니티 뉴딜정책 수립 20) 도시건축 방재성 제고를 통한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 21) 지속가능 리모델링 활성화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친환경 녹색 리모델링 활성화 22) 부산형 도시재생시범사업 : (가칭) “부산형 행복타운” 계획 및 실 행 23)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구축
	6. 녹색건축에 기반한 생태적 도시성장	24) 자원순환형 녹색입체 도시 25)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관리시스템 융복합 26) 부산시 맞춤형 친환경 건축물 구축 27) 부산 녹색건축센터 설립 28) 선샤이닝(sun-shining) 부산 프로젝트 29) 수변형 녹색도시 시범사업
건축문화도시 창의적 건축문화 육성과 건축서비스의 선진화	7. 통합적 협치의 도시건축 행정시스템	30) 위원회 및 심의 제도 개선 31) 부산건축디자인기준 수립 32) 도시건축 거버넌스 체계구축
	8. 문화시스템으로서의 도시건축	33) 부산건축의 비전 공유와 확산 34) 참여형 건축문화기반 강화 35) 부산도시건축재단의 추진 36) 도시건축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37) 우수건축 및 건축가의 지원, 홍보 및 위상 강화 38) 건축문화 제고를 위한 시민건축상 39) 도시건축아카데미 운영
	9.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건축산업 시스템	40) 지속가능한 지역 건설산업을 위한 지원 41) 지식설계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42) 지식산업/문화산업으로서의 부산형 건축 콘텐츠 개발 43) 건축전문가의 역할/책임/영역 확대 지원 44) 부산 ‘영화의 전당’ 의 건축·장소마케팅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은 대전시의 각 실·국별 건축 및 도시 관련정책과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위상이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기존 건축·도시 관련 계획들이 주로 물리적 공간 계획에 국한되어 있는데 반해, 본 계획은 건축의 생활 공간적 공공성 구현,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 연구과제,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정책과 사업 발굴 등을 통한 통합적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상위법으로 차별성을 부여한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대전시 건축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대상으로 구체적 건축정책 기본방향과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함
- (계획의 범위) 2013~2017년
- (구성 및 내용) ‘창조적 녹색건축 문화 공동체, 대전’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수립

[부록_표17] 대전시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실천과제

VISION 창조적 녹색건축 문화 공동체, 대전		
목 표	전 략	실 천 과 제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명품 디자인 도시	1. 생활문화경관 중심의 도시디자인 구현	1) 건축디자인기준 및 관련 디자인 정책지표 개발 2) 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의 생활문화공간 거점화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활성화 유도
	2. 품격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	1)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체계 구축 2) 민관 협력 방식의 도시주거 정비 및 관리모델 개발 3) 지역밀착형 주거유형 모델 개발 및 공급방식 다변화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 도시	3. 녹색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1) 녹색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계획 체계 정비 2) 녹색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정비 사업 추진 3) 녹색건축교육 프로그램 강화
	4. 생애주기를 고려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리체계 구축	1) 건축물 및 공간환경 유지관리 관련법·제도 정비 2) 지속가능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한 모델개발 3) 건축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건축문화 도시	5. 역사적인 건축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체계 구축	1) 건축문화 육성을 위한 전담 추진체 정비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역사문화 상징지구 조성 3) 건축문화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6. 창의적 건축문화 환경 조성 위한 건축행정체계 개선	1) 건축디자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 2) 선진적인 건축행정 지원체계 확립 3) 통합적인 공간환경 디자인 체계 구축

□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배려하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외 국가차원 건축정책과 지역차원 건축정책들의 사례를 보다 자세히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건축기본법의 건축정책기본계획 내용 및 경상남도 건축정책 및 문화진흥조례 제5조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타 지자체 건축기본계획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각종 재난에 대비한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유지하기 위한 방안 고려
- (계획의 범위) 1차 5개년 계획 : 2013~2017년 (건축·도시 관련 기반구축), 2차 5개년 계획 : 2018~2022년 (민간 파급·확산기), 3차 5개년 계획 : 2023~2027년 (대한민국의 선도적 건축·도시 환경 구축), 4차 5개년 계획 : 2028~2032년 (건축·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구성 및 내용)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녹색 경남건축’ 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수립

[부록_표18]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실천과제

VISION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고품격 녹색 경남건축		
목 표	전 략	실 천 과 제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1. 건축·도시디자인 향상	1)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2)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2. 건축·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1)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2) 협치의 건축·도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친환경 녹색경남 구현	3. 친환경 건축·도시 구현	1) 저탄소 녹색건축·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2) 저탄소 녹색건축 설계·기술 활성화 및 보급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1) 노후건축물 녹색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2) 건축물 생애관리 토대 구축
정체성 있는 건축문화 창조	5. 지역성을 살린 건축문화 창조	1) 경상남도 건축문화유산DB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2) 경상남도 건축지리지 구축과 건축문화유산 보전·활용 3) 경상남도 우수건축 및 공간환경 창출과 활용
	6. 건축문화 창조 기반 구축	1) 창의적 건축문화 활성화 및 교육·홍보 강화 2) 지역기반의 건축문화 창조역량 제고 3) 건축·도시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구축

□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사업추진시점은 상반기(2013~2014), 중반기(2015~2017), 하반기(2018년~)로 구분되며, 사업기간은 단기(2013~2014), 중단기(2013~2017), 중기(2015~2017), 상반기 지속(2013년~), 중반기 지속(2015년~)으로 나뉜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국가 건축문화 아젠다 발굴, 대구 여건을 고려한 건축문화진흥사업 제안, 대구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적 건축·도시사업 제안, 건축을 통한 대구경제성장 방향 모색,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도시정책 수립의 기반 구축
- (계획의 범위) 2013~2017년
- (구성 및 내용) ‘문화중흥지, 시민의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와 48개 세부과제로 구성, 건축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선도과제로서 6대 핵심전략 사업 제안

[부록_표19] 대구시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실천과제

VISION 문화중흥지, 시민의 도시 대구 -건축도시문화의 부흥 거점,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		
목 표	전 략	실 천 과 제
즐거운 문화도시 -대구 건축문화의 저변화-	1. 대구 건축의 전통성 확립	1.1 건축문화기반 확충 1.2 전통공간의 보존 및 활용
	2. 시민 건축문화 확산	2.1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마을만들기 운동 촉진 2.2 시민참여제 확산 2.3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주거지 조성
준비된 미래도시 -대구의 지속성장 기반 확보-	3. 일류 녹색도시 조성	3.1 대구 녹색스탠다드 확립 3.2 녹색도시환경 조성 시범사업 추진
	4. 미래 건축·도시기술 구현	4.1 유비쿼터스 시범지구 조성 4.2 공간정보활용 극대화 도모 4.3 건축물 생애관리체계 도입
꿈이 있는 창조도시 -대구에서의 창의적 건축활동 촉진-	5. 창의활동 기반 마련	5.1 이전후적지 랜드마크 개발 5.2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특성화 촉진
	6. 건축산업부흥 촉진	6.1 건강한 건축산업 육성기반 마련 6.2 대구건축 우수 품질인증 확산

□ 제주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의 단기과제로는 단기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로서 중점과제와 지원과제를 위주로 하고, 지속적으로 실행 성과가 도출되는 미래 잠재력이 큰 과제들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였다.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으로 해안변과 중산간지역에 대한 개발관리 방안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범사업 등을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타 지자체와 달리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조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구성
- (계획의 범위) 단기 : 2013~2018년, 중기 : 2018~2023년, 장기 : 2023~2033년
- (구성 및 내용) '전문가와 함께하는 품격도시 제주' 을 비전으로 3대 목표, 15개 중점과제, 4개 지원과제, 2개 중·장기과제 수립

[부록_표20] 제주시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과제

VISION 전문가와 함께하는 품격도시 제주			
목 표	중 점 과 제	지원과제	중·장기과제
건축·도시 공간의 품격 향상	1. 제주건축의 특성화를 통한 국제화 기반 구축 2.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공간 확대 3. 건축·도시 생활환경 개선 4. 노후·불량건축물 성능 개선 5.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6. 도서지역 특성화를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1) 건축물의 품질관리방안 수립	1) 해안변 및 중산간지역의 개발 관리방안 마련 2) 해안변 및 중산간지역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시행
친환경 건축·도시 조성	7. 친환경건축물 활성화 대책 수립 8. 건축물 녹화공간 조성의 활성화 9. 주거지 담장정비사업 추진 10. 친환경건축자재의 생산 지원 및 적용 활성화	2) 건축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방안의 개선 3) 건축·도시 관련 조직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11. 건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12.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13. 건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4. 제주건축문화축제의 활성화 및 국제건축비엔날레 개최 15. 제주건축지원센터 및 건축박물관 설립	4) 건축 관련 로컬 거버넌스시스템 구축	

□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은 인천의 건축물과 공간 환경에 대한 주요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서 및 군·구별 건축·도시 관련 추진사업 등을 건축적 관점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건축디자인시범사업 전개, 민간전문가의 참여유도 등을 통한 건축디자인 품격 향상 및 그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건축·도시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은 건축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과제별 성격에 따라 단·중·장기로 구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한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가장 최근에 완료된 계획으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재해·재난 등 안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의 실천과제 도출
- (계획의 범위) 단기 : 2011~2015년, 중기 : 2016~2020년, 장기 : 2021~2030년
- (구성 및 내용)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 아름다운 인천' 을 비전으로 3대 목표, 9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수립

[부록_표21]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실천과제

VISION 함께 만드는 건축문화, 아름다운 인천		
목 표	전 략	실 천 과 제
지역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인천	1. 원도심 정주환경 재창조	1)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노후주거지 생활권 정비 2)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 기반구축
	2.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구현	1) 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대표 공간환경 조성 2) 공공디자인을 통한 가로환경 개선
	3. 지역별 정체성 확립	1) 인구·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유형 개발 2) 유형별 공간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건축을 선도하는 인천	4. 녹색건축 기반조성	1)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한 종합 지원 2) 녹색공간 조성을 통한 그린네트워크 확충
	5. 안전한 공간환경 조성	1) 교통약자를 배려한 공간환경 조성 2) 재난재해에 대비한 공간환경 조성
	6. 지역 건설산업 자생력 확보	1)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구축 2) 건축서비스산업육성을 통한 선순환체계구축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인천	7. 역사·문화 자원 보전 및 활용	1)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관광명소화 2) 장소유산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8. 건축문화 기반조성	1) 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인천 건축문화제 활성화 2) 건축 아카이브 구축
	9. 건축교육 저변확대	1) 기초건축교육 활성화 2) 공무원 및 건축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은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과제 시급성, 파급성, 현실성을 고려하여 도민친화적 생활건축사업, 경상북도형 알뜰 지역재생사업, 건축문화유산 거리조성사업,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전시관 마련,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건축도시디자인 통합관리조직 운영의 6대 핵심전략사업을 선정하였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도민이 공감하고 정체성을 담은 경북다운 건축문화 정착과 농어민에게 도움되고 서민 친화적인 건축정책 수립에 초점을 두어 진행
- (계획의 범위) 2014-2018년
- (구성 및 내용) ‘경상북도 고유의 아름답고 건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3개 부문별 목표와 12개 전략, 35개 정책과제 수립

[부록_표22]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세부과제

VISION 경상북도 고유의 아름답고 건전한 건축환경 조성		
목 표	전 략	정 책 과 제
미래지향적인 건축산업 육성	1. 첨단 기술과 융합된 미래성장형 건축산업 발굴	1.1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사업 1.2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및 그린리모델링 건축산업 1.3 U-CITY 미래성장형 융복합 건축산업
	2.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축사업 개발	2.1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순차적 개발체계 구축 2.2 민·관협력형 건축사업 실행방안 연구 2.3 지역의 여건 및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개발
	3. 경쟁력 있는 지역 건축산업의 특성화	3.1 지역 건축산업의 활성화 방안 3.2 지역 건축·도시 전문가의 역할 강화 3.3 지역 특성화의 중장기 전략
	4. 한옥, 근대건축물 등 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	4.1 경상북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계획 4.2 지역 건축문화유산의 유지관리 계획 4.3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문화유산의 활용
우수한 건축인력양성 및 사회참여	5. 건축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5.1 우수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5.2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 5.3 지역 내 건축전문가의 역량 강화
	6. 민간 건축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방안 마련	6.1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활용 체계 구축 6.2 경상북도 건축지원센터(안) 설립 6.3 지역 내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영역확대 지원
	7. 건축문화 관련 자료구축 및 보관	7.1 건축역사문화자산 DB 구축 7.2 근현대 건축물 자료의 종합적 DB 구축 7.3 건축문화자산 자료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방안 수립
	8. 건축문화의 사회적 확산	8.1 복합적인 건축디자인 전시관 구축 및 운영 8.2 콘텐츠 중심의 지역건축문화 체계화 및 전파 8.3 건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VISION 경상북도 고유의 아름답고 건전한 건축환경 조성		
목 표	전 략	정 책 과 제
효율적인 건축제도 마련	9. 도시경관을 통합한 건축디자인 관리방안	9.1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9.2 경상북도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및 활용 9.3 경상북도 건축·도시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10. 민·관 협력 사안리 및 지원방안	10.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 10.2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익형 민관협력 사업 모델 개발 및 적용
	11. 주민참여기구의 설립 및 운영 지원방안	11.1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 11.2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11.3 주민참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12.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12.1 도시·건축 관련 심의제도 개선 및 투명심사제 12.2 공공건축 발주제도 개선 12.3 공공건축 관리체계 개선

□ 충청남도 건축관련 기본계획

충청남도 건축 관련 기본계획은 제1차 건축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하는 과제는 단기 과제(2014~2019), 제2차 건축기본계획은 중기과제(2020~2024), 제3차 건축기본계획(2024~2029)은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단계별 수립목표를 정립하였다.

추진전략별 시급성을 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로 충남 행복가꿈센터 설립 및 운영,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충남 공공건축 지원센터 운영,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건축투어프로그램 개발,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재생방안 마련, 지역 맞춤형 녹색건축 기준 마련, 건축교육 기반구축 및 참여기회 확대 등을 6대 핵심전략과제로 선정하였다.

- (계획의 성격 및 특징) 도시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도 건축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광역건축기본계획’ 과 전국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수립되는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이 통합된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2015-2019년
- (구성 및 내용) ‘충남다움, 어울림의 건축문화 창조’ 를 비전으로 3개의 목표, 8개 추진전략 및 19개 실천과제 도출

[부록_표24]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실천과제

VISION 충남다움, 어울림의 건축문화 창조			
	목 표	전 략	실 천 과 제
충청남도 건축기본 계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1.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1.1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1.2 주민 주도에 의한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 조성 1.3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축·도시 공간 조성
		2. 도시와 농촌의 어울림 이 있는 경관 창출	2.1 다양성을 살린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기반 마련 2.2 지역성과 역사성이 어우러진 농어촌경관 관리방안 마련
		3.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품격 있는 공공건 축·공간 조성	3.1 지역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향상 3.2 사람 중심의 쾌적한 공공공간 디자인 확보
	일상이 필요로운 건축문화 실현	4. 충청남도 건축문화자산 의 잠재가치 발굴과 건 축 정체성 발현	4.1. 역사적 건축물의 가치발굴과 관리를 통한 풍부한 건축 자산 기틀마련 4.2. 도민과 소통하는 근대건축자산 활용전략 마련 4.3 한옥의 가치 보전과 현대적 활용을 통한 한옥경쟁력 강화
		5. 도민의 체험과 참여가 중심이 되는 건축문화 기반 조성	5.1 창의력과 혁신, 재생이 이루어지는 충남건축유산 활용 5.2 일상에서 체감하는 우수건축·공간환경 발굴 및 육성 5.3 시민과 전문가가 어우러지는 건축교육과 공감하는 건축 문화 형성
충청남도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친환경도시 구현	1. 충청남도 에너지사용 특성에 따른 녹색건축 기준 마련	1.1 충남형 탄소제로 녹색건축 디자인 강화 1.2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저탄소 유지관리 방안 마련
		2.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 는 친환경 녹색 마을	2.1 충청남도가 선도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2.2 노후건축물의 냉난방비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
		3. 친환경 녹색마을 조성 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도민 공감대 형성	3.1 전문지식의 공유와 습득을 통한 충청남도 녹색건축산업 육성 3.2 녹색건축물 조성방안 및 효과 홍보로 녹색건축 인식 확산

부록3. 관계실무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역건축기본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설문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실행, 성과관리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행정적 한계와 문제원인을 파악하고 계획의 실효성에 관한 의견을 묻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은 제2차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비밀은 보장되오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06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회신기한 : 2015년 06월 00일 까지

회신방법 : 설문지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전송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담당자 : 김영현 부연구위원

연락처 : 010-6254-3320

이메일 : yhkim@auri.re.kr

1. 계획의 위상

[문1-1] 다음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포함하는 지역단위의 법정 계획들입니다. 이들 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은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경관정책기본계획, 도시지생전략계획 등

[문2-3]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소 반영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비교적 반영하였다	매우 반영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2-4]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세부실천과제가 실행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다소 구체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비교적 구체적이다	매우 구체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6]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획수립절차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순위별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 _____ > 2순위 _____ > 3순위 _____)

- ① 전문가 자문 또는 인식조사 (자문회의, 워크숍) () ② 지역 주민 설문조사 ()
 ③ 관련 실·국별, 시·군별 관계자 의견수렴 () ④ 주민 공청회 ()
 ⑤ 도의회 또는 시의회 의견청취 () ⑥ 건축위원회 사전자문 ()
 ⑦ 도지사 또는 시장 보고 ()

[문2-5]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 및 항목별 중요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항목	중요도				
	매우 낮다 ①	낮다 ②	보통 ③	높다 ④	매우 높다 ⑤
1. 지리적 현황					
2. 인구구조 및 인구 특성, 규모, 분포 등 인구현황					
3. 주택 수, 주택유형별 분포, 주택노후도 등 정주환경					
4. 건축물 및 공간 환경					
5. 도시구조 및 경관					
6. 건축문화자산관련					
7.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8. 지역별 도시계획현황					
9. 건축·도시 관련 교육·산업 현황					
10. 국내·외 정책 관련 사례조사					

3.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문3-1] 지역건축기본계획이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없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다소 효과적이다.	매우 영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계획실행체계 () | ② 계획내용의 위계 () |
| ③ 계획수립방식 및 절차 () | ④ 현황 및 여건변화 조사 등 기초조사 항목 () |
| ⑤ 성과관리체계 () | ⑥ 전담지원조직 () |
| ⑦ 예산주체 () | ⑧ 기타 () |

[문3-3] 현재 시행중인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이행정도를 볼 때,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어느정도 있다	매우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3-4]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	있다
①	②

[문3-4-1] (②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면 다음 중 가장 합리적인 평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실천 과제의 이행 여부 점검
- ② 성과지표 등을 통한 실천 과제의 달성 정도 및 수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
- ③ 전문가에 의한 이행 성과의 정성적 평가
- ④ 주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의 만족도 평가

[문3-5]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 성과지표, 목표달성 검증방법 필요 등

1) [문3-6]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저해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가능)

- ① 계획수립기간의 부족 ()
- ② 계획실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한계 ()
- ③ 계획수립 시 사업내용 및 구체성 부족 ()
- ④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건축정책 ()
- ⑤ 지역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부족 ()
- ⑥ 건축관련 계획들 간의 연계성 부족 ()
- ⑦ 전담부서 및 집행 조직 구성의 한계 ()
- ⑧ 계획실행 담당자(부서)의 전문성 부족 ()
- ⑨ 타부서간 업무 협조의 어려움 ()
- ⑩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방안의 부재 ()
- ⑪ 사업예산의 부족 ()
- ⑫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기타의견〉

■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자유기술)

■ 응답자 기본사항

성함		연령/경력	만 ()세 / 만 ()년
소속		직책	
전공분야	건축 □ 도시 □ 조경 □ 행정 □ 기타 □ ()		
지역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 전라북도 □ 대전특별시 □ 경상남도 □ 대구광역시 □ 제주도 □ 인천광역시 □ 경상북도 □ 강원도 □ 충청남도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전라남도 □ 충청북도 □		

부록4. 전문가 자문의견

[부록_표47] 설문조사 서술식 답변

구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건축정책 관련전문가	강** 1. 성과측정을 위한 적정지표 설정 및 합리적인 달성도 측정방법 (달성도는 정량적·정성적 방법의 복합 필요) 2. 계획의 충실도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건언책 마련(인센티브 등) 3. 다른 법정계획들 상호간의 역할 위상 등에 대한 정리 필요(너무 많은 법정 계획, 부문별 분절성의 심화 등으로 계획의 통합성, 실천력의 저하, 중복 및 상충의 모호함으로 인한 위상의 모호함 등으로 인한 역기능 및 해소방안 필요)	1. 지역단위에서 통합된 집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구축 (건축기본계획만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실천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중앙정부 자원사업과의 연계 등) 2. 지역단위의 종합적계획수립 및 실행체계 구축(다른 법정 계획들과의 역할분담, 위상 및 실천목표의 차별적 구성 등)
	권제 1. 이행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가이드리인	1. 예산확보 및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2. 현장공무원들의 비협조 3. 지역에서 필요한 니즈(Needs) 파악하고 적합한 사업추진
	권** 1. 연도별 성과지표 설정	1. 지방의회의 협조 및 예산확보 2. 관련부서간 협조 (도시, 주택, 건축, 문화)
	권** 1. 실천과제의 이행여부 평가방법	1.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본계획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김** 1. 전담조직의 유무 2. 관련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3. 시군과의 협력	1. 광역계획의 경우 정책적 큰 틀만 제시, 각 시군단위의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무관심 2. 전문적인 전담조직과 인력 필요 3. 도시계획 관련 제도와의 관계성 연구
	김** 1. 성과지표에 의한 정량적 방법과 전문가에 의한 정성적 방법의 적절한 사용 2. 객관적 성과지표 마련(성과지표에는 건축물 공간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 설문조사 포함)	1. 공무원, 주민 등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정책 실행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취지, 정책적 의도, 국내외 사례를 통한 홍보 등 인식전환)
	김** 1. 관련 부서 책임자의 인식과 의지	1. 도시건축직의 전문성 보완과 함께 도시건축 분야의

구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상에 대한 재인식 필요 2. 단체장 유관부서 등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과 책임의지
김**	1. 검증방법을 통한 성과지표 관리	1.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및 토목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한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이해력 보완
나**	1. 합리적인 목표설정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 부여 유무를 성과관리측면에서 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 건축계획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방법 필요 2. 지역별 지역건축계획에 대한 로드맵 작성 3.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탈티 부여방안 마련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계적인 성과지표 설정 2. 주기적인 검증방법 및 개선방안 모색 	-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실가능성 있는 목표에 따른 이행여부 체크 2. 실행가능한 계획의 정밀한 예산과 기획 필요 3. 지역주민의 실질적 필요와 전문가들의 식견에 의한 전체적 상황의 적절한 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에서 필요한 니즈(Needs)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수립 2. 단기, 중기, 장기 플랜에 따라 기본계획의 아젠다를 구분 진행 3. 지역 건축 및 도시 등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의 실질적 발굴 필요
박**	1. 계획의 충실한 이행평가를 위한 피드백 과정 필요	-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이 현실에 잘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2. 현실과 다르게 계획된 경우 수정 보완 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장기적인 로드맵 작성 필요 2.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조사를 통해 현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계획의 수립 3. 좋은 계획도 실행과정에 현실과 동떨어진 잘못된 예측이 있을 수 있기에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
박**	1. 단순한 사업원료건수로 관리되거나 예산투입의 정도로 평가되는 현재의 성과관리방식에서 공간환경의 구체적 개선정도를 상대평가 하는 방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구체적 위계와 위상에 대한 지자체의 합의와 관련 계획간의 상호연계성 확보 필요 2. 지자체장 및 공무원들의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필요 3.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 여타 사업이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시급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 매우 미비하므로 실행을 위한 기본(조직, 예산, 권한)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표나 평가 방법에 대한 실행주체와의 지속적인 합의하에 설득력 있는 지표와 평가방법 도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기 지역건축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예상 2. 계획 실행조직에 충분한 예산과 권한 부여 3. 타부서(사업부서)와의 협업 체계 혹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 강구
배**	1. 성과지표의 단순명확화 및 체계적 평가방법론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 경관계획 등과 위계/위상 정립 시급 2.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마련 3. 관련 사업의 구체화, 예산 추진조직 마련방안 검토
변**	1. 성과지표	1. 공공건축물 발주방식의 개선

구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2. 광역지자체(특히 도) 조직에서 건축관련부서의 위상 강화 3. 유사한 법 및 관련 기본계획의 통합 4. 지역건축기본계획에 담겨진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직(지역건축지원센터 등)과 예산지원 필요
송**	1.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도있는 관리 시스템 필요	-
신**	1. 과제 선정 및 달성을 통한 수요자 그룹 2. 진행측 의 만족도 평가 (집행기관 주민 등)	-
안**	-	-
안**	-	-
윤**	1. 계획내용의 구체성 2. 계획내용의 집중성	-
이**	1. 검증방법 필요	-
이**	1. 투입예산 대비 실현기회의 평가 2. 사용자 만족도 평가	1. 행정협약체제 의한 협력적 계획 실현의 제도적 뒷받침 확보 2. 시민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 3. 지역주민(이해관계자)의 계획수립 참여 유도
이**	1. 계획수립이후 실천과제가 지자체 사업으로 실현되는지 여부 확인	-
이**	1. 성과지표/성과지표 검증방법/성과검증기관 2. 성과달성기준	1.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진의 전문성 강화 및 건축 관련 다양한 인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실행력을 가진 사업 위주의 과제 구성 3. 성과관리체계 구축 4. 담당부서의 전문성 강화 및 담당공무원 의식 개선
이**	1.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황지표 개발	1. 실행을 담보하는 지역건축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과제 발굴 시스템 구축 2. 지역 전문가 육성 시스템 및 전담 지원 기관 설립 필요 3. 법정 계획기간과 지자체 선출직 임기와의 부조화로 인한 실천담보의 어려움 해소
이**	-	-
이**	-	-
임**	-	-
전**	-	-
조**	-	1. 주민제안, 주민 공모, 문화행사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등의홍보 활동 강화
최**	1. 정량적 평가를 벗어난 질적 목표 달성 관리체계 및 방법 마련	1. 타 관련법률과 건축기본법 간의 관계 및 해당계획간 내용 중복에 대한 정리 2.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관련사업 추진방안 마련

구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최**	1. 의무적 성과확인 보다는 전략과 사업의 실현가능 성과 노력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추**	1. 정책반영 및 사업추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 또는 조직 필요	1. 인력 및 예산 확충/건축 관련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해당분야 전문 인력 확보 2. 지역건축 관련 분야의 데이터 축적 3. 지역 특성과 수요,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발굴(정책 제도, 행정사항 등 포함) 4. 지역 내 전문기관 또는 전담기구 구축 5. 지역 내 협업체계(관련부서, 관련기관 등) 강화
홍**	1.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발굴과 객관적 검증방법 수립	-
강**	1.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부여(산전사제 탐방기획 교육혜택 부여)	1. 지역건축기본계획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계획 필요 2.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수행하는 기관은 수도권에 집중 3.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부족
강**	1. 객관적 성과지표 도출방법	1. 예산부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설득력 있는 지역건축기본계획서 작성
김**	-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위상에 대한 고민 필요
김**	1. 실행계획 대비 실행율 2. 소요예산 대비 예산확보율	1.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부족 2.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현황조사와 정 부처원에서 정확한 현황조사를 위한 지원(세부 분야별 다양한 설문조사, 현황조사, 전문가의 연구수행 매년 중앙부처 주관으로 전국적인(지역별) 건축에 따른 통계조사 필요) 3. 지역 건축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및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
김**	1. 성과관리체계 지표 2. 지자체장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	1. 지역건축기본계획은 비예산으로 실행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많은 실천과제를 양산하는 것보다 중요함 2. 지역단위에 적합한 범위의 계획 수립
김**	1. 목표달성은 사업에 대한 집행액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존 성과관리체계의 불합치 2. 각종 공모사업 신청 및 정책의 방향 제시 필요	1. 주민의 의견이 반영 2.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보다 사업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요
김**	1. 성과지표	-
김**	1. 미래지향적 목표의 선정 및 달성 여부	1.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2.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 수립
김**	1. 목표설정의 적정성 및 객관적 검증방법	1. 열악한 재정재정만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우므로 지역별 특성화 계획에도 국비 등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김**	1. 목표달성 검증방법 모색	1. 예산 및 전문 조직 등 계획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구분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관리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2. 계획 실행을 위한 제도적인 강제 규정 마련
문**	1. 목표달성 검증방법 필요	-
박**	1. 계획 대비 목표달성 결과물 2. 과제별 투자액 대비 예산반영 정도 3. 세부 실행계획 마련 여부 등	1.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필요 2.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3. 가시적 성과 도출 및 관계전문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실질적 사업 중심으로 단기 과제 선정
박**	1. 과제의 진행과정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1. 구속력이 있는 도시 건축 주택 등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 실질적인 연계 수단을 확보함 2. 타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특성 반영
왕**	1.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2. 조직의 위계와 비전 3. 세부적 실행계획 실천	-
류**	1. 시행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 2. 주기적(월 분기)으로 목표달성도 평가 3.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과제 시행을 시도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인력) 필요	1. 자치단체장 및 조직 관리자들에게 실행의지 관심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장단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일반적 인 과제와 지역특성에 꼭 필요한 과제로 구분 3.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행과제는 과제수를 최소화 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
정**	1. 실천과제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 개발	1.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필요 2.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필요 (건축진흥특별회계 등)
정**	1. 실천 가능성과 성과목표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 (세 부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등)	1. 최근 제정된 건축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계획 증가로 지자체의 부담 가중(계획 수립비용 및 차별화의 한계)
조**	1. 실천 과제의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을 설정 검증 관리	1. 지역별 목표달성 또는 진척사항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2.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체계를 갖추어 지역건축정책에 대한 해당 지자체 사업주체와의 공감대를 형성 3. 우수지역사례를 발굴하여 지자체별로 경쟁을 하도록 하는 체계 도입 방안 모색
한**	1.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발굴과 객관적 검증방법 수립	-
홍**	1.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증원 선행 후 성과관리 필요	1. 전담인력과 예산지원
황**	1. 건축기본계획의 실천과제 수행과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	1. 국가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사업 발굴 지원 2.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부족 3.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시·군과 협력 부재 4. 국가 예산지원 등 관심도 저고

부록5. 타 법정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체계

1) 지방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 지방녹색성장기본계획의 개요

시·도는 법률에 따라 국가 5개년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방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5개년 계획(2009.7)이후 지방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였다(2009-2013, 2010-2014).

[부록_표48] 지방녹색성장계획 성과평가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제도 명칭	-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2항 및 시행령 제9조1항
평가내용	-녹색성장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분석, 평가하여 정책실효성 제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와 성과지표에 의한 정책분야별 성과평가 실시
평가주관기관	-지방녹색성장 위원회
평가대상기관	-16개 시도(시군구 실적을 포함하여 측정)
평가단위	-지자체 실적 대상(지방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그린카 보급률, 그린마을사업 등)
평가기준 및 지표	-평가지표 개발 방향: (녹색경쟁력 지표) 합동평가의 지역녹색성장 시책 지표에 주요 녹색성장 지표를 추가하여 구성. 자체측정지표는 지자체 증빙자료 제출없이 중앙부처 등의 객관적 통계로 측정 -평가지표: 4개 분야(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생활·일자리, 녹색기반), 15개 세부 지표, 8개 예고지표
평가주기	-
평가기간	-
평가결과보고	-종합분석보고서
평가결과공개	-관계부처 및 시·도에 배부
평가 후	-문제점 및 부진사항 등의 개선, 우수사례의 확산 등의 후속 조치 -우수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지방녹색성장 추진 성과 및 평가시스템 운영방안

• 평가의 개요

지방녹색성장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1조) 및 동법(제12조), 동법 시행령(제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지방녹색성장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조정 및 점검 하고자 한다.

• 평가의 목적

지역자치단체가 그동안 자체 조례에 따라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평가 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지방녹색성장정책의 이행상황과 성과 확인, 개선과제의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녹색성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녹색성장 추진체제의 안착이 중요하고 향후 지방녹색성장의 활성화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 평가체계 및 내용

평가체계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 시행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간 녹색성장 추진실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4개 분야 15개 지표를 개발·공표(2012.4)하여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녹색경쟁력 지표는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생활, 녹색기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교통은 시책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승용차 줄이기를 위한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며, 녹색건축물은 244개 지방청사의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 노력을 측정, 녹색생활은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을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업무효율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으며, 동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가능
하다. 동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를 위해 위원회
소속 녹색성장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녹색성장기획팀, 에너지정책팀, 기후변화정책팀, 녹
색기술산업팀, 녹색생활지속발전팀, 국제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_표49] 녹색경쟁력 평가지표

분야(4개)		녹색경쟁력 평가지표(15개)
녹색 교통 (3)	정량	① 자전거도로 연장 실적 ② 천연가스버스 보급률 ③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실적
	예고지표	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실적 ② 자전거 등록 실적 ③ 생활형 자전거도로 조성 실적
녹색 건축물 (3)	정량	① 지방행정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②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③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인허가 실적
	예고지표	① 친환경주택 취·등록세 감면 실적
녹색 생활· 녹색 일자리 (4)	정량	①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실적 ②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립 실적 ③ 자치단체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정성	④ Green 마을 지도·점검 결과
	예고지표	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 창출 실적 ② 녹색길(트래킹코스 등)개발·조성 실적 ③ 도시숲 조성 실적
녹색 기반 (5)	정량	① 녹색성장 조례 또는 규칙 제정 실적 ② 임야면적 증감률 ③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④ 지방행정기관 재활용센터 설치 실적
	정성	⑤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예고지표	① 녹색성장 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실적

[부록_표50]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 사유

분야	녹색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사유
녹색교통 (3)	자전거도로 개설 실적	가정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절감 프로그램 참여로 녹색생활 실천 확산
	지방행정기관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률(정량) 및 민간 지원 실적	전기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저연료 소비차량 확대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녹색교통 활성화 우수사례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시책, 승용차 줄이기 등 교통부문을 종합하는 지표를 녹색교통 활성화
녹색 건축물 (3)	지방행정기관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교육·홍보 효과 및 육성·발전 기여
	지방행정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지방행정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인허가 실적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인허가 실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녹색생활 · 녹색 일자리 (4)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가정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절감 프로그램 참여로 녹색생활 실천 확산
	지방행정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지방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확대로 녹색기업 활성화 촉진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온실가스 발생비용 상쇄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나무심기 등 투자
	Green 마을 시범사업 점검 결과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Green 마을' 시범사업 96개소의 점검결과 반영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전기, 가스, 석유 등의 전년도 대비 절약 실적을 평가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유도
녹색기반 (5)	산림면적 증감률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숲 보존국 보상'에 합의하는 등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 ⇒개발에 상응하는 보상 필요
	녹색정보화 수준 점검 실적	친환경 정보화 환경 구축 및 활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에 기여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우수사례를 통해 독창성, 주민 참여도, 저탄소 녹색성장 확산 가능성 등 파악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지방녹색성장위원회정기회,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견인

2) 지역에너지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 지역에너지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시스템 운영방안

- 지역에너지계획의 개요⁹⁵⁾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법(제7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한다.

세부 실행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고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국비 지원사업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광주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부록_표51] 광주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 목적	-지역에너지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계량화 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
평가 방안	-8가지 평가지표 선정에 따라 목표 대비 수행 실적을 통한 평가 수행(필요시 각 평가 지표별 세부추진과제를 정량적, 정성적 지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선정 가능)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지표별 점수와 곱하여 계산 -사업 변경 시, 주무부서 및 관계자와 협의·시행하고 역할과 책임 재검토
평가지표	안정적 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 활용 대책,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책, 온실가스 감축 대책, 집단에너지 공급대책, 미활용에너지원 개발대책, 에너지복지대책, 지역 특화 사업 발굴
평가 시기	매년 9월 1년마다 평가실시계획 작성
평가 기간	에너지위원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평가를 종료
평가대상 기관	평가대상 과제, 사업, 정책을 선정하여 평가실시계획을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에 보고
평가형태	제3자 평가, 합동 평가,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평가 결과보고	평가보고서 형태로 시 및 시의회, 시 관계기관, 중앙정부부처, 관계전문가, NGO등에 배포
평가 결과공개	시민에게 공표하여 설명책임을 수행함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홍보 효과 기대
평가 후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피드백하고 평가 관련 회의 또는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침 협의

95) 광주발전연구소(2014), 광주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

3) 지역환경보전계획의 성과관리 현황

□ 지역환경보전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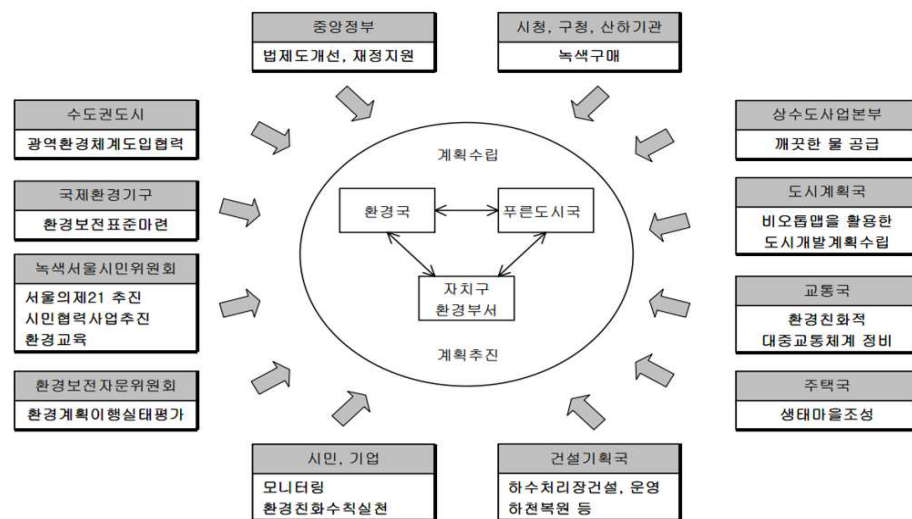
지역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2항), 환경정책기본법(제18조1항)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되어 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추진기간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지역환경보전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시스템 운영방안

-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 평가(2006~2015)

환경국, 푸른도시국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자체 사업의 평가와 함께 유관분야의 사업성과의 연결성을 함께 평가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환경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서울환경보전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는데, 이행실태를 평가할 시, 각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요인을 평가하고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매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실시한다.



[부록_그림8]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부문별 역할

출처: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관리 현황⁹⁶⁾

□ 계획 개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약칭: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법(제7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 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시스템 운영방안

• 평가의 개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의 평가는 농어업인 삶의 질 법(제9조)에 근거하여 평가되며, 동법(제10조)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한다.

시·도는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따라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후, 제1차('05~'09), 제2차('10~'14), 제3차('15~'19)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부록_표52]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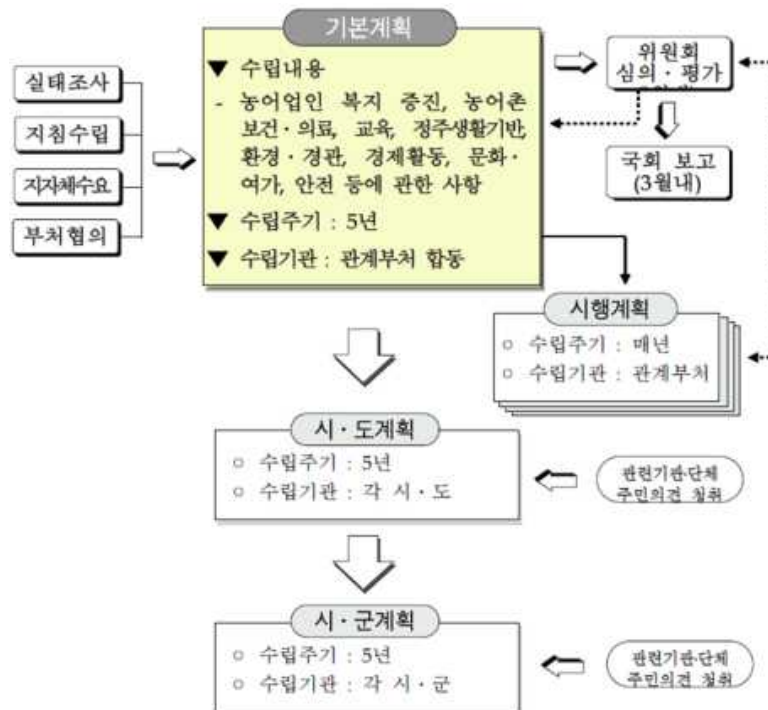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각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1월까지 위원회 농식품부 사무국에 제출 -사무국은 각 부처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로 제출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평가 체계	-정책 추진성과를 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자체 평가 -민간전문가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분과위원회 심의
	평가 내용	-계획, 실행·관리, 성과·환류 단계별 공통지표 활용 평가 -평가대상: 연차별 삶의 질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 -평가단위: 정책과제별, 정책분야별, 부처별 평가 추진
	환류	-사업개선의견 및 자원배분 방향 제시, 위원회 심의

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 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시·도 및 시·군 계획의 수립과 평가

[부록_표53]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구 분	내 용
시·도 및 시·군 계획의 수립과 평가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농식품부로 제출 -시·군은 시·도 계획에 따라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로 제출, 시·도는 시·군 계획을 종합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시·도 및 시·군에서는 자체점검 평가실시단을 구성하여 점검



[부록_그림 9]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및 역할

출처: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2014), p85.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위원장 1명,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교육·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여성정책기본계획 성과관리 현황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 점검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4차례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제3차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진단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시행 중에 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은 연구진이 지표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였다.

1, 2차 기본계획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실적을 간략하게 취합하였고, 3차 기본계획에서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세부과제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목표, 그에 따른 달성도, 예산 계획 대비 집행실적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각 과제에 투입된 물량, 재정규모 측정 등 정책과제에 대한 목표 대비 집행실적 점검이 가능하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에서는 중앙부처 이행실적, 중앙행정기관별 2011년도 이행실적 분석, 기본계획 운영개선 사항과 영역별 점검결과, 제1~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 중 분야별 성과 및 향후과제 제안, 제4차 계획기간 수립 시 고려사항을 연구하였다.

[부록_표54] 부처별 사업에 대한 점검 지표

구 분	내 용
타당성	-사업목표가 상위목표와 부합하는지 -사업목표 및 계획이 구체적인지
합목적성/충실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세부사업)이 적절한지 -세부사업의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이 적절하고 충분한지
목표달성도	-당초 계획한 사업이 충실이 이행되었는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 평균적 달성도를 의미)
목표달성도의 근거	-실적보고 내용이 목표달성 기재 내용을 정당화하는지 (목표달성도 지표의 연계지표임)
예산	-(여성가족부)작성양식에 기재된 예산액 (단위: 천원)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⁹⁷⁾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성평등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3개 목표, 7개 정책과제, 28개 중과제 및 100개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내 정책과제들의 달성 여부와 진전도 평가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특정 과제에 대하여 성평등 지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정책 추진의 엄밀성,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표 5-55] 여성의 경제력 역량 강화 정책과제 성과지표

성과지표	출처 및 산식
1-1.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 지원	
전문계고 졸업생 지원건수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중기청 통계자료
청년층 경력개발 사업 건수	
경력단절 5년 미만 여성들의 취업지원 수혜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여성 중고령자 취업훈련 참여율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새로일하기 센터 및 예산 증가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료
신규직종 발굴 및 시범사업 건수	
지역별 업종별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사업 건수	
1-2. 사회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성차별 개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국회입법자료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대상 지원건수	
모니터링 센터 설치 실적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개선 여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복지기금 마련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장/ 한부모 취업지원 통합지원센터 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취약계층 취업지원 수혜자 수	
농어촌지역 여성 취업지원 사업 수	농림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여성농어업인 경영성공사례 DB 건수	
여성결혼이민자 학력수준 제고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1-4. 여성 협동조합 및 창업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	
여성중심 협동조합 지원건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여성기업 금융지원건수	중기청 통계자료

* 출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9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6)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성과관리 현황⁹⁸⁾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개요⁹⁹⁾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제1차('04~ '09), 제2차('10~ '14)가 실시되었다.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초 당해 연도 추진계획 수립지침을 시·도에 송부하고 이에 따라 시·도는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까지 시·군에 시달, 복지가족부에 제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매년 투자계획의 집행실적 및 사업추진성과 등을 점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는 매년 관내 시·군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자체계획을 보완하여 점검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평가의 개요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및 별도의 평가체계 부재로 매년 추진실적 점검이외의 종합적인 평가는 실시되지 않는다. 또한, 농어촌 실태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미흡하여 농어촌 현실에 적합한 정책 발굴이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농어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제고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농어촌 보건복지계획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행하고자 노력 중이다.

- 농어촌 보건복지 계획의 평가들

[부록_표56]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의 평가들

부 문	평가들
계획부문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집행 부문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평가들과 동일한 구조
성과부문	성과지표에 대한 제안과 동 지표에 대한 평가 진행

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실행력확보를 위한 평가체계마련

99) 보건복지가족부(201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10~14)

[부록_표57]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평가틀

부문	평가틀	내 용
계획 부문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에서 농어촌 농어업 종사자들의 특성파악을 통해 동 사업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함
집행 부문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예산집행실적 -홍보 등 -일정관리	집행부문의 복지부의 다른 계획들 평가와 차이는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여부'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포함한 것
성과 부문	-성과지표 및 성과 목표치 적절성 -성과목표 달성도 -농어촌 환경변화 기여도 -기본계획 성과지표	-성과부문의 다른 계획에 대한 평가와 다른 점은 다음연도 평가를 고려하여 '차기 기본계획 성과지표'를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환경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추가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성과지표를 위한 기준자료 구축

- 보건분야 지표

[부록_표58] 보건분야의 거시적 지표

구 분	지 표	산출방법
건강 및 삶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혹은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건강관련 삶의 질	EQ-5D index 값 산출
	만성질환 유병률	암,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율
의료이용 접근성	필요서비스 미치료율	최근 1년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
	경제력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최근 1년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
	의료기관까지 접근성	의료시설거리별 접근도
건강행태	우울감 경험율	최근 1년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사람의 비율
	건강검진수진율	최근 2년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암 검진율	최근 2년동안 암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
인프라	의료 인력	필수진료과목별 인구 1천명당 의사수, 인구1천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
	응급의료 접근성	발병후 응급실도착 소요시간
	예산	지자체 전체예산 대비 보건의료 예산 비중

- 사회복지분야 평가지표

[부록_표59] 사회복지분야 거시지표 평가지표

구 분	지 표	산출방법
기본 생활 보장	사회보장제도 관련생활여건 변화	5점 척도
	복지수준에 대한 만족도	3점 척도
	자활사업 성공률	자활사업 참여자 수 대비 취·창업자와 탈수급자 합계의 비율
사회 통합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보육시설 충족률	전체 읍면부 수 및 도우 수 대비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읍면부 수 및 동부 수의 비율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당해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2
	농어촌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사업 예산	예산 규모
	다문화가족 욕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교육서비스, 편견 없애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장애인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장애인 가구/전체 장애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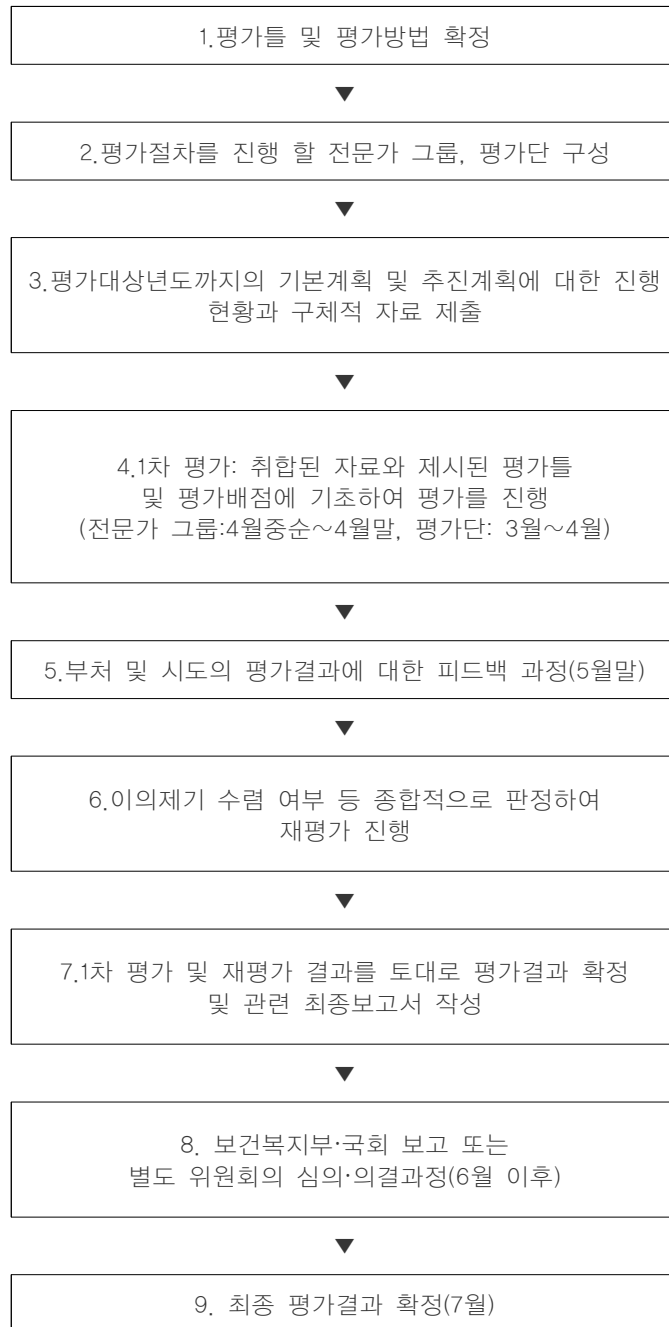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및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시기

2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및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는 중간점검, 최종 평가가 실시되며, 3차년 및 5차 년도에 전체과제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추진계획의 경우 1차년도, 2차년도, 4차년도에 평가단을 통해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 계획에 대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평가 절차

[부록_표60]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의 평가절차



7) 여성친화지정도시 성과관리 현황¹⁰⁰⁾

□ 여성친화도시의 개요¹⁰¹⁾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며,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직접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성친화도시가 성인지적 관점과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여성친화지정도시의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를 연구하고 있다.

□ 여성친화지정도시의 이행점검

2012년부터 지정기간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도시별 현황에 따른 피드백 실시와 자체개선계획 수립 등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이행점검 추진하고 있다.

[부록_표61] 여성친화지정도시의 이행점검

부 문	내 용
점검 목표	여성친화지정도시들의 사업 추진 현황 파악, 사업 개선을 위한 자문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점검 지표	2010년 여성친화도시 매뉴얼 연구에서 제안된 개별 추진기구 역할 구체화·세분화
점검 과정	자료제출 > 서면 점검 > 현장 점검 > 종합분석 및 서면 피드백
점검 방법	2012/2013년: 지자체를 선별하여 추진 2014년: 50개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행점검 연구진이 방문하여 간담회 형태로 진행

* 출처: 여성가족부(2011), 「여성친화 지정도시 이행점검 연구 및 컨설팅」에서 재구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자체 사업 추진 실적을 공통된 지표로 표준화하고, 매해 추가되는 신규 지표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제시한 행정 내 협업, 시민참여, 민관협력 장치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가를 점검한다.

[부록_표62]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영역 및 지표(2014년)

점검영역	점검지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추진체계, 자치법규, 행정 역량 강화, 기타 책무성 장치 등
민-관 협력 체계	위원회 또는 협의체 운영 현황, 시민참여 구조, 시민 역량 강화, 여론 수렴 및 홍보 등
대표사업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 발굴·기획 및 추진과정, 사업추진결과 및 의의 등

* 출처: 여성가족부(2011), 「여성친화 지정도시 이행점검 연구 및 컨설팅」

100) 여성가족부(2011), 여성친화 지정도시 이행점검 연구 및 컨설팅

101) 여성가족부(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8)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성과관리 현황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개요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개요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근거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기조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1998-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수립·시행한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계획의 기본방향,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의 지원,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 및 품질확보대책, 중소건설업 및 중·소 건설 용역업의 육성대책,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대책,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등의 세부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시스템 운영방안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평가

계획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차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 수립 작업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 계획에서 채택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선정의 적절성, 과제 달성도, 효과성을 1-10점 척도로 평가하여 이의 중앙값을 도출·분석한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Kicon.net에 등록된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흥기본계획의 실천여부와 건설 산업 발전에 미친 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록_표63]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중점과제	평가점수
① 공정한 경쟁 룰의 확립	6.67
② 건설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8.27
③ 건설업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6.13
④ 건설안전·품질관리체계 구축	7.60
⑤ 건설산업기반 유지 및 확충	7.80
⑥ 해외건설진출의 활성화	7.73

* 주: 아주 부적절함(1점) 보통(5점) 아주 적절함(10점)

* 출처: 건설교통부(2003),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p.23

- 제1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평가과정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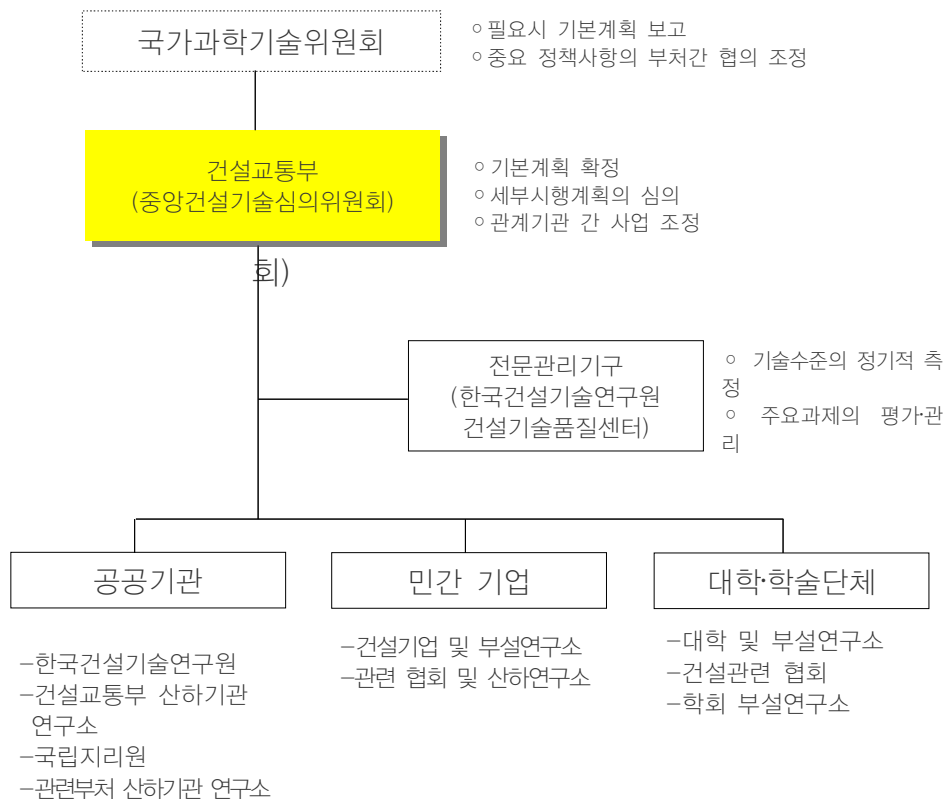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약 70%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적절한 집행, 평가체계의 부재 및 실질적인 추진, 집행조직의 부재로 계획의 달성도에 응답을 하였고 이는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9)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성과관리 현황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의 개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및 연구개발의 촉진·활용 등을 통해 건설기술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종합 계획이다.

- 추진체계



- 추진 절차

[부록_표64]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추진 절차



□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시스템 운영방안

- 평가의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 11조), 동법 시행령(제5조)에 근거하여 제1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1991-2000)이후 5년마다 계획수립을 추진한다. (1991-2000, 1997-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부록_표65]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성과평가 개요

구 분	내 용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평가주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기준 및 지표	-3차: 측정된 정량적, 정성적 평가결과에 대한 실적평가 -4차: 3차와 동일(상, 하반기로 나누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및 자문 회의 실시) -4차 수정계획: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로 나누어 성과 점검 (정성적 평가:정책 추진부서,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설문조사_효율성, 달성도, 효과성, 적합성, 충실성 정량적 평가: 중점 추진과제 별 추진, 미추진, 진행중으로 나누어 계획 이행 점검)
평가주기	매년 시행
평가기간	매년 2월 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평가결과보고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평가결과 활용	-활용도 제고 등 확산조치와 인센티브 부여 -관계기관의 부진 사업에 대하여 수정계획 마련 등 조정 요청 -기술개발 결과의 체계 통일

• 성과평가 체계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은 제도개선 현황 등 정성적 평가와 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정량적 목표 측정평가,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종합평가로 나누어진다.

[부록_표6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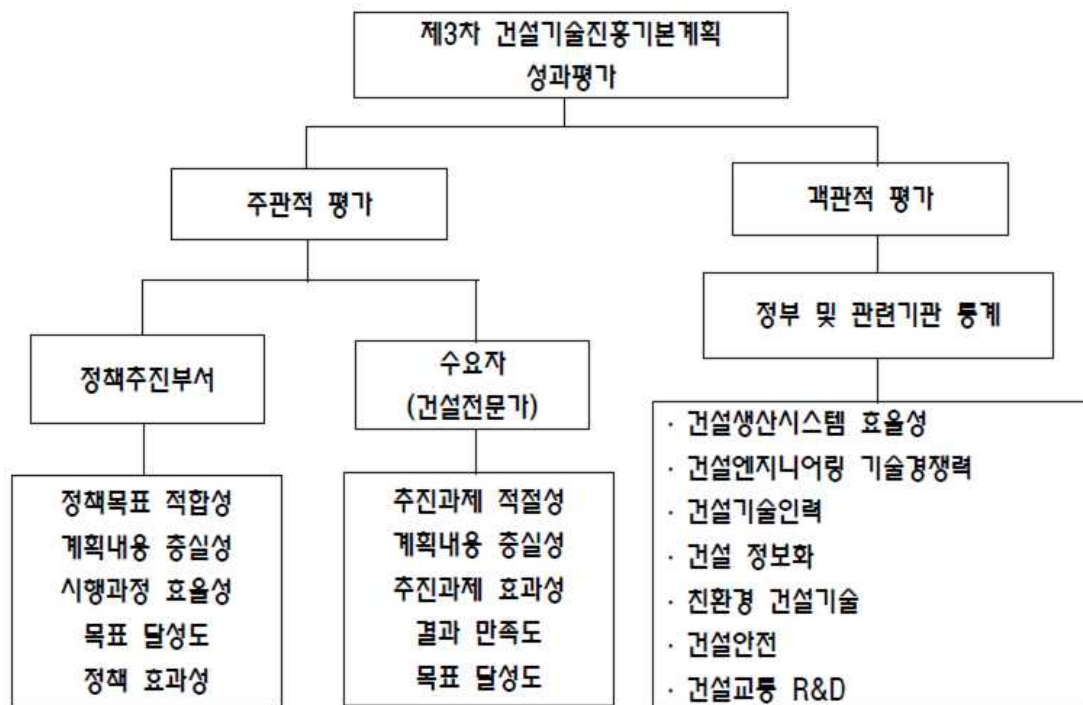
구분	세부 내용
정성적	-정책추진부서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실시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추진
정량적	-7개분야, 20대 중점추진분야별 추진실적 조사 -기본계획의 정량적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성과측정을 위한 조사양식 개발 및 조사 -조사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과 제시
종합평가	-측정된 정량적, 정성적 평가결과에 대한 실적 평가

* 출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7), 제3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성과분석 연구

제3차 기본계획의 평가를 위한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의 적절성 확보가 어려움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추진 부서와 수요자별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

추진부서의 자체 평가결과와 건설전문가 수요자 입장의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객관적 평가의 경우, 7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분야가 추구하는 성과 파악 후, Harty(1999)가 제시한 성과지표¹⁰²⁾ 결정시 고려할 사항을 참고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부록_그림11]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성과평가 체계

102) Harty(1998)이 제시한 성과지표는 관련성, 중요성, 이해 가능성, 사업의 성과에 대한 영향력, 자료획득 가능성, 비중복성, 조작가능성, 포괄성, 지표의 수 총9개 항목을 고려

- 관련성: 성과지표는 사업의 임무 및 목적, 그리고 측정하려는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
- 중요성: 성과지표는 성과의 주요한 측면을 측정
- 이해가능성: 성과지표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 사업의 성과에 대한 영향력: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직, 간접 영향력 고려
- 자료획득 가능성: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적절한 자료를 획득 가능
- 비중복성: 성과지표가 다른 성과지표와 중복 회피
- 조작가능성: 사업담당자가 조작할 수 있는 지표는 제외
- 포괄성: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포함
- 지표의 수: 지표의 숫자는 가능한 최소로 하고 중요한 지표만 고려

[부록_표67] 정책추진 부서용 주관적 설문

설 문	내 용
정책목표 적합성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고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내용 충실성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충실하고, 여론 수렴 및 타 부처/부서와 연계를 수행하셨습니다습니까?
시행과정 효율성	세부추진계획의 일정이 예정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소요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습니까?
목표달성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효과성	제3차 기본계획 수행으로 건설기술진흥에 실질적인 효과가 발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출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7), 제3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성과분석 연구

[부록_표68] 수요자용 주관적 설문

설 문	내 용
추진과제 적절성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고 건설산업의 기술진흥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내용 충실성	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 충실하고,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과제 효과성	제3차 기본계획 추진시점인 2003년 이후 기본계획 추진으로 건설기술에 실질적인 효과가 발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 만족도	제3차 기본계획에 관련된 정책, 제도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의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목표 달성도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출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7), 제3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성과분석 연구

10) 국토종합계획 성과관리 현황

□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 국토종합계획 수립

국토종합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제3장18조)에 근거한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국토종합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시스템 운영방안

- 평가의 개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시·도지사 협의,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평가기능을 대신하였으나 2011년 국토기본법 개정 후, 2012년 5월부터 국토기본법(제19조 2항)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을 보완·발전할 수 있으며, 2012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4년 기준 총 21건 실시하였다.

[부록_표69] 국토계획평가의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제도 명칭	-국토계획평가제도
근거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2항
평가주관기관	-국토계획평가위원회
평가대상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수립기관 중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제출한 기관
평가기준 및 지표	<평가기준> 1. 지역경쟁력 2. 지역균형발전 3.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4.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5.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6.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평가기간	평가대상계획의 수립기간이 12개월인 경우, 4-6주 소요
평가결과 보고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합성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 보고서 작성

[부록_표70] 국토계획평가 실시 현황

구 분	평가 대상
2012년 (5건)	도시·군 기본계획(인천), 댐건설장기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전라북도종합계획, 물류시설개발기본계획
2013년 (12건)	도시·군 기본계획(대전, 당진, 동두천, 수원, 원주, 창원, 세종) 산림기본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내륙첨단발전종합계획(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백두대간권)
2014년 (5건)	도시·군 기본계획(부천, 여수, 청주, 청원)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 출처: 국토교통부(20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평가위원회

국토계획평가 위원회는 국토기본법(제26조, 27조, 28조)에 근거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구성되며, 국토계획평가 및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 국토계획평가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 2)에 근거하여 국토관리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치하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반의 세부 평가기준 선정에 관한 의견 제시, 평가기준 검토위원회 활동, 국토계획평가 관련 현지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평가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국토계획평가 제도,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국토계획평가 평가기법¹⁰³⁾

국토계획평가는 효율·형평 및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 등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분석, 전망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계획내용 등 대상계획 특성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기법을 선택하며, 정량적 방법으로 GIS분석, 편익·비용분석, 모델링, 시나리오 분석, 지표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을 제시하고, 정성적 방법으로 유관자려, 전문가적 식견 및 판단 등을 통한 영향분석 기법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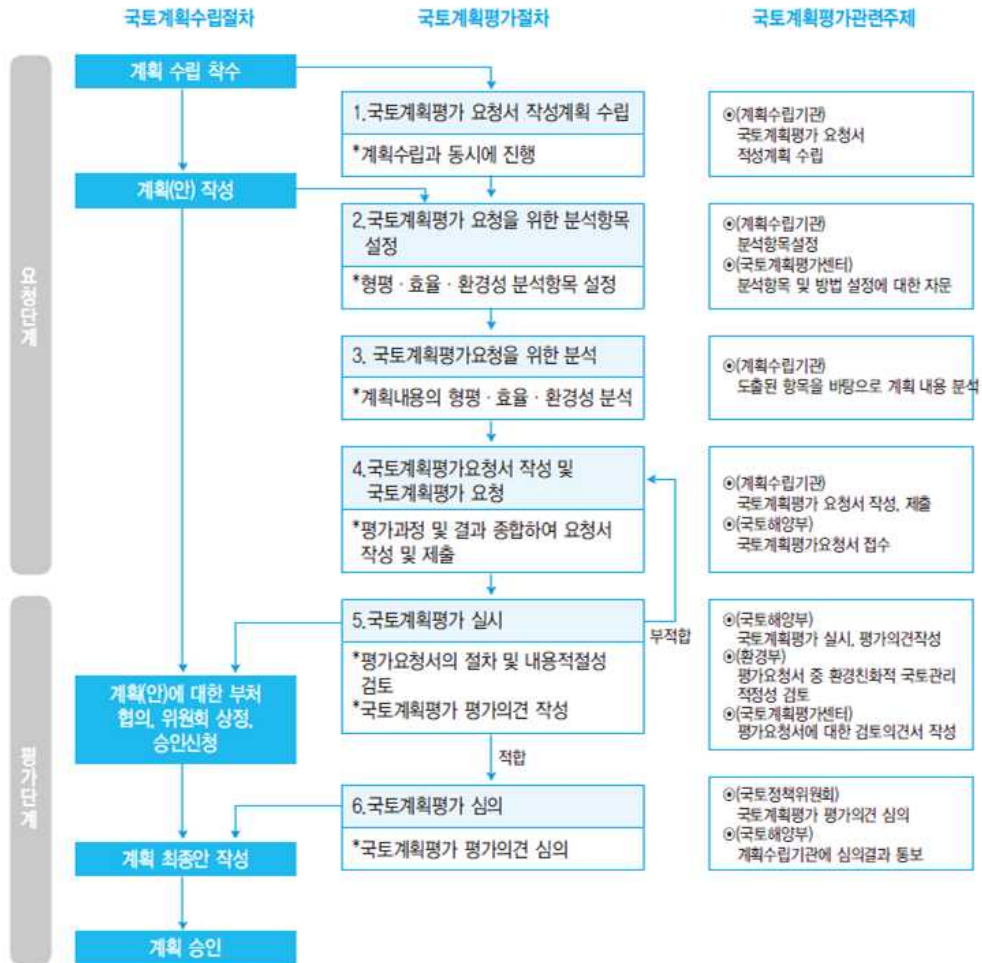
103) 국토연구원(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부록_표71] 국토계획평가 평가기법(예시)

분류	평가기법	개요	적용가능 세부평가기준(예시)
정량적 기법	비용 (편익 분석)	계획의 영향을 금전화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	-자립적 경쟁기반 구축: 계획수립으로 인한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선도사업 추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 첨단 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댐 등의 건설과 각종 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
	모델링	계획의 영향을 계량화된 인문 및 자연시스템의 인과관계로 분석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계획으로 인한 산림, 수산, 식량, 생태자원 및 수자원의 이용량 변화를 분석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계획으로 인한 대기질, 수질변화 분석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시나리오 분석	계획의 내용이나 대안에 따른 미래상이나 목표달성 등의 변화 정도를 복수로 제시, 분석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 계획의 대안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GIS분석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나 영향 정도를 시각적으로 비교, 분석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계획으로 인한 토지, 산림, 생태자원 및 수자원의 분포와 변화를 분석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계획으로 인한 생활공간 쾌적성, 오픈스페이스, 생태공간, 녹지축 변화를 분석 -생물서식공간 보전 및 훼손 생태계 복원: 계획으로 인하여 훼손이 우려되는 생물서식공간, 생태계 분석
	지표분석	계획으로 인한 유관지표의 변화를 전망, 분석	-특화산업 육성: 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성장동력산업의 비중, 지역 특화자원의 부가가치 등 지표 변화 분석 -균형발전: 계획수립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인구, 일자리 등 지표 변화 분석 -생활여건 낙후지역의 발전기반 확충: 계획으로 인한 인구, 일자리 등 지표 변화 분석 -국토의 국제적 인적, 물적 교류 증대: 계획으로 인한 해외가업 및 관광객 유치 등 지표 변화 분석
	환경용량 분석	계획으로 인한 환경용량, 임계치 등의 변화 분석	-쾌적한 국토환경 및 생활공간 조성: 계획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량 변화를 분석
정성적 기법	전문가 의견	지속가능성 이슈(형평, 효율, 환경)와 계획이슈(공간구조, 토지이용, 산업, 교통 등)간의 관계를 전문가적 식견과 판단에 근거하여 평가	-지역 간 교류협력 촉진: 계획으로 인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정도 분석 -남북 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계획으로 인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수자원 공동 이용, 공동 방재체계 구축 등의 분석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조성: 계획이 난개발 방지, 용도지역제 개편, 통합적 토지관리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

* 출처: 국토교통부(20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평가절차



[부록_그림12] 국토계획평가의 세부절차

(국토교통부(2013), 20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p.70)